연구용역 보고서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바람직한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수립 및 부산형 발전 모델 구축

2021. 10. 22. 최종

한 국 금 융 학 회

— 목 차 —

요약 ····· i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목적 ····· 1
2. 필요성 - 최근 대내외적 환경 변화의 영향 ····· 3
   가. 홍콩 사태의 영향 ····· 3
   나. 코로나사태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5
   다. 4차산업혁명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8

Ⅱ.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 경과

1. 그간 중앙정부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분석 ····· 13
   가. 잘된 점 ····· 13
   나. 아쉬운 점 ····· 14
   다. 시사점 ····· 14
2. 그간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분석 ····· 16
   가. 부산 금융중심지의 추진 성과 ····· 16
   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추진 한계 ····· 26
   다.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 29
   라. 시사점 ····· 41

Ⅲ.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발전 전략

1. 일반 금융중심지 사례 분석 ····· 44
   가. 영국 런던 (City of London) ····· 44
   나. 홍콩 ····· 45
   다. 싱가포르 ····· 51

2. 특화 금융중심지 사례 분석 ····· 55
가. 룩셈부르크 ····· 55
나. 더블린 ····· 62
다. 오슬로 ····· 69
라. 오사카 ····· 72
마. 중국의 금융중심지들 ····· 77
바. 각국의 '제2금융센터'와 '기능형' 금융도시 ····· 97
사.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에의 시사점 ····· 102

IV. 바람직한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및 부산형 모델
1. 바람직한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 104
가.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 방향 ····· 106
나. 부산 금융중심지에 적합한 벤치마크 전략 ····· 107
다. 금융중심지 정책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 108
라. 금융중심지법을 특별법 형태로 개정 ····· 110
2.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최적 조합 모색 ····· 115
가.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 115
나. 지역특화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 ····· 147
다. 선박금융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 유치 방안 ····· 150
3. 금융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조직 혁신 ····· 161
가. 부산광역시청 내 '금융/기업지원실' 설치 ····· 161
나. 회사 설립/운영/이전/현황조사/분석/상장 등을 위한 One-Stop 조직 설치 ····· 171
4. 특화금융 경쟁력 제고와 미래금융 육성 ····· 176
가. 해양금융 선진화 방안 ····· 176
나. 파생금융 및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 200

다.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를 통한 혁신기업 유치 방안 ····· 213
라. 대체거래소(ATS) 설립방안 ····· 222
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장기과제 ····· 241
바. 국제금융인력 양성 방안 ····· 248

V. 부산형 모델 구현을 위한 단계별 접근방안 및 법제 개선방안
1. 단계별 접근방안 ····· 265
가. 단계별 추진전략 ····· 265
나. 1단계 (단기) ····· 265
다. 2단계 (중기) ····· 267
라. 3단계 (장기) ····· 267
마. 기대효과 ····· 271
2. 부산형 모델 구현을 위한 혁신금융 법제 개선방안 ··· 271
가. 부산시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271
나.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의 활용 ····· 277
다. 부산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단계별 ICO 허용 방안(“부산 ICO 프리존”) ····· 286
라. 선박금융의 STO 활용방안 ····· 295
VI. 결론 및 시사점 ····· 302
부록 ····· 310
중국 금융중심지 사례분석 ····· 310
설문조사 내용 정리 ····· 327
전문가 면담 내용 정리 ····· 336
참고문헌 ····· 345

표 목 차

<표 1-1> 코로나 사태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 ····· 6
<표 1-2> 주요국 선박금융의 특징 ····· 10

<표 2-1>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계획 ····· 17
<표 2-2> 주요국 선박금융의 특징 ····· 23
<표 2-3> 부산 유치 글로벌 금융회사 ····· 23
<표 2-4> 세계 주요 도시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 24
<표 2-5> 부산 금융중심지의 콜센터 및 데이터센터 유치기관 현황 ····· 26

<표 3-1> 더블린 IFSC의 현황 ····· 65
<표 3-2> OECD 주요 국가별 법인세율 비교 (2021년 4월 29일 기준) ····· 66
<표 3-3> 아일랜드 소재 순자산 및 펀드수 ····· 67
<표 3-4> 아시아/태평양 금융중심지 15곳 순위 ····· 77
<표 3-5> 2020년 장강 삼각주 41개 도시 GDP 지표 ····· 80
<표 3-6> '13.5 규획기간 베이징 보험서비스업 발전 정책 ····· 85
<표 3-7> 난샤(Nansha) 금융 및 유사 금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91
<표 3-8> 호주 각 업태 금융업자 수의 도시별 점유율(%) ····· 97
<표 3-9> 미국의 각 업태 금융업자 수 도시별 점유율(%) ····· 98
<표 3-10> 영국의 각 업태 금융업자 수 도시별 점유율(%) ····· 99
<표 3-11> 캐나다의 각 업태 금융업자 수 도시별 점유율(%) ····· 100
<표 3-12> 기술인력의 도시별 평가 ····· 101

<표 4-1>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 현황('19년말 기준) ····· 151
<표 4-2> 우리나라 위안화 표시 수출입 비중 ····· 160
<표 4-3> 금융전략과 조직개편안 ····· 165
<표 4-4> 투자금융과 조직개편안 ····· 165
<표 4-5> 정책금융과 조직개편안 ····· 166
<표 4-6> 금융신산업과 조직개편안 ····· 167
<표 4-7> 산업전략과 조직개편안 ····· 168
<표 4-8> 산업 1과~5과 조직개편안 ····· 169

〈표 4-9〉 2014-2019 국내 선박금융 추정 규모 ·····177
〈표 4-10〉 수출입은행 선박금융 잔액(대출 및 대외채무보증) ·····177
〈표 4-11〉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연간 선박금융 규모 ·····178
〈표 4-12〉 한국산업은행의 연간 선박금융 규모 ·····178
〈표 4-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선박투자회사 설립 실적 ·····179
〈표 4-14〉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기금의 선박금융 공급 실적(누계치) 179
〈표 4-15〉 국내 상업은행의 연간 선박금융 규모 ·····180
〈표 4-16〉 국내 선박투자회사 운영규모 현황 ·····181
〈표 4-17〉 국내 특별자산펀드(선박펀드) 추정 규모 ·····181
〈표 4-18〉 국내 민간부문 선박금융 규모 ·····182
〈표 4-19〉 연도별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 ·····183
〈표 4-20〉 2015-2021 세계 선박금융 투자 규모 ·····184
〈표 4-21〉 주요 지역별 ECA ·····187
〈표 4-22〉 세계 주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규모 (2020년) ·····188
〈표 4-23〉 글로벌 은행의 지역별 선박금융 잔액 현황 ·····189
〈표 4-24〉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201

〈표 5-1〉 규제샌드박스 신청·실증실험 현황 ·····283
〈표 5-2〉 국내기업 주요 ICO 현황 ·····287
〈표 5-3〉 암호자산 및 전자기록이전권리 규제 정리 ·····299

그 림 목 차

<그림 2-1> 중앙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 성과 ····· 13
<그림 2-2> 연도별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진입 현황 ····· 14
<그림 2-3> 해양금융종합센터로서의 부산 금융중심지 ····· 19
<그림 2-4> 전 세계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 ····· 21
<그림 2-5> 우리나라 조선업 수주, 건조 수주잔량 동향 ····· 22
<그림 2-6> 국제 유가 추이 ····· 22
<그림 2-7> 부산(및 서울)의 연도별 지역내총생산 증가세 ····· 30
<그림 2-8> 부산 금융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 38
<그림 2-9> 부산 금융산업 부문별 사업체 비중(2019년 기준) ····· 38

<그림 3-1> 홍콩의 지리적 위치 ····· 48
<그림 3-2> 룩셈부르크의 핀테크 기업 리스트 ····· 61
<그림 3-3> 아일랜드 GDP 성장률 추이 ····· 63
<그림 3-4> 아일랜드 실업률 추이 ····· 63
<그림 3-5> 경제서비스부문 GDP 성장 추이(백만유로) ····· 64
<그림 3-6> 금융서비스 기업 수 추이 ····· 64
<그림 3-7> 상하이 와이탄-루자쭈이 일대 금융기관 분포 ····· 82
<그림 3-8> 베이징 금융업 기능구(一主一副三新四后台) ····· 84
<그림 3-9> 웅안신구의 위치 ····· 86
<그림 3-10> 홍콩과 선전 지리적 위치 ····· 88
<그림 3-11> 선전의 금융기관 수 추이(2007-2018) ····· 88
<그림 3-12>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 위치 ····· 93
<그림 3-13> 청위경제구 도시체계공간구조도 ····· 93

<그림 4-1>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조직도 예시 ····· 124
<그림 4-2> 부산시 일자리경제실 조직현황 ····· 162
<그림 4-3> 서울시의 경제정책실 조직도 ····· 163
<그림 4-4> 부산시 금융/기업 지원실 조직개편안 ····· 164
<그림 4-5> 부산 원스톱 비즈니스 창업센터(가칭) 구조도 ····· 173
<그림 4-6> Z/Yen Group GFCI 13-17 상위 5개 도시 점수 추이 ····· 174

<그림 4-7> 도쿄 원스톱 비즈니스 창업센터의 구조 ·····176
<그림 4-8> 2008-2015 우리나라 은행의 선박금융 구조 변화 추이 ·····181
<그림 4-9> 자본시장을 통한 세계 선박금융의 조달 ·····184
<그림 4-10> 세계 주요 은행의 선박금융 공급 규모(2020년 기준) ·····185
<그림 4-11> 2020년 해양금융 신디케이트론 규모 추이 ·····186
<그림 4-12> 부산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특례현황 ·····191
<그림 4-13> 선박조세리스 구상도 ·····198
<그림 4-14> 구조도(예시) ·····199
<그림 4-15>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209
<그림 4-16> 국내 및 해외 대체투자 펀드 규모 ·····214
<그림 4-17> Clarksons Services ·····219
<그림 4-18> 배송 및 거래(Shipping and trade) 서비스 규모 ·····222
<그림 4-19> Klaytn Governance Council ·····243
<그림 4-20> 디지털금융 MBA 교과목 체계도 ·····260
<그림 4-21>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홍보자료 ·····262

<그림 5-1>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방향 ·····270

<요 약>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 정부와 금융당국은 ’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 수립, ’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08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을 기점으로 지난 20여 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09년 1월)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나, 국제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20년 5월에 발표된 정부의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여 ①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②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③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3대 중점전략으로 제시(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년 5월 18일)

○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②금융인프라 국제화 ③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

▣ 부산금융중심지는 ’09년 1월 ‘해양·파생금융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공공 금융기관 및 지역 금융기관이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해 오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시현하며, 정책적 노력을 경주

○ 동북아 항만 물류허브, 동남지역에 위치한 조선사를 중심으로 하는 선박금융 특화

○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활용하여 파생금융 특화

○ 서울과 상호 협력, 보완하는 측면에서 서울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인 강점이 있는 백오피스·백업센터에 특화

▣ 그러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융규제, 환경 등 큰 틀에서 금융중심지 정책은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GFCI) 기준 서울 13위, 부산 33위 등 여전히 경쟁력 및 매력도가 낮은 도시로 나타나는 데 반해 상하이, 도쿄, 홍콩, 싱가포르, 베이징이 차례대로 3위에서 9위권으로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상당한 경쟁력 보유

○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의 획기적 개선 등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중심지 정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하며,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지역간 이전 투구양상이 심화할 우려

▣ 본 연구는 그간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금융중심지의 비전 및 정책을 재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금융중심지 정책추진 이후 답보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법·제도적 측면을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

○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급속한 확산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금융산업 접목 등 환경 변화 요인을 금융중심지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

○ 향후 중앙정부의 추진전략에 발맞추어 개별 금융중심지의 특성에 맞는 부산형 발전모델도 모색할 필요

2. 필요성 - 최근 대내외적 환경 변화의 영향

가. 홍콩 사태의 영향

▣ 최근 홍콩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미국으로부터 특별지위를 박탈

당하면서 금융중심지로서 변혁의 시대를 걷고 있다고 평가

▣ 홍콩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융중심지 본연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홍콩거래소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남길남(2020)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시장의 관문의 역할을 하면서 유망한 중국 테크기업의 홍콩거래소 상장이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오히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실제로 '20년 홍콩거래소의 IPO 실적이 세계 최대 규모 IPO 실적을 시현한 NASDAQ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세계 2위에 랭크 (HKEX 512.8억달러 vs. NADSDAQ 573억달러)

나. 코로나 사태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 사태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은 코로나 위기의 확산과 차단, 극복 등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행태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과 결합에 따른 산업적 특성, 그리고 글로벌 연계성 등에 따라 달리 전개될 가능성

▣ 코로나 사태는 비대면 및 비접촉 경제활동을 확대·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오프라인 의존도를 완화시키는 계기를 제공

○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및 차단을 위한 비대면 활동과 비접촉 방식의 활성화는 디지털화와 같은 온라인 중심 영업활동을 촉진

○ 온라인 중심의 영업 활동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금융회사의 경우 비대면 거래를 통한 영업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경험 및 사례를 확보

○ 모바일 또는 사이버 거래가 확산·시도되어 왔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소지

▣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화를 통한 금융정보의 축적이나 활용에 대한

유인을 확대하고 기업정보의 혁신을 촉진할 전망

○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정보의 축적이나 활용, 공유 등에 대한 유인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픈뱅킹이나 ERP정보, 세제 정보 등을 결합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정보의 분석 및 활용이 촉진될 전망

다.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인공지능(AI) 및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 기술 활용 추세는 산업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으며* 빅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은 BDAI로 불리기도 하며 사회·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지칭(금융감독원 2019)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은 기업에서 이들 기술을 활용하면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그것이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며, 소비자의 행동으로부터 수집, 축적된 데이터는 다시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기술-기업-소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전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온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기존의 기술혁신에 의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disruptive)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Economists, 2020)

▣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이 금융의 다방면에서 활용됨에 따라 금융 서비스의 제공 방식 또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 우선, 소매금융의 경우 고객에 대한 개인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

○ 핀테크(FinTech) 서비스의 확산과 더불어 금융거래 절차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

○ 또한, 기업금융의 경우도 흔히 관계 금융으로 대표되어온 기존

의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정성적 판단에 기반하는 영업방식 대신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등을 활용하여 도출된 정량적인 신용 판단 기준에 기반한 서비스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Peterson 2004)

○ 금융기관 및 관련 기업들은 고객응대, 가격측정, 보험계약, 신용평가 등의 정확성 제고를 목적으로, 헤지펀드, 브로커, 딜러 등은 수익성 제고와 트레이드 최적화 등의 목적으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을 도입하여 활용

○ 공공 및 민간의 유관기관들도 규제 준수 및 감시, 데이터 품질 평가, 금융사기 적발 등에 활용

Ⅱ. 금융중심지 추진 경과

1. 그간 중앙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

▣ 잘된 점으로 1) 자본시장 규모 확대 및 질적 성장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혁신금융 지원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2)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인프라·감독·시스템 구축

▣ 아쉬운 점으로 1) 금융산업의 전반적 성장과 함께 최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경쟁력 개선과 글로벌화 추진 필요 2)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03년) 이후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아직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가 해외지점 수를 줄여 나가고 있어 어려운 상황

▣ (시사점) 최근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 관점의 변화가 있어 향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은 우리 현실과 역량에 기반한 특화 분야를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지원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하고자

함

○ 연기금 등을 필두로 자산운용 수요가 증가하고,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은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 기존의 조세특례혜택 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허브를 지양하고, 부산금융중심지만의 특화된 강점을 살려 약간의 제도 보완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

○ 국제금융중심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각 지역이 가진 기회와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전략에 따라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며, 약간의 제도적 보완과 연기금 및 투자공사 등 연관된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해양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실 있는 비교우위 전략을 목표

○ 향후 해양 금융의 기반이 되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주변국 해운·물류 수요증가도 예상되며, 우리나라 선사들이 이미 글로벌 5위 수준의 선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어 부산의 해양 금융 중심지 잠재 기회는 크다고 볼 수 있음

2. 그간 부산의 금융중심지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

가. 부산 금융중심지의 추진 성과

1) 기본 인프라 구축

▣ 문현금융단지의 개발을 통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의 건립, 금융공공기관의 이전,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소 등 해양금융 특화지구 조성,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설립으로 부산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기본 틀을 구축

○ 외형상 금융중심지 부산의 하드웨어가 완성되었다고 평가

○ 해양금융종합센터는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니즈(needs) 충족을 위한 포괄적 해양금융(선박, 해양플랜트, 해운, 기자재)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양금융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양금융부, KDB산업은행의 해양산업금융부의 3개 기관이 협업하

여 서비스를 제공

○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및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부산시와 지역의 7개 금융기관·기업이 사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설립

금융중심지 계획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기본계획	도약 2020 계획, 부산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발표일자	2010.08	2015.04	2018.09
비전	국제적 선박・파생 분야 특화금융중심지 육성	세계 속의 부산금융 중심지 육성	부산형 금융모델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지
목표	1) 선박금융: 세계 시장점유율 3% ('20년) 2) 파생금융: 장내세계1위 유지, 장외 동북아 3위 이내('20년)	동북아 해양・파생금융 중심지 구축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
추진과제	5개부문 30개 과제	4개 분야 12개 과제	5개 추진전략, 15개 과제

출처: 이종필, 부산연구원 2019

2) 소프트웨어 보강

▣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양금융대학원과 부산대학교의 금융대학원이 개원

○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18년 9월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양금융대학원과 부산대학교의 금융대학원이 개원

▣ 선박금융 및 해양금융분야 액션플랜의 경우 단기 핵심사업으로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기능 부산 유치, 선박금융전문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선박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 부산 국제해운거래소의 설립, 해외 선박금융기관의 유치 등이 제시되었고, 중장기 사업으로는 수협은행의 본사 유치 등이 제시되었음

○ 이 외에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해운선사를 비롯한 해운기업이 집적한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선박금융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수협은행의 본사를 부산에 유치함으로써 수산금융산업 활성화 도모

3) 디지털화 및 국제화

▣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20년 12월 홍콩 등 국제적 금융회사 6개사를 신규 유치 예정

○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21년 9월 기준으로 33위에 위치

○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공간(D-Space BIFC)에 홍콩 등을 비롯한 국제적 금융회사 6개사를 유치하였다고 발표

○ 이러한 외국 금융회사의 유치를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도시" 육성을 기대

▣ BIFC 등 문현금융단지 입주를 기점으로 백오피스 기능에 특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콜센터 및 데이터(전산백업 포함) 센터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 해외기관 등을 유치하고자 노력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

○ 문현 금융단지 입주를 계기로 백오피스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등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여 활성화를 도모

○ 현재까지 외국계 생명보험사 및 인터넷 은행 등 콜센터 또는 백업센터를 유치하고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 또는 이전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다만 클라우드를 비롯한 민간기업 데이터센터 유치는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 단기로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 데이터 센터 유치 성과를 시현하였고, 중장기적으로 백업센터 및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노력 경주

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추진 한계

▣ 정책적 자율성 부족, 컨트롤 타워 부재 등으로 금융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이 미흡

○ 금융중심지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자리 잡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

○ 이전 금융공공기관이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부산의 토대가 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고립된 섬으로 고착된 한계를 노정

▣ 해운비즈니스클러스트 운영 등을 통한 해양기업의 유치는 기대되고 있으나,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또는 수협은행의 본사 유치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활성화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동삼동 혁신지구 및 부산항 우암부두에 대한 해양클러스트 지정에 따라 해운비지니스 관련 민간부문의 활성화 기반은 마련

○ 아직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또는 수협 본사의 유치 등과 같은 민간 선박금융이나 수산금융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정부 주도하에 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분야도 마찬가지로 서울 인프라 집중 현상의 심화로 여타 도시로의 분산이 쉽지 않은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

○ 부산이 서울을 비롯한 여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금융 및 신성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경주

▣ 지역 금융산업과 연계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화된 전문인력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

○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 정책이 아직까지 지역 금융산업의 규모, 성장, 생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 그 외 문제점으로 외국인 거주에 따른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 항목이 미흡해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는 외국어 서비스, 외국인 주거지원, 외국인 대상 법률 서비스 지원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

다.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제 및 산업수준 변화

▣ ’19년중 부산경제(GRDP 기준)를 보면 그 규모가 16개 시도중 6위에 그치고 있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5위에 불과하여 부산의 경제적 위상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 ’09~’19년 기간중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부산은 서울과 같이 경제의 서비스화가 계속 진전되었음. 그러나 부산은 사업서비스업, 보건복지업 등이 경제의 서비스화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사업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이 경제의 서비스화를 주도

▣ ’09~’19년중 서울·부산 개별산업의 전국적 위상(지역의 개별산업이 전국의 개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서울은 고부가산업인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이 월등히 높고 집적화가 고도로 이루어진 반면, 부산은 이들 산업의 위상이 취약한 모습

○ ’09년중 부산의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 생산은 서울의 이들 산업 생산수준의 3.7%, 11.8%에 불과

○ 산업특화도 변화에서도 서울의 경우 정보통신업(’19년 특화도 : 2.66)이나 금융보험업(2.10)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의 경우 이들 산업의 특화도(0.46, 1.15)가 저조한 모습

▣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핵심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산업자료를 살펴보면 ’19년 기준 금융 관련 산업체가 3,241개, 관련 종사자가 51,020명으로 나타나며, ’17년 이후 업체수 및 종사자 모두 감소 추세에 있음

다. 시사점

▣ 부산에 금융중심지로서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금융 역량 제고 전략과 기존 특화전략을 병행 추진할 필요

○ 부산이 서울을 비롯한 여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금융 및 신성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 부산 금융중심지는 서울·부산의 특화전략을 바탕으로 해양 금융 특화를 통해 시장친화적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산업을 선도할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BIFC 1, 2 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등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금융공공기관과 해양금융기관의 집적으로 금융센터로 자리매김

▣ 그러나 부산은 금융중심지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금융회사가 여전히 부족한 문제점에 직면. 다만 최근 유치하였다고 발표한 홍콩 등을 비롯한 국제적 금융회사 6개사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이 부산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부산에서 현재 소수의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또한 축소 논의 중

○ ’20년 기준 일본 야마구찌은행, 필리핀 메트로은행, 중국 공상은행의 3개 기관이 부산에 진출 중

▣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제 및 산업 수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부산의 경우 경제적 위상이 약화되는 가운데 ICT, R&D, 금융산업 등 성장주도 고부가산업의 육성은 더딘 것으로 평가

▣ 따라서 부산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주도 고부가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ICT산업, R&D산업, 금융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에서의 집적고도화가 절실히 필요

▣ 특히 금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IT와 교통수단 등의 발달이 지방 금융산업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만큼, 기존의 해양·파생금융 육성과 별도로 금융적 규제가 덜한 벤처투자 금융의 육성, 2차 공공 금융기관 유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Ⅲ.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발전 전략

1. 일반 금융중심지 사례 분석

가. 영국 런던 (City of London)

▣ 영국 정부는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핀테크 산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금융중심지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이 혁신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에 결합해 금융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장려하는 정책적 환경을 제공하여 금융과 기술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지향

○ 핀테크 관련 기술 인재의 공급이 높으며, 금융서비스 전문지식, 기업가 및 리더십 노하우를 보유한 우수한 인력풀을 구비

나. 홍콩

▣ 홍콩은 외환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질 높은 노동력과 사회적 인프라, 개방적 M&A시장,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과 규제,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통해 국제화 전략을 취함

○ 홍콩은 토지가 작고 천연자원이 부족하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재수출 무역에서 제조 중심으로 전환. 이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산업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하며 국제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는 토대 마련. 세계적인 은행센터와 외환시장, 무역경제를 보유

○ 지리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모든 지역에 접근이 용이한 교통의 중심지. 광둥성, 마카오와 함께 지역통합 발전계획인 웨강아오 대만구건설 내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서비

스업 협력구를 이뤄 금융업 강화 정책을 추진

○ 정치적으로 150년간 영국의 식민지 시대 동안 지역적 특성을 지닌 자본주의 체제를 형성. 매우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어 많은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상장할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음. 이러한 외자 유입을 통해 급속한 산업과 경제 발전과 국제 금융중심지로서 입지를 견고히 함

○ 자유로운 경제, 편리한 사업장 위치, 낮은 세율을 통해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임

다.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와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직접 규제나 전면 금지보다는 간접 규제에 초점을 맞춰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심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며, 특정 지역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R&D 허브 및 금융허브의 육성과 지역운영본부(Headquater)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해외소득에 대해 광범위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2. 특화 금융중심지

가.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는 지리적 이점, 다국화된 인구, 우수한 인적자원, 낮은 세제 및 규제 등을 통해 투자펀드, 프라이빗 뱅킹, 재보험 등 특화 금융육성을 통해 EU를 대표하는 금융중심지로 발전

○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해 다국적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현지에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 및 다양한 혜택 제공. 중소기업 투자지원금, 연구개발 및 혁신 프로젝트 보조금 제공, 기술지식재산 보호 등 지원금 제공

○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방향을 핀테크

정책으로 수립하고 핀테크지원센터 'LHoFT(Luxembourg House of Financial Technology)'를 설치하여 법인 설립 기간 최소화, 판로 개척, 기술 지원,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소프트랜딩 등 핀테크 에코 시스템 창출. 브렉시트로 인하여 80개 이상의 회사가 런던에서 룩셈부르크로 법인 이전을 진행 및 예고 중

○ 기존의 금융기관과 거래에 참여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규제는 필수적이므로, 룩셈부르크의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인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는 기술 혁신에 대한 역량과 개방성으로 맞춤형 핀테크 규제에 대응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맞춰 금융산업에서도 핀테크, 디지털 금융 관련 혁신 금융서비스, 규제 극복을 위해 노력 중, 특히 새로운 디지털 금융 산업인 레크테크(RegTech), 인슈어테크(InsurTech),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등을 받아들여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가 생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 중

○ 다양한 기업들의 유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특별과정 및 대학 설립을 통해 인재양성에도 노력중

나. 더블린

▣ 세계적 국제금융시장의 허브인 런던과 같은 시간대이며, 지리적으로 가까워 프론트업무(front-office service)는 런던에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백오피스업무(back-office service)는 아일랜드에서 세제혜택 등으로 총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더블린의 장점으로 영어 사용권, 단일 감독기구 체제와 영국 금융시스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 그리고 후선 업무를 포함한 펀드 산업에 특화된 점이 꼽힘

다. 오슬로

▣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오슬로의 강점은 부동항의 항구도시, 해운기업의 집적에 따른 해운기업 생태계 조성, K/S펀드를 비롯한 선

박금융 발달, 선박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금융관련 규제는 심한 편이라 해지펀드 등 민간금융은 크게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김명희, 이기환, 양혁준, 2016)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선박의 가치 하락 및 선박대출 관련 리스크 증가로 선박금융 비중을 축소*하고 있지만 여타 상업은행에 비해 큰 규모의 선박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 중

* DNB의 선박금융 익스포져는 2016년말 210억 달러에서 2019년 현재 69억 달러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감소

○ 아울러 취득세, 등록세 등 등록관련 제반비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선박 치적제도(NIS : Norwegian International Ship Register)를 도입

○ 노르웨이의 K/S 펀드는 독일의 KG펀드와 함께 대표적인 선박펀드로 알려져 있으며, 활성화된 해양금융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세계 선대 보유율은 세계 7위 수준 (Clarkson, world fleet monitor, 2015.6). 해당펀드들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투자성향으로 유명

▣ 오슬로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녹색성장 관련 투자가 활발한 도시로, 교통망/전략 및 경제발전 기조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틀 속에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도시로 평가

라. 오사카

▣ 오사카가 목표로 하는 국제금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작년 12월 23일 오사카부・시, 경제단체(간사이 경제연합회, 오사카 상공회의소, 간사이 경제동우회)는 “국제금융도시 OSAKA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21년 3월 29일 “국제금융도시 OSAKA 추진위원회”가 설립됨.

○ 오사카는 비즈니스・생활면에서 강・약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업자 및 투자자 등의 수요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나 각 단체, 경제계, 행정기관 등에서의 각각의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마. 중국의 금융중심지들

▣ 중국은 넓은 국토만큼 다양한 금융중심지를 가지고 있으며 GFCI 29 기준 부산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도시가 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 청두 등 6개가 있음

○ 상하이는 GFCI 29에서 전체 114개 도시 중 3위를 기록. 중국 현대금융산업의 발상지로 1843년 개통 이후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로 자리잡음. 은행간 대출, 금/은 시장, 채권시장 및 기타 금융시장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금 시장 거래량은 뉴욕과 런던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음

○ 상하이시는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과 함께 장강 삼각주 도시그룹을 구성하여 우월한 지리적 위치, 방대한 도시 규모, 발달한 교육 및 과학 기술, 편리한 교통 운송, 광대한 경제 배후지를 활용하여 내외 영향력을 증강하고 중국에서 가장 먼저 글로벌 도시군으로 진입. 향후 장삼각지역 발전을 위한 국제자금 유치 및 배분, 과학기술 혁신, 프리미엄 산업 선도 기능을 강화할 계획

○ 베이징은 GFCI 29에서 전체 114개 도시 중 6위를 기록, 런던이나 도쿄와 같이 수도경제권 내 도시로 수도가 지닌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금융산업 발전. 중국의 대표적 금융기구인 일행삼회, 4대 국유상업은행, 3개 정책성은행, AIIB, 대형 증권・보험회사 본부 등 주요 금융기관이 소재

○ 2015년 베이징은 금융업 중 보험서비스에 대한 발전의견을 별도로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보험서비스의 사회 안정장치 역할과 경제 발전의 보조적 역할을 강화하는 업그레이드 전략을 적극 추진. 보험업 혁신과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수도 보험업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

○ 2017년 4월, 베이징에 인접한 곳에 웅앙신구를 설립하여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해체와 함께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꾀함

○ 선전은 GFCI 29에서 전체 114개 도시 중 8위를 기록,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선두 주자로서, 강력한 혁신 모멘텀과 분위기로 해

양도시에서 1천만 명 이상의 상주인구를 가진 국제도시로 발전. 하이테크, 금융, 물류, 문화 및 기타 기둥 산업이 급속한 발전의 기초가 됨.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선정되었으며(1979년), 2007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로 성장하여 중국 내에서 가장 부유하며 현대화된 도시로 성장

○ 선전은 지리적으로 홍콩의 바로 위쪽에 위치하여 언어·문화적으로 동질감을 형성함. 따라서 홍콩과 깊은 상생관계로 세계 수준의 금융중심지로 도약

○ 선전은 중국 인터넷 금융의 주요 집결지 중 하나로, 각 전통 금융기구는 계속해서 인터넷 금융을 배치, 인터넷으로의 전환, 업무의 인터넷화 발전을 가속화 함. 이를 통해 소액 대출, P2P 및 기타 새로운 인터넷 소액대출산업이 발전. 또한 선전경제특구의 녹색금융규정을 발표하여 중국 녹색금융분야의 첫 번째 지역 규정이며, 국제 녹색 금융의 최첨단 연구결과를 배우고, 선전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시범지역 건설의 새로운 개혁 및 입법 혁신을 수행하며, 많은 분야에서 국가 및 국제 녹색금융분야의 선구자를 개척하고, 선전에 새로운 녹색산업의 발전과 전통산업의 녹색화에 더 도움이 되는 금융 생태환경 및 법률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장함

○ 광저우는 GFCI 29에서 전체 114개 도시 중 22위를 기록,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선두 주자로서, 강력한 혁신 모멘텀과 분위기로 해양도시에서 1천만 명 이상의 상주인구를 가진 국제도시로 발전. 하이테크, 금융, 물류, 문화 및 기타 기둥 산업이 급속한 발전의 기초가 됨.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선정되었으며(1979년), 2007년 1인당 GDP가 1만달러로 성장하여 중국내에서 가장 부유하며 현대화된 도시로 성장하였음

○ 광저우는 인접 지역과의 연계 등을 통해 기존의 지역중심, 제조업 중심 기반에서 그레이터 베이 지역(Greater Bay Area)을 연계한 제조업, 서비스, 글로벌 중심지 역할을 강화

○ 광저우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비해 금융회사의 집적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톈진, 지안 등 북부

지역의 금융중심지 확대에 따른 경쟁에도 직면해 있지만 광동-홍콩-마카오를 연결하는 그레이터 베이 지역(Greater Bay Area)을 세계 4위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충

○ 광저우는 상하이 등 정치경제 중심지와 차별화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타 역내 금융중심지와 차별화. 난샤 지구를 중심으로 한 기술금융 및 선박금융에 특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등 신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중심의 산업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유치 전략을 병행

○ 청두는 GFCI 29에서 전체 114개 도시 중 35위를 기록, 청두가 있는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를 내륙으로 확대하고,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

○ 청두는 중국 중서부 지역의 교통거점이자 물류허브의 기능을 수행함. 중국 서부의 최대 공항인 쌍류국제공항, 청두에서 출발하여 유럽과 이어진 철도 운송망, 창장 내륙수로 운송을 담당하는 64개의 항만, 동부 연안지역까지 이어진 도로망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차세대 정보기술, 장비 제조, 자동차 제조, 항공우주, 신재료, 생물의약, 현대서비스업 등에 특화된 산업 밀집지역

○ 아직까지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는 설립 초기로써 입주기업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외자기업의 경우 다양한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륙지역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능 전환, 상호 투자협력, 무역자유화 및 편리화, 금융 혁신, 대외 개발 협력 및 지역개발, 첨단산업 창업의 6개 주요 정책을 펼침

바. 각국의 ‘제2금융센터’와 ‘기능형’ 금융도시

1) 제2금융센터: 해당 국가의 주요 금융센터보다 규모가 작지만 종합적인 금융 기능을 가진 도시

▣ 멜버른(호주): 주요 금융센터인 시드니에 비해 인구(시드니의 96%)와 GRP(시드니의 80%)는 작지만 경제의 성장성이 높으며 경제 규모 국내 2위로 4대 은행 중 두 은행이 본점을 두는 등 대형 금융기관이 시드니와 동등하게 사업을 확장하는데 주력해 왔음

○ 그 결과, 금융・보험업의 국내 고용자수 가운데 27%를 멜버른이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호주에는 기업에 임금의 일정액 각출을 의무부여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존재하는데, 멜버른에는 퇴직연금기금 중 가장 큰 Australian Super 등이 존재함. 이들 기금의 운용자산은 GRP 대비 140% 이상까지 증가했으며, 그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조언회사도 집적되어 있음.

2) 기능형 금융도시: 특정 금융 거래 및 금융 관련 업자가 집적하는 도시

▣ 시카고(미국): 미국 제3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시카고는 파생상품 시장이 발달

○ 역사적으로 거래소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증권/상품 중개업자가 다수의 고용을 창출함.

▣ 에든버러(영국): 에든버러는 자산운용업자가 집적된 기능형 금융도시임.

○ 영국에서는 금융도시로서 런던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지만 에든버러는 다른 도시에 비해 투자・자산관리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에든버러에서는 전체 고용자의 10% 정도가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음.

▣ 밴쿠버(캐나다): 밴쿠버는 벤처캐피털의 움직임이 활발한 기능형 금융도시임.

○ 밴쿠버가 벤처캐피털의 거점인 배경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투자자에 대한 세제나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이 있음.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내의 적격투자가에 대해 투자액의 30%(최대 연 12만 달러)의 환급형 세액공제 부여

○ 독자적인 기술의 R&D나 쌍방형 전자매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요건.

▣ BC Tech Fund

○ 2016년에 창설된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설립한 약 1억 달러(캐나다 달러)의 펀드이며, 투자회사 Kensington Capital Partners가 관리(同사도 동액 공동출자)

○ 지방에 소재하는 테크놀로지 기업의 펀딩지원과 동 기업의 고용창출 등이 목적

○ 민간기업, 민간 벤처캐피털 모두 출자

사.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에의 시사점

▣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으로 우선 '제2금융센터'로 자리매김하되 특정 분야에 특화하는 '기능형' 금융중심지 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특히 부산은 지리적 특성과 강점을 살려 해양 및 선박 금융중심지로 특화하되 핀테크 및 데이터 산업, 나아가 친환경 및 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활성화 하는 기능형 금융중심지로 나아갈 필요

○ 부산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오슬로와 같이 선박 및 해양금융 중심지로 특화

○ 룩셈부르크와 더블린 같이 핀테크 및 데이터 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발전을 도모

○ 중국 도시와 같이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 도시와 함께 연합을 통해 통합 발전 및 균형 발전을 추구

○ 나아가 친환경/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 오슬로는 실제로 항구도시이면서 금융중심지로 위상이 높은 독일 함부르크, 그리스 피레우스,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등과 더불어 해양관련 선박금융 육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룩셈부르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맞춰 금융산업에서도 핀테크, 디지털 금융 관련 혁신 금융서비스, 규제 극복을 위해 노력

○ 특히 룩셈부르크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산업인 레그테크(RegTech), 인슈어테크(InsurTech),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등을 받아들여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가 생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

○ 룩셈부르크의 금융 서비스 규제기관인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는 기술 혁신에 대한 역량과 개방성으로 맞춤형 핀테크 규제에 대응

▣ 중국 금융중심지를 살펴보았을 때 부산 또한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 도시와 함께 연합을 통해 통합 발전,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오슬로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녹색성장 관련 투자가 활발한 도시 중 하나이며, 교통망/전략 및 경제발전 기조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틀 속에서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것과 같이 부산 역시 친환경 및 녹색성장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킬 필요

▣ 지방금융도시의 형성이 갖는 장점을 검증하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서울에 금융기능이 집중된 경우 재해 시 금융 기능 대체와 지방경제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방금융도시를 형성하는 의의를 검증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실시할 필요

Ⅳ. 바람직한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및 부산형 모델

1. 바람직한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가.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 방향

▣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 현재의 부산 금융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금융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이 긴요

▣ 게임 체인저로서의 "근본적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정부·국회·서울·부울경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조세, 의료, 교육, 금융규제 등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 및 부산에 추가적인 법적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자체가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

▣ 다만, 근본적인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을 위주로 추진전략 마련

1) 부산의 지리학적, 정책적 이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선진화 정책 방향: 금융산업의 발전 지원

▣ 서남아, 중동, 동남아, 중국, 일본, 미주 등 동서양을 잇는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서 해양 및 선박금융 국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략 제시

○ 해양, 파생, 기술금융에 특화된 공공기관 및 금융기업들(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해양진흥공

사,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시너지 효과 유도가 가능한 전략 제시

▣ 특히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된 금융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시

○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를 통한 혁신기업 유치 전략 제시

○ 대한민국에 2개뿐인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랩 중 하나인 '부산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랩'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기업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통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 및 전략 제시

▣ 핀테크 산업, 비대면 금융 등의 발전이 금융회사의 물리적 이동 필요성을 낮출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핀테크 회사 지원 플랫폼 마련, 핀테크 기업 클러스터 구성, 적절한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지원 등 핀테크를 체계적으로 투자 및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매력적인 핀테크 기업 생태계 조성 필요

○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창업활동 및 새로운 핀테크 산업을 장려하며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전략 제시

○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관련 규제 완화방안으로 ICO 활성화 추진

▣ 금융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음

○ 금융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조직 혁신 방안으로 부산광역시청 내 '금융/기업지원실' 설치방안과 회사 설립부터, 운영, 이전, 현황조사, 분석, 상장 등을 위한 One-Stop 조직을 설치

○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형 벤처 캐피탈의 역할 강화

○ 해양금융 선진화 및 해양진흥공사 역할 강화

○ 파생금융 및 녹색금융 활성화

○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를 통한 혁신기업 유치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창업 활동 및 새

로운 핀테크 산업을 장려하며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전략

○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관련 규제 완화방안으로 ICO 활성화 추진

2) 국내외 우수한 기업이 모여들 수 있는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 금융회사의 집적 촉진

▣ 부산 금융중심지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기반으로 금융중심지 붐을 조성해 일반회사 및 금융회사들을 부산에 유인할 수 있는 전략 제시

○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win-win할 수 있는 부산지역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 제시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민간금융회사와 해외금융기관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정책 제시

▣ 금융회사의 집적 촉진을 위한 추진과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음

○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조화를 통한 부산형 모델의 일환으로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모태펀드 단계별 조성 및 운영

○ 국내 금융 및 일반회사 유치와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 선박금융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 유치를 통한 외국계 금융회사 집적 촉진

3) 경제주체간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 강화: 정책 자율성 부여

▣ 바람직한 부산형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부산시, 부산 소재 기업 및 시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협업이 필수

▣ 중앙정부는 전폭적인 법 개정, 세제 및 금융중심지 담당 조직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지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금융중심지정책과 관련 하여 부산시에 정책적 자율성을 대폭 부여(또는 위임)할 필요

▣ 부산시도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활성화되고, 신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집적 효과가 구현되는데 금융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정책, 교육 및 인력관리 정책, 정주여건 개선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연구개발 부문 활성화와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 간의 전향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실 향상에 노력해야 함.

○ 특히 디지털 금융 특성화 교육을 통해 국내 및 부산의 디지털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관련 금융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제시

▣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정합성 제고와 부산 금융중심지 신인도 향상 및 위상 강화 노력 경주

▣ 금융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부산형 모델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방안
○ 국제 금융전문인력 양성
○ 대체거래소 부산 설립 방안
○ 금융인프라 국제정합성 제고

다. 부산 금융중심지에 적합한 벤치마크 전략

▣ 부산이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역할 분담 및 민관협력 강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조화로 부산지역 금융 및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부산의 산업구조와 연계된 자생력 확보,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 1단계는 공공기관의 이전 및 유치,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 및 여건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온 것이 특징

○ 2단계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정착 및 업무기반 강화를 통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조화를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민간부문의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고려 및 지원, 그리고 역외 수요의 충족과 금융중심지의 대외적 위상 및 글로벌화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해 나갈 필요

○ 2단계 활성화는 1단계의 정부 주도, 공공부문 주도, 산업정책에 의한 보완 역할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협업 강화, 상업적 주재의 강화, 기존 기관의 업무 및 서비스 활성화, 지역경제와의 연계 등 점진적,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

라. 금융중심지 정책 및 추진체계 개선 방향

1) 금융중심지 정책 이슈

▣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금융중심지 정책과 발맞추어, 서울, 부산이 개별적으로 중심지 정책을 추진하되, ‘블루오션’ 분야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레드오션’ 분야에서는 특화전략을 추진하는 등 서울, 부산의 win-win 기반을 조성

▣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 정책목표만을 위한 세제 및 고용제도 개편에 한계가 있는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창의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지역금융기관은 지역중소기업과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관계형 금융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국단위 금융기관보다 유리한 위치

▣ 특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 등을 검토하여 핀테크, 블록체인 등 IT기반 금융혁신을

반영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제시

○ 핀테크의 성장은 우리나라 경제, 기업, 금융발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핀테크 성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지닌 엑셀러레이터 육성방안을 제시

2) 금융중심지 추진체계 개선 방향

▣ 대통령 직속의 '금융중심지 추진 위원회' 설치 및 각 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강력한 추진 동력 확보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역량 강화

○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분산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과 금융중심지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

마. 금융중심지법을 특별법 형태로 개정

▣ 현행 금융중심지법이 제도와 지정절차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규정들은 다른 법에 두고 있거나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

○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을 전제로 동 법률에서는 법률 목적을 달성할 방안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력이 약화

○ 금융중심지 조성을 담당할 전담조직이 없고 인허가 의제 등 규제완화 사항, 재정 및 세제 지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동 법률만으로는 소위 금융특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한계

▣ 2020년 7월 박수영 의원은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금융특구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발의

○ 금융중심지법 법률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

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법령에서 배제 및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며,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금융특구청을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금융회사 인허가 규제’가 핵심임을 감안, 단계별로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되, 금융중심지 내 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법에 인허가 의제규정 등 법·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적절

○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제11조에서는 36개 개별법률에 따른 각종 인가·허가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가·허가를 의제함으로써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국내의 금융중심지 관련 조세특례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여건 및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

○ 법인세 또는 소득세 혜택 대상은 2021년 12월 말까지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위 금융특구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최적 조합 모색

가.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1) 필요성

▣ 금융중심지는 금융관련 투입, 산출, 환류 등 전반적인 부가가치 생성과정이 지역 내에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생태계*이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우 금융공기업이 주로 집적되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

태계 조성은 부족한 상황

* 자금조달, 회계/법무/전산 등 백오피스 집적과 인력양성 기반이 갖추어져 지역 내에서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

○ 부산지역산업의 자금조달은 정부보증, 대출 등 지원적 성격의 자금이나, 간접금융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수도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자금조달 구조는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의 진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역 내에서 자금의 순환을 통한 금융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도 한계요인으로 작용

▣ 부산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부산형 모태펀드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검토할 필요

○ 2000년대 초반 중소·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행한 모태펀드는 주로 중앙정부 주도하에 운영되며, 투자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경우 중앙정부의 모펀드에 시비를 매칭하는 정도의 소극적 개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 지역의 산업현황을 이해하고 자금공급이 필요한 영역에 선제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모펀드를 기획, 운용, 관리하고, 지역의 투자이력과 금융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

▣ 지역의 성장전략에 부합하는 자금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현황 파악과 교육을 통해 자본시장과 산업현장의 거리감을 좁혀나가는 역할도 필요

2) 국내 모태펀드 현황과 부산금융중심지에 적합한 모태펀드 형태

▣ 국내 모태펀드 현황

○ 모태펀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아닌 펀드에 출자하여 투자위험을 줄이며 동시에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며, 정책

측면에서 자금의 수요처에 대한 투자재원 공급, 정책적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함

○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모태펀드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5년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와 성장사다리펀드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있음

▣ 부울경 모태펀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운영구조, 출자규모, 부울경 지원 방안 등

○ 기존 펀드 정비: 기존 펀드 가운데 신성장 산업과 관련한 펀드 선별 및 통합

○ 모태펀드 및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 추진 T/F 및 투자운영위원회 구성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

○ 펀드 조성 및 운용 추진

▣ 부산금융중심지에 적합한 모태펀드 형태

○ 부산 금융중심지의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투자공사 설립이 필요

○ 모펀드의 투자기구 설립 근거법 규정에 따라 투자의 범위, 운용주체 등이 상이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비교검토가 필요

- (1안) 자산운용사 : 모태펀드의 투자기구 형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자산운용사로 하는 경우 투자대상(인프라, 대출펀드 등 투자가능), 방법 등에 제약이 적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함으로써 설립이 가능함

- (2안) 벤처투자조합 : 모태펀드의 투자기구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는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벤처투자조합으로 투자대상이 한정됨. 또한 투자기구의 설립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모태펀드가 존재하므로 부울경 모태펀드를 신설하는 경우 인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벤처투자조**

합형태로 부울경 모태펀드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세제상 차이도 있으며, 모태펀드 설립의 목적, 향후 투자의 확장성 등을 고려해 투자기구의 법적성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투자금융공사의 조직 구조 및 주요 역할

▣ 부울경 모태펀드의 거버넌스 체계는 한국성장금융과 유사하게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운영위원회'를, 운영을 위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부울경 투자금융공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부울경 모태펀드의 기본 운영방향은 '투자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며, 동 위원회는 투자대상 검토 및 승인을 비롯하여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은 부산시 내부위원을 비롯해 부산시의 전략산업 분야 전문가, 학계 및 금융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 부울경 지자체는 부울경 모태펀드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펀드의 전반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 부울경 지자체는 '투자운영위원회'와 '부울경 특별금융회사'에 지자체의 의견을 전달하며, '투자운영위원회'에 참석

○ '부울경 특별금융회사'로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를 구비하여 효율적인 펀드 운영 체계 확립

▣ 투자금융공사는 모태펀드의 결성, 투자 및 운영을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기관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

○ 세부 운영계획 수립, 자산운용, 부산시의 정책방향과 투자자의 니즈를 고려한 펀드 조합 및 투자상품 개발, 컴플라이언스 준수, 출자금 회수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

○ 인력구성은 투자관리 전문기관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경험과 연속성, 전문성 있는 인력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며, 부산시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정보력과 함께 펀드 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고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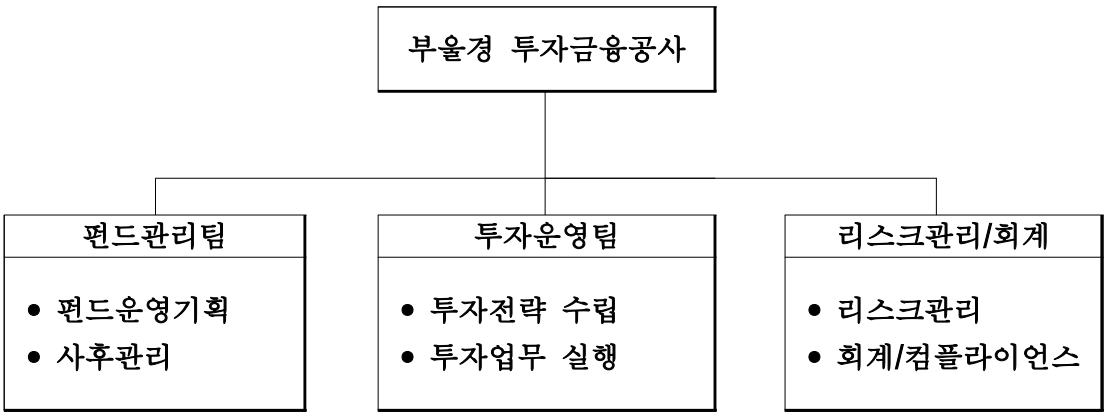
▣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펀드 조성

4) 펀드의 조성 및 운영

▣ 모태펀드의 운영 효과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섹터, 성장단계 등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산의 산업구조를 보면 성장단계 중 초기기업 뿐만 아니라 중기·후기 기업들도 자금의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창업에서 성숙, 구조조정까지 기업의 사이클에 모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지역의 금융생태계 조성측면이나 펀드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임

○ 한편, 투자의 대상 섹터도 해양·선박 등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측면을 고려해 다양화 추구



▣ 모태펀드 포트폴리오 제안

① 벤처투자형 모태펀드

○ 다양한 창업동아리 및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1단계로 출자규모 100억원의 벤처투자형 모태펀드 설립

-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재원 공급은 1단계로 부울경 관련 지방정부가 하되, 투자의사결정은 전문기관인 가칭 “부울경 기업금융투자”가 담당

○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부울경 대학교/금융회사/기업 등 출자 분야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고려

② 기업구조조정 모태펀드

○ 특히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연평균 25% 내외의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어 투자대상 다양화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일 뿐 아니라 향후 그 투자비중도 확대될 전망

○ 최근 정부가 모태펀드의 기업구조조정조합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 운용규정 개선방안*에 따라 구조조정 분야에 대한 투자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

* 취약분야 구조조정 투자의 경우 출자 한도 상향(기존 30%->50%)
* 출자심의위원회에 구조조정 전문가 참여
* 구조조정분야 투자심사인력 강화등

③ 해양금융 모태펀드

○ 부산시가 주축이 되고 부울경이 통합으로 설립하는 모태펀드는 해양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펀드이되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태펀드와 지원 산업이나 방법 등에서 차별화할 필요

○ 해운업은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많은 자본이 소요되어 해운기업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벤처업계의 풍부한 자금이 부산의 해운업계로 공급될 수 있도록 부울경 모태펀드의 해양 부분 지원이 필요

○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울경 모태펀드의 일정 금액 이상이 해양금융 활성화의 수단으로 해양 분야에 투자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

5) 자금운용 방안

▣ 자금의 조성

① 규모와 방법

○ 부산 금융중심지 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산형 모델의 첫걸음으로 부울경 통합 2천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

- 현재 운영중인 펀드를 하위펀드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신규의 하위펀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

  * 기존 부산시가 운영중인 펀드 규모(모태펀드 출자분 제외)가 약 2,500억원인데 이 가운데 신성장 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선별하여 통합하고, 신규로 2,000억원 규모 조성

○ 먼저 부울경 모태펀드 조성을 위해 부울경에서 65억원*의 신규투자를 초기연도에 시행하고, 다른 민간금융회사, 금융공기업 등이 유사한 규모로 매칭해서 시행 초기연도에 13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수행하되, 10년에 걸쳐 2천억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전략

  * 2014년 계획되었던 서울 희망펀드의 경우 신규 총투자금액 200억원인 점(서울시 출자액 80억원), 부울경 통합 지역내총생산이 서울의 65%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설정 (2019년 부울경 GDRP 281.688조원, 서울 435.927조원)

○ 총 2천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연차적 투자규모를 펀드 진행상황을 고려하되 펀드가 잘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음; 첫 2개년 130억원, 그다음 2개년 130억원의 10% 증액 투자, 그다음 2개년 직전 규모의 20% 증액, 그다음 2개년 직전 규모의 30% 증액, 그 다음 2개년 직전 규모의 40% 증액 순으로 10년에 걸쳐 총 2천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 부울경과 민간 등의 출자 비중은 연도별 투자액의 50% 유지

○ 향후 펀드 진행상황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가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음

② 자금조성 대상

○ 기존 펀드 가운데 선별하여 통합하고 관련 기금을 바탕으로 출자금을 마련하고 부울경 이외의 기관으로 연기금, 공공기관, 공제회 등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와 민간을 포함할 필요

○ 부산시 산하기관을 통해서 지자체 기금을 출자하되, 부산시 출자부분은 투자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구조로 펀딩

○ 가칭 '부울경 기업금융투자'의 설립을 위해 금융공기업의 출자를

유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

③ 추가적 자금 조성

○ 지속적인 자금 조성을 위해 성공사례를 만들어갈 필요

- 과거 성장사다리펀드의 초기 펀딩이 크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라는 점을 거울삼아 가칭 '부울경 기업금융투자' 도 부울경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펀딩이 필수임
- 연기금 등 추가 자금의 출자를 위해서 펀드 자체적으로도 은행, 민간기업의 자금을 유치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함
- 부산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BNK금융그룹과 같은 지역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회원업체의 펀드 참여를 유도할 필요

▣ 자금의 운용 및 회수

① 펀드 존속기간

○ 모펀드는 부산의 산업정책에 따라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존속기간은 20~3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시장여건에 따라 출자 규모 및 비율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회수된 투자자금은 이익금은 분배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재투자 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자금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

② 운용

○ 지역 업체들의 성장단계, 성향 등을 고려해 투자(출자)와 융자(대출) 모두 가능하도록 설정

③ 회수

○ 중도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에 대한 투자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회수하는 경우가 아닌 개별적인 중도환매는 금지하도록 함

▣ 자펀드 활성화 방안

○ 앵커펀드 와 매칭펀드

- 운용 규제를 최소화해 운용사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
- 정책목적이 강한 펀드의 경우 모펀드 비중을 높여 자펀드 출자자들의 부담절감 필요
- 매칭펀드는 운용규제를 줄이고 자펀드의 출자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유도

○ 지속사업에 대한 시그널을 통해 민간참여 유도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의 설립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민간 운용사들에게 해당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메가시티 전략에 부합하는 금융 생태계 조성 노력
-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에 부합하여 펀드 투자의 지역·산업 제한을 조정하여 투자대상을 넓히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자펀드 운용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 필요

6) 타 시도 및 해외사례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BC)주의 약 1억 달러(캐나다 달러, 약 925억원) 규모인 BC Tech Fund의 성공적 운영을 벤치마크하여 부울경 모태펀드 설립에 참고

○ BC주*의 주도인 밴쿠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캐피털의 움직임이 활발한 기능형 금융도시

* 2019년 기준 BC주의 지역내총생산규모는 309,059 mil. CAD, 약 3091억 CAD로 271.77조원 (연평균환율 0.7536 *1166.72)

○ 2016년에 창설된 BC Tech Fund는 BC주와 운영을 맡고있는 투자회사 Kensington Capital Partners가 매칭형태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펀드

○ BC 기반 벤처 캐피탈 펀드 및 BC 지역에 소재하는 신기술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이 목적

▣ 싱가포르 TIF <모태펀드형태의 서울형 신성장동력 희망펀드 조성방안연구, 한국채권연구원, 2012>

○ 특징
- TIF는 1998년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인재와 자금을 싱가포르로

유입할 목적으로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10억달러의 모태펀드 형태로 조성되었음. TIF는 TIF Ventures와 싱가포르 투자공사(GIC: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에 의해 관리됨

○ TIF는 아래의 투자유치기업 및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하위펀드를 결성하여 투자를 시행하였음. 싱가포르는 많은 해외 벤처캐피탈을 자국으로 유치하여 홍콩과 더불어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의 아시아 거점으로 성장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 희망(경제)펀드는 매칭펀드 형태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로 1호부터 4호까지 조성

○ 지역펀드의 특성상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내 기업우선투자를 조건으로 손실금 우선충당이라는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경창업투자(주)가 수도권 기업 일변도로 투자하고, 그 손실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우선적으로 떠안게 되는 결과 초래

○ 2016년 11월 기준 대구시와 경북도가 부담하게 된 누적 손실금의 규모는 약 22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반면 대구지역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삼성 C-Lab으로 6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지역의 대표 창업육성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으며, 성공 원인은 우선 삼성전자와 같은 우수한 글로벌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가 주요한 원인이나 그 밖에 지자체가 창업기업 선정 및 투자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투자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시 전담인력의 연속성에 기인

○ 2015년부터 시작한 지역 최초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초기창업기업육성(C-Lab) 사업은 전용투자펀드(C-펀드)를 기반으로 한 투자연계형 보육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대구혁신센터가 운영

○ 삼성과 대구시가 지난 2014년에 조성했던 청년벤처창업펀드 200억원이 5년에 걸쳐 투자 완료됨에 따라, 2019년 2단계로 120억

원을 추가 조성(대구시와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각각 20억원을 3년간 출자)

○ 지역의 혁신·창업기업 발굴·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 부품, 전장 회사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

▣ 부산 모펀드 조성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되 지자체는 펀드 자금을 제대로 모으는 데 역할의 초점을 두고, 투자의 지속성 및 성과관리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지역의 전담기관 설치가 필요

○ 지방정부가 무조건 중앙정부를 따라가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처 선정*

* 중앙정부가 내세우는 4차산업혁명 관련이나 뉴딜펀드 등에 무작정 동조하기 보다는 부산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 (해양물류, 데이터센터, ESG, 금융 등 고려할 수 있으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분야를 면밀히 선정)

○ 지자체의 역할은 GP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펀드 자금을 모으는 데까지로 국한해야 함

○ 벤처캐피탈에 대해 지역 기업 집중투자 미션을 부과하는 등 이러한 동향은 장기적으로 성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지역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한 글로벌 벤처캐피탈이 중요한데 지역 자체가 커져야 생태계가 선순환되기 때문

○ 지자체가 단기실적에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에 전담기관 설치가 중요

나. 지역특화형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방안

▣ 영국정부는 개별 지역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투자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2002년부터 지역기업 전문 VC 투자조합인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 이하 ‘RVCF’)에 참여 하였음

○ RVCF는 각 지역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담보대출이 아닌 직접투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 영국정부와 민간부문의 출자, 그리고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이하, ‘RDA’)의 지원을 토대로, 잉글랜드 9개 Region별로 RVCF가 2002~2003년에 결성되었고, 2015년까지 운용되었음

○ RDA는 RVCF에 출자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내 구축된 자체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RVCF 운용주체인 펀드매니저가 RVCF 결성을 위해 전개하는 민간투자 유치활동을 지원

▣ RVCF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연기금, 민간투자자, VC 회사 등과의 공동출자를 통해 부산기업 전문 VC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VC 회사에게 전담 운용을 맡김

○ 영국정부가 RVCF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의 안정성을 모도하기 위해 자체 투자자금으로부터 얻을 수익에 한도를 부과한 점을 주지할 필요

▣ 부산지역 또는 조선·해양 전문 VC 투자조합에 대한 한국벤처투자의 출자 확대와 함께, 부산시 재정자원 투입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VC 투자조합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므로 출자된 부산시 재정자원은 회수될 수 있으며 다시 사용될 수 있어 보조금과 달리 일회성의 집행으로 끝나지 않음

○ 부산형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산시 정책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중앙정부와 부산시 간의 협약을 통해, 부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받는 보조금을 활용해서 부산 지역내 중소·벤처기업 전문 VC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다. 선박금융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 유치 방안

▣ 수익기회가 있으면 부산 금융중심지가 발전하고 외국 금융사가 자연적으로 유치됨에 따라 다양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제시

○ 그러나 기존 연구 검토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험 관리가 강화되고, 조세피난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고조 등으로 인하여 기존사례를 부산 해양 금융 중심지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

○ 2014년도에 도입된 서울 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동 시장은 한국과 중국 간 수출입 교역 및 역외 자본거래를 바탕으로 일일 약 20억불이 거래되는 큰 시장으로 성장

- 이는 정책기관의 지원과 시장조성자 금융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창출한 대표적 사례

▣ 1) 해양 선박업무의 끊어진 맥을 연결하는 해운 및 선박금융의 핵심 서비스의 제공 2) 부산 금융중심지는 원화 역외 금융허브로 특화 검토 3) 부산 금융 중심지는 원화 금융허브를 중심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금융허브 역할을 보완적으로 담당

○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부산 해양 금융중심지가 해운 서비스 및 선박금융 업무의 일부분만 제공된다면, 금융중심지 활성화는 어려움

○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이미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선박 수출 실물금융은 경상거래임에 따라서 부산을 역외 원화금융 허브로 특화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이미 운영중인 서울 위안화 직거래 시장과 중국의 금융특구와의 연계한 원화-위안화 직거래도 가능

▣ (기대효과) 1) 부산 역외원화 금융허브는 그간 해운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비용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금융 가격경쟁력 개선 2) 정부는 부산 금융 중심지를 역외 원화 금융허브로 지정함으로써 약간의 정책조정만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별화된 해양 금융 서비스 제공 가능 3) 조선-선박운용-선박금융-글로벌 시장이 연결되는 일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일부 단절된 업무 분야에 신규 진출 4) 우리나라 해양 선박 금융의 여건은 우수하나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과 해양 선박 금융 및 서비스 업무가 취약한 상황으로 다양하고 일관된 선박 관련 업무를 추진

(개선방안)

▣ **부산 금융중심지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 선박금융은 선박의 등록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포함하는 업무임에 따라 제주선박등록특구에 추가하여 부산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여 병행 운영이 필요

○ 부산을 추가로 선박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국적 외항선이나 외국 선박 등이 부산지역에 등록할 경우 현재 제주선박특구와 동일하거나 나은 수준의 세제혜택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

○ 아울러 조세지원의 일몰제를 개선하여 우리나라에 등록한 글로벌 선사들로부터 정책 일관성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

-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7위 선박소유국가임을 감안할 때 검토해 볼만한 방안 (World fleet(2018)-IHS data)

▣ **부산 금융중심지 해양 선박 편의치적 나용선 등록제도 도입**: 향후 동북아 및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교역 증가로 선박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파나마, 그리스와 같은 글로벌 선박등록국으로 발전의 디딤돌을 선제적으로 마련

▣ **선박 매매 청산업무(ship closing) 및 선박 매매 중개, 관리업무 도입**: 선박은 글로벌 선박 운임지수에 따라서 신조 및 중고선 매매가 매우 활발함에 따라 부산 금융 중심지 선박등록특구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선박의 매매 중개와 선박의 등기변경 및 선박금융으로 조달된

자금의 결제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선박 매매 청산업무(ship closing) 및 선박 매매 중개, 관리업무 도입

○ 글로벌 선박금융 중심지에서는 일상화된 업무이고, 이미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처리된 사례도 있어 선박등기소, 선사, Ship Broker, 은행, 법무법인, 선급협회 협업만으로 업무 진행 가능

○ 해운시장은 화물운송시장, 선박매매(S&P, Sales & Purchase)시장, 신조선시장, 해체선시장 등 4대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 업무 도입으로 선박금융의 일괄 서비스 제공이 가능

▣ **해외 대사관의 영사확인 업무 지원**: 선박의 매매는 법률적인 권리 행사임에 따라 선박 매매 당사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본인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영사 확인이 필요

○ 선박등록특수제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법무법인의 요청에 따른 우리나라 해외 영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협력이 절실히 요구

▣ **부산을 선박금융에 한해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로 지정**: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부산 해양 금융 중심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산 금융중심지의 선박금융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비거주자의 원화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금융경쟁력 강화

○ 원화 금융은 자국통화임에 따라 우리나라 조선소 및 선사 입장에서는 국제통화 대비 유동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

▣ 부산 금융중심지에서 거래되는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자금용도와 총액 한도를 제한하여 운영함으로써 비거주자의 원화거래 따른 외환시장 변동위험의 최대치를 제한할 수 있음

○ 부산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외환매매, 위험관리 및 자금결제 등)는 상해 역외원화 직거래 시장 및 서울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구축-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단기간에(1~2년 이내) 구축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부산 해양 원화금융중심지 내의 거주자 적격금융기관 및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원화로 채권발행(가칭 ‘태권본드’, 또는 ‘거북선본드’)을 허용하여, 거액의 장기 선박금융에 활용

○ 기존 글로벌 경쟁시장의 선박금융 사례를 보면 은행을 중심으로 국제 차관단 여신이나 유로본드 발행 및 다양한 펀드투자자를 포함

▣ 또한 부산 해양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 및 외국 적격금융기관들에게 증권인수기능을 부여하여 위의 가칭 ’태권본드 또는 거북선본드’를 포함하는 대출금 주간사 및 증권의 인수 및 매각하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함

○ 현재 증권사 및 산업은행에게만 허용된 국내 및 해외 발행 증권(채권) 인수 권한을, 부산 해양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적격 해양금융 취급기관에게 선박금융 자금용도를 제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필요

▣ **원화금융과 위안화 금융의 상호 연계**: 부산 금융중심지는 수출입 거래에 위안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다양한 금융교류가 활발함에 따라 위안화 금융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한국 위안화 시장 활성화를 도모

○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와 유로화 대비 위안화의 거래 비중이 부족하므로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활성화는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부산 해양금융중심지는 수출입 실물 거래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금융을 중심으로 위안화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선박 및 인프라 프로젝트 등 거액 장기금융을 필요로 함에 따라 원화 및 위안화 표시 선박금융, 채권발행 부문에서 협력

○ 우리나라와 중국은 전체 조달 금액의 적절한 규모 이내에서 원화와 위안화를 주고 받는 투자금융을 추진

3. 금융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조직 혁신

가. 부산광역시청 내 '금융/기업지원실' 설치

▣ '금융/기업지원실' 추진 배경

○ 현재 부산시의 일자리경제실 담당 부서 소관이 경제/일자리·창업/금융/산업입지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음, 금융과 기업 육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태계 조성 및 역량과 자원 집결의 필요성 대두

○ 핀테크·블록체인 분야로 금융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4차 산업(ICT, 모빌리티, 바이오 등)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 혁신 필요

○ 부산은 금융중심지로서 금융 및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시의 투자회사 및 펀드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필요,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과 기업 육성을 전담하는 조직에서의 부서 필요

▣ 부산광역시 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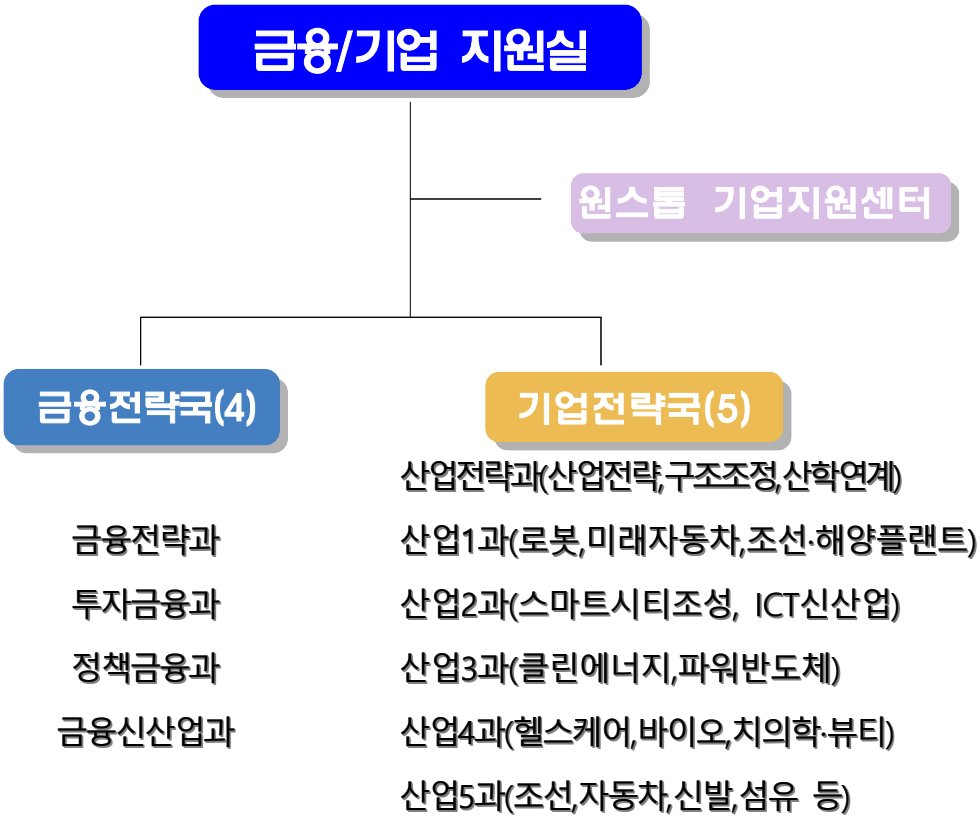
○ 2021 상반기 기준, 일자리경제실 5과 23팀 중 금융과 기업지원 관련 팀은 4개 부서에 걸쳐 금융(금융육성팀, 금융신산업팀)과 기업지원(중소기업지원팀, 창업기반팀, 창업지원팀, 자금지원팀) 및 투자통상과(6팀)으로 구성

○ 금융중심지로서 현재 행정조직 내에 금융/기업 회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조직, 부서가 통합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한 상황

▣ 금융과 기업지원 관련 부서를 통합한 조직개편안

○ 금융, 기업전략 마련, 금융중심지 및 산업 육성, 산학 연계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청의 금융/기업지원실(가칭) 조직개편안을 제안하여 One-stop으로 행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마련. 금육 육성과 기업 지원을 투트랙으로 개편

<市 경제 · 산업분야 조직 개편안>



▣ 금융전략국 : 정책개발, 제도개선, 투자 회사 및 펀드 운영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 활성화. 전략 마련 및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금융생태계 조성. 금융전략 개발 및 펀드 조성을 통한 금융산업 붐업 조성. 포용금융 및 혁신 금융 지원을 통한 균형있는 금융 산업 발전 도모

○ 금융전략과 : 금융중심지 정책 개발,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운영, 금융중심지 특별법 추진, 對금융위·금감원 지원, 금융감독 업무확대 관련 금융전문인력양성, 산학연계 지원, 대부업 지도 감독

○ 투자금융과 : 모태펀드 및 투자금융공사 운영, 지역 금융회사 투자

○ 정책금융과 : 정부 부처 정책 펀드 지원, 포용금융(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관련, 부산신용보증재단 관련

○ 금융신산업과 : 핀테크 기반 금융신기술 육성,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활성화, 부산국제금융센터 개발, 금융 빅데이터 산업 육성

▣ 기업전략국 : 기반산업·4차 산업 육성, 지원 및 현황 리서치 등을 통한 산업 전반 컨트롤 타워. 기간·전통 산업 특화 및 신산업 육성 통한 부산경제 견인

○ 산업전략과 : 산업 육성·전략 총괄, 부산산업전략 위원회 운영, 산업 현황 리서치·육성·구조조정 관련,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관련, 기업 현장 대응반 운영 관련, 산학연계 지원

○ 산업 1과 ~ 4과 : 기반산업 육성, 산업 현황 리서치·육성·구조조정 관련, 산업1과(로봇, 미래자동차, 항공,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2과(스마트 시티 조성, ICT신산업), 산업3과(클린에너지, 파워반도체, 환경대응 산업), 산업4과(스마트헬스케어, 바이오, 치의학, 뷰티), 산업5과(조선, 해양플랜트, 자동차, 항공, 기계, 신발, 섬유, 패션, 부품, 소재 등)

▣ 금융전략국을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 펀드 조성을 통한 기업 지원 및 새로운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전략국을 통해 기반산업 및 4차산업 관련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되, 금융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하나의 실을 구성하여,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금융과 기업에 대해 지원

나. 회사 설립/운영/이전/현황조사/분석/상장 등을 위한 One-Stop 조직 설치

▣ 부산 시청, 금융/기업 지원실 산하에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부산 지역내 회사 설립 시 필요한 행정사항처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조인트 운영을 통해 금융규제 자문 및 컨설팅 제공

○ 국내, 해외 모든 기업 대상으로 회사 설립의 용이성을 위해 창업을 위한 절차를 통합하고, 설립을 계획할 때부터 하나의 통합된 센터에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회사 등록, 관련 신고, 세금, 관련 기관 소개와 더불어 설립에 필요한 금융 지원, 법률 자문, 생활 지원, 이민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및 제

공해주는 센터 설립

○ 센터 내에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행정사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를 보유하여,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어 가능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부산 원스톱 비즈니스 창업센터(가칭) 구조도

▣ 해외 기업들이 부산 지역 내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원스톱으로 창업 지원

○ 해외의 사업자가 부산에 사업을 설립할 때, 언어, 행정 절차, 생활환경, 창업과 관련된 법과 규정 및 등록 등에 대한 걱정과 문제가 있기에, 부산시와 더불어 센터에서 중앙집중식 지원을 제공하여 행정절차 및 사업 수립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영문화하여 행정절차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및 과거의 데이터와 사례를 인용하여 영어 가이드북을 제공, 주요 언어에 대해 의사소통이 가능

한 직원을 배치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 필요

▣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해당 센터에서 '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금융 서비스 지원

○ 금융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센터가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함께 조인트로 운영되어 종합적인 금융 규제 자문 제공

○ 영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산의 지방은행 금융지주회사인 BNK와의 협약을 통해 영업 연계, 기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수익기반 네트워크 조성 지원

▣ 일본 도쿄의 기업 설립 지원 시스템 사례

○ 도쿄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성장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 분산된 관리 조직 및 느린 대응, 정부 기관에서의 영어 능력 부족, 지속적인 조치 결여, 조치 실행 속도 느림 등의 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쿄도는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센터 설립, 금융서비스청(FSA)와 협력하여 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본으로 진출하려는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행정 절차 신속 지원, 일본 금융법과 규정에 대한 영어 가이드북 제공, 절차를 간소화한 원스톱 창업 지원 시스템 시작

○ 도쿄 비즈니스 개발 센터(Business Development Center TOKYO)를 통해 해외 기업에 대한 업무 연계 지원 및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제공, 사업 설립 전부터 비즈니스 구축, 사업 설립 후까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지원 제공

○ 도쿄 원스톱 비즈니스 창업센터(Tokyo One-Stop business Establish Center, TOSBEC)를 통해 행정절차에 정통한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법인의 정관인증, 회사등록 및 법인설립 통지, 세금, 사회보장제도, 이민 등 창업 시 필요한 각종 서류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

4. 특화금융 경쟁력 제고와 미래금융 육성

가. 해양금융 선진화 방안

1) 국내 선박금융의 현황 및 동향

▣ 국내 선박금융시장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주도하고 확대하는 추세임에 반해, 민간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의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해운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 해외 선박금융의 현황 및 동향

▣ 세계 선박금융의 공급 규모는 2007년 연간 8,120억 달러까지 확대된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함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세계 선박금융의 경우 은행대출이 7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20년 기준으로 신디케이트 해양 금융 대출은 총 485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약 14 % 감소했으며, 딜 건수도 169건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선박, 크루즈선, 해양플랜트 등이 포함

▣ 전체적으로 세계 선박금융의 규모 및 역할과 관련하여 보면, 각 국가의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

3) 정책적 시사점

▣ 첫째, 국내 해양금융시장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융기관이 해양금융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

○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해운불황의 장기화 및 중소조선사의 도산 등의 영향으로 해양금융의 규모를 축소하는 흐름

▣ 둘째, 세계 해양금융시장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계 은행의 선박금융 투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아시아계 은행의 선박금융 투자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Bank of China와 China Exim이 선박금융 부문에서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정책의 영향이라고 추정

4) 민간 해양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수협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

▣ 장래 부산이 해양금융의 허브로서 발전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① 한국산업은행, ② 한국수출입은행, ③ 한국무역보험공사, ④ 수협은행의 부산 이전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 현실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집중된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여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금융의 허브가 되고 국제금융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2)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국제해운클러스터의 조성

▣ 북항재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북항에 국제해운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다수의 외국의 해운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 나아가 국제해운클러스터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와 연계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해양금융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

(3) 국제해운거래소의 설립 추진

▣ 선박금융의 수요를 창출하고, 아시아권 해운정보·거래 중심지로 부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운거래소의 입법적 추진이 신속

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①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제공, ②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③ 운임선도거래시장 운영을 국제해운거래소가 담당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4) 부산국제해양금융포럼의 조직 및 활동

▣ 부산광역시가 중심이 되어 가칭 부산국제해양금융포럼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국제적 활동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해양금융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 해운회사, 금융회사, 조선회사, 정책금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연락망을 구축함으로써 민간 해양금융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해양금융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5) 민간 해양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률서비스 환경 구축

▣ 민간 해양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금융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나아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해사중재가 영국에서처럼 부산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

(6) 국제적 역량을 갖춘 해양금융전문인력의 지속적 공급과 양성

▣ 민간 금융기관의 해양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스트럭처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해양금융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부산이 해양금융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양금융대학원과 부산대학교의 금융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5)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체계적 발전 및 협력 강화

(1)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이유, 성과 및 발전 필요성

▣ 한진해운 파산 이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붕괴와 해운매출액, 선복량, 외화획득 등의 감소로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이 추락하고 일자리 감소 및 수출입 차질 등의 혼란을 경험

▣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해운재건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를 설립

○ 해양분야 정책금융 기능과 항만 등 인프라 투자 기능도 가지고 있는 해진공은 아직 설립 초기 단계로 부산지역의 해양금융 및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서는 동 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2) 해양진흥공사의 체계적 발전방안

▣ 선박 가속상각제도 도입

○ 민간부문의 선박투자 참여 확대 유인을 세제 측면에서 부여하기 위하여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선박 조세 리스제도를 도입

○ 가속 상각 적용 시 자산의 총 내용연수기간 동안 총 과세액은 동일하지만 사업 초기 가속상각으로 종국적으로 투자자의 영업비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상업은행, 자산운용사, 리스회사 등 민간부문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선박조세리스 제도가 활성화되면 조선, 금융, 법률, 회계 등 연관산업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 선박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대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유치 방안 수립과 시행이 필요

▣ 금융선주(Tonnage provider) 역할 수행

○ 신조 선박 확보를 위한 금융이 어려운 중소·중견선사의 선박 확보 부담 경감을 위해 해진공이 현재 수행중인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S&LB)을 확대하여 대선전문기관(금융선주)로 발전시킴

○ 해진공의 신용을 통해 선박금융 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조달하여 신조선 발주, 중고선 매입을 통해 선박을 확보하고 이를 국적선사에 운용리스 방식으로 대선하여 경기역행적인 선박투자 기반 마련과 국내 해운사들의 위험을 완화 가능

▣ 민간부문 선박금융 참여 유도를 위한 보증사업 역할 강화

▣ 선박금융 업무 확대를 위한 금전대여 기능 부여

(3) 부산시 및 해양금융 관련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

▣ 해양진흥공사의 체계적 발전을 통해 해양금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수도와 금융중심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부산 소재 정책금융기관, 한국거래소, BNK 부산은행과의 실질적 협력 확대가 필수적

나. 파생금융 및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1) 파생금융 활성화 방안

▣ 부산의 현재 파생금융 현황

○ 부산에는 우리나라 유일 파생상품거래소인 한국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시장 존재하지만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주요 거래원인 증권사 및 선물사는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부산을 장내 파생상품거래중심지로 보기는 어려움

▣ 부산의 파생금융 활성화 방안

○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의 부산 입점을 위해 노력 필요, 또한 현물상품 거래를 위한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도 유치 필요

○ 대부분의 파생상품의 거래가 코스피200지수, 국채, 미국달러 관

련 파생상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숫자는 타 해외 주요국의 상품 수에 비해 매우 적으므로,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가 필요

○ 대규모의 항만 및 조선 산업과 수산업이 발달한 부산에서 해양수산 부문 및 다양한 파생상품의 성공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현물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적 상품성이 있는 파생상품 개발: 반도체, LNG, 탄소배출권, 선박운임지수, 수산물 가격지수, 암호화폐 가격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개발

2) 녹색금융 현황

▣ 녹색금융(Green finance)은 새로운 금융 분야로 기술, 지속 가능성 및 금융의 교차점이라 할 수 있어 부산금융중심지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

○ 경제가 COVID-19에서 회복됨에 따라 환경 부채, 갈색 및 좌초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 탄소 배출량 측정,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 및 물과 같이 희소한 자원의 사용을 포함하여 "더 나은 재건"이 강조됨에 따라 이러한 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BIS, 2021)

* 좌초자산이란 기업의 자산이 유효 연수(useful life)를 다하기 전에 그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는 자산이라는 의미로 통용 (Al Gore and Blood,2013)

▣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금융 분야로 어떻게 진화할 지는 여전히 알 수 없으나, 녹색 채권이나 대출, 녹색 상장 주식 및 지속 가능성 관련 상품 등 핵심 영역에서 부산 역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량 강화

○ 녹색 채권, 녹색 대출, 녹색 상장 주식, 지속 가능성 관련 상품,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공시의 표준화를 포함하여 핵심 분야에 초점

○ 환경 부채 및 영향 측정, 포트폴리오 및 탄소 거래 노출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등을 포함

▣ 유럽연합은 회계연도 평균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역내 기업이나 공익법인에 대하여 '비재무정보 의무공시제도'(EU Directive on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를 2014년에 도입하고 2018년부터 의무공개 계획 발표

○ 유럽연합은 이러한 정책을 정교화시키는 과정에 돌입하고 현재 ESG 공시 기준과 형식을 구체화

○ 더 나아가 2023년을 목표로 재무와 비재무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영국은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테스크 포스인 이른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요구사항을 영국 경제 전반에 걸쳐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할 계획; 미국은 바이든 대선공약으로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 독일도 지속가능리스크 가이드라인 발간('20.1월); 프랑스는 은행부문 기후리스크 분석보고서('19.4월)를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가이드 발간('20.5월); 중국 역시 '20.9월 UN연설에서 2060년 이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10월 정부 부처 공동으로 '기후금융 지침서'를 발간

▣ 국내에서도 과거부터 관련 논의가 몇 차례 제기되었으나, 녹색산업의 정의 미비, 녹색투자 유인 부족 등으로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그린 뉴딜 및 탄소중립 의제화에 따라, 녹색 분야로의 자금흐름 전환 및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논의 재부각

3)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 국내에서도 과거부터 관련 논의가 몇 차례 제기되었으나, 녹색산업

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이 포함되면서, 녹색산업·기업·사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 필요성이 재부각

○ 2050 탄소중립 선언('20.12월)에 따라,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금융권 역할에 대한 기대감 상승

○ 금융권의 녹색분야 논의 참여는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20.8월 민관합동의 녹색금융 추진TF* 출범

* 금융위·환경부 합동TF 산하에 ①기후리스크 평가·관리, ②녹색투자 활성화, ③기업 공시 개선 등 주요 정책과제별 세부 작업반을 구성·운영

▣ 금융위·환경부는 환경정보 공시 및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가이드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 지정

① (기업공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공 등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계획 마련('21.1)

② (녹색채권)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녹색채권 발행 시 녹색투자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발간('20.12월)

③ (특성화대학원) 녹색금융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인하대학교, KAIST,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정('20.10월)

* 연간 약 5.5억원씩 3년간 지원 예정 ⇨ 2020년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구체적 세부과제 이행에 착수할 필요

▣ 부산시는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기준을 고려하고, 산업 표준 및 지침 채택을 지원하고, 산업 주도 역량 강화 노력을 장려하고, 녹색 채권시장의 개발을 주도

○ 부산 지역금융기관은 녹색 및 지속가능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대출심사 제도 마련

○ 지역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 관련 기술에 대한 외부

심사와 신용평가 기능 제고 필요

▣ 부산시는 환경부 및 한국거래소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부산의 기업들이 녹색채권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도모하도록 지원

○ 방안 1: 부산에 본점 소재지 또는 주된 사업지를 두고 있는 기업이 발행하여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된 원화녹색채권에 대하여 환경부가 지원하는 외부검토서비스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부산시가 녹색채권 발행 후 보고에 대한 검토 비용을 지원

○ 방안 2: 부산에 본점 소재지 또는 주된 사업지를 두고 있는 기업이 발행하여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된 원화녹색채권에 대하여 부산시에 등록된 외부검토기관이 제공하는 외부검토서비스 비용을 지원

▣ 최근 BNK부산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원화 ESG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산 금융중심지 녹색채권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2020.11.30.)

▣ 더불어 부산시는 해양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하에 부산지역 금융기관들은 지속가능한 사업 추구 및 녹색금융의 한 분야로 해양금융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포세이돈 원칙은 지속가능 금융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은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해양금융의 역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원칙. 즉 선박금융에 대한 기후변화적 중요성을 강조

○ 부산에 APEC기후센터가 있어 향후 관련 과제 추진에 있어서 협력이 용이

○ 은행권 최초로 부산·경남은행이 이사회 내 위원회 형태로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향후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협의체), CDP(탄소공개 프로젝트) 가입 등을 통해 부산 지역 녹색금융 활성화를 도모

다.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를 통한 혁신기업 유치 방안

▣ 정보제공 플랫폼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군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대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벤처기업, 원자재, 선박, 항공 등 다양

○ 국내 대체투자 펀드 규모 및 해외 대체투자 자산 비중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대상의 다양성, 투자정보의 산재 등으로 투자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의 수집이 어려워 이를 대처할 대체투자 관련 정보 부족

○ 부산은 금융중심지로서 부·울·경 지역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에서 수집가능한 대체투자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대체 투자를 활성화 필요

▣ 공공 및 민간의 단편적인 대체투자 관련 정보들을 모은 '통합금융 빅데이터 인공지능 비즈니스 공공플랫폼' 구축 및 제공

○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서 선박·파생금융, 백오피스·백업센터 관련 비교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대체투자수요를 파악하여 투자정보를 통합·분석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기관이나 업체 유치 및 금융경제 활성화

○ 다양한 대체투자 관련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전문사모운용사와 대체투자 정보를 이용하는 금융 및 사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하여 금융중심지로서의 금융 산업 생성 및 전문화, 활성화 가능

▣ 정보제공 플랫폼 적용 기술 및 수집 데이터

○ 단순한 공공 대체투자 정보 수집 및 원자료 제공만이 아닌 빅데

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가공되고 의미 있는 분석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

○ 데이터 수요자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필요한 대체투자 분석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로직 개발

○ 부산에 유치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금융데이터 수집 및 금융 인프라 활용하여 파생금융상품 대체투자정보 제공 가능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부동산 정보, 한국해양진흥공사, 국토교통부 등에서 선박/항공기 정보,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에서 천연자원 정보 등 다양한 대체투자정보 수집 및 활용 가능)

▣ 정부의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7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연계 가능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타 공공서비스와의 연계 또는 확장 가능성 확보

▣ 정보제공 플랫폼 해외 사례 : 시티오브런던 - 시티 비즈니스 라이브러리(City Business Library, CBL)

○ 시티오브런던은 기업형 자치정부답게 서비스형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스타트업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플랫폼인 '시티 비즈니스 라이브러리'

○ CBL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필수 비즈니스 데이터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지역이나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일반적인 창업 조언, 시장 조사에 대한 정보, 통계, 회사 데이터 및 비즈니스 뉴스를 위한 국내외 취재를 포함하여 영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및 출판물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비즈니스 정보 전용 공공 도서관

○ 20년 7월 시티오브런던은 이 서비스에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구독형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음

▣ 정보제공 플랫폼 해외 사례 : 런던 - 클락슨 리서치(Clacksons Research)

○ 클락슨은 1852년 설립된 통합 해운 서비스 제공업체이며 세계에서 제일가는 선박 중개 능력(broking capacity)을 가짐. 또한 클락슨에서 개척된 파생상품부터 풍부한 투자 은행 서비스, 맞춤 채무 솔루션까지 금융서비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공

○ 클락슨의 리서치 팀은 세계 해운 및 해상 부문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정보 제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이 리서치 팀 내에는 70명이 넘는 상근 연구원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 검증, 분석 및 관리하여 업계를 형성하는 주요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대해 알려줌

○ 클락슨 리서치 팀은 연안 및 에너지(Offshore and energy), 배송 및 거래(Shipping and trade), 평가(Valuations) 3가지 사안을 초점으로 정보를 제공함.

○ 금융, 정부, 보험, 석유 회사, 장비 및 조선 분야의 많은 기업 및 기관 고객들이 클락슨의 맞춤형 고객 서비스 계약을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서비스는 맞춤형 데이터 공급, 프로젝트 추적 인텔리전스 흐름, 재무 오퍼링, 세미나, 컨설팅 및 2030년 클락슨의 해양 및 에너지 포럼과 같은 다중 고객 연구를 제공함

라. 대체거래소(ATS) 설립 방안

1) 대체거래소의 의의

▣ 전자거래에 기반한 매매체결시스템으로서 기존 정규거래소의 보완 또는 대안적 기능을 수행

▣ 기존 정규거래소와 같은 상장기능과 규제기능은 없음

▣ 각국의 대체거래소 정의(이하, 통칭 ‘대체거래소’)

○ (한국) 다자간매매 체결회사(자본시장법 제8조 제2항)

○ (미국)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1998년 Regulation

ATS(2018년 개정), 2005년 Regulation NMS

○ (유럽)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2007년 MiFID

○ (일본) PTS(Proprietary Trading System), 1998년 금융시장개혁법

▣ 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경쟁을 촉진하여 거래비용 축소

○ 외국자본의 유입과 국내 신규투자유도로 자본시장 유동성 증대

○ 거래소의 독점에 따른 수수료 과다 등 비효율을 제거하고 증권회사의 수익구조 개선

○ 시장의 가격발견기능 향상, 효율적인 거래플랫폼 개선

○ 고빈도거래, 알고리즘거래 수용으로 고객니즈에 부응하고 외국투자자 유인

2) 각국의 대체거래소 도입 현황

가) 주요국의 시장분할지수(FFI)와 시장분할의 의미*

* 자료 : Fidessa 2021년 9월 현재

▣ 미국 : Dow Jones 4.58, S&P 500 4.62, NASDAQ 100 4.34

○ Dow Jones 상장주식이 최소 4.58개 이상 거래소에서 동시 거래됨을 의미

▣ 유럽 : FTSE 100 2.04, DAX 1.88. CAC 40 2.04

○ FTSE 100 상장주식이 최소 2개 이상 거래소에서 동시 거래됨을 의미

▣ 일본 : Nikkei 225 1.06

○ Nikkei 225 상장 주식이 1.06개 거래소에서 동시 거래됨을 의미

나) 주요국의 대체거래소 도입방식

▣ 미국: 1998년 Regulation ATS, 2005년 Regulation NMS(National Market System)을 통해 증권거래소의 호가독점규칙을 폐지하고 거래소 이외의 대체거래소(ATS)를 시장으로 인정

▣ 유럽 : 2007년 MiFID(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를 통해 거래소 집중의무 폐지, 증권회사에 의한 거래소 신설 및 합병을 인정

▣ 일본 : 1998년 금융시장개혁법을 통해 대체거래소(PTS) 도입 근거 마련

다) 대체거래소의 글로벌 운영

▣ 주요국의 대체거래소 설립과 운영은 대형 금융회사(증권회사, 투자은행)가 주도

▣ 수익사업의 일환인 동시에 금융회사 스스로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 수행

▣ 역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대체거래소인 BATS, Direct Edge와 같은 성공적인 대체거래소들은 규제 또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정규거래소로 전환하였고, 현재는 CBOE에 인수됨

라) 대체거래소의 분화

▣ 다크풀과 같은 일부 사설거래 시스템들은 내부거래시스템 등 정규거래소가 수용하기 어려운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

마) 아시아 주식시장

▣ 아시아 지역은 패러다임 전환과정: 매매전자화, 서비스 다각화 등 수요가 증가하고 법규자체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

바) 각국의 대체거래소 도입현황

▣ 미국

○ 2017년 말 현재 NYSE(뉴욕증권거래소), CBOE(시카고옵션거래소), NASDAQ(나스닥) 등 13개 정규거래소와 90여 개의 대체거

래소 등록

○ 현재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대체거래소는 대부분 다크풀(Dark Pool, 익명거래시장)로 확인되며,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시티그룹, JP모건, 크레디트스위스 등 대형 브로커-딜러는 대부분 사설 대체거래소를 보유

▣ 유럽

○CBOE가 '17년 34억불에 BATS를 인수, 유럽 최대의 Pan-European 거래소 중 하나로 런던거래소, 독일거래소와 경합 중 (각각 약 14% 내외의 점유율)

▣ 일본

○ 2018년 1월 현재 SBI JapanNext, Chi-X Japan 등 2개의 대체거래소가 금융청 인가를 받아 운영 중

○ 최근 일본 대체거래소의 비중은 약 9%(JapanNext 6%, Chi-X 3%)로 북미(약 40%), 유럽 (약 20%)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

3) 국내 대체거래소 관련 제도

가) 국내 대체거래소 도입 경과

▣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 2016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운영제약 완화

○ 거래량 한도 상향 조정(시장전체 15%, 개별종목 30%)

나) 대체거래소 관련 법규 요약

구 분	내 용
대체거래소 설립	인 가 제
규정 적용	• 한국거래소와 동일 : 시장 감시, 시장 안정화 조치, 공매도 제한,가격변동제한 폭 • 대체거래소 자율 결정 : 매매수량단위, 최소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최저자본금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 최저자본금 : 200억원(자기매매포함시 500억원) • 1인당 소유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5%이내. 단, 외국 대체거래소나 자산운용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30%까지 예외 인정
취급종목	주식 및 증권예탁증권(DR)
거래량 한도	시장 전체기준 15%, 개별종목기준 30%

4) 대체거래소 설립 방안

가) 대체거래소 설립 필요성

▣ 최첨단 대체거래소를 설립하여 지역 금융시장을 활성화,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

▣ 디지털거래플랫폼 중심지로서의 기반 마련

▣ 주요국의 대체거래소 운영 현황과 국내 관련 법규, 법인 설립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설립 추진

▣ 대체거래소 설립추진시 기본 전제

○ 대체거래소 본사 및 매매체결시스템이 부산에 소재해야 함

○ 최고속도(매매체결시간), 최저비용(수수료) 구현

○ 발행플랫폼의 유연성과 시스템의 높은 호환성 유지

나) 대체거래소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목적

○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내외 관련 법령 검토, 증권회사 의견

수렴, 출자자 모집, 업무모델 및 시스템 개발, 업무규정 제정, 금융위 인가 등 제반절차 수행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예

○ 외국계 대체거래소, 부산지역 증권회사(BNK 그룹), 예탁결제기관(한국예탁결제원) 및 부산시가 컨소시엄 구성

다) 대체거래소 설립 자본 및 소유 지분

▣ 법령상 대체거래소 주식의 1인당 소유한도 15%(금융기관 및 외국 대체거래소는 30%)와 최소자본금 200억원을 고려하여 소유지분 분산 필요

▣ 부산시는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행정적 지원

라) 대체거래소 BIZ모델 및 시스템 개발

▣ 국내외 환경을 종합하여 최적의 BIZ 모델 및 시스템 개발 마스터플랜 작성

▣ 감독기관(금융위) 및 잠재적 이용고객(증권회사)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국제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춘 모델 개발

마) 대체거래소 시스템 개발 주요 고려사항

▣ 알고리즘고빈도매매 제공

▣ (시장접근성 제고) 부산 대체거래소가 주식거래 시 DMA와 동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빈도의 초단타매매 시 초당 처리건수와 건당 응답속도 모두 한국거래소보다 빠를 경우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음

(기대 효과)

▣ 금융중심지 부산의 위상 강화, 최첨단의 투명하고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제공, 시장접근성 강화로 부산의 금융IT 집적도 제고, 글로벌

거래소 운영을 통한 부산의 국제금융센터 위상 강화

5) 외국 사례연구: 일본의 대체거래소 시장

▣ 일본과 한국은 미국, 유럽에 비하여 발행, 유통시장과 금융환경 및 법규체계가 유사

▣ 한국거래소와 동경증권거래소의 매매방식 및 규제내용 유사

▣ 매매방식, 청산결제, 거래내역 공시 등 실제 대체거래시스템 운영시 실무적으로 관련 사안을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 필요

▣ (조직 구조) SBI JapanNext와 Chi-X Japan 모두 증권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형태(우리나라의 현행규정상 대체거래소도 다자간매매체결을 업으로 하는 증권회사이므로 결국 일본과 같은 구조임)

▣ (시장참가자: 대체거래소의 회원) SBI JapanNext와 Chi-X Japan은 회원을 증권사(브로커-딜러)로 제한

▣ (거래 상품) 동경증권거래소 상장주식과 ETF

▣ (시장 구성) SBI JapanNext는 주간 시장, 야간시장, X-market, VWAP market 등 네 개 시장을 대체거래소 시장으로 운영

▣ (정보비용, 거래수수료) SBI JapanNext와 Chi-X Japan은 동경증권거래소(이하 동증)와 달리 시장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거래수수료 역시 동증에 비하여 저렴함

▣ (호가 단위) SBI JapanNext와 Chi-X Japan은 동증에 비해 매우 세분화된 호가단위 적용

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장기과제

▣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을 통한 발전전략

○ 최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

○ 카카오는 2018년 3월 블록체인 개발사인 그라운드X를 설립하고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과 가상화폐 클레이를 개발 및 발행. 페이스북의 가상화폐와 비슷하게, 카카오의 클레이튼 및 클레이도 카카오플랫폼과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패밀리앱과 사업, 그리고 국내외의 파트너사와 함께 글로벌 통용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가능성 존재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은 적극적으로 규제 혜택 및 지원을 통해 부산에 그라운드X 및 클레이튼 유치를 한다면, 대기업의 낙수효과로 인해 다양한 금융산업 생태계가 생겨나고, 글로벌 리딩 디지털 기축 통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은행에서 개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부산의 동백전 그리고 그라운드X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관련 금융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음

▣ 블록체인 기반의 발전전략

○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사업을 1차 시작으로 부동산, 데이터 거래, 의료 마이데이터 등 총 3개 사업을 추가하여 진행 중

○ 지금 개발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들을 토대로 스타트업 회사들을 지원하여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플랫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인 필요

○ 해당 부산소재 벤처들이 사업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사업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혜택, 인센티브 등이 필요

○ 부산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한 플랫폼 서비스, 디지털 바우처를

이용한 플랫폼 서비스 등 추후에 한국형 CBDC가 개발되고 상용화 될 때 바로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유인 가능

○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에게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및 완화와 기술 개발/도입 자금지원이 필요

○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공용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고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전문지원 공기관 설치 필요(기업 연계, 네트워크, 법/제도 피드백, 자금지원 창구 등)

▣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전략)** 부산시는 '19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부산 클라우드 3.0' 전략을 추진 중이며, 데이터센터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산 정보산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지역 I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진 안전지대로, 일본과 대만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우회경로로도 활용

○ '16년부터 '18년까지는 '부산 클라우드 2.0' 계획을 추진, 소프트웨어 기업 유치에 집중해 해외와 국내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더존비즈온을 센텀시티에 유치

○ 이에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데이터센터 강자인 홍콩,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부산 데이터센터 육성계획에 따라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

○ 지식경제부는 2011년 5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5년 내 클라우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개 과제를 선정함

○ 또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 해저케이블의 90%이상이 부산으로 들어오고, 일본과는 최단거리(250Km)의 전용 해저케이블이 위치하고 있어 대한민국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 네트워크 및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들의 수요 확대를 통해 국내 IT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FDI의 증대 예상

○ 차세대 컴퓨팅 기술의 고도화에 기여

○ 데이터의 허브화로 국가데이터 안보 확보 및 데이터료 수입 증대

▣ (시사점) 지자체의 클라우드 센터 유치 정책은, 단순히 서버유치뿐 아니라 IoT, 소프트웨어 등 후속산업 지원을 통해 실질적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성과가 없을 경우 해당 기업체에 전기료나 부지만 싸게 주는 격이 되어 이득이 없을 가능성 존재

○ 후생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면 유치의 의미가 퇴색됨

▣ (시사점) 직접적인 효과는 클라우드로 인한 연관 파생산업으로 인한 고용효과 및 경제 활성화 효과와 데이터센터건립에 들어가는 건설 비용 등으로 지역 건설 경기 부양 효과로 볼 수 있음

○ 최근 오라클이 강원도로, 소프트뱅크 및 네이버 등이 김해시로 방향을 틀며 부산시가 클라우드 센터 유치에서 차지한 위치가 공고히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 대두

마. 국제금융인력 양성 방안

▣ 부산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 2009년 9월 부산 및 서울 국제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금융전문인력양성과정 설치를 계획, 2017년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예산 통과 후, 9월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부산대와 한국해양대가 금융위원회와 부산광역시로부터 ‘금융중심도시’ 부산의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금융대학원 설립 교육기관으로 선정

○ 두 대학은 4년간 각 50억원과 30억원을 지원받아 부산 금융중심지를 이끌어갈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파생금융특화 부산대

학교 금융대학원과 해양금융전문가를 양성하는 해양금융분야 특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 과정을 운영

○ 향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해운, 선박, 조선 및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제 고급 전문가 양성 중

○ 해당 부산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뛰어난 교수진 구축과 안정적인 교육과정 진행, 꾸준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제금융인력을 양성하고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과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 필요

▣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핀테크, AI 등 혁신적 기술 발전으로 금융 산업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 파생 금융전문지식과 글로벌 감각을 지니며 고도의 윤리의식을 겸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

○ 해양금융분야의 시장 환경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양금융전문인의 양성을 목표로 개원.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해양금융분야 특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해운·조선·금융의 융합지식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특화 교육 진행

▣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 2020년 6월, 금융위원회와 서울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여 금융회사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금융위-서울시 공동사업으로, 금융회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KAIST가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비학위·학위)을 제공

○ KAIST는 금융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디지털금융 이론 및 실무 교육과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최고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자체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

○ 부산시 또한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함께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디지털금융, 핀테크 관련하여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과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필요

▣ KAIST 경영대학(여의도 금융대학원) 디지털금융 MBA

○ 국제금융중심지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시, 금융위원회, KAIST 경영대학이 공동 개설한 2년제 금융-IT 융복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계량 및 금융기초와 금융핵심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데이터 사이언스와 심화된 금융 지식을 통해 제적 감각을 갖춘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

▣ 서울특별시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 금융부문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비학위 전문가 양성과정 진행

○ 서울시의 제안에 각 금융권 교육기관이 호응하여 추진된 것으로, 지방정부와 금융권이 서로 협력하여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설(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여신금융교육연수원 등 6개 금융권 교육기관)

▣ 부산 U-Space(Unicorn-Space-) BIFC 현황

○ 부산 U-Space BIFC는 2019년 10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핀테크 혁신기업 지원 및 핀테크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시, BNK금융그룹, (사)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BNK금융그룹 지원), 위워크가 공동으로 조성한 디지털 혁신금융 육성 플랫폼

○ 입주 당시 29개 기업, 128명에서 2021년 6월 기준 43개 기업, 333명이 근무 중, 청년 일자리 창출(205명)의 모범사례

○ U-Space BIFC는 입주기업에게 임대료, 일자리, 교육, 법률, 컨설팅, 주요기업 협업, 데이터 랩 등을 집중 지원하며, 매출은 2020년 기준 270억원으로 2019년 대비 131% 증가

○ U-Space BIFC 플랫폼을 통해 플랫폼 강화, 인재양성, 데이터 기반 사업환경을 구축하여 핀테크 기업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결국 부산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

▣ 부산 U-Space BIFC 고급 인력 확충 방안

○ U-Space BIFC에 입주한 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금융기업들에게 채용 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고급 개발자 또는 인력 채용 지원을 진행 한다면 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현재 U-Space BIFC 입주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들이 많지만, 이를 실행하고 구현할 수 있는 고급 개발자들을 리소스 부족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인건비 및 채용 지원을 통해 고급 개발자 및 인력 충원을 통한 사업의 질적, 양적 확대가 가능해지고, 추가 고용이 가능해져, 신진 금융 인력들이 채용된 리더급 고급 개발자 및 인력에게 실제 업무 및 금융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 제공 가능.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 전문인력 양성 가능

○ 해외의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고급 인력 또한 채용을 지원하여 자유롭게 열린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밑거름 제공

○ 처음엔 적은 인원을 지원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실적에 따라 점점 인원을 늘리면 지원을 크게 하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 필요

Ⅴ. 부산형 모델 구현을 위한 단계별 접근방안 및 법제 개선방안

1. 단계별 접근방안

▣ 바람직한 금융중심지 모델 구현을 위해 앞서 제시한 과제를 추진 시계 (time horizon)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추진

▣ 관련 환경변화 및 이슈가 이미 상당부분 가시화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어젠다와 그 이외의 중장기 어젠다로 구분이 가능

○ 금융규제, 기타 환경 규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개선방안을 도출(법·제도·인센티브 등)

○ 부울경 통합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가칭 '금융/기업지원실'과 같은 조직의 활성화 방안

가. 1단계 (단기)

▣ 다양한 국내외의 금융 및 비금융회사들이 부산에 모일 수 있을 요인을 만들기 위한 부산 지역 산업 발전, 새로운 기술과 금융의 융합 발전, 금융허브 자생력 확보 전략 수립, 이를 위한 부산시 역할 강화 방안 모색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부울경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 및 부울경 모태펀드의 단계별 조성에서 1차 조성 및 운영 시작

▣ 금융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직 혁신

○ 부울경 통합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가칭 '금융/기업지원실' 설치

○ 부울경 지역 내 금융회사 설립·운영·이전·현황조사·분석·상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설치

▣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VC 활용 방안과 부산시 역할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 1항 시행령 제정안" 추진

▣ 해양금융 선진화 방안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체계적 발전 및 협력 강화

- 금융과 해양산업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해양진흥공사의 업무영역 확장 등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적극 참여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BNK와의 3자 협력을 통해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

▣ 디지털 금융의 적극적 육성

○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 활용

○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를 통한 혁신기업 유치전략 제시

○ 블록체인 기반의 발전과제

○ 클라우드 및 데이터산업의 발전과제

나. 2단계 (중기)

▣ 다양화되고 발전된 지역 산업과 더불어 부산에 특화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전략

▣ 부울경 모태펀드 중기(2차~3차) 조성

▣ 대체거래소 부산 설립
▣ 선박금융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 유치
▣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
▣ 인프라 금융과 지속가능 금융의 활성화
○ 신공항, 북항 재개발, 트라이 포트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다양한 금융기업과 금융회사를 통해 조달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해운, 조선 업종) 지원을 통해 파생금융 및 녹색금융 활성화

다. 3단계 (장기)

▣ 부산 금융중심지가 근접한 해외 금융중심지(홍콩, 싱가폴, 도쿄, 상하이)와의 차별점을 구체화하고 부산에 특화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법 개정 및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

▣ 부울경 모태펀드 장기(4차~5차) 조성
▣ 금융중심지 인허가 규제 개선 및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금융 생태계 조성
▣ 現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지원에 관한「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권한 강화

▣ 상기 추진과제 수행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 배분과 관련 산업의 성장 지원이 필요

▣ 그러나 이상의 기준에 의거한 단기 및 중장기 시계의 구분은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책추진 당국은 관련 이슈에 대해서 상시적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점검할 필요
○ 또한 중장기 어젠다 내에서도 세부 과제별로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노력 병행 필요

<그림 5-1>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방향

목 표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 국제경쟁력 강화

전 략

- 부울경 통합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조달과 운용의 효율화
-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 및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 생산적·혁신적 분야 금융지원 강화 및 금융의 4차 산업혁명 지원
-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선박 및 해양금융 발전 지원

추진 과제

1 금융회사의 집적 촉진

-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금융회사 집적 촉진(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
- 국내 금융 및 일반회사 유치와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 선박금융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 유치를 통한 외국계 금융회사 집적 촉진

2 금융산업의 발전 지원

- 행정조직 개편으로 가칭 '금융/기업 지원실' 설치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지역특화형 벤처 캐피탈의 역할 강화
- 핀테크 등 혁신산업 발전 지원
- 선박 및 해양금융 발전 지원
- 파생 및 녹색금융 반전 지원
-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

3 금융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 금융규제 개선 및 부산형 모델 구현을 위한 혁신금융 법제 개선
- 대체거래소 설립
- 금융인프라 국제정합성 제고

4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

- 국제 금융전문인력 양성
- 금융연관산업 발전 지원

2. 부산형 모델 구현을 위한 혁신금융 법제 개선방안

가. 부산시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 현행 자본시장법 및 은행법 등의 진입규제 검토

▣ 자본시장법 및 은행법 등의 진입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산 금융중심지에 종합금융업 및 예금 수신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하에서 서울 금융중심지 및 다른 지역과의 금융회사 진입규제의 차등화는 인정되기 어려움

2) 최근 일본은행의 업무범위 규제 완화 방안의 시사점

▣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이점을 살려서 BNK 금융지주 산하에 블록체인 핀테크 사업 등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BNK 금융지주의 자회사를 통해 지역 벤처기업 또는 지역활성화 사업회사에 대해 출자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고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 1항 시행령 제정안

▣ 부산시에서 VC의 유망 해양벤처기업 발굴·투자·성장지원 기능을 활용하여 금융중심지로서의 성장과 부산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지역특화형 VC를 활성화하여 부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금융중심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벤처투자법)을 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관련 권한을 부산시로 이양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u>벤처투자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u>

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

○ 그러나 현재 제76조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부재

▣ 따라서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벤처투자법의 개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76조 제1항에서 위임한 시행령에 부산형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권한을 부산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 벤처투자법 제76조 제1항 시행령 제48조의2 (권한의 위임) 제정안

[제1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법 제9조,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의 관리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 시·도지사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

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법 제9조,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의 관리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시·도지사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의 활용

1)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 지역중심형 (금융규제)샌드박스 ☞ 시험응용을 위한 공간을 부산시가 제공하는 개념(Testbed of Regulartory Sandbox)

○ 현행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여 전국 단위에서는 서비스 운영이 어려우나 혁신성이 높은 시험사업을 부산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 부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경우(또는 부산시에 등록한 금융회사)에 다른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부산형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여 허용

○ 지역적으로 부산지역(또는 부·울·경)에 한정된 영업을 시행

2)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의 의의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 내의 규제를 면제·유예 시켜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에는 다양한 기관 및 이해관계자

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의 역할 수행과 더불어 부처 간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특례 관련 권고 이외에는 규제특례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실효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두고 있지 않음

▣ 규제샌드박스 신청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현행 법령에 마련되어있지 않음

○ 가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규제적용 특례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로 이관하여 재심사를 받는 방안 강구필요

○ 이 경우 중앙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3) 규제자유특구와의 차이점

▣ 지역특구법상의 규제 자유구역(Freezone)과는 달리, 기존의 금융샌드박스 규제체계 내에서 장소적 제한조건을 추가(부산시 또는 부·울·경내에서만 영업을 허용)하여 보다 실험적인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Testbed of Regulatory Sandbox) 개념

▣ 금융혁신법에서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승인 사항을 부산시(가칭 부산시 혁신금융센터)에 위임하는 방식

○ 부산시와 금융감독원 부산지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심사 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

4) 해외 사례

▣ 일본의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 지역한정형이란 규제샌드박스 대상 지역을 특구 지정을 받은 지자체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2018)」에 근거한 '프로젝트형' 샌드박스 제도와 구별되며, 기존 국가전략

특구의 혁신 관련 규제개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전략특구법」에 도입

5) 지역중심형 규제 샌드박스의 이점

▣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경우, 부산 지역특구에 선정된 블록체인과 해양모빌리티 분야 이외의 사업도 부산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보다 신속하게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중앙정부는 기초·원천 중심의 R&D에 집중하고, 지역은 지역 환경과 인프라를 활용한 신기술 실증 활성화 기대

○ 지역(지자체)은 행정적으로 잠재 사용자인 주민과 보다 가까우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공간 제공(주민수용, 행정절차 등)이 용이한 이점이 있음

▣ 특정지역에 국한된 신기술 실증은 ① 쇼윈도 효과(타 지자체 학습효과), ② 실험 효과(전국적 규제완화 결정에 앞선 사전적 시험장소로 선점효과), ③ 기업집적 유도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가능

○ 지역이 경쟁적으로 R&D를 기획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R&D 중심)과 지역(실증 중심)이 함께 R&D사업을 공동 기획하는 방식도 가능

다. 부산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단계별 ICO 허용 방안(“부산 ICO 프리존”)

▣ 가령, 부산시가 특정 기업의 ICO 사업을 특구 신청 계획에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을 한 후에 심의를 통과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해당 기업을 특구 사업자로 지정했다면 이 회사는 부산 지역에서 ICO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규정 하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다른 기업들이 ICO를 하고 싶다면 다시 부산시장에게 제안을 하고 부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구 사업자로 명시해야 함

○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자 역시도 규제특구 사업자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구 내에 위치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특구 지정 후에 새로 특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자동적으로 ICO를 할 수는 없음

▣ 스위스의 작은 도시 추크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와 해당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급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만큼 대학과 연구소를 비롯한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수 인력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업화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크립토밸리의 사례와 같이 시드머니(seed money)는 민간과 공동으로 펀딩(funding)하는 작업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안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파생된 가상화폐와 그 거래에 대한 관심으로 편중

○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등 기술보급 확대를 위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지역 밀착형 블록체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

▣ 단계별 ICO 허용 방안

○ 1단계: VC 및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 대상 가상통화 발행 및 투

자 허용

○ 2단계: 에스크로 및 Private ICO 등을 통한 선별적인 허용

○ 3단계: 부산시 자체 진입 및 운영 규제를 따르는 Public ICO 허용

▣ 단기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ICO를 허용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업 및 유관 서비스 기업을 부산시로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블록체인 허브도시로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

▣ 부산 지역내 ICO를 허용함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는 '가상통화 거래소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적 효과'와 '가상통화 발행기업 이전 효과' 및 'ICO 유관산업 성장 효과' 등이 있음

라. 선박금융의 Security Token Offering(STO) 활용방안

▣ STO의 발행은 유동성과 시장성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낮고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자산을 유동화 하는 경우 또는 거래 인프라가 빈약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적용에 유용

▣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 STO를 발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비용 절감 효과, 시스템 안전성, 신뢰성, 용이도 및 기성 시스템과의 보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 부동산의 자산유동화, 신생 벤처기업이 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적재산권 신탁에서의 자금조달 등과 같은 분야가 증권형 토큰의 활용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분야

▣ STO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① 판매정보를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것과 ② 자산을 토큰화해 판매하는 형태로 구분

○ 선박금융에 STO를 적용하면 일반 소액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선박금융에 쉽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대효과

○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해 판매한다면 누구나 소액으로 선박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과 관련한 모든 내역은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실시간으로 기록

○ 분할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선박운용에서 발생하는 부가수익과 매각 시 발생하는 매각대금을 분할 소유권 보유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매각수익을 얻을 수 있음

Ⅵ.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그간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부산 금융중심지의 비전 및 정책을 재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

○ 금융중심지 정책추진 이후 답보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법·제도적 측면을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부산의 지리적 이점뿐 아니라 홍콩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구도 변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급속한 확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금융산업 접목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요인을 금융중심지 관점에서 점검하였음

○ 향후 중앙정부의 추진전략에 발맞추어 개별 금융중심지의 특성에 맞는 부산형 발전모델도 제시하였음

▣ 그간 부산 금융중심지 관련 정책 및 관련 과제의 성취도를 분야별로 평가할 때 가시적 성과를 보인 부분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

○ 부산 금융중심지는 서울·부산의 특화전략을 바탕으로 해양 금융 특화를 통해 시장친화적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산업을 선도할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하고 있음

○ BIFC 1, 2 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등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금융공공기관과 해양금융기관의 집적으로 금융센터로 자리매김하여 물리적 집적지 조성이라는 성과 시현

○ 각종 국제 금융기구 유치 및 국제회의 개최로 글로벌 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

○ 그러나 부산은 금융중심지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금융회사가 여전히 부족한 문제점에 직면

○ 또한 정부 주도하에 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분야도 마찬가지로 서울 인프라 집중 현상의 심화로 여타 도시로의 분산이 쉽지 않은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

○ 지역 금융산업과 연계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화된 전문인력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

○ 그 외 문제점으로 외국인 거주에 따른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항목이 별도로 없는 상황

▣ 그간의 부산 금융중심지 관련 성과를 구분하여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부분은 주요 금융공기업의 이전에 따른 해양 및 선박금융 분야와 BIFC 건립 등 물리적 기반 구축 등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보유한 공공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금융시장 형성 및 민간금융회사의 활동에 의한 금융중심지 생태계 조성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판단

▣ 홍콩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 가능성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급속한 확산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금융산업 접목, 그린 파이낸스 대세 등 환경 변화 요인을 금융중심지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

○ 홍콩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융중심지 본연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홍콩거래소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 사태는 비대면 및 비접촉 경제활동을 확대·촉진하고 디지털화를 통한 기업정보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오프라인 의존도를 완화시키는 계기를 제공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온 디지털화는 기존 기술혁신과 다르게 파격적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이 금융의 다방면에서 활용됨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제공 방식 또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홍콩 및 GFCI에서 높은 등수를 차지고 있는 중국 국가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주를 이루며 무역과 내수산업의 발전과 함께 금융업 및 금융중심지 역할도 발전

○ 중국의 각 금융중심지 도시들은 인근 지역 도시와의 연합을 통해 win-win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으며 통합 발전, 균형 발전을 추구

▣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으로 우선 '제2금융센터'로 자리매김하되 특정 분야에 특화된 '기능형 금융중심지' 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오슬로와 같이 선박 및 해양금융 중심지로 특화하되 룩셈부르크와 더블린 같이 핀테크 및 데이터 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중국 도시와 같이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 도시와 함께 연합을 통해 통합 발전 및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나아가 친환경/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 오슬로는 실제로 항구도시이면서 금융중심지로 위상이 높은 독일 함부르크, 그리스 피레우스,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등과 더불어 해양관련 선박금융 육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룩셈부르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맞춰 금융산업에서도 핀

테크, 디지털 금융 관련 혁신 금융서비스, 규제 극복을 위해 노력

○ 특히 룩셈부르크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산업인 레그테크(RegTech), 인슈어테크(InsurTech),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등을 받아들여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가 생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

○ 룩셈부르크의 금융 서비스 규제기관인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는 기술 혁신에 대한 역량과 개방성으로 맞춤형 핀테크 규제에 대응

○ 중국 금융중심지를 살펴보았을 때 부산 또한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 도시와 함께 연합을 통해 통합 발전,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오슬로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녹색성장 관련 투자가 활발한 도시 중 하나이며, 교통망/전략 및 경제발전 기조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틀 속에서 발전시키고자 노력

▣ 부산이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역할 분담 및 민관협력 강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조화로 부산 지역 금융 및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부산의 산업구조와 연계된 자생력 확보,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 1단계는 공공기관의 이전 및 유치,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 및 여건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온 것이 특징

○ 2단계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정착 및 업무기반 강화를 통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조화를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민간부문의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고려 및 지원, 그리고 역외 수요의 충족과 금융중심지의 대외적 위상 및 글로벌화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갈 필요

○ 2단계 활성화는 1단계의 정부 주도, 공공부문 주도, 산업정책에 의한 보완 역할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협업 강화, 상업적

주재의 강화, 기존 기관의 업무 및 서비스 활성화, 지역경제와의 연계 등 점진적,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

(관련 추진과제)

▣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조화를 통한 부산형 모델의 일환으로 부울경 통합 모태펀드 조성,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형 벤처 캐피탈의 역할 강화, 선박금융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 유치, BIFC 입주 공공기관과 협업 강화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부울경 모태펀드를 단계별로 조성하고 운영

○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VC 활용 방안

○ 특히 부산시 역할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 1항 시행령 제정안" 추진

▣ 금융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청 내 '금융/기업지원실' 설치방안과 회사 설립부터, 운영, 이전, 현황조사, 분석, 상장 등을 위한 One-Stop 조직을 설치

▣ 특화금융 경쟁력 제고와 미래금융 육성을 위해 해양진흥공사 역할 강화를 통한 해양금융 선진화, 파생금융 및 녹색금융 활성화 등 지속가능 금융 활성화,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를 통한 혁신기업 유치, 대체거래소 부산 설립, 국제금융인력 양성 방안을 추구

▣ 상기 전략적 추진과제를 추진 시계로 분류해 볼 때 관련 환경 변화 및 이슈가 이미 상당부분 가시화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어젠다와 그 이외의 중장기 어젠다로 구분이 가능

▣ 1단계(단기) : 다양한 국내외의 금융 및 비금융 회사들이 부산에 모일 수 있을 요인을 만들기 위한 부산 지역 산업 발전, 새로운 기술

과 금융의 융합 발전, 금융허브 자생력 확보 전략 수립, 이를 위한 부산시 역할 강화 방안 모색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부울경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 및 부울경 모태펀드의 단계별 조성에서 1단계 조성 및 운영 시작

▣ 금융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직 혁신

○ 부울경 통합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가칭 '금융/기업지원실' 설치

○ 부울경 지역 내 금융회사 설립·운영·이전·현황조사분석·상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설치

▣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VC 활용 방안과 부산시 역할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 1항 시행령 제정안" 추진

▣ 해양금융 선진화 방안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체계적 발전 및 협력 강화

- 금융과 해양산업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해양진흥공사의 업무영역 확장 등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적극 참여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BNK와의 3자 협력을 통해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

▣ 디지털 금융의 적극적 육성

○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 활용

○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를 통한 혁신기업 유치전략 제시

○ 블록체인 기반의 발전과제

○ 클라우드 및 데이터산업의 발전과제

▣ 2단계(중기) : 다양화되고 발전된 지역 산업과 더불어 부산에 특화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 전략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부울경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 부울경 모태펀드의 중기(2차~3차) 조성

▣ 대체거래소 부산 설립
▣ 선박금융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 유치
▣ 국제금융인력 양성
▣ 인프라 금융과 지속가능 금융의 활성화
○ 신공항, 북항 재개발, 트라이 포트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다양한 금융기업과 금융회사를 통해 조달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해운, 조선 업종) 지원을 통해 파생금융 및 녹색금융 활성화

▣ 3단계(장기) : 부산 금융중심지가 근접한 해외 금융중심지(홍콩, 싱가폴, 도쿄, 상하이)와의 차별점을 구체화하고 부산에 특화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법 개정 및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

▣ 부울경 모태펀드 장기(4차~5차) 조성
▣ 금융중심지 인허가 규제 개선 및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금융 생태계 조성
▣ 現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지원에 관한「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권한 강화

▣ 상기 추진 과제 수행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 배분과 관련 산업의 성장 지원이 필요
○ 그러나 이상의 기준에 의거한 단기 및 중장기 시계의 구분은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책추진 당국은 관련 이슈에 대해서 상시적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점검할 필요
○ 또한 중장기 어젠다 내에서도 세부 과제별로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노력도 병행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 정부와 금융당국은 ’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 수립, ’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08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을 기점으로 지난 20여 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09년 1월)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나, 국제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20년 5월에 발표된 정부의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여 ①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②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③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3대 중점전략으로 제시(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년 5월 18일)

○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②금융인프라 국제화 ③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

□ 부산 금융중심지는 ’09년 1월 ‘해양·파생금융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공공 금융기관 및 지역 금융기관이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해 오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시현하며,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음

○ 동북아 항만 물류허브, 동남지역에 위치한 조선사를 중심으로 하는 선박금융 특화

○ 해양진흥공사 설립 및 유치,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설로 해양금융 특화

○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활용하여 파생금융 특화
○ 서울과 상호 협력 및 보완하는 측면과 서울에 비해 비용적 상대적 강점이 있는 백오피스·백업센터에 특화
○ 해양진흥공사 설립 및 유치,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설

□ 그러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융규제, 환경 등 큰 틀에서 금융중심지 정책은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GFCI) 기준 서울 25위, 부산 40위 등 여전히 경쟁력 및 매력도가 낮은 도시로 나타남
○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상하이, 도쿄, 홍콩, 싱가포르, 베이징이 차례대로 3위에서 7위로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의 획기적 개선 등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중심지 정책추진에 한계 존재
○ 그러한 상황에서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지역간 이전 투구양상이 심화할 우려

□ 아울러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체계 상의 구조적 한계도 존재하는데, 일례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의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정부 각 부처의 전략적 협조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부족한 상황
○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한 교육, 의료, 문화 등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의 주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획기적, 지속적 추진에 한계

□ 본 연구는 그간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금융중심지의 비전 및 정책을 재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금융중심지 정책추진 이후 답보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법·제도적 측면을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

○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급속한 확산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금융산업 접목 등 환경 변화 요인을 금융중심지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

○ 향후 중앙정부의 추진전략에 발맞추어 개별 금융중심지의 특성에 맞는 부산형 발전모델도 모색할 필요

2. 필요성 - 최근 대내외적 환경 변화의 영향

가. 홍콩 사태의 영향

□ 홍콩은 지난해 2020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미국으로부터 홍콩이 누리던 특별지위를 박탈당하면서 금융중심지로서 변혁의 시대를 걷고 있다고 평가

○ 홍콩시위의 장기화로 홍콩의 금융중심지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KDI 경제정보센터)

○ 관련하여 2가지 이유를 제시함.

- 첫째, 금융산업 핵심 인력의 이탈가능성. 현재 홍콩 금융산업의 핵심지위에 종사하는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 등) 출신 외국인은 거의 1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홍콩 총인구 740만 명). 하지만 홍콩시위가 격화되며 지난해 3분기부터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등 홍콩경제는 이미 기술적 침체(technical recession)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현지 언론에서는 홍콩 소재 글로

벌 금융기관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금융권의 연말 보너스가 큰 폭으로 삭감될 가능성을 언급함. 이 경우 금융권 종사 외국인들이 거주비용이 높고 정세가 불안해졌으며 좋은 업무실적도 기대하기 힘들어진 홍콩에 잔류할 이유도 함께 감소해 결국 금융 분야 인재들이 대거 이탈하는 엑소더스(exodus)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음.

- 둘째, 자금의 대량유출 가능성. 홍콩은 현지 화폐(HK$)가 미 달러에 페그(peg)돼 있어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자유로운 환경을 가짐. 즉 금융기관들이 마음만먹으면 하루아침에 대량의 자본을 홍콩 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뜻. 실제 골드만삭스는 홍콩시위가 격화된 2019년 6~8월 사이에만 4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홍콩을 이탈해 싱가포르 등지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여타의 전문기관들도 연말까지 30~4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출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홍콩정부의 입장은 단호한 편으로 자본 유출은 홍콩 외환보유고나 통화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중

○ 일부 자본의 유출이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홍콩정부가 관리하는 외환보유고 규모(4,413억달러, 2019년 12월 기준)나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에 비하면 그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반응.

○ 실제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홍콩금융관리국(HKMA; 금융시장 감독 및 중앙은행 일부 역할을 수행) 측은 홍콩시위로 인한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홍콩의 외화보유고와 통화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뱅킹 섹터 등 전반적인 금융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하는 중

- 전 세계를 통틀어, 뉴욕이든 런던이든, 국제금융중심지의 경영환경이 국가보안법 실시로 인해 훼손된 경우는 없을 것임

○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 이상이 홍콩에서 자본을 철수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혔고, 응답 기업의 60% 이상이 홍콩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함. 기회와 이익에 대립하는 기업은 없음

-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2009년 기본법 제 23조에 근거해 국가안전수호법을 통과시켰음.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마카오의 GDP는 153% 성장했고 관광객 수는 81% 증가했으며, 전체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최저수준으로 떨어짐

□ 더욱이 홍콩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융중심지 본연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홍콩거래소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남길남(2020)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시장의 관문의 역할을 하면서 유망한 중국 테크기업의 홍콩거래소 상장이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오히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실제로 2020년 홍콩거래소의 IPO 실적이 세계 최대 규모 IPO 실적을 시현한 NASDAQ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세계 2위에 랭크 (HKEX 512.8억달러 vs. NADSDAQ 573억달러)

나. 코로나 사태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1)]

□ 코로나 사태는 실물경제의 둔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시스템 위험을 확대하고, 이는 다시 안전자산 선호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인을 확대

○ 코로나 사태는 전염성 질병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복합 위기에 해당

○ 코로나 사태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경제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시스템 위험(systemic risks)을 초래(FSB, 2020)

1) 구본성(2020), 금융연구원 참고하여 재정리

□ 코로나 사태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은 코로나 위기의 확산과 차단, 극복 등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행태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과 결합에 따른 산업적 특성, 그리고 글로벌 연계성 등에 따라 달리 전개될 가능성

□ 코로나 위기의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접촉을 통한 경제·사회적 행위를 축소(untact)하거나 비대면 형태로 전환하는 양상

○ 비대면 형태로의 기술적 전환이 용이한 경우 경제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될 수 있으나 대체 정도 및 수용성 등에 따라 산업별 차이가 나타날 여지

○ 코로나 위기의 글로벌 확산(pandemic)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별 위기 극복의 시점이나 수준에 따라 글로벌 연계효과가 심화될 소지*

* 코로나 위험의 회복 단계의 국가별 차이는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으로 인해 회복 시기를 지연시킬 수도 있으며, 동 과정에서 국가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전과 다른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존재

<표 1-1> 코로나 사태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

	코로나 위기 이전	코로나 위기 이후
행태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	자율적 참여와 통제
중요도	개인·기업의 가치 극대화(valuation)	시스템 안정성 (stability)
성장기반	세계화·무역	지역화·내수
혁신	디지털화·생명공학	디지털화·생명공학
가치 (value)	개별성, 독립성, 경제성	연계성, 연대성, 사회성

출처: 구본성 (2020) 인용

□ 코로나 위기는 실물경제의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에 의해 유동성과 정책효과에 의해 크게 결정될 전망

○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자금지원을 통해 재무적 위험을 완화하는데 초점

○ 코로나 위기의 해소 과정은 백신의 개발이나 치료법의 발견 등에 이르기까지 불안감이 잔존할 수 있어 단시일 내에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

○ 코로나 위기는 업종별 특성이나 글로벌 연계성 등에 의해 회복 속도가 상이할 수 있고 완전한 해소 과정은 글로벌 경제의 정상화와 밀접히 관련*

* 수출 경제는 내수 중심의 경제에 비해 회복국면의 속도가 빠를 수 있는 반면 회복 시기는 내수 중심의 경제에서 오히려 조기에 나타날 가능성

□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정책적 대응에 힘입어 안정성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물경제와 연계성이 이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국내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의 침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장안정화 정책에 힘입어 안정성을 회복

○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른 생산 및 투자의 둔화 등에 직면할 수 있어 실물경제의 지표와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 정부의 역할 강화로 재정 지출의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에 대한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 부문에 대한 금융의 역할도 높아질 전망

○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저성장 탈피를 위한 정부의 지출 확대 등은 장기 국채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

○ 특히 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강화 등에 따라 금융의 모험자본 공급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될 여지

□ 코로나 사태는 비대면 및 비접촉 경제활동을 확대·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오프라인 의존도를 완화시키는 계기를 제공

○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및 차단을 위한 비대면 활동과

비접촉 방식의 활성화는 디지털화와 같은 온라인 중심 영업활동을 촉진

○ 온라인 중심의 영업 활동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금융회사의 경우 비대면 거래를 통한 영업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경험 및 사례를 확보

○ 모바일 또는 사이버 거래가 확산·시도되어 왔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소지

□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화를 통한 금융정보의 축적이나 활용에 대한 유인을 확대하고 기업정보의 혁신을 촉진할 전망

○ 코로나 위기의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및 재무, 종업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필요성이 대두

○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정보의 축적이나 활용, 공유 등에 대한 유인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픈뱅킹이나 ERP정보, 세제 정보 등을 결합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정보의 분석 및 활용이 촉진될 전망

□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 경제 중심의 운용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정책의 개방성 및 혁신성이 강화될 전망

○ 비대면 및 비접촉에 의한 경제활동 확대에 따라 금융산업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정책 기조가 강화될 전망

○ 디지털 기술 중심의 서비스 모델,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운용모델(application & solution),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금융정책은 더 개방적이고 혁신적으로 전환될 전망

다.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제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모바일), 물리적(로봇), 생물학적(생명공학) 기술 간의 융합으로 촉발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뜻하며, 흔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의 주도로 진행

○ 방대한 양의 데이터,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 온·오프라인의 구분 없는 연결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근본적 변화

□ 특히 인공지능(AI) 및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 기술 활용 추세는 산업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으며* 빅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은 BDAI로 불리기도 하며 사회·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지칭(금융감독원 2019)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은 기업에서 이들 기술을 활용하면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그것이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며, 소비자의 행동으로부터 수집, 축적된 데이터는 다시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기술-기업-소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전

* 전 세계적으로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World Economic Forum의 보고에 따르면 AI 스타트업 투자금액은 2011년 2억 8천만 달러에서 2015년 24억 달러로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구글, 바이두, 인텔,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의 AI 기업 인수·합병 역시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온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기존의 기술혁신에 의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disruptive)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Economists, 2020)

○ 첫째, 무선망(wireless network)과 무선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완전히 해소할 것

○ 둘째,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의한 오프라인 서비스를 가상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 공간을 넘어서는 서비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을 보여줌

○ 셋째,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체계, 검증방식을 갖춤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기술에 의한 대체효과를 극대화

○ 넷째, 정보에 의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체계의 형성이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 활용은 디지털화에 의한 핵심효과(WEF,

2017)

○ 다섯째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높은 수용성과 적응력으로 인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과는 앞으로 현행 서비스의 완전한 대체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금융소비자 간의 상호관계(interface)를 재정립

<표 1-2> 세계 10대 기업 중 BDAI 기반 기업 비중 추이

	2007년	2012년	2017년	2021년
100%				
	엑슨모빌	엑슨모빌	버크셔헤서웨이	테슬라
	GE	페트로차이나	존슨&존슨	TSMC
	시티그룹	BHP 빌리튼	JP모건 체이스	버크셔헤서웨이
	개즈프롬	ICBC	애플	애플
50%	중국공상은행	차이나모바일	구글(알파벳)	MS
	토요타	월마트	MS	아마존
	BoA	삼성전자	아마존	구글(알파벳)
	로얄더치쉘	로얄더치쉘	페이스북	페이스북
	BP	MS	텐센트	텐센트
	MS	애플	알리바바	알리바바

자료: 금융감독원, BDAI 활용에 따른 금융시스템 변화 및 감독상 대응 (2019) 및 list of public corporations by market capitalization (wikipedia) 일부 발췌 및 수정

□ <표 2>에서 나타나듯이 2017년부터 불과 10년만에 전세계 시가총액 기준 10대 기업 중 7개, 테슬라나 TSMC와 같이 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까지 고려한다면 9개사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 모델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파급력의 크기를 짐작

□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이 금융의 다방면에서 활용됨에 따라 금융 서비스의 제공 방식 또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 우선, 소매금융의 경우 고객에 대한 개인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

○ 핀테크 서비스의 확산과 더불어 금융거래 절차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

○ 또한, 기업금융의 경우도 흔히 관계 금융으로 대표되어온 기존의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정성적 판단에 기반하는 영업방식 대신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등을 활용하여 도출된 정량적인 신용 판단 기준에 기반한 서비스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Peterson 2004)*

* 전자와 같은 정성적 정보를 soft information, 후자와 같은 정량적 정보를 hard information 이라고 분류 (Petersen, 2004). Petersen은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보의 경성화(“hardening”)로 이어졌으며 관계금융의 쇠퇴를 이와 관련지어 설명

□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기술 활용의 급격한 확산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금융기관 또는 기업과 비교해 기술 변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는 핀테크 기업의 출현과 맞물려 진행

○ 핀테크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오랫동안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었던 금융산업의 지배적인 운영 모델—단대단(end-to-end) 서비스 제공 및 규모의 경제 추구—과 경쟁 구도—소수 대형 종합 금융기관에 의한 과점—에도 변화를 초래

□ 핀테크 기업은 계층화된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정 기능에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수직통합된 기업간의 경쟁 형태로 이루어진 기존의 금융산업 생태계를 재구성

○ 기존 금융기업과 고객 확보를 놓고 직접 경쟁하는 핀테크 서비스는 물론, 그 외에도 금융시스템 내 백 오피스, 미들 오피스 및 규제 요구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나타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승자와 패자가 등장

○ 핀테크의 성장 속도는 놀라운 수준으로 2021년 Q1은 핀테크 기업의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 분기로 614건 거래에서 벤처캐피탈 지원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액수는 228억 달러에 달함

□ 특히, 미국의 GAFA(Google-Amazon-Facebook-Apple),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핀테크나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 이들은 빅테크(BigTech) 또는 테크핀(TechFin)이라고 불리우면서 인증, 자문, 평가 등 특화된 일부 기능에 주로 집중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들과는 다르게 기존 은행들보다 더 큰 고객 기반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내세워 잇따라 금융업에 진출

○ 이들 기업은 사용자와 자주 접촉하고, 제품의 개인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년간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금융 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용자 신뢰가 두텁다는 강점을 보유

□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빅테크 기업과 핀테크 기업, 기존 금융기관이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금융 생태계의 모습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향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금융산업에서의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의 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및 관련 기업들은 고객응대, 가격측정, 보험계약, 신용평가 등의 정확성 제고를 목적으로, 헤지펀드, 브로커, 딜러 등은 수익성 제고와 트레이드 최적화 등의 목적으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을 도입하여 활용

○ 공공 및 민간의 유관기관들도 규제 준수 및 감시*, 데이터 품질 평가, 금융사기 적발 등에 활용

* 이를 RegTech(Regulation + Technology)라는 별도의 용어를 써서 지칭하기도 함. RegTech에서의 regulation은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적인 컴플라이언스와는 차이가 있음(신경희, 2020)

Ⅱ.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 경과

1. 그간 중앙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

가. 잘된 점

□ 자본시장 규모 확대 및 질적 성장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혁신금융 지원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자본시장 제도 선진화 및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외국인 주식 보유액 또한 증가*

* 시가총액 / 외국인 보유액(조원, 연말 기준) : ′13년) 1,305 / 431 → (′19년) 1,717 / 593

○ 민간모험자본 생태계 구축,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혁신, 핀테크 스케일업 등을 통해 혁신성장 선도

○ 중앙정부 차원의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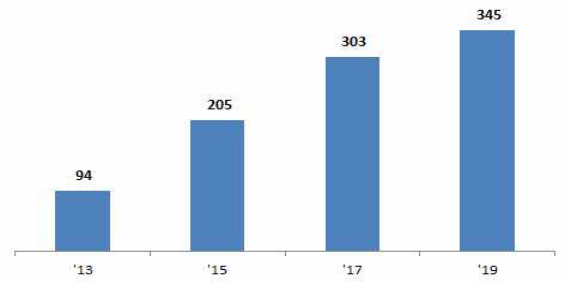
○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체계(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평가

□ 특히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인프라·감독·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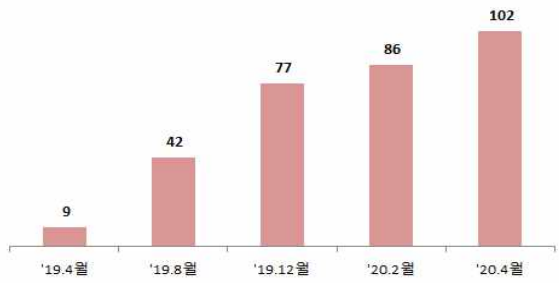
○ FSB 등 글로벌 논의 적극 참여,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금융감독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

<그림 2-1> 중앙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 성과

핀테크 기업 수(′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년, 누적)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 5

나. 아쉬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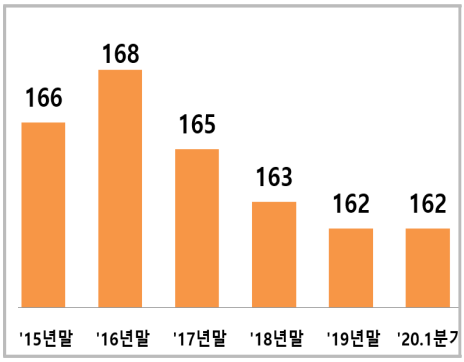
□ 금융산업의 전반적 성장과 함께 최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경쟁력 개선과 글로벌화 추진 필요

○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모국투자편향(Home bias)*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 우리나라 모국투자편향은 '18년 0.77로 '01년(0.98) 대비 대폭 완화되었으나, 미국 0.56, 영국 0.33, 독일 0.38 등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

○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본점 수익성 악화 등으로 국내 진입 정체 및 영업축소 움직임이 존재

<그림 2-2> 연도별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진입 현황



(단위 : 개)

구 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A)	'20.1분기 (B)	차 이 (B-A)
은 행	60	60	55	56	**53**	**53**	-
금융투자	56	56	59	57	**59**	**59**	-
보 험	29	30	30	30	**29**	**29**	-
여신전문	15	14	13	12	**13**	**13**	-
저축은행	6	8	8	8	**8**	**8**	-
합 계	**166**	**168**	**165**	**163**	**162**	**162**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 5

□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03년) 이후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아직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가 해외지점 수를 줄여 나가고 있어 어려운 상황

○ 2020.7.16 제4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논의

다. 시사점

□ 최근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 관점의 변화가 있어 향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은 우리 현실과 역량에 기반한 특화 분야를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지원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하고자 함

□ 연기금 등을 필두로 자산운용 수요가 증가하고,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은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 최근 K-브랜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확산되고, 고성장하는 신남방·신북방의 개발금융 수요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평가

○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의 금융수요를 장기적으로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

○ 금융중심지 정책 역량을 아세안에 집중하고,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핀테크 등이 동반 진출해 글로벌화의 거점으로 삼아야 함

□ 기존의 조세특례 혜택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허브를 지양하고, 부산금융중심지만의 특화된 강점을 살려 약간의 제도 보완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

○ 아울러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 정책목표만을 위한 세제 및 고용제도 개편에 한계가 있는 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창의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

○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0~2022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부산 금융중심지는 위안화 특화금융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

* 한국은 홍콩,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역외 위안화 거래시장을 보유. 해당 용역보고서는 부산을 국내 위안화업무 특화 허브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국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수요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국제금융중심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각 지역이 가진 기회와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전략에 따라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며, 약간의 제도적 보완과 연기금 및 투자공사 등 연관된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해양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실 있는 비교우위 전략을 목표

○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 추진을 국제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기본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여 ①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②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③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3대 중점전략으로 제시

○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②금융 인프라 국제화 ③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

□ 향후 해양 금융의 기반이 되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주변국 해운·물류 수요증가도 예상되며, 우리나라 선사들이 이미 글로벌 5위 수준의 선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어 부산의 해양 금융중심지 잠재 기회는 크다고 볼 수 있음

○ 부산 금융 중심지 전략은 해운, 항만 역량이 집중된 부산 지역의 특화된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과 국내외 일반 및 금융회사의 부산 지역 유입을 도모하는 전략을 함께 추구

○ IMF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의 GDP는 18조 458억 달러로 전세계 GDP의 약 23%를 차지하여 동북아 주요국 간의 교역 확대 및 물류 수요 증가가 예상

2. 그간 부산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분석

가. 부산 금융중심지의 추진 성과

1) 기본 인프라 구축

가) 문현금융단지의 개발을 통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의 건립

□ 2014년 8월 준공식을 열어 정식 개장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건립함으로써 외형상 금융중심지 부산의 하드웨어가 완성되었다고 평가

○ 나아가 2020년 4월부터 문현금융단지의 3단계 개발사업이 추진[2)]

* 부산시는 BIFC 1·2단계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핀테크 등 금융

2) 부산 문현금융단지 3단계 개발 본격화, 한국경제신문, 2020.03.20.

기술 생태계 확대,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 BIFC 3단계 공간조성을 오는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 특히 3단계 사업으로 남부발전 사옥신축 공간을 활용한 창업금융 등 융복합 금융클러스터(예타중)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

<표 2-1>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계획

계획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기본계획	도약 2020 계획, 부산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발표 시기	2010.08	2015.04	2018.09
비전	국제적 선박·파생분야 특화금융중심지 육성	세계 속의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부산형 금융모델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지
목표	1) 선박금융: 세계 시장점유율 3% ('20년) 2) 파생금융: 장내세계 1위 유지, 장외 동북아 3위 이내('20년)	동북아 해양·파생금융 중심지 구축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
추진 과제	5개부문 30개 과제	4개 분야 12개 과제	5개 추진전략, 15개 과제

출처: 이종필, 부산연구원 2019

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로 금융 공공기관 이전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입주한 금융 공공기관으로는 ① 한국거래소,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③ 한국주택금융공사, ④ 주택도시보증공사, ⑤ 한국예탁결제원, ⑥ 한국수출입은행, ⑦ 신용보증기금, ⑧ KDB산업은행, ⑨ 한국무역보험공사, ⑩ 캠코선박운용 등이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은 해양금융부서 혹은 부산 본부임

다) 해양금융 특화 지구 조성

□ 2014년 11월 11일, 해양금융종합센터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소식을 열었는데, 해양금융종합센터는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니

즈(needs) 충족을 위한 포괄적 해양금융(선박, 해양플랜트, 해운, 기자재)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양금융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양금융부, KDB(산업은행)의 해양산업금융부의 3개 기관이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설립 및 운영

○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조선 및 해운산업 세계 1대 강국 유지 및 진입을 위한 Total Solution Provider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함

□ 해양금융종합센터와 더불어 해양진흥공사('18.7, 한국선박해양·해양보증보험 합병) 설립으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서 해양금융 특화지구로 부상

○ 다만, 해양진흥공사의 자본*을 감안할 때, 어려움에 처한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산업의 지원요구에 충분히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

* 납입자본금 3.1조원(정부출자 1.55, 선박해양 1, 해양보증보험 0.55)

□ 부산에 국제해운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선박금융의 수요 창출 및 아시아권 해운정보·거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

○ 부산에 국제해운거래소의 설립을 추진함

○ 진행중 (2017년 3월 거래소 설립을 위한 해운업법 국회통과)

□ 해양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산업의 인프라, 금융지원, 금융기관의 유치, 지역금융기관의 협업 등은 나름대로의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

○ 선박금융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선박금융 전문기관의 육성이나 선박금융 전문 교육기관의 육성, 선박운용회사의 설립 등 정부 차원의 선박금융 중심지 역할을 위한 인프라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

* 해양진흥공사(2018), 해양금융전문대학원(2018) 설립 (한국선박해양은 2017년 설립 후 해양진흥공사로 흡수 통합)

○ 일부 선박운용기관은 지점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선박금융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BIFC에 입주하여 선박금융 업무를 지역화를 도모

* KSF선박운용, 한국금융선박금융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해양금융종합센터

○ 부산은행의 경우 한국해양보증보험과 업무협약(2016) 등을 통해 선박금융의 확대를 지원, 2019년 해양금융부 설치

○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은행의 경우 2019년 해양금융부를 설치

<그림 2-3> 해양금융종합센터로서의 부산 금융중심지

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설립

□ 2018년 한국금융연구원의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2030」 연구용역 결과, 민관협력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2020년 7월 1일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출범

○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금융 관련 중·장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및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부산시와 지역의 7개 금융관련기관·기업이 사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설립

○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① 부산금융중심지 관련 정책홍보, ② 금융기관 유치, ③ 금융생태계 조성, ④ 부산금융중심지 발전모델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 ⑤ 대내·외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

2) 소프트웨어 보강

가)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양금융대학원과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

□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2018년 9월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양금융대학원과 부산대학교의 금융대학원이 개원

○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양금융대학원은 해양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원은 15명, 부산대학교의 금융대학원은 파생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원은 25명 총 40명임

○ 금융위원회와 부산광역시가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을 통해 양 대학원을 재정적으로 지원

○ 다만 관련 법령 제약으로 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지 않아 지속가능성에 한계

* 부산대(파생), 한국해양대(해양) 과정 개설, 80억원('17~ '20), 연 40명

나) 선박금융 분야

□ 선박펀드의 조성 및 판매 등에 운영 경험이 있는 선박운용회사를 부산에 유치함으로써 선박펀드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해양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선박운용회사의 유치 및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함

□ 2017년 1월 한국선박해양 설립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에 따라 흡수 통합)

□ 유럽 등 선박금융업이 발달한 국가의 선박금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선진 선박금융기법을 습득함과 아울러 선박금융 결제통화인 달러자금의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부산시가 해외 선박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선박금융 부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가 상승에 따른 호황이 있었으나 유가하락에 따른 조선업 및 해운업의 성장세 둔화와 수주 경쟁의 심화 등에 따라 장기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부산 금융중심지는 선박금융을 중심으로 한 특화금융 중심지로서 세계 및 아시아 시장에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

○ 선박금융은 2012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기준 수주의 취소나 신규 수주물량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중국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조선업이 위축

○ 또한 교역량의 증가세 둔화 및 선박 공급 증가 등에 따른 운임지수의 하락에 따른 신규 수용의 감소는 조선업의 위축과 이에 따른 자금 공급을 위축

<그림 2-4> 전 세계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

단위 : 백만CGT

주: 상선은 탱커선, 가스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기준
출처: 한국기업평가

□ 국내 조선업은 글로벌 선박건조 수요의 축소에 따라 기존 주문의 완성 이후 위축 국면이 나타나면서 조선업 관련 업종의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민간 부문의 자금공급이 축소되고 정책금융의 역할이 확대

○ 세계 선박수요의 축소와 기존 주문의 연기 등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는 2016년 이후 신규물량의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따

라 중견 조선사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

○ 국내 조선업계는 중견 조선사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국면으로 전환되고 중국 조선업계의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로 민간 상업은행의 자금지원은 전반적으로 축소

○ 국내 선박금융은 민간 자금의 위축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선별적 지원 추세에 따라 지난 10년 전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양상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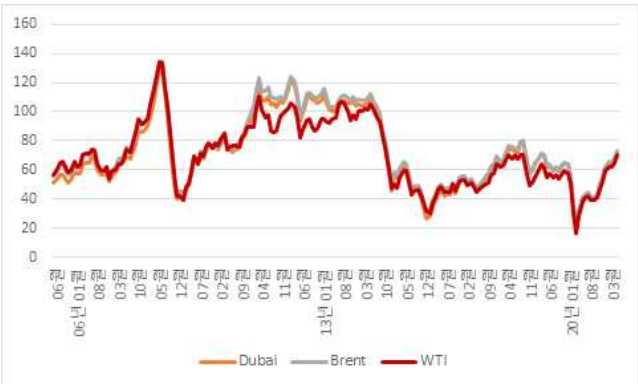
○ 다만 2018년부터 신규 수주물량이 확대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복세를 시현 중

○ '20년 우리나라 선박 수출 및 수입금액은 각각 197.5억불, 34.4억불이며, 무역수지는 163.1억불을 기록하는 한편, '20년 선박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은 각각 819만CGT, 880만CGT, 2,216만CGT

<그림 2-5> 우리나라 조선업 수주, 건조 수주잔량 동향

출처: e-나라지표

<그림 2-6> 국제 유가 추이



출처: Petronet 한국석유공사

<표 2-2> 주요국 선박금융의 특징

교토감축단위	주요 특징
독일	- 과거 KG펀드 주도로 선박금융 시장의 선두에 있었음 - 파격적인 세제혜택(소득공제, 고속상각, 손실과 소득 상계처리) - 그러나 현재 펀드는 비활성화 상태이며, 주로 KfW(연방정부은행)을 통해 해양 및 선박금융 제공
노르웨이	- 과거 KS펀드 주도로 선박금융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 - 파격적인 세제혜택(연 25% 정률상각법, 자본이득 8년간 유예) - '80년대 확대, '92년 위축(세제 혜택 축소), '00년대 확대(해운 호황) '08년 이후 축소(글로벌 금융위기) - 현재 펀드는 비활성화 상태이며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DnB를 통해 대부분 해양 및 선박금융 제공
일본	- 국내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선박금융, 금융기관의 전문성이 높음 - 지방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음
중국	- 정책금융(중국수출입은행, 국가개발은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중국 조선소에 선박건조 발주한 국·내외 선주들에 선박금융 지원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4) 및 저자 업데이트

3) 디지털화 및 국제화 강화

가) 국내외 금융회사 및 국제적 금융회사 유치

□ 2020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공간(D-Space BIFC)에 홍콩 등을 비롯한 국제적 금융회사 6개사를 유치하였다고 발표

○ 이러한 외국 금융회사의 유치를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도시" 육성을 기대(표 3 참조)

□ 그전까지 금융중심지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자리 잡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

○ 2020년 기준 3개 기관 진출 : 일본 야마구찌은행, 필리핀 메트로은행, 중국 공상은행

<표 2-3> 부산 유치 글로벌 금융회사

	금융회사	국가
1	BMI GROUP Limited	홍콩
2	GBR Capital Limited	홍콩
3	Winsome Group	홍콩
4	㈜한국시티은행	미국
5	후오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6	㈜요즈마그룹 코리아	이스라엘

출처: 머니투데이, 2020.12.09.

나)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 상승

□ 2020년 9월 기준, 부산광역시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의 순위상으로 세계 120개 금융도시 중에서 40위에 올라있음.

○ 지난 2020년 9월 기준으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상 51위였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음(표 4 참조)

<표 2-4> 세계 주요 도시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2020.09 기준)

국가	도시
대한민국	서울(25). 부산(40)
미국	뉴욕(1), 샌프란시스코(8), LA(11), 보스턴(15), 워싱턴(19), 시카고(20)
영국	런던(2), 에딘버러(13)
중국	상하이(3), 홍콩(5), 베이징(7), 선전(9), 광저우(43), 칭다오(47)
일본	도쿄(4), 오사카(39)
독일	프랑크푸르트(16), 함부르크(29), 슈투트가르트(37), 뮌헨(48)
스위스	취리히(10), 제네바(14)
캐나다	밴쿠버(24), 몬트리올(26), 토론토(31)

출처: THE FACT, 2020.09.27.

다) 백오피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 BIFC 등 문현금융단지 입주를 기점으로 백오피스 기능에 특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콜센터 및 데이터(전산백업 포함) 센터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 해외기관 등을 유치하고자 노력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

○ 문현 금융단지 입주를 계기로 백오피스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등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여 활성화를 도모

○ 현재까지 외국계 생명보험사 및 인터넷 은행 등 콜센터 또는 백업센터를 유치하고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 또는 이전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다만 클라우드를 비롯한 민간기업 데이터센터 유치는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 단기로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 데이터 센터 유치 성과를 시현하였고, 중장기적으로 벡업센터 및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노력 경주

□ 데이터센터 사례

□ LG CNS

○ LG CNS는 2012년 12월 완공, 13년 초부터 자체 데이터센터를 부산에 운영하고 있으며, 축구장 5개 면적에 달하는 총 7만 2천대의 서버를 보유

○ 지식경제부, 부산시, LG CNS의 전략적 제휴로 탄생함.

○ LG CNS의 부산데이터센터는 국내 수도권과 일본 지역 기업들에게 기존 센터와 하나의 센터처럼 통합 관리 가능한 확장센터를, 해외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해외 서비스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교두보 센터'를 제공한다는 전략

○ 니켄세세케이, NTT데이터 등 10여개의 회사를 확보한 상태

○ 2017년 LG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가 98프로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카카오톡의 서버도 입점했음을 감안할 때, 가동률이 크게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

○ LG CNS 부산데이터센터가 위치한 미음지구는 부산신항, 김해공항과도 인접해 최고의 접근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 Microsoft Azure

○ 부산시는 강서구 미음지구에 GCDC(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을 추진(2015)

○ 협약을 체결한지 4년여 만에 데이터센터 1개동을 준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음

○ 강서구 미음산단 국제산업물류단지 일대 17만 8409m2를 1천84억에 매입해 6개 데이터센터를 하나로 묶은 '리전' 형태로 설립

○ 총 86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나머지 5개 데이터센터는 데이터 수요에 맞춰 순차적으로 건설될 예정

○ MS는 총 1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BNK 금융그룹

○ 19년 1월부터 부산에서 전산센터와 개발센터를 각각 설립해 운영 중

□ 그 외 솔바테크놀러지, 아마존 AWS, 더존ICT그룹 등은 부산 센텀시티에 데이터센터를 설립 및 운영

○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 교육센터와 스타트업·아이디어 작업공간 등으로 구성된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동서대 센텀캠퍼스에 유치

<표 2-5> 부산 금융중심지의 콜센터 및 데이터센터 유치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콜센터	AIA생명보험, BNK캐피탈, CC네트웍스, CJ홈쇼핑, CS One Partner, GS홈쇼핑, 교보AXA자동차보험, 그린화재, 농협, 동양생명보험, 롯데카드, 미래에셋생명, 부산은행, 삼성생명STS, 삼성카드, 신한카드, 한화생명, 우리카드(예정), 홈앤쇼핑(예정)
데이터센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코스콤, 카카오뱅크, LG CNS, MS Azure, AWS, BNK 금융그룹, 솔바테크놀러지, 더존ICT그룹

출처: 부산컨택센터협회, 인터넷 서치

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추진 한계

□ 정책적 자율성 부족, 컨트롤 타워 부재 등으로 금융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이 미흡

○ 금융중심지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자리 잡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

○ 이전 금융공공기관이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부산의 토대가 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고립된 섬으로 고착된 한계를 노정

□ 해운비지니스클러스트 운영 등을 통한 해양기업의 유치는 기대되고 있으나,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또는 수협은행의 본사 유치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활성화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동삼동 혁신지구 및 부산항 우암부두에 대한 해양클러스트 지정에 따라 해운비지니스 관련 민간부문의 활성화 기반은 마련

○ 아직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또는 수협 본사의 유치 등과 같은 민간 선박금융이나 수산금융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세계의 유수 선박금융전문기관 중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서울에 진출해 있는 경우는 많으나 부산에 지점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들 은행의 부산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달성하지 못하였음

□ 부산 금융중심지는 중장기 목표로 이슬람금융이나 동북아개발은행, 자체 금융공사 설립, 금융자유지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현가능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부산 금융중심지는 선박금융 및 파생금융, 백업센터 등을 활용한 금융중심지로서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이슬람금융, 동북아개발금융 외에 자체 금융공사 또는 금융자유지대 등과 같은 외연 및 심화 단계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

○ 이슬람금융을 활용한 외화자금 조달은 이슬람금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개선됨에 따라 이슬람금융의 활용 유인이 크게 확대되지 못한 상황

○ 동북아개발은행 유치는 북한 제재나 중국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대북관계 또는 북미관계의 진행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이 유지될 필요성도 존재

○ 부산금융공사 설립이나 금융자유지대 구축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규율 강화 등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

* 부산 금융중심지의 장기 발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내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주요국의 이슬람금융 정책, 제도 동향>

○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 아래 체계적 제도화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며 이슬람금융의 허브를 자처하고 이슬람금융 강국으로 부상
○ 영국은 정부와 재계가 협력하여 비이슬람권 국가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슬람금융을 육성 및 발전시켜 서방의 이슬람금융 허브로 자리매김
○ 싱가포르는 발전한 금융인프라 배경을 이슬람금융 육성에 활용하고 이슬람금융 허브를 목적으로 중동권과의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
○ 일본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이슬람금융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기존 사법적 제약에 부딪혀 주춤하며 제한적으로 도입한 상태이며 이슬람금융을 활용하려는 업계는 국내에서의 사법적 제약에 대처하여 해외진출을 통한 우회전략을 채택
○ 이슬람금융에서 필수적인 샤리아 자문방식은 상설의 샤리아위원회 방식이며 외부의 전문 컨설팅기업 이용방식은 상품개발 같은 건별 자문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음
○ 이슬람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위한 다양한 교육· 연구기관 운영

<국내 이슬람금융 동향>

○ 국내 금융기관들은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슬람금융의 중요성 및 잠재력을 인식하고 도입을 준비 중이며 비 금융기업 중에서는 1차적으로 공기업 위주로 이슬람자본 유치를 적극적 검토
○ 정부도 이슬람금융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 및 세제 정비 등 지원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나 1차적으로 수쿠크 발행을 대상으로 큰 장애물인 조세문제 해결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예정된 국회 통과가 일단 유보된 상태이며 전망도 다소 불투명

□ 또한 정부 주도하에 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분야도 마찬가지로 서울 인프라 집중 현상의 심화로 여타 도시로의 분산이 쉽지 않은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
  ○ 부산이 서울을 비롯한 여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금융 및 신성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경주

□ 지역 금융산업과 연계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화된 전문인력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

○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 정책이 아직까지 지역 금융산업의 규모, 성장, 생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 그 외 문제점으로 외국인 거주에 따른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 항목이 별도로 없어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는 외국어 서비스, 외국인 주거지원, 외국인 대상 법률 서비스 지원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없는 상황

다.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3)]

1) 위상

□ 부산 경제의 위상은 하락하는 모습

○ 2019년중 부산의 경제규모(GRDP, 지역내총생산)는 93조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6위에 머물고 있음. 2019년중 부산과 서울의 경제규모(GRDP, 지역내총생산)는 2009년 대비 각각 1.46배 및 1.48배 증가하였으며 부산의 경제규모는 서울의 1/5 수준

○ 2009년~2019년 기간중 부산경제는 연평균성장률이 2.5%로서 전국(3.3%)이나 서울(2.7%)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성장속도가 완만

지역별 경제규모(GRDP) 추이
(지역내총생산 기준)

(명목, 조원, %)

	2009(A)	2012	2015	2018	2019(B)	배수(B/A)	연평균성장률 (실질)
전 국	1,207.7	1,445.4	1,660.8	1,902.5	1,927.4	1.60	3.3
서 울	293.7	334.3	370.2	423.7	435.9	1.48	2.7
부 산	63.7	71.2	82.7	90.0	93.0	1.46	2.5
대 구	37.9	44.8	51.8	56.7	58.1	1.53	2.9
인 천	56.3	66.4	80.1	88.7	90.0	1.60	3.4
광 주	25.2	29.8	34.8	39.8	41.5	1.65	3.6
대 전	27.9	32.9	37.2	41.3	43.1	1.54	3.0
울 산	51.2	70.0	72.9	73.6	74.7	1.46	2.5
경 기	248.0	311.4	382.0	479.8	477.4	1.92	5.1
강 원	30.2	34.6	40.9	46.9	48.8	1.62	3.5

3) 2009년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약 10년간(2009년~2019년)에 걸쳐 부산의 생산수준과 산업구조 변화를 위상, 산업구조 변화, 개별산업의 산업특화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함

충 북	35.6	45.5	55.2	69.6	69.4	1.95	5.3
충 남[1)]	73.5	94.2	110.6	126.6	125.3	1.71	4.0
전 북	35.7	41.2	47.0	50.6	52.0	1.46	2.5
전 남	53.0	64.5	68.9	75.4	76.9	1.45	2.4
경 북	79.1	93.0	103.1	108.8	106.8	1.35	1.8
경 남	86.0	98.4	106.6	110.7	114.0	1.33	1.6
제 주	10.6	13.2	16.9	20.1	20.3	1.92	5.1

주 : 1)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자료 : 통계청

<그림 2-7> 부산(및 서울)의 연도별 지역내총생산 증가세

주: 부산 GRDP:좌측, 서울 GRDP:우측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2021.8

□ 2019년중 부산경제(GRDP 기준)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그쳤으며, 지역별 경제규모가 전국 1~3위에 해당하는 경기는 24.8%, 서울은 22.6%, 충남은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2019년 기간중 부산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p 하락하였으며, 서울경제의 전국 비중도 1.7%p 하락. 그러나 부산과 같은 경제권역인 경남이 1.2%p 하락한 것과 달리 서울과 같은 경제권역인 경기가 4.2%p 상승함으로써 수도권역의 비중은 오히려 크게 상승한 모습

지역별 경제규모 비중 추이
(지역내총생산 기준)

(%, %p)

	2009(A)	2012	2015	2018	2019(B)	비중변화(B-A)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0.0

서 울	24.3	23.1	22.3	22.3	22.6	-1.7
부 산	5.3	4.9	5.0	4.7	4.8	-0.4
대 구	3.1	3.1	3.1	3.0	3.0	-0.1
인 천	4.7	4.6	4.8	4.7	4.7	0.0
광 주	2.1	2.1	2.1	2.1	2.2	0.1
대 전	2.3	2.3	2.2	2.2	2.2	-0.1
울 산	4.2	4.8	4.4	3.9	3.9	-0.4
경 기	20.5	21.5	23.0	25.2	24.8	4.2
강 원	2.5	2.4	2.5	2.5	2.5	0.0
충 북	2.9	3.1	3.3	3.7	3.6	0.7
충 남1)	6.1	6.5	6.7	6.7	6.5	0.4
전 북	3.0	2.9	2.8	2.7	2.7	-0.3
전 남	4.4	4.5	4.1	4.0	4.0	-0.4
경 북	6.5	6.4	6.2	5.7	5.5	-1.0
경 남	7.1	6.8	6.4	5.8	5.9	-1.2
제 주	0.9	0.9	1.0	1.1	1.1	0.2

주 : 1)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자료 : 통계청

□ 2019년중 부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758만원으로 전국 15위 수준에 그침

○ 2019년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울산은 6,511만원, 충남(세종 포함)은 4,976만원, 서울은 4,512만원으로 각각 전국 1~3위를 차지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추이

(명목, 천원)

	2009(A)	2012	2015	2018	2019(B)	배수(B/A)
전 국	24,493	28,793	32,556	36,866	37,274	1.52
서 울	28,967	33,312	37,236	43,664	45,118	1.56
부 산	18,208	20,554	23,956	26,464	27,577	1.51
대 구	15,289	18,078	20,991	23,151	23,883	1.56
인 천	20,871	23,770	27,798	30,194	30,584	1.47
광 주	17,031	19,799	23,139	26,654	27,799	1.63
대 전	18,518	21,347	24,094	27,214	28,561	1.54
울 산	46,624	62,242	62,605	63,793	65,112	1.40
경 기	21,731	26,007	30,748	36,821	36,064	1.66
강 원	20,345	22,973	26,946	30,856	32,192	1.58
충 북	23,467	29,177	34,728	43,016	42,704	1.82
충 남[1)]	36,024	44,071	48,279	50,996	49,761	1.38

전 북	19,926	22,670	25,621	27,797	28,835	1.45
전 남	29,695	36,201	38,339	42,131	43,402	1.46
경 북	30,021	35,014	38,510	40,677	40,082	1.34
경 남	26,942	30,124	32,007	32,993	34,040	1.26
제 주	19,421	23,525	28,280	30,721	30,792	1.59

주 : 1)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자료 : 통계청

□ 2019년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상대수준을 보면 부산은 전국평균(기준치=100.0)의 74.0%에 불과한 반면 서울은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한 121.0%을 기록

○ 2009년~2019년 기간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상대수준 기준으로 부산은 0.4%p 하락(74.3%→74.0%)한 반면, 서울은 2.8%p 상승(118.3%→121.0%)함에 따라 서울과 부산의 1인당 GRDP 격차가 크게 확대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상대수준 추이

(전국평균 대비)

(전국평균 = 기준치 = 100.0, %, %p)

	2009(A)	2012	2015	2018	2019(B)	수준변화 (B-A)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0.0
서 울	118.3	115.7	114.4	118.4	121.0	2.8
부 산	74.3	71.4	73.6	71.8	74.0	-0.4
대 구	62.4	62.8	64.5	62.8	64.1	1.7
인 천	85.2	82.6	85.4	81.9	82.1	-3.2
광 주	69.5	68.8	71.1	72.3	74.6	5.0
대 전	75.6	74.1	74.0	73.8	76.6	1.0
울 산	190.4	216.2	192.3	173.0	174.7	-15.7
경 기	88.7	90.3	94.4	99.9	96.8	8.0
강 원	83.1	79.8	82.8	83.7	86.4	3.3
충 북	95.8	101.3	106.7	116.7	114.6	18.8
충 남[1)]	147.1	153.1	148.3	138.3	133.5	-13.6
전 북	81.4	78.7	78.7	75.4	77.4	-4.0
전 남	121.2	125.7	117.8	114.3	116.4	-4.8
경 북	122.6	121.6	118.3	110.3	107.5	-15.0
경 남	110.0	104.6	98.3	89.5	91.3	-18.7
제 주	79.3	81.7	86.9	83.3	82.6	3.3

주 : 1)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자료 : 통계청

2) 산업구조 변화

(전산업)

□ 2019년중 부산의 제조업 생산은 15.2조원으로 2009년에 비해 1.34배, 서비스업 생산은 63.6조원으로 1.48배 성장. 부산의 제조업 생산은 서울(16.3조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서울(367.7조원)의 1/6 수준에 불과

□ 2009년~2019년 기간중 부산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연평균성장률은 각각 2.5%로 전국의 연평균성장률(3.7%, 3.0%)을 하회

전국·서울·부산의 산업별 생산 추이 비교
(지역내총생산 기준)

(명목, 조원, %)

		2009(A)	2012	2015	2018	2019(B)	배수 (B/A)	연평균성장률 (실질)
전국	지역내총생산	1,207.7	1,445.4	1,660.8	1,902.5	1,927.4	1.60	3.0
	농림어업	26.9	31.5	33.2	33.2	32.0	1.19	0.4
	광업	2.0	2.2	2.3	2.3	2.1	1.05	-2.7
	제조업	309.7	401.3	441.6	506.2	486.0	1.57	3.7
	전기가스	15.5	18.4	32.2	23.6	24.5	1.58	1.2
	건설업	62.2	63.1	81.1	103.0	105.0	1.69	1.1
	서비스업[1)]	683.1	804.7	933.1	1,071.9	1,115.7	1.63	3.0
서울	지역내총생산	293.7	334.3	370.2	423.7	435.9	1.48	2.3
	농림어업	0.5	0.5	0.4	0.4	0.4	0.73	-2.9
	광업	0.1	0.1	0.0	0.0	0.0	0.10	-21.1
	제조업	14.5	17.1	16.7	16.3	16.3	1.12	0.5
	전기가스	1.3	1.7	1.7	1.3	1.3	1.04	-3.4
	건설업	8.8	8.1	10.5	13.6	13.9	1.57	0.5
	서비스업[1)]	243.4	279.5	310.5	355.1	367.7	1.51	2.5
부산	지역내총생산	63.7	71.2	82.7	90.0	93.0	1.46	2.4
	농림어업	0.6	0.7	0.5	0.4	0.4	0.59	-5.1
	광업	0.0	0.0	0.0	0.0	0.0	0.85	-6.9
	제조업	11.3	12.9	14.9	14.6	15.2	1.34	2.5
	전기가스	0.8	0.7	1.9	1.3	1.2	1.50	1.1
	건설업	2.9	3.6	4.1	5.5	5.7	1.94	2.3
	서비스업[1)]	42.9	47.9	55.2	61.4	63.6	1.48	2.5

주 : 1)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문화기타서비스 등
자료 : 통계청

□ 2019년중 전체산업의 산업구조를 보면 부산의 경우 제조업이 17.6%로서 2009년에 비해 1.6%p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은 73.9%로서 0.6%p 상승하여 경제의 서비스화가 계속 진전된 모습

○ 서울의 경우 제조업이 4.1%로서 2009년에 비해 1.3%p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은 92.0%로서 1.4%p 상승

전국·서울·부산의 산업구조 변화추이 비교
(총부가가치 기준)

(비중, %, %p)

		2009(A)	2012	2015	2018	2019(B)	비중변화(B-A)	기간중 평균
전 국	총부가가치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2.4	2.4	2.2	1.9	1.8	-0.6	2.2
	광업	0.2	0.2	0.2	0.1	0.1	-0.1	0.2
	제조업	28.2	30.4	29.0	29.1	27.5	-0.6	29.4
	전기가스	1.4	1.4	2.1	1.4	1.4	0.0	1.6
	건설업	5.7	4.8	5.3	5.9	5.9	0.3	5.4
	서비스업[1)]	62.1	60.9	61.2	61.6	63.2	1.1	61.3
서 울	총부가가치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0.2	0.2	0.1	0.1	0.1	-0.1	0.1
	광업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5.4	5.6	4.9	4.2	4.1	-1.3	4.9
	전기가스	0.5	0.5	0.5	0.3	0.3	-0.1	0.5
	건설업	3.3	2.6	3.1	3.5	3.5	0.2	3.1
	서비스업[1)]	90.6	91.0	91.4	91.9	92.0	1.4	91.4
부 산	총부가가치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0	1.0	0.7	0.5	0.4	-0.6	0.8
	광업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19.2	19.6	19.5	17.6	17.6	-1.6	19.0
	전기가스	1.4	1.1	2.4	1.5	1.4	0.0	1.7
	건설업	5.0	5.4	5.3	6.6	6.6	1.6	5.6
	서비스업[1)]	73.3	72.8	72.0	73.8	73.9	0.6	72.9

주 : 1)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문화기타서비스 등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

□ 2019년중 부산의 서비스업중 부동산업(8.9조원), 도소매업(8.3조원), 사업서비스업(8.2조원)이 각각 1~3위를 차지. 서울의 경우 사업서비스업(64.4조원), 도소매업(62.8조원), 정보통신업(51.4조원)의 순서

전국·서울·부산의 서비스업 생산추이 비교
(지역내총생산 기준)

(명목, 조원, %)

		2009(A)	2012	2015	2018	2019(B)	배수 (B/A)	연평균성장률 (실질)
전국	서비스업	683.1	804.7	933.1	1,071.9	1,115.7	1.63	3.0
	도소매업	93.6	119.5	125.0	138.0	139.3	1.49	3.3
	운수창고업	40.8	42.7	56.5	55.9	58.4	1.43	3.2
	숙박음식업	27.8	30.6	37.0	44.0	46.9	1.69	1.4
	정보통신업	54.8	61.9	71.7	81.7	85.3	1.56	3.5
	금융보험업	70.7	81.6	88.3	104.1	104.3	1.47	3.9
	부동산업	91.1	103.1	122.2	138.2	141.4	1.55	2.1
	사업서비스업	88.8	115.6	144.2	168.8	178.2	2.01	4.0
	공공국방행정	70.3	82.4	95.8	115.6	121.8	1.73	2.5
	교육서비스업	66.6	73.6	82.2	90.7	94.6	1.42	1.5
	보건복지업	42.3	51.7	63.7	81.7	90.1	2.13	6.2
	문화기타서비스업	36.2	42.1	46.5	53.2	55.4	1.53	0.4
서울	서비스업	243.4	279.5	310.5	355.1	367.7	1.51	2.5
	도소매업	42.4	52.8	56.1	61.5	62.8	1.48	3.3
	운수창고업	8.4	8.2	10.9	10.1	10.5	1.24	1.4
	숙박음식업	8.2	8.7	10.2	11.8	12.8	1.56	0.7
	정보통신업	32.1	38.4	42.1	49.1	51.4	1.60	3.3
	금융보험업	33.4	37.0	40.6	48.2	49.5	1.48	3.9
	부동산업	30.7	33.7	38.9	45.5	45.7	1.49	1.7
	사업서비스업	40.9	47.1	52.8	61.8	64.4	1.58	1.9
	공공국방행정	12.7	14.2	14.9	16.5	16.7	1.32	-0.2
	교육서비스업	15.0	16.3	17.5	19.1	19.9	1.33	1.0
	보건복지업	10.4	12.3	15.2	18.9	20.9	2.02	5.5
	문화기타서비스업	9.2	10.7	11.4	12.7	13.1	1.43	0.2
부산	서비스업	42.9	47.9	55.2	61.4	63.6	1.48	2.5
	도소매업	7.0	8.4	7.9	8.2	8.3	1.18	1.2
	운수창고업	5.6	4.3	6.0	5.6	5.8	1.05	3.0
	숙박음식업	1.9	2.1	2.5	2.9	3.1	1.65	1.2
	정보통신업	1.8	1.7	1.7	1.9	1.9	1.04	1.5
	금융보험업	4.2	4.9	5.3	6.1	5.9	1.39	2.9
	부동산업	5.4	6.2	7.6	8.7	8.9	1.65	2.6
	사업서비스업	4.2	4.8	6.6	7.5	8.2	1.96	3.8
	공공국방행정	3.2	3.9	4.7	5.5	5.8	1.81	2.7
	교육서비스업	4.4	4.9	5.3	5.6	5.7	1.31	0.7
	보건복지업	3.1	4.0	5.0	6.5	7.1	2.24	6.8
	문화기타서비스업	2.2	2.5	2.6	2.9	3.1	1.40	-0.3

자료 : 통계청

□ 2019년중 부산의 경우 지역내 전산업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 사업서비스업은 9.5%로 나타나 2009년에 비해 각각 1.1%p, 2.4%p 상승한 반면, 도소매업은 9.6%로 2.3%p 하락. 서울의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이 16.1%, 정보통신업 12.9%로 나타나 2009년에 비해 각각 0.9%p 상승한 반면, 도소매업은 15.7%로 0.1%p 하락

□ 2009~2019년 기간중 부산은 지역내 비중이 비교적 높은 보건복지업이 2.8%p, 사업서비스업이 2.4%p 상승하였으며 서울은 사업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이 각각 0.9%p 상승

전국·서울·부산의 서비스업 산업구조 변화 추이 비교

(총부가가치 기준)

(비중, %, %p)

		2009(A)	2012	2015	2018	2019(B)	비중변화 (B-A)	기간중 평균
전 국	서비스업	62.1	60.9	61.2	61.6	63.2	1.1	61.3
	도소매업	8.5	9.0	8.2	7.9	7.9	-0.6	8.4
	운수창고업	3.7	3.2	3.7	3.2	3.3	-0.4	3.4
	숙박음식업	2.5	2.3	2.4	2.5	2.7	0.1	2.4
	정보통신업	5.0	4.7	4.7	4.7	4.8	-0.2	4.7
	금융보험업	6.4	6.2	5.8	6.0	5.9	-0.5	6.0
	부동산업	8.3	7.8	8.0	7.9	8.0	-0.3	7.9
	사업서비스업	8.1	8.7	9.5	9.7	10.1	2.0	9.1
	공공국방행정	6.4	6.2	6.3	6.6	6.9	0.5	6.4
	교육서비스업	6.1	5.6	5.4	5.2	5.4	-0.7	5.5
	보건복지업	3.8	3.9	4.2	4.7	5.1	1.3	4.2
	문화기타서비스업	3.3	3.2	3.1	3.1	3.1	-0.2	3.1
서 울	서비스업	90.6	91.0	91.4	91.9	92.0	1.4	91.4
	도소매업	15.8	17.2	16.5	15.9	15.7	-0.1	16.6
	운수창고업	3.1	2.7	3.2	2.6	2.6	-0.5	2.9
	숙박음식업	3.1	2.8	3.0	3.1	3.2	0.1	3.0
	정보통신업	12.0	12.5	12.4	12.7	12.9	0.9	12.5
	금융보험업	12.4	12.1	11.9	12.5	12.4	-0.1	12.1
	부동산업	11.4	11.0	11.4	11.8	11.4	0.0	11.3
	사업서비스업	15.2	15.3	15.5	16.0	16.1	0.9	15.6
	공공국방행정	4.7	4.6	4.4	4.3	4.2	-0.5	4.5
	교육서비스업	5.6	5.3	5.2	4.9	5.0	-0.6	5.2
	보건복지업	3.9	4.0	4.5	4.9	5.2	1.4	4.3
	문화기타서비스업	3.4	3.5	3.4	3.3	3.3	-0.1	3.4
부 산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서비스업	73.3	72.8	72.0	73.8	73.9	0.6	72.9
	도소매업	12.0	12.8	10.4	9.9	9.6	-2.3	11.3
	운수창고업	9.5	6.6	7.8	6.7	6.8	-2.7	7.3
	숙박음식업	3.2	3.2	3.3	3.5	3.6	0.4	3.3
	정보통신업	3.1	2.6	2.3	2.2	2.2	-0.9	2.5
	금융보험업	7.2	7.5	6.9	7.3	6.8	-0.4	7.2
	부동산업	9.2	9.5	10.0	10.4	10.3	1.1	9.8
	사업서비스업	7.1	7.4	8.6	9.0	9.5	2.4	8.1
	공공국방행정	5.4	6.0	6.1	6.6	6.7	1.2	6.1

교육서비스업	7.5	7.4	6.9	6.7	6.7	-0.8	7.1
보건복지업	5.4	6.1	6.5	7.8	8.2	2.8	6.6
문화기타서비스업	3.8	3.8	3.4	3.5	3.6	-0.2	3.6

주 : 1) 총부가가치 기준 자료 : 통계청

□ 한편,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핵심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산업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금융 관련 산업체가 3,241개, 관련 종사자가 51,020명으로 나타나며, 2017년 이후 업체 수 및 종사자 모두 감소 추세에 있음

○ 2014년 금융 관련 산업(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체 수는 3,215개, 관련 종사자는 50,947명

○ 2017년 금융 관련 산업(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체 수는 3,301개(2018년 3,302개로 최다), 관련 종사자는 51,659명으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최다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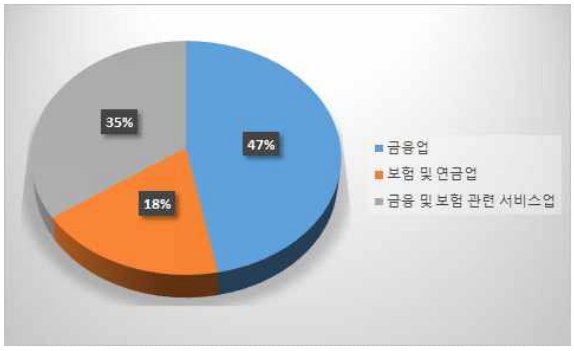
○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금융 관련 산업(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체수는 3,241개, 관련 종사자는 50,947명

<그림 2-8> 부산 금융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주: 사업체 수:좌측, 종사자 수:우측

출처: 통계청 2021

<그림 2-9> 부산 금융산업 부문별 사업체 비중(2019년 기준)



출처: 통계청 2021

3) 개별산업의 특화도

(서울·부산 주요 개별산업의 전국적 위상)

□ 2019년중 서울·부산의 개별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부산의 경우 1~2위 업종인 운수창고업이 2009년에 비해 하락한 반면 보건복지업은 상승. 한편 같은 기간중 서울의 경우 1~2위 업종인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집적고도화가 크게 이루어졌음

서울·부산 개별산업의 전국비중 추이 비교
(지역내총생산 기준)

(%, %p)

		2009(A)	2012	2015	2018	2019(B)	비중변화 (A-B)	기간중 평균
서 울	지역내총생산	24.3	23.1	22.3	22.3	22.6	-1.7	22.8
	농림어업	1.9	1.7	1.2	1.2	1.2	-0.7	1.4
	광업	3.5	5.8	0.2	0.3	0.3	-3.2	2.5
	제조업	4.7	4.3	3.8	3.2	3.4	-1.3	3.8
	전기가스	8.1	9.2	5.3	5.4	5.3	-2.7	6.7
	건설업	14.2	12.8	12.9	13.2	13.3	-0.9	13.2
	서비스업	35.6	34.7	33.3	33.1	33.0	-2.7	34.1
	도소매업	45.3	44.2	44.9	44.6	45.1	-0.3	44.8
	운수창고업	20.7	19.2	19.3	18.0	17.9	-2.8	19.0
	숙박음식업	29.5	28.3	27.5	26.8	27.2	-2.3	28.0
	정보통신업	58.6	62.0	58.7	60.0	60.2	1.6	60.0
	금융보험업	47.3	45.4	45.9	46.3	47.4	0.2	46.0
	부동산업	33.7	32.7	31.8	32.9	32.3	-1.3	32.6
	사업서비스업	46.0	40.7	36.6	36.6	36.1	-9.9	39.5
	공공국방행정	18.1	17.2	15.5	14.3	13.7	-4.3	16.1

	교육서비스업	22.4	22.1	21.3	21.0	21.1	-1.4	21.7
	보건복지업	24.5	23.8	23.8	23.1	23.2	-1.3	23.6
	문화기타서비스업	25.3	25.5	24.6	23.9	23.7	-1.6	24.8
부 산	지역내총생산	5.3	4.9	5.0	4.7	4.8	-0.4	4.9
	농림어업	2.2	2.1	1.6	1.3	1.1	-1.1	1.8
	광업	0.3	1.0	0.8	0.5	0.3	-0.1	0.7
	제조업	3.6	3.2	3.4	2.9	3.1	-0.5	3.2
	전기가스	5.3	3.9	5.8	5.4	5.0	-0.3	5.1
	건설업	4.7	5.7	5.0	5.3	5.4	0.7	5.2
	서비스업	6.3	6.0	5.9	5.7	5.7	-0.6	5.9
	도소매업	7.5	7.0	6.4	6.0	5.9	-1.5	6.6
	운수창고업	13.6	10.1	10.6	10.0	10.0	-3.6	10.6
	숙박음식업	6.7	6.9	6.9	6.6	6.6	-0.2	6.8
	정보통신업	3.3	2.7	2.4	2.3	2.2	-1.1	2.6
	금융보험업	6.0	6.1	6.0	5.8	5.6	-0.3	5.9
	부동산업	5.9	6.1	6.2	6.3	6.3	0.4	6.1
	사업서비스업	4.7	4.2	4.6	4.5	4.6	-0.1	4.4
	공공국방행정	4.5	4.8	4.9	4.8	4.7	0.2	4.7
	교육서비스업	6.6	6.6	6.4	6.2	6.1	-0.5	6.4
	보건복지업	7.4	7.7	7.8	8.0	7.8	0.4	7.8
	문화기타서비스업	6.1	6.0	5.6	5.5	5.6	-0.5	5.8

자료 : 통계청

(개별산업의 산업특화도)

□ 2019년중 서울과 부산의 산업특화도(입지계수)를 보면 부산의 경우 제조업은 2009년에 비해 0.04p 하락한 0.64로 기준치(=1)를 하회하였고, 서비스업은 0.01p 하락한 1.17로 나타나 산업특화도가 하락. 서울의 경우 제조업이 0.15, 서비스업이 1.46으로 각각 나타남

○ 서울의 경우 생산자서비스업인 정보통신업이 2009년에 비해 0.26p 상승한 2.66, 금융보험업은 0.16p 상승한 2.10인 반면, 부산의 경우 2019년중 이들 산업의 특화도가 각각 0.46, 1.15에 그쳐 이들 고부가산업의 특화도가 서울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

서울·부산의 산업특화도[1] 변화추이 비교

		2009(A)	2012	2015	2018	2019(B)	계수 변화 (B-A)	기간중 평균
서 울	농림어업	0.08	0.07	0.05	0.05	0.05	-0.03	0.06
	광업	0.14	0.25	0.01	0.02	0.01	-0.13	0.11
	제조업	0.19	0.18	0.17	0.14	0.15	-0.04	0.17
	전기가스	0.33	0.39	0.24	0.24	0.24	-0.10	0.29
	건설업	0.58	0.55	0.58	0.59	0.59	0.00	0.58

	서비스업	1.46	1.49	1.49	1.49	1.46	0.00	1.49
	도소매업	1.86	1.90	2.01	2.01	1.99	0.13	1.96
	운수창고업	0.85	0.83	0.87	0.81	0.79	-0.06	0.83
	숙박음식업	1.21	1.22	1.23	1.21	1.20	0.00	1.23
	정보통신업	2.40	2.67	2.63	2.70	2.66	0.26	2.63
	금융보험업	1.94	1.95	2.06	2.09	2.10	0.16	2.01
	부동산업	1.38	1.41	1.43	1.48	1.43	0.05	1.43
	사업서비스업	1.88	1.75	1.64	1.65	1.60	-0.29	1.72
	공공국방행정	0.74	0.74	0.70	0.64	0.61	-0.13	0.71
	교육서비스업	0.92	0.95	0.95	0.95	0.93	0.01	0.95
	보건복지업	1.00	1.03	1.07	1.04	1.02	0.02	1.03
	문화기타서비스업	1.04	1.10	1.10	1.08	1.05	0.01	1.09
부 산	농림어업	0.42	0.42	0.32	0.27	0.23	-0.19	0.35
	광업	0.06	0.21	0.15	0.11	0.05	-0.01	0.14
	제조업	0.68	0.65	0.67	0.60	0.64	-0.04	0.65
	전기가스	0.99	0.78	1.15	1.12	1.03	0.04	1.03
	건설업	0.89	1.14	1.00	1.11	1.11	0.23	1.04
	서비스업	1.18	1.20	1.18	1.20	1.17	-0.01	1.19
	도소매업	1.41	1.41	1.26	1.25	1.22	-0.19	1.33
	운수창고업	2.56	2.04	2.12	2.08	2.05	-0.51	2.12
	숙박음식업	1.26	1.39	1.36	1.38	1.35	0.08	1.37
	정보통신업	0.63	0.55	0.48	0.48	0.46	-0.17	0.53
	금융보험업	1.12	1.22	1.19	1.22	1.15	0.04	1.19
	부동산업	1.10	1.22	1.24	1.31	1.28	0.18	1.24
	사업서비스업	0.88	0.84	0.90	0.93	0.94	0.06	0.89
	공공국방행정	0.85	0.96	0.98	1.00	0.97	0.12	0.96
	교육서비스업	1.23	1.33	1.27	1.29	1.24	0.01	1.29
	보건복지업	1.40	1.55	1.55	1.67	1.61	0.21	1.56
	문화기타서비스업	1.14	1.20	1.11	1.16	1.14	0.00	1.16

주 : 1) 입지계수 = 개별산업 지역내비중 / 개별산업 전국비중('1' 초과시 특화산업을 의미, GRDP 기준)
자료 : 통계청

4) 요약

□ 2019년중 부산경제(GRDP 기준)를 보면 그 규모가 16개 시도중 6위에 그치고 있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5위에 불과하여 부산의 경제적 위상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 2009~2019년 기간중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부산은 서울과 같이 경제의 서비스화가 계속 진전되었음. 그러나 부산은 사업서비스업, 보건복지업 등이 경제의 서비스화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사업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이 경제의 서비스화를 주도

□ 2009～2019년중 서울·부산 개별산업의 전국적 위상(지역의 개별산업이 전국의 개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서울은 고부가 산업인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이 월등히 높고 집적화가 고도로 이루어진 반면, 부산은 이들 산업의 위상이 취약한 모습

○ 2009년중 부산의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 생산은 서울의 이들 산업 생산수준의 3.7%, 11.8%에 불과

□ 산업특화도 변화에서도 서울의 경우 정보통신업(2019년 특화도 : 2.66)이나 금융보험업(2.10)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의 경우 이들 산업의 특화도(0.46, 1.15)가 저조한 모습

라. 시사점

□ 부산에 작지만 금융중심지로서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금융 역량 제고 전략과 기존 특화전략을 병행 추진할 필요

○ 부산이 서울을 비롯한 여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금융 및 신성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 부산 금융중심지는 서울・부산의 특화전략을 바탕으로 해양 금융 특화를 통해 시장친화적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산업을 선도할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

○ 해양금융종합센터('14.9), 해양진흥공사('18.7, 한국선박해양, 해양보증보험 합병) 설립으로 해양금융 특화지구로 부상

○ '17년 9월에는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선정하고 부산대, 한국해양대 공동으로 해양·파생금융 특화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부산 금융중심지는 BIFC 1, 2 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등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금융공공기관과 해양금융기관의 집적으로 금융센터로 자리매김하여 물리적 집적지 조성이라는 성과 시현

○ 2009년 1월 금융중심지 선정 이후 정부와 부산시는 부산국제금

융센터 1단계, 2단계 개발사업 추진하였으며, 29개의 공공·민간 금융회사들을 집적

○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한국거래소,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롯한 공공 금융기관이 집적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하던 선박금융 업무를 부산으로 일괄 이전, 해양금융종합센터 출범

○ 최근 중앙정부 주도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IBK 기업은행, KDB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수협중앙회 등 20여곳의 금융기관이 2차 이전 기관에 포함될 가능성 존재

○ 다만,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등이 법률상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추진 시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글로벌 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

○ FATF TREIN('16.9) 유치, IDB-IIC총회('15), AfDB 연차총회('18.9) 등 국제 금융기구 유치 및 국제회의 개최

○ 앞서 언급한 '20.9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수(GFCI) 발표에 따르면 부산은 꾸준히 40위를 기록하여 일본 오사카의 뒤를 잇는 글로벌 금융도시'로 자리매김 중

- 부산은 매년 3월, 9월 두 번 발표하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수(GFCI)에서 '17.3 이후 (50위)- '17.9 (70위)- '18.3 (46위) - '18.9 (44위) - '19.3 (46위)- '19.9 (43위)- '20.3 (51위)- '20.9 (40위)를 기록, 대체로 40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임.

□ 그러나 부산은 금융중심지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금융회사가 여전히 부족한 문제점에 직면

○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별로 없으며 있는 기관도 축소를 논의 중에 있는 어려운 상황

○ 2020년 기준 일본 야마구찌은행, 필리핀 메트로은행, 중국 공상은행의 3개 기관이 부산에 진출 중

○ 이중 공상은행은 부산지점에서 사실상 소매금융만 진행중인데, 수익성 악화로 인해 지점 폐쇄를 논의중이라고 알려짐

- 사업자금도 부산에서 자체 조달하는 것이 아닌, 중국 본사에서 사업성을 인정받고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서울 본사 외에는 마땅한 수익모델조차 없는 상황

□ 다만 최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공간(D-Space BIFC)에 유치하였다고 발표한 홍콩 등을 비롯한 국제적 금융회사 6개사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이 부산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제 및 산업 수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부산의 경우 경제적 위상이 약화되는 가운데 ICT, R&D, 금융산업 등 성장주도 고부가산업의 육성은 더딘 것으로 평가

□ 따라서 부산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주도 고부가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ICT산업, R&D산업, 금융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에서의 집적고도화가 절실히 필요

□ 특히 금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IT와 교통수단 등의 발달이 지방금융산업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만큼, 기존의 해양·파생금융 육성과 별도로 금융적 규제가 덜한 벤처투자 금융의 육성, 2차 공공금융기관 유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Ⅲ.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발전 전략

□ 전통적인 금융중심지 및 특화 금융중심지에 대한 사례 분석
  ○ 금융도시의 성장 배경, 현황 및 발전 요인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1. 일반 금융중심지

가. 영국 런던 (City of London)

□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런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가운데 세제 지원 및 핀테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부산에 적합한 모델을 검토
  ○ 영국 카나리워프 지구는 런던의 신흥 금융지구라 할 수 있는데, 개발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통망 확충 전략이 성공 요인이었다는 평가
  ○ 관련 연구에 따르면 기업특구(Enterprise Zone)으로 지정하여 투자자에 대해 20년간 조세혜택이 주어졌는데, 1981년 이후 개발과정에서 유입되는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사업세)를 면제하는 한편, 지역개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투자자금 중 15%까지 환급해 주는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지출한 비용의 150%까지 감면해 주었음

□ 영국 정부는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핀테크 산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금융중심지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이 혁신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에 결합해 금융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장려하는 정책적 환경을 제공하여 금융과 기술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지향
  ○ 영국 정부는 전통적인 금융허브의 명성을 IT분야와 접목시키기 위해 2012년 핀테크혁신연구소(FinTech Innovation Lab)를 설립하였으며,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터

(incubator)와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육성에 노력

○ 핀테크 관련 기술 인재의 공급이 높으며, 금융서비스 전문지식, 기업가 및 리더십 노하우를 보유한 우수한 인력풀을 갖추고 있음[4)]

※ 테크 네이션 비자(Tech Nation Visa) ㅇ 명칭 : 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 for digital technology ㅇ 대상 :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리더 혹은 특별한 가능성을 가진 차세대 리더 ㅇ 체류 유효기간 : 5년(영국외 지역 신청시 5년 4개월), 추가 5년 갱신 가능 ㅇ 신청절차 : 1단계 승인신청과 2단계 비자신청으로 구분 - 이민국으로 신청, 테크 네이션에서 1단계 자격여부 평가(8주, 456파운드) - 1단계 자격 통과 시 3개월 내 이민국으로 비자 신청(8주, 152파운드)

□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 특히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 시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 등은 핀테크 사업을 시작하는 데 이점으로 작용

○ 런던의 테크 시티는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자금조달 용이성, 창업 클러스터의 활성화, 해외창업자에 대한 개방성 등 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나. 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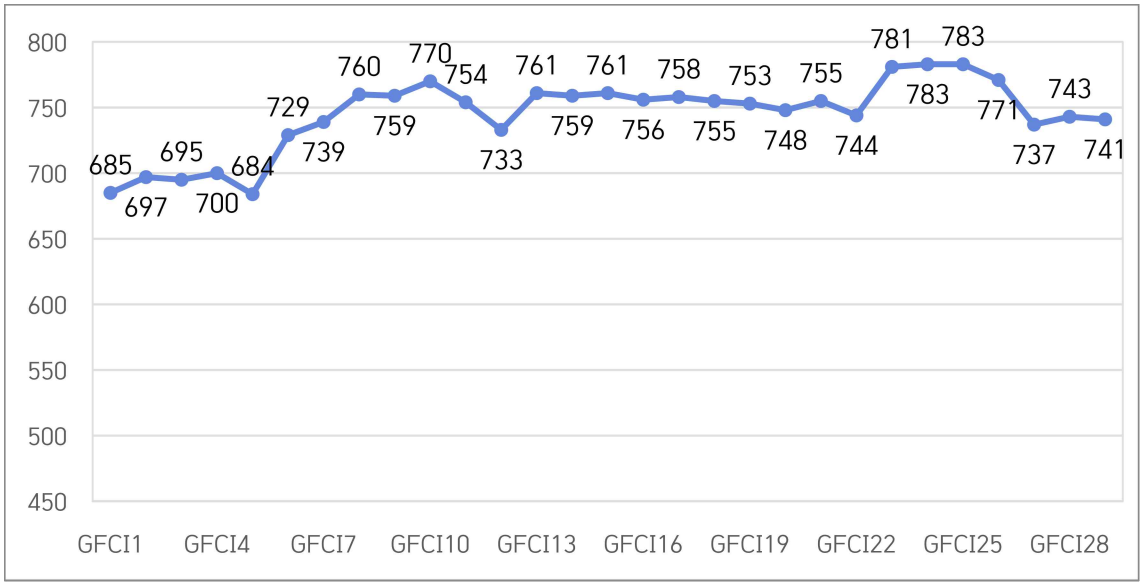
□ GFCI score 및 GFCI Rank 추이

○ 홍콩은 2007년 3월 GFCI 1에서 685점으로 전체 46개 도시 중에서 3위를 기록하며 처음 순위에 기록된 이후, 2021년 3월 GFCI 29에서 741점으로 전체 114개 도시 중에서 4위 기록

□ GFCI scor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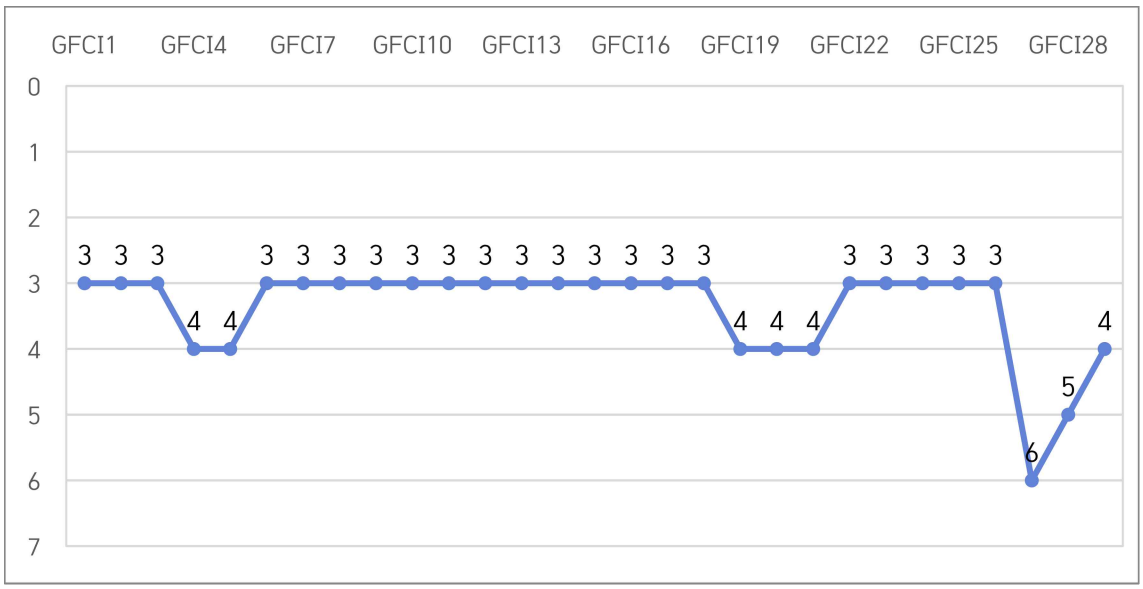
○ 홍콩은 2013년 이후 대체로 꾸준히 700점 대 중후반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랭크

4) 보다 자세한 논의는 IV. 4. 다. ①, ② 참조.



출처: The Z/yen Group,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1~29

□ GFCI Rank 추이



출처: The Z/yen Group,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1~29

□ 홍콩의 발전 배경을 살펴보면 홍콩은 규모가 작고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재수출 무역에서 제조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산업생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되면서 금융업이 발전

○ 1950년부터 1960년까지 홍콩 상업은행은 외국지점 포함하여 29

개에서 73개로 증가했으며, 1960년대에서는 총자산이 197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홍콩이 국제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1970년대 초 다각화된 경제의 발전에서 금융산업은 매우 빠르게 발전했고, 1981년 금융산업의 생산 가치가 국가 경제의 총 생산량의 23.8%를 차지했으며, 금융산업은 홍콩의 기둥 산업이 됨.

○ 현재 홍콩은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은행센터, 6번째로 큰 외환시장, 11번째로 큰 무역경제임.

□ 지리적 이점: 1842년 홍콩이 항구로 개항했을 당시에는 자원이 한정된 작은 어촌에 불과했음. 하지만 홍콩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모든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음. 또한 홍콩은 중국의 관문으로서 중국시장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기업에게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홍콩이 자연스럽게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됨.

○ 홍콩은 북미와 유럽 사이의 시차를 연결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함. 홍콩은 아시아 항공의 허브이자 세계 금융시장에서 하루 24시간 거래를 하는데 기여하는 국제 금융중심지임.

○ 세계인구의 절반이 홍콩에서 5시간 거리내에 있음.

- 인근 도시와의 커넥트: 중국은 2017년 6월 20일 4년간의 노력 끝에 MSCI 신흥시장지수에 합류했으며, 이는 중국 금융 역사상 기록될만한 사건임. 홍콩과 인근 지역의 금융개방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중국은 홍콩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2003.7월 중국과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협정* 체결 이후 對중국 중계교역 중심지로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로 전환되는 등 중국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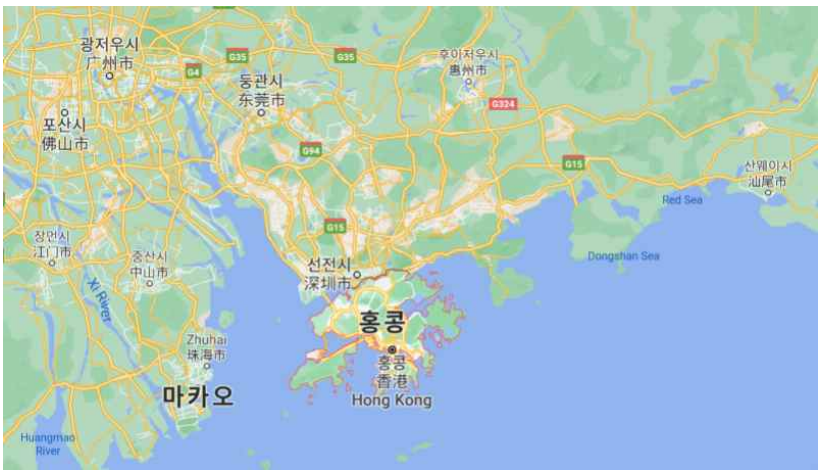
* 중국・홍콩간 경제협력 강화 협정으로 홍콩의 대중국 수출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 면제,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포함

- 대표적으로 상하이・홍콩 금융개방은 두 주식시장 간의 첫 번째 금융 채널임. 상하이는 첨단제조 산업개발, 인프라 건

설, 특히 푸동 신구에서 중국 최초의 경제기술개발구, 산업단지, 첨단기술구역, 보세지역, 수출가공지역, 자유무역지대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단지 건설 경험을 가짐. 반면, 홍콩의 경우 국제시장규칙에 익숙해지고 금융 및 기타 전문 서비스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짐. 상하이의 인구, 재능, 해운 및 상업, 금융, 기술 및 제조 등 포괄적인 경제력과 홍콩의 국제 금융 역량이 합쳐져 장기적으로 win-win의 협력관계를 맺음

- 광둥성・홍콩・마카오 지역통합 발전계획인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내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서비스업 협력구(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의 경우, 홍콩의 금융업 및 법률서비스 투자 제한 완화 관련 중앙의 지지 획득, 홍콩국제중재기구의 첸하이 지부 유치, 홍콩거래소와의 선물거래 협력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함

<그림 3-1> 홍콩의 지리적 위치



출처: 구글 지도

□ 정치적 요인: 홍콩은 1860년 영국 식민지가 됨. 150년의 식민지 시대 동안 홍콩은 점차 지역적 특성을 지닌 자본주의 체제를 형성함. 더욱이 홍콩은 시장 경제가 매우 자유로워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홍콩에 투자하고 상장할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었음. 이러한 외자 유입은 홍콩의 산업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국제 금융중심지로서 입지를 견고히 함

○ 식민지 시대의 외국은행산업: 은행 산업은 홍콩 금융발전의 시작임. 홍콩 개장 초기에 외국 기업과 주식 은행이 홍콩에 도입되면서 주요 비즈니스 흐름도 홍콩으로 이전됨. 당시 "대리점"으로 알려진 외국 은행의 은행 부서는 홍콩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함. 1845년 동방은행(The Oriental Bank Corporation)은 빠르게 홍콩 중심에 지점을 설립하여 홍콩에 정착한 최초의 외국 은행이자 홍콩에서 지폐를 발행한 최초의 은행이 됨. 1857년에는 Chartered Mercantile Bank of India, London and China의 홍콩 지점도 열었고 8년 후 홍콩 달러 지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됨. 오랫동안 홍콩의 3대 지폐 발행 은행[5] 중 하나였음. 시간이 지나 Standard Chartered Bank와 HSBC(Hong Kong & Shanghai Banking Corporation)도 홍콩에 자리를 잡음

□ 홍콩의 국제화 전략[6]

○ 거대한 전문 서비스 군집과 보편적인 국제 네트워크와 연계

- 외국인의 외환거래(외국자본의 유입·유출·투자수익의 송금 등)와 자산 투자(부동산 투자·증권 발행 및 취득,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규제가 없는 등 외환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외국금융기관이 홍콩 진출을 허가받으면 역내금융, 역외금융, 외환 및 홍콩달러 업무 등 은행의 모든 업무를 내국은행과 동일하게 영위할 수 있음(GATT가 규정한 National Treatment<내국민대우>의 철저한 준수)

○ 질 높은 노동력 및 사회적 인프라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함으로써 금융분야의 글로벌 고급 전문인력에게 편리한 근무여건을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국제업무에 적합한 노동력 제공이 가능

5) 이후 1959년 영국계 상업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Hong Kong &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HSBC)에 인수됨. 현재는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SCB), 중국의 외환전문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 BOC) 3곳에서 홍콩 달러를 발행 중.

6) 조용범, <해외 사례로 본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의 미비점 및 향후 과제>, 한국은행 부산본부, 2013.05.23

-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실시한 2021년 세계대학평가에서 홍콩대학교(University of Hong Kong)는 27위를 기록하면서 그 위상을 나타냄.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인 홍콩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핵심 기능으로 작용
- 또 다른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한 World Reputation Rankings 2021에서도 39위를 기록

○ 개방적 M&A시장,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과 규제, 정부의 역량,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 M&A시장도 지분소유구조에 제한이 없는 데다 기업거래 촉진을 위한 전문가 패널 제도, 규제에 대한 자문제도 등을 운용하는 등 매우 개방적.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을 불문하고 내국기업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음
- 홍콩의 금융감독·규제는 최소 규제[7]를 통해 시장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문성과 유연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
-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법정 지급준비금제도가 없고 예금보험제도가 없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인 준조세적 부담이 없어 금융기관의 영업환경에 유리
- 증권거래소도 증권결제기간을 단축(T+2)하고 집중화된 결제시스템에서 미국달러와 홍콩달러의 동시결제 그리고 위안화의 실시간결제를 지원하는 등 결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국제물류센터로서 홍콩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국제 공항과 최첨단 정보기술 및 통신 네트워크 보유

- 현대식 국제공항인 책랍콕(Chark lap kok)공항과 세계 최고수준의 항만, 그리고 현대적이고 선진화된 정보시스템을 구비하는 등 국제업무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7) 금융감독기능을 회계법인이나 업계 자율규제, 내부 통제기능 등에 상당부분 위임하되 법규 위반시에는 강력히 제재함.

□ 효율성과 유연성

○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 편리한 사업장 위치로 세계 5위 선정

○ 통화는 안정적이며 환율 제한 없이 완전히 전환 가능

○ 홍콩은 조세항목이 매우 단순하고 세율도 낮은 조세체계를 유지

- 세목은 이윤세(profit tax, 법인세에 해당), 근로소득세(salaries tax), 재산세(property tax)로 단순하게 구성
- 1980년대 이후 부가가치세(VAT),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등을 폐지하였으며 상속세(inheritance tax) 및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도 없음
- 이윤세는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주식회사 16.5%, 비주식 회사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홍콩 이외의 해외원천소득(Offshore-Income)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히 국내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territorial source principle)에 충실하여 역외금융이나 중개업무만 영위하는 금융기관에는 매우 유리한 구조
- 기존 홍콩 법인의 소득세율은 16.5%의 단일 세율로 적용되었으나,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 HK$ 2,000,000 까지는 기존 법인 세율의 절반인 8.25%가 적용됨. (개인 사업자의 과세 소득세율은 7.5%) 다만,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이 홍콩 내 여러 법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관계 법인 중 한 법인에만 적용 가능.

다. 싱가포르

□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며, 특정 지역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R&D 허브 및 금융허브의 육성과 지역운영본부(Headquater)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해외소득에 대해 광범위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조세특례규정들은 주로 경제확장인센티브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 Act)과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서 규정하고 있음

○ 세법에는 투자인센티브별로 포괄적인 한도만이 규정되어 있고, 감면기간이나 감면기간의 개시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외국인투자자와 싱가포르 정부간에 협상을 통해 결정

□ 개척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업무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Singapore)에서 주관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제도 — 금융부문개발기금(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 FSDF)[8)]

○ MAS는 싱가포르를 금융 중심지로 홍보, 금융 서비스 부문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개발, 금융 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 기관, 연구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금융부문개발기금(FSDF)을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보조금을 제공함

구 분	보조금명	내 용
주요 사업 분야 지원	글로벌-아시아 채권 보조금 제도	싱가포르 채권 시장을 통해 처음으로 자본을 조달하려는 아시아 연계 기업을 지원 (2024/12/31 까지)
	지속가능한 채권 보조금 제도	싱가포르에서 녹색, 사회, 지속 가능성 관련 채권의 발행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됨 (2023/5/31 까지)
	보험연계증권 보조금 제도	싱가포르에서 ILS(Insurance-linked Securities)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ILS 채권 발행 비용의 회대 100% 까지 자금을 조달 (2020/12/31 까지)
	SGD 신용 등급 보조금 제도	채권 발행자가 신용 등급을 획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정됨 (2022/3/31 까지)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대한 보조금 제도	상장 보조금, 인재개발 보조금, 연구 보조금 (2019/2/14부터 3년 동안 유효)
	외환전자거래 생태계 보조금 제도	싱가포르에서 매칭 및 가격 책정/ 거래 엔진을 설정하는 유동성 공급자와 주요 딜러 간 플랫폼, 멀티 딜러 플랫폼에서의 선발주자를 지원
	가변자본회사(VCC) 보조금 제도	새로운 투자 펀드를 VCC로 설정하거나 기존 해외 투자 펀드를 VCC로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펀드매니저를 지원함 (2023/1/15 까지)

8) https://www.mas.gov.sg/schemes-and-initiatives/financial-sector-development-fund-fsdf

	녹색 및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 보조금 제도	기업이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이 녹색 및 지속 가능성 연결 대출을 개발하도록 보조금 제공 (2023/12/31 까지)
	투자자 교육 보조금 제도	싱가포르에서 투자자 기반 개발을 이끄는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모든 기관을 지원
혁신 및 기술 지원	혁신 센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시장 솔루션을 출시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우수 혁신 센터 또는 연구소 설치를 지원 (2023년 3월까지)
	기관 수준 프로젝트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시장 솔루션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 전반의 기술 인프라 또는 유틸리티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시장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할 기술/유틸리티 인프라의 광범위한 채택을 위해 산업별 또는 전국적인 유틸리티 프로젝트를 지원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석(DA)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입증하는 프로젝트와 싱가포르와 싱가포르 경제부문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분석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 (2023년 3월까지)
	개념 증명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초기 혁신 기술의 실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자금 지원 (2023년 3월까지)
	사이버 보안기능	사이버 보안 역량을 높이고 싱가포르 금융 서비스 부문의 현지 사이버 보안 인재 개발을 지원 (2023년 3월까지)
	디지털 가속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소규모 금융 기관 및 FinTech 회사가 생산성 향상, 효율성 증대, 위험 관리 개선, 운영 탄력성 구축,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생산성 솔루션 보조금(PSG)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전 승인된 솔루션 또는 장비를 채택한 소규모 금융 기관을 지원
기술 및 경력 개발 지원	기관 및 개인을 위한 지원	금융 기관들의 고용, 트레이닝, 인력전환과 개인의 기술 개발 및 경력 이동을 지원

□ 이 외에도,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설립하거나 확장할 계획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로 허가받은 금융 기관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인 FSI(Financial Sector incentive)와 허가받은 보험회사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인 IBD(Insurance Business Development)가 있음

□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신속한 시장테스트를 위한 Sandbox Express 출시

(2019.8.7.)[9]

○ 싱가포르는 영국의 금융핀테크 산업중심 규제샌드박스와는 달리 금융, 의료,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샌드박스 익스프레스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보완책으로 기존의 표준화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협의된 기준 내에서 신속하게 혁신 실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즉, 신청자에게 필요한 시간 및 자원을 절감시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을 시험 시장에 더 빨리 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MAS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응답해야 하고, 적격지원자는 21일 이내에 미리 정의된 환경에서 시장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음

○ 더 짧은 기간 내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의 사전 정의된 (pre-defined) 샌드박스에 대한 조건 및 규제완화가 사전 결정되어야 함

○ 샌드박스 익스프레스는 낮은 위험도를 지닌 금융 서비스나 제품, 또는 각각 사전 정의된 샌드박스 구조가 합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금융 서비스나 상품만을 그 대상으로 함

□ 신청자 사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신청자성명, 샌드박스 시작일, 만료일, 주요 사업활동 등 승인된 모든 신청서의 관련 정보를 MAS 홈페이지에 공개

□ 시사점

○ 싱가포르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와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강화를

9)https://www.mas.gov.sg/-/media/MAS/Smart-Financial-Centre/Sandbox-Express/Sandbox-Express-Guidelines-7-Aug.pdf

위해 직접 규제나 전면 금지보다는 간접 규제에 초점을 맞춰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심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 특화 금융중심지

가.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는 지리적 이점, 다국화된 인구, 우수한 인적자원, 낮은 세제 및 규제 등을 통해 투자펀드, 프라이빗 뱅킹, 재보험 등 특화 금융을 시작으로 EU의 금융중심지로 발전

○ 룩셈부르크는 면적 2,586㎢(부산의 3.4배), 인구 62만명(2019년 기준)으로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여러 국가가 경계에 근접하여 다양한 언어와 문화,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음(인구의 48%가 외국인, 170개국 이상 국적)

○ 1인당 명목 GDP는 113,196달러(2019년)로 세계 1위인 강소국으로, 독일, 프랑스, 벨기에에 둘러싸여 있고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 독일어, 룩셈부르크어이지만 영어에도 능통하여 다국어를 구사

○ 20세기 초 철강산업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나, 70년대 오일쇼크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철강산업이 위기를 겪게 되자 산업구조를 '인재 기반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금융산업에 집중 육성

□ 금융에 대한 규제가 크게 없었기에 과감한 전략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고, 법인세 등 각종 세율을 대폭 낮추었으며, 특히 투자펀드, 프라이빗 뱅킹, 재보험 등 강점을 살린 특화금융육성을 통해 EU를 대표하는 금융중심지로 발전

○ 1980년대 후반까지는 주로 국내 시장에 집중되었던 보험시장이 1990년대 초부터 유럽 내부보험 시장으로 발전하고, 서비스 자유체제가 도입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룸. 1984년 재보험법을

도입하면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환경으로 재보험에 대한 욕구를 가진 다국적 대기업과 금융기관 유치

○ 서유럽 중심국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금융시장 개방 정책, 낮은 세율, 풍부한 다언어 노동력 등의 장점을 통해 빠르게 금융 산업이 발전

□ 룩셈부르크는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해 다국적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현지에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 및 다양한 혜택 제공

○ 1980년대 법인세율을 21%로 낮게 설정하여 이베이, 스카이프, 아마존, 라쿠텐 등의 다국적 기업이 유럽 본사를 자국으로 유치함

○ 해외로 송금 시 세율을 유럽 최하위 수준인 1%대로 낮추고, 금융감독기관(CSSF)를 통해 개인 금융거래 비밀보장 및 자국으로 이전하는 은행에게 EU 국가 중 최단 기간 은행 인가, 행정부의 빠른 의사결정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

○ 글로벌 기업이 대거 입주하면서 산하 벤처기업도 자연스레 생기는 낙수효과 발생, 은행 외 제2금융권 자본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하면서 19년 2월 기준 29개국 136개 국제은행 영업, 42개의 손해보험사, 207개의 독립보험사, 자사보험사(Captive Insurance Company), 46개의 생명보험사가 영업 중

□ 현재도 자국에 다양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지원금, 연구개발(R&D) 및 혁신 프로젝트 보조금 등을 제공, 기술지식재산 보호, 혁신 관련 외부 자문 서비스, 고급 인력 임시 파견 등을 위한 지원금 제공

○ 2020년 법인세율은 15-17%로 낮은 세율을 유지 중이고, 서비스 공급에 적용되는 기본 부가세율은 17%로 EU에서 가장 낮음,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또한 유럽 최저수준으로 최대 한계 세율이 42% 수준

○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질병, 출산, 장애, 사망, 노령 위

험과 같은 개인 및 직업적인 사고에 대해 보장 제공, 공동 사회 보장 센터(Joint Social Security Centre)를 통해 다양한 보험 기금을 처리하고, 고용주 상호보험제도(Employers' Mutual Insurance Scheme)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방지

○ 인큐베이션부터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간단한 유한책임 회사 설립 절차(1유로 회사), 프로젝트 이니시에이터 및 기업가들을 위한 원스톱샵 'House of Entrepreneurship' 을 통한 전문적 지원, 법인 설립 문서에 영어 사용 가능, 처음 사무실을 내는 스타트업과 국제 기업을 대상으로 16,000㎡의 시설 제공 등 간편하고 다양한 창업 지원

○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여 항공, 도로, 철도, 수로 인프라를 통해 대륙 간 유럽의 물류 허브 역할. 단순하고 효율적인 규제 및 행정 프레임워크로 인해 상품 처리가 효율적이고 거래 비용이 절감

□ 룩셈부르크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방향을 핀테크 정책으로 수립하고 브렉시트로 인하여 80개 이상의 회사가 런던에서 룩셈부르크로 법인 이전을 진행 및 예고 중

○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재정부, 상공회의소 등이 주주로 참여한 핀테크지원센터 'LHoFT(Luxembourg House of Financial Technology)'를 설치하여 최단 기간 법인 설립, 판로 개척, 기술 지원,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소프트랜딩 등 핀테크 에코 시스템 창출. 암호화폐거래소 인가는 물론 2020년 2월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와 송금(transaction)에 대해서도 기존 은행 거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 제정

○ 룩셈부르크는 ICT 강국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가 번창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가 된다는 목표. 핀테크,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고성능 컴퓨팅, e-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등 새로운 혁신 사업 등을 적극 장려. 더불어 ICT 연구 분야로 안전한 데이터 관리, 핀테크, 사이버 보안, 커넥티드 카 및 스마트 도시 등이 있음

○ 룩셈부르크의 인프라와 법률 체계는 데이터 처리와 보안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안정적인 데이터 취급 및 보호가 가능. 2018년에 초당 1페타플롭스(PetaFlops, 1천조)의 성능을 보유한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HPC)을 도입하여 유럽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 본 인프라를 통해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제조업, 스마트 스페이스,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범유럽 프로젝트에 활용 계획

○ 사이버 보안 부분에서는 룩셈부르크 응급 대응 커뮤니티 CERT.LU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사이버보안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핵심적인 인프라를 보호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중요정보를 교환하고 대중의 인식을 강화 하는 역할. 또한 사이버 보안 기능 센터 C3(Cybersecurity Competence Centre)에서 위협 정보, 사이버 보안 기술 및 전문성과 더불어 사물 인터넷, 스페이스 기술, 핀테크 및 무인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교육 및 테스팅 기회 제공

○ 인큐베이션에서 성공 및 엑셀러레이션 단계에 이르기까지 ICT 스타트업을 위한 수많은 지원책을 포함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창업기회 제공과 새로운 회사 유치 진행

○ 민간 금융 부문에서 은행, 비즈니스 엔젤 투자자, 벤처 캐피탈 등을 통해 자본 조달이 가능하고, 국책 투자 은행(SNCI), 디지털 테크 펀드(Digital Tech Fund), 룩셈부르크 퓨처 펀드(Luxembourg Future Fund), 룩셈부르크 수출 신용 기구(Luxembourg Export Credit Agency)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초기 첨단 스타트업 지원, 혁신적인 중소기업 지원, 교역 사업 기업 지원 등 다양한 혁심 기금과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법규 준수, 준법 감시, 내부 통제 등의 규제 업무를 효율화하는 레크테크(RegTech) 기술은 룩셈부르크 금융 서비스 산업의 핵심 강점. 금융기관들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규제 보고와 준법을 비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구축하는데 주력 중. 룩셈부르크에서 개발된 솔루션을 통해 준법, 거래상대방 위험 관리, 부정 행위 탐지 등 규제에 대

한 부담을 자동으로 처리해 고객에게 집중 가능

○ 결제, 기금 관리, 보고, 청산, 대체 자산의 소유권 추적 등 많은 금융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 중. 특히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는 이더리움(Ethereum) 기반의 분산형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자가 공시하는 정보를 '디지털 서명'을 통해 제공하고 분산형 플랫폼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펀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보험 산업에 적용하는 인슈어테크(InsurTech) 회사들도 즐비. 특히 브렉시트의 결과로 지난 2년간 다수의 주요 국제 보험사들이 EU 운영을 그랜드-더치(Grand-Duchy)에 설립하기로 하면서 국제 손해보험 분야의 주요 주체

○ 페이팔, 아마존 페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알리페이, 핑퐁, 비트플라이어 등 글로벌 대형 데이터센터 및 다국적 핀테크 업체 유치

□ 기존의 금융기관과 거래에 참여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규제는 필수적이므로, 룩셈부르크의 금융서비스 규제기관인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는 기술 혁신에 대한 역량과 개방성으로 맞춤형 핀테크 규제에 대응

○ 금융규제기관은 엄격하지만 기술 중립적 접근방식의 혁신에 개방적. 신기술과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적절한 규제와 라이선스 제공(핀테크 기업은 라이센스가 필수)

○ 법적 보안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회피함.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위한 이노베이션 육성 및 신흥기술을 면밀히 연구 및 검토

○ EU 국가중 유일하게 전자보관을 위한 운영법 체계를 갖춰, 디지털 문서의 법적 가치를 인정하며 특정 조건에서 원본 준수를 보장. 종이 문서 없이 디지털 사업 및 금융업이 가능한 환경 제공

○ 룩셈부르크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신기술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기존 규제 요건내에서 비즈니스모델에 규제 장벽이 있는지 여부 평가

○ 특히 EU 규제기관 중 최초로 가상화폐, 암호화폐 자체를 규제하지 않고 암호화폐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확한 법적 입장 제시. 유럽최초로 지불 기관 라이센스를 비트플라이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

○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2)의 시행으로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큰 오픈 뱅킹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룩셈부르크는 다양한 기업들의 유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특별과정 및 대학 설립을 통해 인재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음

○ 2003년 룩셈부르크대학교(University of Luxembourg)를 설립하면서, 다언어, 다학문, 국제적 특성을 뚜렷히하여 전문적인 고등교육 제공. 3개 학부, 3개 다학제 센터로 구성되어 전세계 국제적인 대학 78개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최근 가장 국제적인 대학교 순위에서 전 세계 2위를 기록하였고, 보안, 안정성, 신뢰, ICT, 바이오 관련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 중

○ 룩셈부르크 기술학교(Luxembourg Tech School)는 “차세대 디지털 리더 양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차세대 디지털 혁신 리더들의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 연마를 목표

○ House of Training은 은행 연합회 ABBL(the Luxembourg Bankers’ Association)과 공동으로 디지털 뱅킹 혁신, 분산 원장 기술, 데이터 분석, 소셜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디지털 뱅킹과 핀테크에 대한 강좌 개발. 국가적 차원의 교육 지원으로 유럽에서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고 인구의 86%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 룩셈부르크의 금융중심지 역할 및 핀테크 중심 산업에 대한 시사점

○ 룩셈부르크는 지리적 이점을 통해 다국화, 다문화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고, 국민들은 영어를 포함한 4개 국어 이상이 가능하여 글로벌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생활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가지고 있음

○ 20세기 초 철강산업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나, 오일쇼크로 철강산업이 위기를 겪게 되자 산업구조를 '인재 기반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금융산업에 집중 육성하여 투자펀드, 프라이빗 뱅킹, 재보험 등 본인들의 강점을 살린 특화금융육성을 통해 EU를 대표하는 금융중심지로 발전

○ 금융산업의 비즈니스 대상이 되는 실물경제 발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롭고 다양한 기업들이 룩셈부르크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투자자금을 제공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맞춰 금융산업에서도 핀테크, 디지털 금융 관련 혁신 금융서비스, 규제 극복을 위해 노력 중, 특히 새로운 디지털 금융 산업인 레크테크(RegTech), 인슈어테크(InsurTech),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등을 받아들여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가 생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 중

<그림 3-2> 룩셈부르크의 핀테크 기업 리스트

출처: luxembourgforfinance, fintech publication, December 2020

나. 더블린

□ 아일랜드는 과감한 개방정책과 적극적인 외자유치 및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현재 EU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2019년 38위에서 2020년 30위로 상승함

□ 아일랜드 금융시장이 발전한 요인으로 대외개방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전략과 펀드 백오피스산업 특화전략을 들 수 있음

□ 아일랜드의 경제 발전과정[10)]

○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아일랜드는 높은 관세를 통한 무역장벽으로 내수위주의 자국산업 육성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극심한 경제난을 겪음

○ 1950년대에 이르러 서서히 수출창출 및 대외개방정책[11)]으로 변하기 시작했으나, 경제성장이 대부분 정부주도의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짐으로써 1980년대 공공부문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 극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간 협상을 통해 1987년 국가재건프로그램(Program for National Recovery)[12)]을 체결하여 공공부문의 지출과 세금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함. 이러한 규제완화와 개방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함 예) 1989년 인텔이 투자하였고, 이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회사들의 투자가 이어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EU 내에서 제일 먼저 경기침체를 겪은 아일랜드는 주택건설부문의 버블 붕괴 및 이로 인

---

10) 박광수·임동순, “아일랜드의 금융시장 발전요인 분석: 펀드산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36(4), 2018.

11) 아일랜드 정부는 산업개발청(IDA: Industrial and Development Agency)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중조직으로 격상시키고, 1990년대 중반부터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섬. IDA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투자유치와 산업정책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외국투자유치, 산업정책입안, 투자조건협상 유인책결정, 산업공단 개발과 운영, 투자업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예산과 운영에 있어서도 고도의 자율성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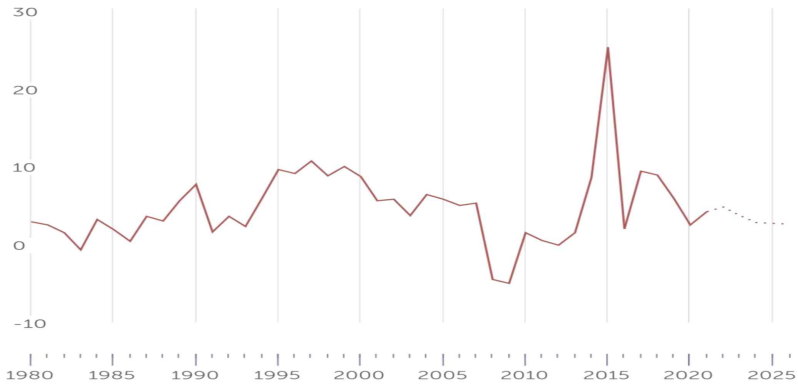
12) 유효기간이 3년인 이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은 협약 체결 당시 임금인상률을 연간 2.5%로 제한하고,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하며, 개인 세금의 감축을 통해 낮은 임금 인상 보전 등으로 구성됨.

한 은행 위기로 2010년 11월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EU와 IMF로부터 총 850억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2010년 12월에는 재정지출 감소(100억 유로) 및 세금인상(50억 유로)을 포함한 150억 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이 아일랜드 의회를 통과하여 강도 높은 재정 감축을 실행함

○ 이후 정부지출 축소, 세금인상 등 정부의 빠른 정책 대응으로 2012년 중반 국채발행에 성공함으로써 유럽의 위기국 중 가장 먼저 구제금융 지원을 졸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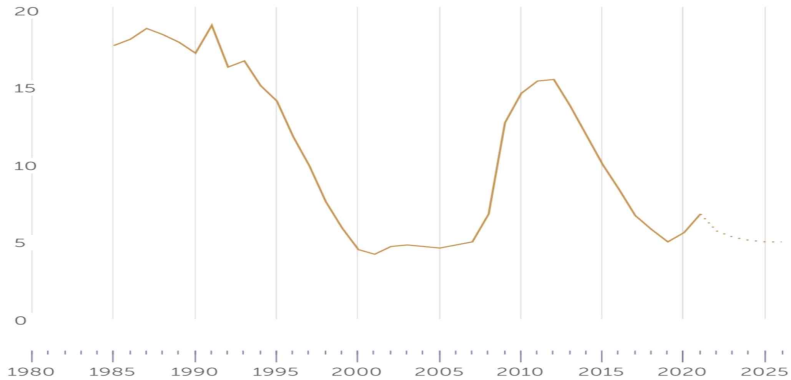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서비스부문 GDP는 30% 상승했으며(193억 유로), 현재 9,000개 이상의 기업과 105,000명 이상의 직원이 아일랜드 전역에서 금융서비스 관련 일을 수행함[13)]

<그림 3-3> 아일랜드 GDP 성장률 추이



출처: IMF, https://www.imf.org/en/Countries/I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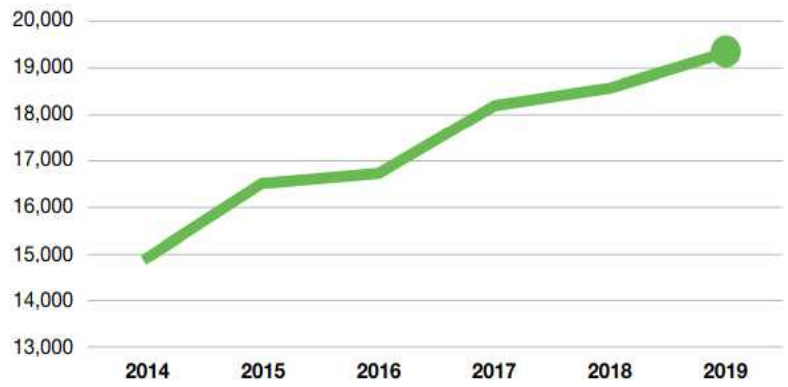
<그림 3-4> 아일랜드 실업률 추이



출처: IMF, https://www.imf.org/en/Countries/I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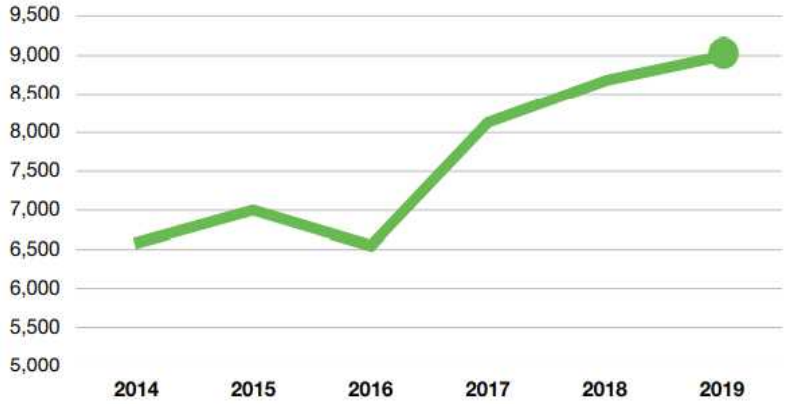
13) Financial Services Ireland, "Ireland's future through finance", 2020.

<그림 3-5> 경제서비스부문 GDP 성장 추이(백만유로)



출처: Financial Service Ireland, “Ireland’s future through finance“, 2020, p.7.

<그림 3-6> 금융서비스 기업 수 추이



출처: Financial Service Ireland, “Ireland’s future through finance“, 2020, p.7.

□ 더블린 국제금융서비스센터(International Finance Service Center: IFSC)

○ 더블린은 유럽 내 펀드서비스, 항공금융, 재보험 등의 중심지이며, 특히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사무수탁 서비스센터임[14)]

○ 1987년 4월 아일랜드 정부는 이미 조세유인정책을 제공하여 도시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던 더블린의 중심부(Custom House Docks: CHD)지역에 국제금융센터 설치를 발표함

○ 1997년 아일랜드 정부는 더블린항 개발청법(Dublin Docklands Area Development Authority Act)을 제정함으로써 더블린항 개발청((Dublin Docklands Development Authority)을 설립하여 더

14) 자본시장연구원(KCMI), "아일랜드 경제회복과 더블린 국제금융센터(IFSC)의 재도약 움직임", 자본시장 Weekly 33호, 2014.

블린 지구 개발을 전담하게 함

○ 정부는 1988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현재 IFSC는 15.8ha의 면적에 2백만 평방피트의 사무실공간과 호텔, 음식점, 주거공간, 소매점 그리고 탁아소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일랜드국립대학 캠퍼스도 소재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은행, 금융중개기관 및 금융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 더블린 IFSC에는 500개 이상의 입주기업, 38,000명의 직접고용인원, 아일랜드 전체 다국적 노동자 가운데 10% 고용 및 아일랜드 GDP의 7.4%를 기여하고 있음. 이 외에도 200개 이상의 다국적기업들과 세계 50대 은행, 세계 20대 보험회사가 입주해 있음.[15)]

○ 더블린 IFSC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런던 금융시장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면서 펀드시장과 백오피스산업 특화전략으로 더블린 IFSC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

- 이러한 전략과 EU 내의 단일 면허체계인 UCITS Directive 제도를 바탕으로 펀드 등록・서비스 금융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 더블린 IFSC는 설립 당시 주 영업대상을 비거주자, 거래 대상 통화를 외국 통화로 한정하였고, 외국투자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엄격한 승인위원회(CAC)의 입주 승인절차를 통해 금융거래 감독, 위험관리 등을 사전에 통제[16)]

<표 3-1> 더블린 IFSC의 현황

항목	수치
입주기업수	500개
근무직원평균연봉	60.100유로
직접고용 인원수	38.000명
토착기업 고용인원수	6.000명
아일랜드 GDP 기여도	7.4%
아일랜드 전체 다국적 노동자 중 고용비율	10%

출처: 박광수・임동순, “아일랜드의 금융시장 발전요인 분석: 펀드산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36(4), 2018, 127면

15) 박광수·임동순, “아일랜드의 금융시장 발전요인 분석: 펀드산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36(4), 2018.

16) 자본시장연구원(KCMI), "부산 금융중심지의 펀드산업(백오피스) 특화전략 연구", 2015.

□ 더블린 국제금융센터의 성공 요인

○ 세계적 국제금융시장의 허브인 런던과 같은 시간대이며, 지리적으로 가까워 프론트업무(front-office service)는 런던에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백오피스업무(back-office service)는 아일랜드에서 세제혜택 등으로 총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함

○ 영어를 사용하는 양질의 노동력, 금융전문 교육기관, 금융전문인력이 풍부하게 존재함. 이러한 노동력은 더블린 IFSC에서의 기업활동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높은 수준의 IT 및 금융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금융거래의 단계별 분화가 가능하며, 통신 및 다양한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증진함

<표 3-2> OECD 주요 국가별 법인세율 비교 (2021년 4월 29일 기준)

국가	중앙정부 법인세율 (%) Central government- Corporate income tax rate
아일랜드	12.50
한국	25.00
영국	19.00
룩셈부르크	18.19
미국	21.00
독일	15.83
프랑스	28.41
벨기에	25.00
덴마크	22.00
네덜란드	25.00
이탈리아	24.00
스페인	25.00

출처: OECD, https://stats.oecd.org/

□ 펀드 백오피스산업 특화전략[17)]

○ 아일랜드는 룩셈부르크와 함께 일찍부터 유럽의 펀드시장의 성장세를 예상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실행해 옴

○ 1989년 UCITS 지침을 도입함으로써 펀드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17) 박광수·임동순, “아일랜드의 금융시장 발전요인 분석: 펀드산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36(4), 2018 ; 자본시장연구원(KCMI), "부산 금융중심지의 펀드산업(백오피스) 특화전략 연구", 2015.

하기 시작함

<표 3-3> 아일랜드 소재 순자산 및 펀드수

	순자산(백만유로)	증가율(%)	펀드수(개)
2007	807,000	11	4,780
2008	646,000	-20	5,025
2009	748,000	16	4,627
2010	964,000	27	4,743
2011	1,055,000	8	5,069
2012	1,227,425	18	5,305
2013	1,344,340	8	5,599
2014	1,663,894	22	5,833
2015	1,898,823	13	6,201
2016	2,084,748	9	6,470
2017	2,396,088	16	6,812
2018	2,421,456	1	7,290
2019	3,048,405	26	7,707
2020	3,324,194	9	7,962
2021(2월)	3,376,349	2	8,043

출처: Irish Funds, https://www.irishfunds.ie/facts-figures/irish-domiciled-funds

□ 아일랜드 펀드 백오피스산업의 발전요인

○ 아일랜드는 유연한 법구조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금융 당국은 규제보다는 산업발전의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펀드의 인가와 감독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펀드를 일반투자자(retail), 전문투자자(professional) 및 적격투자자(qualifying)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맞춤형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펀드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 아일랜드는 펀드 관련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 및 공제혜택을 주고 있음

- 아일랜드 소재 펀드는 소득(income) 및 수익(gains)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되고, 순자산가치에 근거하여 모든 아일랜드 조세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또한 아일랜드 소재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설정세가 면제되

고 펀드 이전의 경우에는 인지세도 면제됨

- 비거주자 투자자가 펀드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아일랜드 펀드에 대한 투자에 대해 면세되며,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면제됨

○ 아일랜드는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함

- 특히 유럽에서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던 대체투자펀드(alternative investment fund: AIF)산업을 위해 최초로 규제틀(AIFMD)을 제공한 국가로서, 이 분야에서 신상품의 개발과 혁신을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IFSC 개발과 함께 회계 및 법률 서비스 시장이 동반 성장하면서, 더블린이 금융클러스터로서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게 됨.

□ 브렉시트와 더블린[18)]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 시장 접근권(금융 패스포트)[19)]을 상실할 것을 대비하여 440개가 넘는 런던 소재 금융기관들이 본사를 EU 내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더블린, 룩셈부르크,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순으로 브렉시트의 수혜를 받고 있음.

- 그러나 특정 EU 도시가 런던을 대체하기보다는 기능별로 분산될 가능성이 큼

○ 브렉시트로 EU 본부 또는 주요 시설의 이전을 결정한 금융기관 중 30%(100개)가 더블린을 선택함으로써 더블린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도시로 부상함

○ 더블린의 장점으로 영어 사용권, 단일 감독기구 체제와 영국 금융시스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 그리고 후선 업무를 포함한 펀드 산업에 특화된 점이 꼽힘

---

18) 자본시장연구원(KCMI), "브렉시트에 따른 런던의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 자본시장포커스 07호, 2019.

19) 금융기관이 EU 회원국 중 하나로부터 인가를 취득하면 회원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권리임.

□ 시사점[20)]

○ 부산지역은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 신성장동력, 글로벌 경쟁구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금융중심지를 육성해야 할 것임

○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거래소(KRX), 부산은행, 지역대학, 연구소 등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서울의 백오피스 기능, 해양, 선박, 무역, 선물 금융과 같은 지역의 특화 금융 발전전략이 필요

○ 나아가 광역적·초광역적 연계, 지역의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특화금융부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다. 오슬로

□ 오슬로(Oslo, Norway)는 노르웨이의 수도이자 해운거래소가 소재하고 있는 항구도시로서 자국의 발달한 해운산업, 주요 선박금융 전문금융기관의 존재 그리고 조세혜택에 따른 선박펀드의 발달 등을 배경으로 성장

○ 오슬로는 유럽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리고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입지하여 북유럽 주요 항구도시로 성장

○ 파도가 없고 부동항으로서 연중 안전한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

○ 현재는 MAREX 그룹에 합병되었으나, 해상운임지수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해 설립되었던 IMAREX(international Maritime Exchange) 역시 오슬로에 위치

○ 오슬로는 실제로 항구도시이면서 금융중심지로 위상이 높은 독일 함부르크, 그리스 피레우스,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등과 더불어 해양관련 선박금융 육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

○ 정부는 선박 투자자들에 대해 투자자산의 고속상각, 투자손실과

20) 이종필, “더블린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 벤치마킹”, 부산연구원 112, 2008.

소득의 상계처리,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아울러 취득세, 등록세 등 등록관련 제반비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선박 치적제도(NIS : Norwegian International Ship Register)를 도입

□ 노르웨이는 세계 30위권 선박금융은행 가운데 DNB NOR Bank(2위, 253억 달러), Danske Bank(22위, 75억달러, 舊 Fokus Bank), Eksportfinans* (29위, 35억 달러)등 3개 은행을 보유

* 노르웨이 수출입 지원은행으로 정부지분 15.0%, 은행 컨소시엄 (DNB NOR Bank 40.0%, Danske Bank 8.1% 등) 85.0%로 구성

□ 노르웨이는 대표적인 석유 부국으로 오슬로에는 국부펀드 단일 운용의 역할을 하고 있는 Norgess Bank가 위치하여 국부펀드를 운용중이며, 산하에 세계 2위 규모 선박펀드 운용사인 DNB NOR bank를 거느리고 있음

○ 북해에서 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수익을 국부펀드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부펀드의 수익률과 투자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가로 풍부한 지하자원에서 나오는 자금을 단일 국부펀드를 통해 운영하며, 이 기관이 오슬로에 위치

○ DNB NOR Bank는 선박금융 특화은행으로서 총 대출금액(2,192억달러)중 선박금융(253억유로) 비중이 11.5%에 이름(2012년말 기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선박의 가치 하락 및 선박대출 관련 리스크 증가로 선박금융 비중을 축소*하고 있지만 여타 상업은행에 비해 큰 규모의 선박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 중

* DNB의 선박금융 규모는 2016년말 210억 달러에서 2019년 현재 69억 달러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감소

□ 독일의 KG펀드와 함께 노르웨이의 K/S 펀드는 대표적인 선박펀드로 알려져 있으며, 활성화된 해양금융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세계 선대 보유율은 세계 7위에 랭크 (Clarkson, world fleet monitor, 2015.6)

○ 1980년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노르웨이 해운산업 성장에 기여
○ 20세기 초부터 활성화되어 독일 KG펀드 보다 훨씬 앞선 역사를 지니고 있고 KG펀드 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펀드로 평가
○ 하지만 KS펀드의 선박투자 규모는 1980년대 빠르게 확대되다 1992년 세제개편에 따른 조세혜택 축소로 크게 위축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위축되어 옴

□ NOS Clearing ASA는 오슬로에 기반을 둔 Imarex Group의 자회사로 운임시장의 청산소 업무를 주로 하며 원자재 시장에 대한 상품의 청산업무 수행
○ NOS는 여러 시장에서의 거래 정산, 청산 그리고 위험 관리에 대해 수 년간 쌓아온 경험을 소유
○ 이를 바탕으로 각종 파생상품에 대한 청산 업무를 위해 고안된 Art Clearing System을 자체 개발하는 등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음.
○ 원자재 파생상품과 에너지와 관련된 상품 등 틈새 상품시장의 청산업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오슬로의 강점은 부동항의 항구도시, 해운기업의 집적에 따른 해운기업 생태계 조성, K/S펀드를 비롯한 선박금융 발달, 선박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21)]

□ 다만 금융관련 규제는 심한 편이라 해지펀드 등 민간 금융은 크게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오슬로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녹색성장 관련 투자가 활발한 도시 중 하나이며, 교통망/전략 및 경제발전 기조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틀 속에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도

21) 해양금융중심도시를 위한 부산의 발전요인 분석(김명희, 이기환, 양혁준)

시로 평가

○ 최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인 투자 방침을 새우고 실행 계획 수립 중

○ 오슬로의 Pilestredet 친환경 주거단지는 시의 중심부인 쇼핑거리인 Karl Johans gate, the Bislett Stadium 및 왕궁과의 도보거리 내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의 대표적 사례

○ 이 지구에는 약 1,430개의 주택, 사무실, 상업용 건물, 교육시설 등을 보유

라. 오사카

1) 주요 내용

□ 일본에서는 도쿄증권거래에 거래가 집중되어 있음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재해 발생시 도쿄 일극 집중의 리스크가 표면화된 한편, 해외 주요국에서는 다른 기능을 가지는 복수의 금융도시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금융도시의 '일극 집중'에서 '다극 연계형'으로의 전환을 추구[22]

○ 그동안 도쿄 외에 오사카와 후쿠오카가 국제 금융중심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최근 오사카는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금융도시 OSAKA 추진위원회"를 설립함

○ 오사카는 Z/yen 그룹 발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세계 32위(2021년 기준). 동 지수 순위는 런던 743점, 상하이 742점, 도쿄 736점, 오사카 684점임(2021년 기준)[23]

□ 오사카는 민관협력 전략을 내세움. 구체적으로 국내・외 민간사업자의 집적을 위해 '국제금융특구' 창설 제안 및 세제조치 등을 국가에 요청하고, 오사카부・시는 비즈니스・생활면에서 환경정비

22) 大阪府知事, 「国際金融都市OSAKA」の実現に向けて, 2020.12.23. (http://www.pref.osaka.lg.jp/attach/39795/00382108/03_kokusaikinnyuutoshizitugen.pdf)

23) https://kansai-sanpo.com/yoshimura-financial-center/

추진, 민간부문에서는 금융인재육성 및 매력적인 시장의 창설을 제의함

2) "국제금융도시 OSAKA 추진위원회" 설립

□ 오사카가 목표로 하는 국제금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작년 12월 23일 오사카부・시, 경제단체(간사이 경제연합회, 오사카 상공회의소, 간사이 경제동우회)는 "국제금융도시 OSAKA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21년 3월 29일 "국제금융도시 OSAKA 추진위원회"가 설립됨.[24]

○ "국제금융도시 OSAKA 추진위원회"는 오사카의 국제금융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 경제계, 각종 단체 등이 협력 하여 대처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25]

○ 행정기관, 경제단체, 민간사업자 등 31명, 옵서버(제3자적 입장에서 조언・협력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업계단체 등 7단체(2021. 3. 29 기준)가 그 구성원임.[26]

3) 2021년도 실시계획(21.3.29)

□ 오사카는 비즈니스・생활면에서 강・약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업자 및 투자자 등의 수요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나 각 단체, 경제계, 행정기관 등에서의 각각의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27]

○ 오사카의 강점: 선물거래(파생상품)의 발상지 예) 도지마 쌀 시장/발달된 도시 인프라(금융상품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거래소, 발달된 교통네트워크, 국제무역항, 고등교육기관, 생명과학산업 등의 존재)

○ 오사카의 약점: 일본의 높은 세율(소득세 45%+주민세 10%임, 싱

---

24) 大阪府知事, 「国際金融都市OSAKA」の実現に向けて, 2020.12.23. (http://www.pref.osaka.lg.jp/attach/39795/00382108/03_kokusaikinnyuutoshizitugen.pdf)
25) 大阪府知事, 「国際金融都市OSAKA」の実現に向けて, 2020.12.23. (http://www.pref.osaka.lg.jp/attach/39795/00382108/03_kokusaikinnyuutoshizitugen.pdf)
26) 大阪府知事, 「国際金融都市OSAKA」の実現に向けて, 2020.12.23. (http://www.pref.osaka.lg.jp/attach/39795/00382108/03_kokusaikinnyuutoshizitugen.pdf)
27) 大阪府知事, 「国際金融都市OSAKA」の実現に向けて, 2020.12.23. (http://www.pref.osaka.lg.jp/attach/39795/00382108/03_kokusaikinnyuutoshizitugen.pdf)

가포르나 홍콩의 소득 세율은 약 20%)[28][29], 파생상품 전문 인력의 99%가 도쿄에 거주

4) 오사카의 잠재력

□ 국내・외의 투자를 유치하는 빅 프로젝트

○ 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세계최고 수준의 성장형 IR (통합 리조트) 건설 예정

□ 새로운 기술혁신의 창출거점

○ 스마트시티, 슈퍼시티의 추진

○ 스타트업・에코시스템 글로벌 거점도시 형성

○ 우메키타 프로젝트 2기, 미래의료 국제거점(나카노시마)의 정비[30]

□ 오사카가 목표로 하는 국제금융도시상

○ 혁신적인 금융도시 오사카: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서 세계의 선두에 서서 오사카에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ESG 투자[31]를 추진

○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외에서 운용자금과 금융인재 등이 집적하는 금융도시 실현

○ 금융사업에 있어서 최첨단 기술의 사회 구현, 금융DX에 의한 새로운 시장 창조

5)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의 기준에 따라 민관 역할 분담[32]

---

28) 싱가포르나 홍콩은 일본에 비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가 낮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주식 토지의 매각이익(자본이득)이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음.(https://kansai-sanpo.com/yoshimura-financial-center/)

29) 다만, 2021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서는 (1) 취업 등을 위해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 사망했을 때 그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 등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국외재산을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함. (2) 투자운용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 비동족회사 등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업적연동급여에 관해 일정한 요건 하에 손금산입을 가능하게 함. (3) 유한 책임투자가인 외국인의 과세 특례에 관해 지분 비율 요건 등을 재검토 실시를 포함함. (https://kansai-sanpo.com/yoshimura-financial-center/)

30) 大阪府知事, 「国際金融都市OSAKA」の実現に向けて, 2020.12.23. (http://www.pref.osaka.lg.jp/attach/39795/00382108/03_kokusaikinnyuutoshizitugen.pdf)

31) 기업 재무정보와 더불어 한경(Environment)·사회(Social)·거버넌스(Governance) 요소도 고려한 투자. 大阪府知事, 「国際金融都市OSAKA」の実現に向けて, 2020.12.23. (http://www.pref.osaka.lg.jp/attach/39795/00382108/03_kokusaikinnyuutoshizitugen.pdf)

32) 大阪府知事, 「国際金融都市OSAKA」の実現に向けて, 2020.12.23. (http://www.pref.osaka.lg.jp/attach/39795/00382108/03_kokusaikinnyuutoshizitugen.pdf)

사업환경	인적자본	인프라	금융분야 발전	평판
(국가차원) 세제개혁 규제완화 효과적인 인세티브 마련	(국가차원) 비자요건 완화 (오사카부・시) 교육, 의료환경 정비 (민간부문) 금융인재육성	(오사카부・시) 비즈니스・생활 면의 환경정비 *교통, 통신환경, 행정서비스 영어대응	(민간부문) 금융분야 발전을 위해 매력있는 시장의 창설 *거래소 기능의 강화 등	(국/부/시/민간) 국내・외의 효과적인 브랜딩 방법으로 세제경감, 비즈니스・생활 면의 환경정비, 매력적인 시장 만들기 등

□ 전략 A(국가차원): 국내・외 민간사업자 집적을 위해 ‘국제금융특구’ 창설 제안, 세제조치(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금융법제 관련 규제완화, 체류자격 완화(출입국관리법)를 제의

□ 전략 B(오사카부・시): 비즈니스・생활면에서 환경정비 추진 등 각종 행정절차 지원(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전문금융인재 육성, 금융교육의 향상, 교육・의료기관의 유치 및 정비 등[33]

□ 민관 일체의 추진 조직에서 실시할 구체적인 사업(20.12.23)[34]

오사카의 비즈니스・생활면에서의 환경정비	(비즈니스면) - 오사카 진출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세티브 부여・ESG 투자 등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 구축 -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증권(시큐리티 토큰) 발행・유통시장 창설 - 거래소 기능강화(예: 에너지 관련 상품의 오사카 이관, 사설거래소 육성 지원, 해외거래소 연계 등
	(생활면) - 인터내셔널 스쿨 유치(현재 국제 바칼로레아 인증 학교: 교토21교, 오사카부 7교) - 영어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확보(현재 외국인 환자 수용 의료기관: 도쿄도 392개소, 오사카부 70개소) - 철도 및 도료표지 등에서의 영어표기 확충 등

33) 大阪府知事, 「国際金融都市OSAKA」の実現に向けて, 2020.12.23.
(http://www.pref.osaka.lg.jp/attach/39795/00382108/03_kokusaikinnyuutoshizitugen.pdf)
34) 大阪府知事, 「国際金融都市OSAKA」の実現に向けて, 2020.12.23.
(http://www.pref.osaka.lg.jp/attach/39795/00382108/03_kokusaikinnyuutoshizitugen.pdf)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의 유치 및 육성	- 민관 일체의 추진조직 설립(해외사업자 유치 프로모션 활동 등) -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해외사업자에게 부내 진출 절차 지원을 하는 컨시어지 기능) 등 - 고급 금융인재의 육성, 금융 교육의 향상 추진 - 그린펀드 등의 발행을 통한 이미지 제고 및 홍보

6) 오사카의 국제금융도시 실현 효과[35]

□ 국내・외로부터 우수한 인재나 자금, 정보가 모여 건강・의료 관련 산업 등 오사카의 경쟁력 있는 분야로의 투자 의욕의 환기나, 부내의 스타트업 기업 등에의 자금 공급 등으로 연결 가능성

○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 등의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오사카 경제의 재생・성장에 있어서 큰 임팩트가 될 것으로 기대

□ 세계박람회와 국가금융도시를 향한 각각의 대응에서 비롯된 상승효과가 기대

○ 그러나 국제금융센터를 유치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단점이 있으며, 외국인에게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36]

□ 시사점

○ 도쿄에 금융기능이 집중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오사카'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

○ 특히, 파생상품 거래의 성장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파생상품 시장의 거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37] 파생상품 시장을 특화하고 있는 부산에서는 이 부분에서 경쟁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35) 大阪府知事, 「国際金融都市OSAKA」の実現に向けて, 2020.12.23. (http://www.pref.osaka.lg.jp/attach/39795/00382108/03_kokusaikinnyuutoshizitugen.pdf)
36) https://kansai-sanpo.com/yoshimura-financial-center/
37) 大阪府知事, 「国際金融都市OSAKA」の実現に向けて, 2020.12.23. (http://www.pref.osaka.lg.jp/attach/39795/00382108/03_kokusaikinnyuutoshizitugen.pdf)

<표 3-4> 아시아/태평양 금융중심지 15곳 순위

금융중심지	GFCI29(2021년 3월)		GFCI28(2020년 9월)		순위변동	점수변동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상하이(중국)	3	742	3	748	0	▼6
홍콩(중국)	4	741	5	743	▲1	▼2
싱가포르	5	740	6	742	▲1	▼2
베이징(중국)	6	737	7	741	▲1	▼4
도쿄(일본)	7	736	4	747	▼3	▼11
선전(중국)	8	731	9	732	▲1	▼1
서울(대한민국)	16	713	25	695	▲9	▲18
시드니(호주)	18	711	32	682	▲14	▲29
광저우(중국)	22	706	21	710	▼1	▼4
멜버른(호주)	23	705	27	693	▲4	▲12
오사카(일본)	32	684	39	665	▲7	▲19
청두(중국)	35	678	43	659	▲8	▲19
부산(대한민국)	36	677	40	664	▲4	▲13
타이페이(대만)	40	668	42	662	▲2	▲6
칭다오(중국)	42	665	47	654	▲5	▲11

출처 : Z/yen 그룹 원출처, 일간리더스경제신문(https://www.leaders.kr) 표 재작성

마. 중국의 금융중심지들

1)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상위 금융중심지 현황

□ 중국은 넓은 국토만큼 다양한 금융중심지를 가지고 있으며 GFCI 29 기준 부산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도시가 6개가 있음. 홍콩 외에 다른 중국 금융 중심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 부산도 GFCI 28에 비해 13점 가량 점수가 올랐지만 중국의 비슷한 수준의 금융 중심지들은 점수 상승폭이 더 컸음.

2) 상하이(上海)

□ 상하이는 2007년 3월 GFCI 1에서 578점으로 전체 46개 도시 중에서 24위를 기록하며 처음 순위에 기록, 2021년 3월 GFCI 29에서 742점으로 전체 114개 도시 중에서 3위에 기록

□ 상하이의 발전 배경으로 상하이는 중국 현대금융산업의 발상지로

1843년 개통 이후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로 자리잡음. 통화의 자유와 좋은 투자환경으로 국내외 무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금융산업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1935년에는 중국에 총 164개의 은행이 있었고, 그 중 상하이에 58개의 은행이 본사를 두고 있었음. 신용 외에도 상하이는 은행간 대출, 은/금 시장, 채권시장 및 기타 금융시장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금 시장 거래량은 뉴욕과 런던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음

○ 현재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발달한 금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가장 높은 밀집도와 거래량을 보임. 2018년 금융산업의 거래액은 1,645.78조 위안으로, 금융부문의 연간 부가가치 실현 금액은 5,781.63억 위안, 금융기관의 위안화 및 외화예금 잔액은 12.11조 위안임. 2017년 말 상하이 내 금융기관은 총 1,491개로, 총자산 규모는 11.25조 위안에 달함(중국 내 금융기관 총자산의 9%). 20년대에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개방된 상업 도시이자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금융중심지임

□ 지리적 발전배경으로 상하이는 중국의 중요한 경제, 무역, 금융, 해운, 과학 및 기술 전시 센터이며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적 영향력이 강함. 내부적으로는 주로 양쯔강 하류와 주변 지역으로 방사되는 반면, 외부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유럽 및 미국 주요 도시와 비즈니스 및 문화적 유대관계를 유지함. 상하이시, 장쑤성(강소성), 저장성(절강성), 안후이성은 장강 삼각주 도시 그룹[38]을 구성하여 중국에서 가장 먼저 글로벌 도시군으로 진입함. 상하이는 우월한 지리적 위치, 방대한 도시 규모, 탄탄한 종합 실력, 발달한 교육 및 과학 기술, 깊은 문화유산, 편리한 교통 운송, 광대한 경제 배후지, 장강 삼각주 등을 활용하여 내외 영향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음

□ 정치적 발전배경으로 1990년 4월 중국은 푸둥을 개발하기 시작했

38) 3성 1시(강소성, 절강성, 안후이성, 상하이시)로 분류되며 총 41개 도시로 구성, 총 면적 35.8만 km²으로 중국 전체의 2.2% 비중을 차지함. 중국 장강의 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구자원이 풍부하고 대외로 연결되는 요충지역임.

고, 루자쭈이금융무역구(陆家嘴金融贸易区)를 설립. 그 후 국가는 일련의 정책을 내놓아 상하이의 국제금융센터 건설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함

○ 2009년, '상해의 현대 서비스업 발전 촉진과 선진 제조업의 국제 금융센터와 국제운항센터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上海加快发展现代服务业和先进制造业建设国际金融中心和国际航运中心的意见)' 에는 상하이에서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력 및 인민폐의 국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국제금융센터" 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명시함

○ 2019년, '중국(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총체방안[39](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总体方案)' 은 인민폐에 대해서 국경을 넘는 금융서비스 능력을 키우고, 깊이와 폭을 넓히며, 무역 융자와 재융자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며,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혹은 지역 자금 관리 센터 설립을 장려할 것을 제시함

○ 2020년, '상해 국제금융센터 건설과 금융지원 장삼각 일체화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의견(关于进一步加快推进上海国际金融中心建设和金融支持长三角一体化发展的意见)' 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로부터 상하이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고, 금융지원 장삼각 일체화 발전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금융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심화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함. 이로써 상하이의 국제 금융 지위 상승을 꾀함

○ 2020년 중국의 지방양회에서 상하이는 새로운 3대 중대전략(자유무역시험구 린강(临港)신구 건설 가속화, 커촹반(科创板) 발전, 장삼각 일체화발전규획 전면 시행, 제3회 국제수입박람회)추진, 국제금융・국제무역・국제항운・과학기술혁신・국제인재 등 5개 중심 구축, 안정적 성장과 구조 고도화(실물경제 역량 제고, 투자의 성장기여도 제고, 소비촉진, 수출기반 강화, 스마트시티건설 가속화(디지털경제 인프라 구축 등), 도시관리수준 제고, 민생 개선을

39) 린강신구(临港新区)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ree Trade Zone, FTZ))로 추가 지정된 지역으로, 상하이(푸동) 동남쪽 항구인근에 위치함. 상하이 FTZ 건설 5년만인 2019년 8월 린강신구 설립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상하이 FTZ 면적이 2배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린강신구에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음.

중점 정책과제로 설정

<표 3-5> 2020년 장강 삼각주 41개 도시 GDP 지표

순위	성	도시명	2020년 GDP(억 위안)	전년대비 증감율
1	상하이	상하이	38,700.58	1.7%
2	강소성	쑤저우	20,170.50	3.4%
3	절강성	항저우	16,106.00	3.9%
4	강소성	난징	14,817.95	4.6%
5	절강성	닝보	12,408.70	3.3%
6	강소성	우시	12,370.48	3.7%
7	안후이성	허페이	10,045.72	4.3%
8	강소성	난퉁	10,036.30	4.7%
9	강소성	장저우	7,805.30	4.5%
10	강소성	쉬저우	7,319.77	3.4%
11	절강성	원저우	6,870.90	3.4%
12	강소성	양저우	6,848.33	3.5%
13	절강성	샤오싱	6,001.00	3.3%
14	강소성	옌청	5,953.38	3.5%
15	절강성	자싱	5,509.52	3.5%
16	강소성	타이저우	5,312.80	3.6%
17	절강성	타이저우	5,262.70	3.4%
18	절강성	진화	4,703.95	2.8%
19	강소성	전장	4,220.10	3.5%
20	강소성	화이안	4,025.37	3.2%
21	안후이성	우후	3,753.02	3.8%
22	강소성	롄윈강	3,277.07	3.0%
23	강소성	쑤첸	3,262.40	4.5%
24	절강성	후저우	3,201.40	3.3%
25	안후이성	추저우	3,032.10	4.4%
26	안후이성	주어양	2,805.20	4.1%
27	안후이성	안칭	2,467.70	4.0%
28	안후이성	마안산	2,186.90	4.2%
29	안후이성	병부	2,082.70	3.0%
30	안후이성	쑤저우	2,045.00	3.9%
31	안후이성	하우저우	1,806.01	4.1%
32	안후이성	리우안	1,669.50	4.1%
33	절강성	헝저우	1,639.12	3.5%
34	안후이성	쉬안청	1,607.50	4.0%
35	절강성	리수이	1,540.02	3.4%
36	절강성	저우산	-	-
37	안후이성	화이난	1,337.20	3.3%
38	안후이성	화이베이	1,119.10	3.3%
39	안후이성	퉁링	1,003.70	3.2%
40	안후이성	츠저우	868.90	4.0%
41	안후이성	황산	850.40	2.8%
장강 삼각주 전체			244,713.18	3.6%

출처: 각 지방 통계국 발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 상하이에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많은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이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개방 과정에서 일류 기관과 인재를 지속해서 유치 중. 국제 유명 금융기관들이 상하이에 정착하여, 세계 최고의 금융 인재에 대한 흡인력을 크게 높임. 현지 양성과 세계 각지에서 끌어온 고급 인재는 상하이 금융업 발전에 전문화된 수요를 제공할 수 있음

□ 상하이 내 수많은 금융 기구들은 은행, 보험, 증권, 채권, 선물, 외환과 금 등 다양한 금융 인프라를 건설함. 금융업의 대외개방 범위가 끊임없이 확대됨에 따라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외자 금융기관이 있는 도시가 됨. 와이탄과 루자쭈이 일대에는 금융 중개 기구가 밀집해 있고, 세계적인 은행들 또한 이곳에 지역 본부나 지점을 설립함

□ 상하이는 주식, 채권, 선물, 통화, 어음, 외환, 금, 보험, 신탁 등 전 세계 금융요소시장과 인프라가 모여 있음. 자유무역 계좌 기능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원유 선물, "후강퉁(邑港通)"[40], "후룬퉁(滬倫通)"[41], "채권퉁(債券通)"[42], 황금국제판(国际板)[43], 국채선물 등 굵직한 금융상품이 성공적으로 출시되었으며, 국경을 넘어 인민폐 업무, 투자 대출 연계, 국경을 넘는 ETF 등의 업무 혁신이 속출하고 있음. 또한, 총 230개의 6대륙 31개국의 상업은행 금융기관이 상하이에 상륙함. 이 중 상하이에 있는 외자 기업 은행은 중국 전체 외자 기업 은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

40) 후강퉁(邑港通) : 해외의 개인투자자도 홍콩거래소를 통해 상하이거래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즉 두 거래소 간의 교차 매매를 허용한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음.
41) 후룬퉁(滬倫通) : 해외의 개인투자자도 런던거래소를 통해 상하이거래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즉 두 거래소 간의 교차 매매를 허용한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음.
42) 채권퉁(債券通) : 중국이 주식시장 개방에 이어 홍콩과 중국 본토 은행간 채권시장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음.
43)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에 있는 금거래소처럼 국제 금 가격 지수를 독자적으로 발표하며 황금 거래 시 위안화를 사용

<그림 3-7> 상하이 와이탄-루자쭈이 일대 금융기관 분포

출처: <世界金融中心的分布与形成机理>

2) 베이징(北京)

□ 베이징은 2007년 3월 GFCI 1에서 514점으로 전체 46개 도시 중에서 36위를 기록하며 처음 순위에 기록, 2021년 3월 GFCI 29에서 737점으로 전체 114개 도시 중에서 6위에 기록

□ 베이징의 지리적 발전요인으로는 영국 런던, 일본 도쿄, 한국 서울 등과 같이 수도경제권내 도시로 수도가 지닌 이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주변지역의 금융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

○ 국제 금융센터 대부분이 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한 이후에 국제적인 대도시로 성장했다는 점에서도 베이징의 국제금융중심지 건설은 절실함

- 수도 북경이 국제금융중심지로 성장하여, 대규모 자본결집 및 자본확대 기능을 충족시킴으로써 원활한 자금 융통과 자본 운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함
- 금융중심 도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발전 및 대규모 상권 형성이 실현되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 확대 및 재정수입 증대가 기대
- 이를 통해 경제·금융부문의 세계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분업에 중국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중국의 전반적인 국제경

쟁력 향상에 기여

□ 베이징은 2008년「수도 금융업 발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首都金融业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금융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금융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44]

○ 베이징은 '의견'에서 금융업 기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기능구를 중심으로 금융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일주·일부·삼신·사후태(一主·一副·三新·四后台)" 전략을 제시하여 추진

- 금융 주(主)중심구에는 국가급 금융기관 본부 위치, 금융 부(副)중심구는 국제 금융기구의 주요 집적지로 계획, 신흥금융기능구를 조성하여 금융중개서비스 환경을 최적화, 4곳의 금융서비스 원구를 조성하여 금융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을 도모하였음. 기능구를 중심으로 금융업이 발전하고 금융 조직체계가 정비되면서 2008~15년 베이징 금융업 생산액은 연평균 14.5%씩 성장

- 베이징에는 중국의 대표적 금융기구인 '일행삼회(一行三会)'[45]가 위치하고 있으며, 4대 국유상업은행,[46] 3대 정책성은행,[47] AIIB[48], 대형 증권·보험회사 본부 등 주요 금융기관이 소재하고 있음. 2015년 기준 베이징 내 금융법인은 683개로 전국 1위

○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은 금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13.5 규획 기간[49]동안 △ 과학기술금융을 기반으로 한 혁신역량 강화 △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국제화 수준 제고 △ 일반특혜금융(普惠金融)[50] 발전 △ 녹색금융[51] 발전 △ 금융안전 강화 △ 현대보험서비스업의 발전을

44) 이상훈, 김주혜, <중국의 지역별 산업고도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베이징시>, 2016 내용 발췌

45) 중국 인민은행,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의미함.

46)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을 의미함.

47)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을 의미함.

48)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49)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50) 일반특혜금융(Inclusive Finance, 普惠金融)은 '포용적 금융'이라고도 하며, 정책 강화를 통한 원조와 시장제도의 확립을 중시해 빈곤지역과 비중심 지역, 소기업, 사회저소득층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의 사용가능 정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함(KOTRA(2016. 1.6),「일반금융특혜(普惠金融), 공익적 성격을 넘어 비즈니스 기회로 성장」).

기반으로 한 금융업 고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방침

<그림 3-8> 베이징 금융업 기능구(一主一副三新四后台)

기능구		위치
一主	금융 주(主)중심구	- 베이징 금융가
一副	금융 부(副)중심구	- 베이징 비즈니스 중심구(CBD)
三新	신흥과학기술금융기능구	- 하이뎬 중관춘 서구(海淀中关村西区)
	신흥산업금융기능구	- 동 2환 교통비즈니스구(东二环交通商务区)
	신흥금융기능구	- 펑타이 리저 비즈니스구(丰台丽泽商务区)
四后台	금융서비스단지	- 하이뎬 다오셴후(海淀稻香湖), 차오양 진잔(朝阳金盏), 퉁저우 신청(通州新城), 시청 더성(西城德胜)

출처: 北京日报(2008.5.7.), <北京首次明确提出将建国际影响力金融中心城市>,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리

□ 2015년 베이징은 금융업 중 보험서비스에 대한 발전의견(关于加快发展现代保险服务业的实施意见)을 별도로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보험서비스의 사회 안정장치 역할과 경제 발전의 보조적 역할을 강화하는 업그레이드 전략을 적극 추진

○ [경제발전의 보조적 역할 강화] △ 중점산업 분야에 부합하는 보험 상품 개발 △ 수출보험 서비스 역량 강화 △ 보험자금 운용을 통한 베이징 경제발전의 보조적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 과학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지원하고,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위험보상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업혁신과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를 적극 추진
-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상업화에 대한 보장서비스를 확대하고, '인터넷+보험'이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보험서비스와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기술의 융합 발전을 추진
- 지식재산권, 예술품, 공연, 영화 등 문화 산업 분야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산업발전기금 설립을 추진
- 보험자금을 채권투자, 지분투자 방식으로 인프라 건설, 징진지 협동발전 지원, 낙후지역 환경 개선 등 베이징 내 중점 프로젝트에

51) 녹색금융(환경금융)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위한 친환경 금융제도를 의미함(KIEP 북경사무소(2008. 6. 13), 「중국의 '녹색금융'제도 현황」).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

○ 보험업 혁신과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수도 보험업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

- 베이징 내 조건에 부합하는 국유·민간·외국자본 투자로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부동산·인프라·건강양로 분야의 전문보험자산관리기구 설립을 지원
- 보험업 자산위탁관리센터, 보험자산거래플랫폼, 보험거래소, 재보험거래소 등 기초 플랫폼 구축 추진
- 베이징 내 보험회사의 해외업무를 지원하고 보험서비스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며, 해외 보험사의 진입을 장려함으로써 보험업의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
- 베이징 보험산업원(北京保险产业园)의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으로 혁신형 보험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험 정책의 싱크탱크이자 보험 디지털 특구로 발전시켜나갈 계획

<표 3-6> '13.5 규획기간 베이징 보험서비스업 발전 정책

주요 정책	세부 조치
경제발전의 보조적 역할 강화	- 과학기술 보험 체계 개선 - 문화 보험상품 개발 - 수출 보험서비스 강화 - 보험자금 운용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 추진
보험의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관리수준 제고	- 보험시스템 운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혁신 - 보험을 통한 사회 위험 관리역량 강화 - 보험을 통한 재해 방비 역량 강화
보험의 민생 보장기능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 완비	-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강화 - 양로보험상품 서비스 혁신 - 건강보험서비스 다양화
도시형 현대농업서비스 발전	- 농업보험의 혁신역량 강화 - '삼농'(농민·농촌·농업) 보험수준 제고 - '삼농' 보험서비스 체계 구축
보험업 혁신과 대외개방 추진	- 현대 보험시장 체계 건설 추진 - 보험업 대외개방 수준 개선 - 베이징 보험산업원 건설 가속화
지원정책을 완비하여 수도 보험업 발전 환경 최적화	- 보험업 발전의 협력체제 강화 - 재정과 세무 지원정책 실시 - 보험시장 규범화 - 사회보험 의식 제고 - 징진지 보험업 협력 강화

출처: 北京市人民政府(2015. 9. 10),<关于加快发展现代保险服务业的实施意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리

□ 2021년 4월 16일 하북 금융대학에서 웅안신구(雄安新区)[52]의 설립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도함.

○ 웅앙신구 금융산업의 단계적 발전 성과

- 2017년 4월 설립된 웅앙신구는 그해 말 147개의 은행, 보험 및 기타 금융기관 지점, 2,187명의 관련 종사자를 보유함. 3년이 지난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금융기관 167개 지점, 3,804명의 근로자를 보유함.
- 4대 국유상업은행은 정부의 호출에 응답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웅안신구에 주둔함. 교통은행, 허북은행, 공동주식상업은행, CDB, 농업발행, 화샤은행, 베이징 은행, 천진은행 및 기타 지역은행도 웅안신구 지점 건설에 적극적임

○ 웅안신구의 금융기능 중요성

- 웅안신구의 설립은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을 해체하는 것 외에도, 더 깊은 의미에서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의 추진에 있음.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 계획 요구사항 및 허북 지역 기능 포지셔닝에 따라 웅안신구는 징진지 전체 레이아웃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매우 강력한 드라이브와 데모 의미를 지님.

<그림 3-9> 웅안신구의 위치

출처: 김화섭, <중국 웅안신구 건립 어떻게 보아야 하나>, KIET 산업경제

52) 중국은 하북성 보정(保定)시 주변 지역에 환경공생형 미래 신도시(웅안신구 : 雄安新区)를 국가급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웅안신구의 위치가 북경과 천진에 인접한 것은 건립 목적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있음을 드러냄. - 출처: KIET 산업경제분석 '중국 웅안신구 건립 어떻게 보아야 하나'

3) 선전(深圳)

□ 선전은 2014년 9월 GFCI 16에서 695점으로 전체 83개 도시 중에서 5위를 기록하며 처음 순위에 기록, 2021년 3월 GFCI 29에서 731점으로 전체 114개 도시 중에서 8위에 기록

□ 발전 배경으로서 선전은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선두 주자로서, 강력한 혁신 모멘텀과 분위기로, 해양도시에서 1천만 명 이상의 상주인구를 가진 국제도시로 발전함. 2016년 기준 하이테크, 금융, 물류, 문화 및 기타 기둥 산업의 성장률은 GDP의 63%를 차지했으며, 과학기술진보의 기여도는 60%에 달하며, 시 국가급 하이테크 기업은 8,037개로, 5G 기술, 신에너지차, 3D 디스플레이, 무인 항공기 및 기타 분야는 선전의 급속한 발전의 기초가 됨. 선전은 중국의 지원, 발전금융 및 금융혁신의 선구자가 됨

□ 선전은 지리적으로 홍콩의 바로 위쪽에 위치하여 언어·문화적으로 동질감을 형성함. 따라서 홍콩과 깊은 상생관계로 세계 수준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함.

○ 바우히니아재단(홍콩정부 싱크탱크)의 [2020년 홍콩-선전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 3위의 거대도시 메갈로폴리스로 성장 계획

- 통합 인프라 구축 : 홍콩 국제공항과 선전공항을 고속철도로 연결, 이동시간을 17분으로 단축
- 주민교류 확대 : 선전 주민에 스마트카드 발급으로 무비자 홍콩 입국 허가

□ 선전시는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선정되었으며(1979년), 2007년 1인당 GDP가 1만달러로 성장하여 중국내에서 가장 부유하며 현대화된 도시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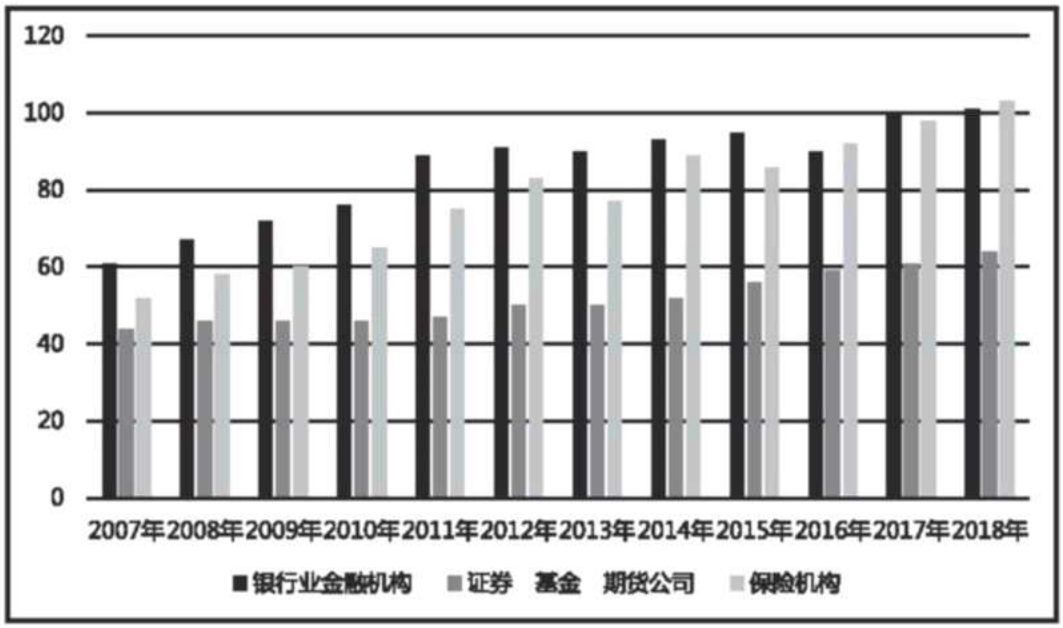
□ 선전은 인터넷 금융의 주요 중심지로 발전 중

○ 선전은 중국 인터넷 금융의 주요 집결지 중의 하나로, 최근 몇 년 동안 업종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미 독특한 인터넷 금융 체계를 형성하였는데, 베이징 본부금융과 상하이 국제금융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그림 3-10> 홍콩과 선전 지리적 위치

출처: 구글 지도

<그림 3-11> 선전의 금융기관 수 추이 (2007-2018)>



출처: <粤港澳大湾区背景下深圳完善金融监管体系研究>

□ 소액 대출, P2P 및 기타 새로운 형태의 금융 특성

○ 선전의 신흥 인터넷 금융은 빠른 속도로 발전함. P2P 대출의 경우 2018년 12월 기준 중국 P2P 대출지수 통계에 포함된 정상경영 P2P 대출 플랫폼은 선전시가 273개로 전국 18.81%를 차지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플랫폼 등록자본은 전국 P2P대출 플랫폼 총 등록자본의 18.83%를 차지해 전국 1위를 차지함. 기타 인터넷 금융업계를 보면, 선전은 제 3자 지급 법인 기구를 19개 소유하고 있으며, 텐페이(财付通)[53] 등 유명한 기구가 적지 않아 교역 규모가 모두 전국 상위권을 차지함

○ 선전의 소액대출산업은 세가지 특성을 가짐

- 첫째, 선전 산업의 변화와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전체의 40%에 달하고 선전은 이들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업무를 전개함. 이들은 자신만의 핵심 비즈니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화 특성이 매우 뚜렷한데,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현상임. 이에 따라 선전 소액 대부업체의 개인 신용대출은 서민과 현실, 시장 수요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
- 둘째, 산업체인, 공급망, 전문시장, 산업단지 및 상공회의소 회원 및 기타 신용서비스 형태를 기반으로 (1+N)모델[54]을 형성하여 고객 맞춤형 대출 전용 상품을 개발함. 이는 전문화, 특성화, 차별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셋째, 종합 금융으로 주로 하이테크 중소기업에 서비스하며, 투자 및 대출연계 서비스, 출자전환의 실현 경로를 모색함. 2009년 이래로, 전체 시의 소액 대부업 누계는 263만 건으로 누계 2,216억 위안의 대출금을 지급함.

4) 광저우(广州)

□ 광저우는 2017년 3월 GFCI 21에서 650점으로 전체 103개 도시 중에서 37위를 기록하며 처음 순위에 기록, 2021년 3월 GFCI 29에서

53) 텐센트가 출시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

54) 단일 소액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 특징에 따라, 전방산업 후방산업 등 밸류체인에 따라 세분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706점으로 전체 114개 도시 중에서 22위에 기록

□ 한국금융연구원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2030>[55]의 내용에 따르면, 광저우는 인접 지역과의 연계 등을 통해 기존의 지역중심, 제조업 중심 기반에서 그레이터 베이 지역(Greater Bay Area)을 연계한 제조업, 서비스, 글로벌 중심지 역할을 강화

○ 2013년 이후 광저우는 기존의 상하이와 더불어 푸젠(Fujian) 및 톈진(Tianjin) 등과 더불어 핵심 자유무역시험구(Free Trade Zone, FTZ)의 발전 모색

○ 2단계 핵심전략은 기존의 생산중심에서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무를 중심으로 한 난샤 자유무역시험구(Nansha FTZ)와 광저우 금융 도시(Guangzhou Financial Town)[56]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반 강화

○ 동 전략은 홍콩 중심의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장하여 광저우를 통해 국경간 거래(cross-border) 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홍콩에 기반한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또는 지점 형태 등 지역적 확장을 모색

□ 광저우는 베이징(Beijing), 상하이(Shanghai), 선전(Shenzhen) 등에 비해 금융회사의 집적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톈진(Tiangjin), 지안(Jian) 등 북부 지역의 금융중심지 확대에 따른 경쟁에도 직면

○ 광저우는 광동-홍콩-마카오를 연결하는 그레이터 베이 지역(Greater Bay Area)을 세계 4위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충

○ 광저우 제조업의 우월적 기반과 홍콩 등 지역적 연계성을 활용한 지역 및 산업, 무역벨트 등 포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금융중심지 기반을 확보

- 광저우의 제조업 기반과 홍콩의 금융기반, 마카오의 무역기반 등을 연계한 광범위한 지역경제를 포괄하는 금융중심지 모델을 마

55) 손상호 외,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2030>, 한국금융연구원, 2018.12
56) Guangzhou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련

- 홍콩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홍콩 지역의 주요 금융기관에 의한 업무 분할을 촉진함으로써 역할분담을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을 강화

○ 2020년 중국의 지방양회에서 광둥(广东)은 웨강아오[57] 대만구 추진 심화, '6가지 안정조치'[58] 추진(투자확대, 소비촉진, 무역안정), 3대 난제 해결[59], 과학기술체제 및 인재발전기제 혁신, 제조업 고품질 발전 추진, 경제체제개혁 심화, 농촌 진흥, 문화산업경쟁력 제고, 생태문명건설 강화 계획을 밝힘.

□ 광저우는 상하이 등 정치경제 중심지와 차별화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타 역내 금융중심지와 차별화

○ 광둥성(Guangdong), 홍콩(Hong Kong), 마카오(Macao), 타이완(Taiwan) 등과의 금융협력을 확대하고 한편 난샤 지구를 중심으로 한 기술금융 및 선박금융에 특화

<표 3-7> 난샤(Nansha) 금융 및 유사 금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해당사항	최고장려금
난샤(Nansha)에 정착시	최대 1,800만 위안
경제적인 공헌을 할 경우	Nansha 지구에서 최초 3년 동안 경제기여액의 100%를 그 다음 2년 동안은 경제기여액의 최대 70%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에너지 수준 측면의 향상을 가져올 경우	최대 2,000만 위안
사무실 사용에 대한 보조금	최대 1,000만 위안
상장 기업에 대한 보조금	최대 500만 위안

출처: Guangzhou Nansha New Zone and Free Trade Zone(2017), 한국금융연구원 정리

□ 광저우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등 신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중심의 산업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유치 전략을 병행

57) 웨강아오 : 광둥·홍콩·마카오 지역을 의미

58) 안정적 고용창출, 안정적 금융리스크 관리, 안정적 대외무역 관리, 안정적 외국인투자 관리, 안정적 투자 관리, 안정적 예측관리.

59) 빈곤 해결, 생태환경 보호, 금융·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대 리스크 예방 및 해소.

○ 광저우는 에스크로우(escrow)[60], P2P 온라인대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 인터넷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인터넷 중심의 금융 기반을 확충

○ 투자 및 이주 등에 대한 복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술혁신 분야 및 전문가 유치를 위한 정부의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역량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기술 중심의 새로운 산업기반 구축 등 구조적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중심지 위상을 제고

5) 청두(成都)

□ 청두는 2017년 9월 GFCI 22에서 604점으로 전체 106개 도시 중에서 86위를 기록하며 처음 순위에 기록, 2021년 3월 GFCI 29에서 678점으로 전체 114개 도시 중에서 35위에 기록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우리 물류기업 진출방향 연구>[61]에 따르면 청두가 있는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를 내륙으로 확대하고,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및 일대일로(一帶一路)[62]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됨. 청두톈푸신구(成都天府新区), 청두칭바이장철도항(成都青白江铁路港), 촨난린강(川南临港) 등 3개 지역, 총 119.99㎢의 면적으로 지정됨

○ 청두는 중국 중서부 지역의 교통거점이자 물류허브의 기능을 수행함. 중국 서부의 최대 공항인 쌍류국제공항, 청두에서 출발하여 유럽과 이어진 철도 운송망, 창장 내륙수로 운송을 담당하는 64개의 항만, 동부 연안지역까지 이어진 도로망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춤. 2018년 기준 쌍류국제공항은 117편의 노선을 운

60)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61) 김범중, 김근섭, 이주호, 김은수, 조지성, 김업지,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우리 물류기업 진출방향 연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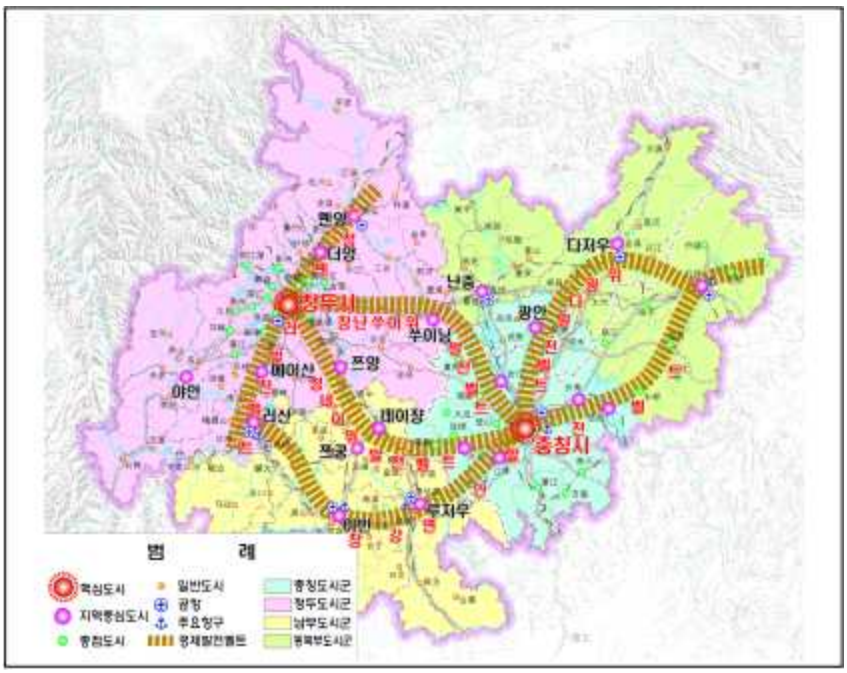
62) 일대일로(一帶一路)란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지칭함.

용 중에 있고 여객 5,295만 명, 화물 44만 8,400톤을 처리함. 철도는 국외 25개 도시 및 국내 14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누적 운행 수는 4,330편이고, 그중 청두-유럽열차의 누적 운행 수는 3,088편을 기록함. 주요항만으로는 루저우항, 이빈항이 있으며 8개의 컨테이너 노선이 운영 중에 있고, 대외적으로 대만, 일본, 한국과 연결됨.

<그림 3-12>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 위치

출처: https://www.chinacheckup.com/blogs/articles/china-free-trade-zones(검색일: 2019.1 1. 12) 바탕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재작성

<그림 3-13> 청위경제구 도시체계공간구조도



출처: 청위경제구지역계획(2011-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작성

□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는 2018년말 기준 누적 5.3만개의 기업이 신설되었으며, 이 중 외상투자기업은 628개로 집계됨. 그러나 2017년 4월 1일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19년 2월말 기준 실체가 있는 기업수는 6,125개이며, 그 중 중국기업은 6,096개, 외자기업은 29개에 불과한 실정임.[63]즉, 아직까지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는 설립 초기로써 입주기업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외자기업의 경우 다양한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륙지역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의 주요 정책을 펼침

○ 정부 기능 전환

- 다른 자유무역시험구와 동일하게 행정 간소화와 상부기관의 권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는 "간정방권(簡政放權)"을 추진함. 이의 일환으로 행정심사 사항을 최소화하고, 창구의 일원화(一口受理), 발급서류의 통합(多证合一) 및 전산화 등이 동일하게 실시됨. 법률 측면에서도 환경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국제 중재 및 상사제도를 강화함. 향후 정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산평가, 감정, 인증, 검사 등을 단계적으로 전문기관에 전담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상호 투자협력

- 투자협력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기업 입주 허가 전 내국민 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및 사중사후관리로의 전환을 적용하고 있고, 그 외 사업분야에 대해서도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를 운영함. 특히, 여행업, 의료서비스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도 같이 취할 계획. 또한, 토지이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임대 시기도 기업의 사정에 맞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투자협력에 중점을 둠.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 전략과 연계하여 중국 표준의 세계화, 정보와 인력의 교류 및 협력, 민관협력 확대 등을 추진

○ 무역자유화 및 편리화

63) 四川省人民政府(http://www.sc.gov.cn), 2019. 4. 1.

- 쓰촨 자유무역시험구의 무역자유화와 편리화 정책 대부분은 다른 시험구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점은 범국경적 국제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글로벌시장으로의 판매처 확대와 통관의 편리화로 요약할 수 있음.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해관특수감독관리지역에서도 항공엔진 등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등에 대한 정비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수출입 정책의 준수를 전제로 보세전시장 설립도 허가하고 있음. 아울러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속 간소화, 중국내 체류 시 지원 등 출입국 전반에 대한 편의를 강화할 예정임.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중의학의 세계화와 관광화를 촉진할 계획

○ 금융 혁신

- 금융 분야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기본적으로는 해외 금융기업(은행, 증권, 보험 등)의 투자를 허용하고 해외 송금, 외국화폐의 채권 발행 등 국제적 기준의 금융거래 편리화를 목표로 함. 또한, 금융 관련 국제기구의 지역 내 유치를 목표로 하고, 지역적으로는 첨단산업, 의료산업 등 중점 육성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확대, 과학기술 및 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특히, 돈세탁, 테러자금, 탈세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해나갈 계획

○ 대외 개발 협력 및 지역개발

- 지역의 항공(쌍류공항), 철도, 항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복합물류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이를 위해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 안전한 운송, 환경보호, 통관 등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운송을 위한 연계식 선하증권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항공 측면에서는 신규노선 개설, 운항 스케쥴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항만 측면에서는 국가급 해관을 설립하고 선박거래, 해운물류정보, 선박수리, 선원 훈련 등의 해운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임. 서부대개발과 연계해서는 인근

성(省)·시(市)의 국가급 개발지역과의 협력방안 발굴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쓰촨지역의 장점을 고려하여 주류산업(바이주)을 집중적으로 육성, 이를 위해 국제 박람회 기능을 강화하고 전시, 투자 및 기술교류를 확대할 계획

○ 첨단산업 창업

- 첨단기술과 관련한 무형자산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무형자산 거래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며, 해관특수감독관리지역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원가절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금융지원을 통해 다양한 창업프로젝트를 유도하고, 국내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의 참여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

□ 2021년 5월 26일, 자오지공원 금융업무지구(交子公园金融商务区)[64]는 '금융생태 최적화 산업에너지의 고도화'를 주제로 2021 청두 신(新)경제 "쌍천(双千)" 발표회를 개최함. 금융자본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 업계에서는 금융자본 공급능력을 강화하고 산업기능지구의 융합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함.

○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

- 서부 금융의 중심지로서, 청두는 금융자본의 공급을 최적화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청두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지탱할 계획임

- 21년 1분기의 청두 금융업 운행은 안정적이고 진전된 형세를 유지함. 금융업의 증가치는 568.0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7% 증가함. GFCI29에 따르면 청두는 전월보다 8계단 뛰어오른 35위, 세계 40위권에 첫 진입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함. 청두는 이미 중서부 지역에서 금융기관의 종류와 수가 가장 많으며, 금융시장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가 되었으며, 금융 부가 에너지 산업의 높은 질적 발전이 가능함

64) 자오지공원 금융업무지구는 면적 9.3㎢로, 청두 고신구 구이시거리, 중화거리 및 금강구 류장거리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성대로, 금강대로 이남, 금화로 서쪽, 천부1가, 센추리시티로 북쪽, 익주대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음. 자본과 요소 시장, 은행 서비스, 보험 서비스, 핀테크, 금융 블록체인, 창투융자를 발전 주체로 하는 금융 세분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금융 정보 서비스, 전문 서비스와 금융 문화, 고급 상업 서비스 등 개성화, 고급화된 서비스를 배분함. http://www.cdht.gov.cn/cdgxq/c139621/jzgyjr.shtml

- 청두 자오지공원 금융업무지구는 현대 금융산업 생태권 구축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식 상권 조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런던시와 비슷한 구조) 이미 이 곳에는 금융 및 부속 기구를 2200개가 있으며, 금융 종사자는 10만 명을 넘음. 이 새로운 랜드마크를 행사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것은 금융산업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보여주고 싶은 취지

바. 각국의 '제2금융센터'와 '기능형' 금융도시

1) 제2금융센터: 해당 국가의 주요 금융센터보다 규모가 작지만 종합적인 금융 기능을 가진 도시[65)]

□ 멜버른(호주): 주요 금융센터인 시드니에 비해 인구(시드니의 96%)와 GRP(시드니의 80%)는 작지만 경제의 성장성이 높음.

<표 3-8> 호주 각 업태 금융업자 수의 도시별 점유율(%)

분 류	시드니	멜버른
은행・신용금고	6.0	3.3
신탁・커스터디(custody) 회사	1.4	1.8
증권회사	14.9	7.6
자산운용회사	4.1	2.1
FP・투자조언회사	18.5	9.2
퇴직금・연금기금	2.6	3.3

출처: 세계 금융도시의 유형 보고서 4면 참고, 일본 금융리서치 센터(21. 3. 18)

□ 경제 규모 국내 2위인 멜버른에는 4대 은행 중 두 은행이 본점을 두는 등 대형 금융기관이 시드니와 동등하게 사업을 확장하는데 주력해왔음. 그 결과, 금융・보험업의 국내 고용자수 가운데 27%를 멜버른이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호주에는 기업에 임금의 일정액 각출을 의무부여하는 퇴직연

65) 日本総研 調査部 金融リサーチセンター, 世界の金融都市の類型と日本への示唆 ~一極集中を是正して都市分散型の国際金融国家へ~, 2021.3.18.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report/pdf/12492.pdf)

금기금제도가 존재하는데, 멜버른에는 퇴직연금기금 중 가장 큰 Australian Super 등이 존재함. 이들 기금의 운용자산은 GRP 대비 140% 이상까지 증가했으며, 그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조언회사도 집적되어 있음.[66]

2) 기능형 금융도시: 특정 금융 거래 및 금융 관련 업자가 집적하는 도시

□ 시카고(미국): 미국 제3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시카고는 파생상품 시장이 발달

○ 역사적으로 거래소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증권/상품 중개업자가 다수의 고용을 창출함.

□ 시카고에서 파생상품 시장이 발달한 배경에는 세계 최초의 선물거래소(시카고상품거래소)가 창설되어 1970년대 이후, 세계최초로 ①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②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에서 파생금융상품의 취급을 개시한 역사적 경위가 있음. 현재도 시카고의 파생상품 거래 건수는 뉴욕을 상회하고 있음

○ CME는 금리나 상품, CBOE는 ETF나 주식, 주식 지수에 강점이 있어 시카고 전체적으로 폭넓은 파생상품 거래가 집적되어 있음

○ 근래에는 디지털화로 중개업자의 고용은 감소하고 있지만, 자산운용 업무가 발달하고 있어 자산운용 회사 등에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표 3-9> 미국의 각 업태 금융업자 수 도시별 점유율(%)

분 류	뉴욕	시카고
은행・신용금고	0.9	0.7
신탁・커스터디(Custody) 회사	3.3	0.6
투자은행	11.9	2.4
증권회사	3.4	0.9
자산운용회사	11.9	2.5
거래소	12.7	10.3
벤처캐피털	10.1	2.3

출처: 세계 금융도시의 유형 보고서 6면 참고, 일본 금융리서치 센터(21. 3. 18)

66) 기업강제각출분은 2025년에 임금의 12%까지 인상될 예정임(현재는 9.5%). 임의각출분을 합하면 호주달러로 연간 25,000달러의 상한선이 있음. 과세대상이지만 세율은 15%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세율보다 낮음.

□ 에든버러(영국): 에든버러는 자산운용업자가 집적된 기능형 금융도시임

○ 영국에서는 금융도시로서 런던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지만 에든버러는 다른 도시에 비해 투자・자산관리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에든버러에서는 전체 고용자의 10% 정도가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에는 보험・연금 등에 의한 고용 비중이 컸지만, 최근에는 펀드매니지먼트 등 자산운용회사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표 3-10> 영국의 각 업태 금융업자 수 도시별 점유율(%)

분 류	런던	에든버러
은행・신용금고	19.5	1.2
신탁・커스터디(Custody) 회사	12.0	1.7
투자・자산관리회사	56.5	3.2
증권회사	33.3	1.4
자산운용회사	37.2	3.1
거래소	25.3	0.9
벤처캐피털	58.6	3.1

출처: 세계 금융도시의 유형 보고서 8면 참고, 일본 금융리서치 센터(21. 3. 18)

□ 에든버러에 자산운용회사가 집적되어 있는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Royal Bank of Scotland 등의 대기업이나 Standard Life Aberdeen 등의 주요 자산운용회사의 본거지였던 점과 함께 인건비 등의 비용이 런던에 비해 낮기 때문임

□ 또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회사인 미국 Black Rock의 유럽 제2의 거점이 있는 등 외국계 자산운용회사가 인수 등을 통해 활발히 진출하였고, 금융 비즈니스에 관한 글로벌한 식견과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점도 특징임. 그 결과, 2010년대 중반 이후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업자가 진출하고 있음

□ 밴쿠버(캐나다): 밴쿠버는 벤처캐피털의 움직임이 활발한 기능형 금융도시임

○ 밴쿠버가 벤처캐피털의 거점인 배경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투자자에 대한 세제나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이 있음

□ 중소기업 투자자 세액공제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내의 적격투자가에 대해 투자액의 30%(최대 연 12만 달러)의 환급형 세액공제 부여

○ 독자적인 기술의 R&D나 쌍방형 전자매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요건

□ BC Tech Fund

○ 2016년에 창설된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설립한 약 1억 달러(캐나다 달러)의 펀드이며, 투자회사 Kensington Capital Partners가 관리(同사도 동액 공동출자)

○ 지방에 소재하는 테크놀로지 기업의 펀딩지원과 동 기업의 고용 창출 등이 목적

○ 민간기업, 민간 벤처캐피털 모두 출자

<표 3-11> 캐나다의 각 업태 금융업자 수 도시별 점유율(%)

분 류	토론토	밴쿠버
은행・신용금고	4.9	3.2
신탁・커스터디(custody) 회사	22.4	6.3
투자은행	20.4	8.3
증권회사	7.4	3.1
자산운용회사	45.1	3.3
FP・투자조언회사	16.9	4.9
벤처캐피털	16.3	13.8

출처: 세계 금융도시의 유형 보고서 8면 참고, 일본 금융리서치 센터(21. 3. 18)

□ 또한 다른 도시에 비해 기술인력의 질과 양이 모두 풍부하고, SaaS(Software as a Service)나 게이밍 관련 기업을 비롯한 스타트업 기업이 많이 모여 있으며,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이 집적되어 있음

<표 3-12> 기술인력의 도시별 평가

분류 척도	평가 항목	토론토	벤쿠버
양(量)	고용 풀의 규모	1	3
	고용의 증가 속도	5	3
	고용의 집중도	2	6
질(質)	고용의 질	3	2
	관련 학위의 취득 비율	2	3
원가경쟁력	비용 대비 고용의 질	3	4
	인건비	17	11
	부동산 비용	19	20

출처: 세계 금융도시의 유형 보고서 11면 참고, 일본 금융리서치 센터(21. 3. 18)

□ 피닉스(미국): 피닉스는 금융기관의 미들・백 오피스가 모이는 기능형 금융도시로, 그 중 30%정도는 금융・보험업이 차지하고 있음

○ 콜센터의 고용자 수로는 미국 전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

□ 피닉스에 미들・백 오피스가 모인 배경에는 ① 미국 내의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임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의 인건비가 저렴하고, ②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등의 대도시와 비교하여 부동산 비용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음.

3) 시사점

□ 지방금융도시를 지향함에 있어 '제2금융센터'를 지향할 것인지, '기능형 금융도시'로서 특화된 금융기능 향상에 주력할 것이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경제 규모나 역사적 경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화 금융기능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

□ 지방금융도시의 형성이 갖는 장점을 검증하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서울에 금융기능이 집중된 경우 재해 시의 금융 기능 대체와 지

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역금융도시 조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사.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에의 시사점

□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으로 우선 '제2금융센터'로 자리매김하되 특화금융을 지향하는 '기능형금융중심지' 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특히 부산은 지리적 특성과 강점을 살려 해양 및 선박 금융중심지로 특화하되 핀테크 및 데이터 산업, 나아가 친환경 및 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활성화 하는 기능형 금융중심지로 나아갈 필요

○ 부산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오슬로와 같이 선박 및 해양금융 중심지로 특화

○ 룩셈부르크와 더블린 같이 핀테크 및 데이터 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발전을 도모

○ 중국 도시와 같이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 도시와 함께 연합을 통해 통합 발전 및 균형 발전을 추구

○ 나아가 친환경/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 오슬로는 실제로 항구도시이면서 금융중심지로 위상이 높은 독일 함부르크, 그리스 피레우스,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등과 더불어 해양관련 선박금융 육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룩셈부르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맞춰 금융산업에서도 핀테크, 디지털 금융 관련 혁신 금융서비스, 규제 극복을 위해 노력

○ 특히 룩셈부르크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산업인 레그테크(RegTech), 인슈어테크(InsurTech),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등을 받아들여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가 생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

○ 룩셈부르크의 금융 서비스 규제기관인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는 기술 혁신에 대한 역량과 개방성으로 맞춤형 핀테크 규제에 대응

□ 중국 금융중심지를 살펴보았을 때 부산 또한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 도시와 함께 연합을 통해 통합 발전,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오슬로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녹색성장 관련 투자가 활발한 도시 중 하나이며, 교통망/전략 및 경제발전 기조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틀 속에서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것과 같이 부산 역시 친환경 및 녹색성장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킬 필요

□ 지방 금융도시의 형성이 갖는 장점을 검증하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서울에 금융기능이 집중된 경우 재해 시의 금융 기능 대체와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방 금융도시를 형성하는 의의를 검증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

IV. 바람직한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및 부산형 모델

1. 바람직한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가.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 방향

□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 현재의 부산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금융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이 긴요

□ 게임 체인저로서의 "근본적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정부·국회·서울·부울경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중심지에 못지 않은 조세, 의료, 교육, 금융규제 등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강구

○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 및 부산에 추가적인 법적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자체가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

□ 다만, 근본적인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 위주로 추진전략 마련

1) 부산의 지리학적, 정책적 이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선진화 정책 방향: 금융산업의 발전 지원

□ 서남아, 중동, 동남아, 중국, 일본, 미주 등 동서양을 잇는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서 해양 및 선박금융 국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략 제시

○ 해양, 파생, 기술금융에 특화된 공공기관 및 금융기업들(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해양진흥공사,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시너지 효과 유도가 가능한 전략 제시

□ 특히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된 금융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시

○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를 통한 혁신기업 유치 전략 제시

○ 대한민국에 2개뿐인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랩 중 하나인 '부산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랩'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기업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통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 및 전략 제시

□ 핀테크 산업, 비대면 금융 등의 발전이 금융회사의 물리적 이동 필요성을 낮출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핀테크 회사 지원 플랫폼 마련, 핀테크 기업 클러스터 구성, 적절한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지원 등 핀테크를 체계적으로 투자 및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매력적인 핀테크 기업 생태계 조성 필요

○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창업활동 및 새로운 핀테크 산업을 장려하며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전략 제시

○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관련 규제 완화방안으로 ICO 활성화 추진

□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 및 민관협력 방안으로 부산광역시청 내 '금융/기업지원실' 설치방안과 회사 설립부터, 운영, 이전, 현황조사, 분석, 상장 등을 위한 One-Stop 조직을 설치

○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형 벤처 캐피탈의 역할 강화

○ 해양금융 선진화(해양금융진흥공사 역할 강화)

○ 파생금융 및 녹색금융 활성화

○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를 통한 혁신기업 유치

2) 국내외 우수한 기업이 모여들 수 있는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 금융회사의 집적 촉진

□ 부산 금융중심지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기반으로 금융중심지 붐을 조성해 일반회사 및 금융회사들을 부산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 제시

○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win-win할 수 있는 부산지역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 제시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다수의 민간금융회사와 해외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 제시

□ 금융회사의 집적 촉진을 위한 관련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조화를 통한 부산형 모델의 일환으로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부울경 통합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 국내 금융 및 일반회사 유치와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 선박금융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 유치를 통한 외국계 금융회사 집적 촉진

3) 경제주체간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 강화: 정책 자율성 부여

□ 바람직한 부산형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부산시, 부산 소재 기업 및 시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협업이 필수

□ 중앙정부는 전폭적인 법 개정, 세제 및 금융중심지 담당 조직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지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금융중심지정책과 관련하여 부산시에 정책적 자율성을 대폭 부여(또는 위임)할 필요

□ 부산시도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활성화되고, 신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집적 효과가 구현되는데 금융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정책, 교육 및 인력관리 정책, 정주여건 개선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연구개발 부문 활성화와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 간의 전향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실 향상에 노력해야 함.

□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정합성 제고와 부산 금융중심지 신인도 향상 및 위상 강화 노력 경주

□ 금융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관련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부산형 모델 구현을 위한 혁신금융 법제 개선방안
○ 국제 금융전문인력 양성
○ 대체거래소 부산 설립 방안
○ 금융인프라 국제정합성 제고

나. 부산 금융중심지에 적합한 벤치마크 전략

□ 부산이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역할 분담 및 민관협력 강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조화로 부산 지역 금융 및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부산의 산업구조와 연계된 자생력 확보,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 1단계는 공공기관의 이전 및 유치,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 및 여건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온 것이 특징

○ 2단계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정착 및 업무기반 강화를 통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조화를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고려 및 지원, 그리고 역외 수요의 충족과 금융중심지의 대외적 위상 및 글로벌화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해 나갈 필요

○ 2단계 활성화는 1단계의 정부 주도, 공공부문 주도, 산업정책에

의한 보완 역할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협업 강화, 상업적 주재의 강화, 기존 기관의 업무 및 서비스 활성화, 지역경제와의 연계 등 점진적,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

다. 금융중심지 정책 및 추진체계 개선 방향

1) 금융중심지 정책 이슈

□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금융중심지 정책과 발맞추어, 서울, 부산이 개별적으로 중심지 정책을 추진하되, ‘블루오션’ 분야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레드오션’ 분야에서는 특화전략을 추진하여 서울과 부산간의 win-win 기반을 조성

□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 정책목표만을 위한 세제 및 고용제도 개편에 한계가 있는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창의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지역금융기관은 지역중소기업과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관계형 금융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국단위 금융기관보다 유리한 위치

□ 특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 등을 검토하여 핀테크, 블록체인 등 IT기반 금융혁신을 반영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제시

○ 핀테크의 성장은 우리나라 경제, 기업, 금융발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핀테크 성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지닌 엑셀러레이터 육성방안을 제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 제2항 제10호와 제21조 제2항 제10호에서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 1977년 미국 의회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공정한 금융서비스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정한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 CRA) 및 1994년에 제정된 지역개발금융기관법(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에 따른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CDFI Fund) 제도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지방은행 및 지역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의 역할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 방안을 제시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의 설립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후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선제적인 대응 및 연구 필요

○ G20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회사가 대출 평가시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정보공시의무 제도화를 추진 중임.

○ 기후금융센터, 기후금융 관련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와 재해보험 관련금융사 및 빅데이터 센터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연구

□ 기후금융은 해양금융과도 연계되어 있어 부산지역 금융기관들은 지속가능한 환경 개선을 통한 해양 금융의 역할을 제고

○ 포세이돈원칙(Poseidon Principles)은 지속가능 금융의 일환으로 금융 기관은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해양 금융의 역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원칙

○ 부산에 APEC기후센터가 있어 향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한 협력이 용이

2) 금융중심지 추진체계 개선 방향

□ 대통령 직속의 ‘금융중심지 추진 위원회’ 설치 및 각 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강력한 추진 동력 확보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역량 강화

○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분산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과 금융중심지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

라. 금융중심지법을 특별법 형태로 개정

1) 관련 법률안 검토

가) 현행 금융중심지법의 한계

□ 금융중심지법으로 약칭되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제정되어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

○ 금융중심지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지원, 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지원,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확정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해 구체화

□ 현행 금융중심지법이 제도와 지정절차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규정들은 다른 법에 두고 있거나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

○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을 전제로 동 법률에서는 법률 목적을 달성할 방안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력이 약화

○ 금융중심지 조성을 담당할 전담조직이 없고 인허가 의제 등 규제완화 사항, 재정 및 세제 지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동

법률만으로는 소위 금융특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한계

나) 금융중심지법 개정법률안 분석

□ 2020년 7월 박수영 의원은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금융특구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발의

○ 금융중심지법 법률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금융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법령에서 배제 및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며,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금융특구청을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2) 금융회사 인허가 규제에 대한 분석

□ 금융중심지법을 개정하는 데 법률체계 구성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법률들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이 있음

□ ‘금융회사 인허가 규제’가 핵심임을 감안, 단계별로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되, 금융중심지에 특권을 부여하여 금융중심지 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법에 인허가 의제규정 등 법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적절

○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제11조에서는 36개 개별법률에 따른 각종 인가·허가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가·허가를 의제함으로써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금융 인허가 규제 단계별 추진전략(안)>

[1단계] : 국내위주
① Small license 확대를 통해 '인허가' 대상이 아닌 '등록' 금융회사 대상 확대
② 금융회사는 '금융중심지' 에 등록, 금융중심지(지자체)가 검사(금감원 협조, 현재 대부업자 감독 등 참조)

[2단계] : 국내위주
① 종합업무 인허가 금융회사 이외에는 모든 금융회사를 '등록' 대상으로 분류
② 금융중심지(지자체)내 금융감독기구 설립(미국 주 금융감독청 참조)

[3단계] : 국제위주
① 금융중심지에서 일부 종합금융회사 '인허가' 도 가능(수신기관 제외)
② 금융중심지(지자체)내 금융감독기구 역할 확대

3) 조세 특례에 대한 연구

□ 국내의 금융중심지 관련 조세특례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여건 및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

○ 법인세 또는 소득세 혜택 대상은 2021년 12월말까지 금융중심지에서 '창업'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하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기존 사업장을 '이전' 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위 금융특구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가)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의 세제 감면 조항

□ 개정안은 제22조를 신설하여 금융특구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사업시행자 등에 대해 국세·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특구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시행자,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특구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7.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1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다만 안 제22조의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국세 감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개발부담금 감면은 국토교통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각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67]

○ 각 부처의 의견을 살펴보면, 개별법에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

67) 이용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93호) 검토보고 (제382회 제2차 국회정무위원회), 2019. 09

법」와의 입법체계에 배치[68][69]

○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감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70]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농지법」 제38조 제6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71]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72]

□ 이와 같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개별법에 대한 개정 방안 도출 필요

---

68) 기획재정부 의견: '65.12.20. (구)「조세감면규제법」 제정시 각종 법률에서 분산 규정하던 조세특례 사항을 동 법에서 통합관리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 사항의 총체적인 재조정·단일화로 과세공평과 효율적 세수관리 목적

○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취지에 배치

69) 행정안전부 의견: 개별법상 규정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

-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임

70) 국토교통부 의견: 동 개정안에 따른 금융특구 조성사업을 감면하는 경우, 타 법령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유사한 감면 요구가 쇄도할 수 있어 개발부담금 제도는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현행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자체 귀속분(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

71)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7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감면·환급 등은 「농지법」에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제4조와 상충되므로 삭제 필요

제4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낮은 세율로 해외자본과 고급인력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2.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최적 조합 모색

가.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1) 필요성

□ 금융중심지는 일반적으로 금융관련 투입, 산출, 환류 등 전반적인 부가가치 생성과정이 지역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지칭하며*,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우 금융공기업이 집적되었으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상황

* 자금조달, 회계/법무/전산 등 백오피스 집적과 인력양성 기반이 갖추어져 지역내에서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

○ 부산지역산업의 자금조달은 정부보증, 대출 등 지원적 성격의 자금이나, 간접금융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수도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자금조달 구조는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의 진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역내에서 자금의 순환을 통한 금융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도 한계요인으로 작용

□ 부산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부산형 모태펀드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검토할 필요

○ 2000년대 초반 중소·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행한 모태펀드는 주로 중앙정부 주도하에 운영되며, 투자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경우 중앙정부의 모펀드에 시비를 매칭하는 정도의 소극적 개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 지역의 산업현황을 이해하고 자금공급이 필요한 영역에 선제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모펀드를 기획, 운용, 관리하고, 지역의 투자이력과 금융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

□ 지역의 성장전략에 부합하는 자금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현황 파악과 교육을 통해 자본시장과 산업현장의 거리감을 좁혀나가는 역할도 필요

2) 국내 모태펀드 현황과 부산금융중심지에 적합한 모태펀드 형태

□ 국내 모태펀드 현황

○ 모태펀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아닌 펀드에 출자하여 투자위험을 줄이며 동시에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며, 정책측면에서 자금의 수요처에 대한 투자재원 공급, 정책적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함

○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모태펀드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5년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와 성장사다리펀드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있음

<한국벤처투자>

○ 지난 2005년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2, 이하 벤처특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에 따라 등장한 벤처투자조합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각 정부 부처가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창업투자회사인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벤처투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2020년 2월 육성계획서 제출 등에 대한 사항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의 부분개정 되었고,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

○ **설립배경**: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

○ **형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이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산하에 있으며,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제출하면, 모태조합운용협의회와 투자관리전문기관(한국벤처투자(주))를 거쳐, 모태조합

(fund of funds)이 구성되고,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투자조합에서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 모태펀드의 출자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영화진흥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참여한다.

○ **설립 근거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6조에 근거하여 설립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용,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한국성장금융>

○ 한국성장금융은 FoFs 운용전문기관으로서,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 마련을 위한 모펀드를 기획, 운용, 관리하며 우수한 GP에게 자펀드 운용을 위탁하여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모험자본을 공급

○ **설립 배경**: 성장사다리펀드가 지속적인 모험자본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자산운용사 설립

○ **형태**: 주주는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재단법인은행권청년창업재단으로 구성.

○ **법적 성격**: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소위 헤지펀드)

○ **성장사다리펀드**: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3년에 출범한 대한민국 대표 모험자본으로 Fund of Funds로 운용 중.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3.6조원의 자펀드를 조성하여 1,831개 기업에 투자하였으며 투자한 기업의 88%가 창업 초기 또는 중소기업으로 성장사다리펀드는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의 Death Valley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 나아가 성장사다리펀드는 회수자금 등의 재투자 재원을 이용하여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기업의 Scale-up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출자기관:KDB, IBK,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부울경 모태펀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추진

- ○ 기본계획 수립: 운영구조, 출자규모, 부울경 지원 방안 등
- ○ 기존 펀드 정비: 기존 펀드 가운데 신성장 산업과 관련한 펀드 선별 및 통합
- ○ 모태펀드 및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 추진 T/F 및 투자운영위원회 구성
-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
- ○ 펀드 조성 및 운용 추진

□ 부산금융중심지에 적합한 모태펀드 형태

○ 부산 금융중심지의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투자공사 설립이 필요

○ 모펀드의 투자기구 설립 근거법 규정에 따라 투자의 범위, 운용주체 등이 상이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비교검토가 필요

- (1안) 자산운용사 : 모태펀드의 투자기구 형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자산운용사로 하는 경우 투자대상(인프라, 대출펀드 등 투자가능), 방법 등에 제약이 적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함으로써 설립이 가능함

- (2안) 벤처투자조합 : 모태펀드의 투자기구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는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벤처투자조합으로 투자대상이 한정됨. 또한 투자기구의 설립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모태펀드가 존재하므로 부울경 모태펀드를 신설하는 경우 인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벤처투자조합형태로 부울경 모태펀드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세제상 차이도 있으며, 모태펀드 설립의 목적, 향후 투자의 확장성 등을 고려해 투자기구의 법적성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벤처투자법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개정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부산시장(또는 경남지사)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3. 제66조에 한국벤처투자
4. 제66조2에 따른 부울경 기업금융투자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7.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8. 그 밖에 부산시장(또는 경남지사, 울산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법 제66조의2 제정안

제66조의2(부울경기업금융투자의 설립 등) 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울경 기업금융투자는 법인으로 한다.

③ 부울경 기업금융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울경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부울경 기업금융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부울경 기업금융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부울경 기업금융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부울경 기업금융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부산시장(또는 경남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부울경)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부울경 기업금융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투자기구별 비교>

구분	PEF	신기술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규 벤처투자조합
소관부처 (근거법)	금융위 (자본시장법)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중기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기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기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적 형태	상법상 합자회사	민법상 조합 또는 상법상 합자조합	민법상 조합 또는 상법상 합자조합	민법상 조합 또는 상법상 합자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업무집행 조합원(GP)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일반법인 CO-GP가능)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설립요건	-금산법상 출자승인(금융회사만 적용) -유한책임조합원수(49인 이하) -LP최소출자금액(GP임원 또는 운용인력 1억원, 그 외 3억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금을 관리·운용 -유한책임조합원수(49인 이하)	-출자금 총액(20억원 이상) -유한책임조합원수(49인 이하) -GP최소 출자비율(출자금의 1%)	-출자금 총액(30억원 이상) -유한책임조합원수(49인 이하) -GP최소 출자비율(출자금의 1%) -모태조합출자 필수(M&A, Secondary, 의무비율 준수 등 경우 예외 있음)	-출자금 총액(20억원이상 통일) -유한책임조합원수(49인 이하) -GP최소 출자비율(출자금의 1%) -모태조합출자 없이 결성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자 공동 GP 가능 규정
설립·등록 절차	금융위 등록 (금감원 위탁)	없음	중기부 등록	중기부 신고	중기부 등록
존속기간 제한	15년 이내	없음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투자대상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인수(10%이상), CB·BW 등	신주·구주·CB·BW 등 타 벤처조합인수 기술관련	신주인수, 신규CB, BW, EB프로젝트 투자	신주·구주·CB·BW 등 지식재산 인수	신주인수, 신규 CB, BW, EB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투

		무형자산(특허권 등) 인수			자, 기타 중기부장관 고시(Fund of Fund 가능)
투자의무	2년 내 출자금의 50%를 경여 참여 목적으로 투자	-	3년 내 출자금의 40%를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창업투자의무)	-	총 자산 규모별로 투자의무 비율 차등(운영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투자금지 업종	-	금융업, 부동산업(서비스업 제외), 사행산업, 미풍양속 저해업종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 등(업종제한 폐지 2019.6.)	금융기관 등 제한	(벤처통합법 제정안에는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벤처투자만을 제한하고 업종제한 없음)
상장주식 취득제한	제한없음	제한없음	출자금의 20% 이내	제한없음(규약 제한)	벤처투자조합 20%
중견기업 투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창업투자의무 비율 준수 후	불가능	투자의무 준수 후 가능(투자의무 총 자산비율 완화)
해외투자	제한없음	제한없음/외국환 취급업무등록 쟁점	先창업투자의무 준수, 後 출자금의 40% 이내	제한없음	50%이내(6개월 이상 보유, 7년 이내 매각시 제한 없음)
지분취득 한도	제한없음	제한없음	50%이내(6개월 이상 보유, 7년 이내 매각시 제한 없음)	제한없음	

3) 투자금융공사의 조직 구조 및 주요 역할

□ 부울경 모태펀드의 거버넌스 체계는 한국성장금융과 유사하게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운영위원회'를, 운영을 위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부울경 투자금융공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부울경 모태펀드의 기본 운영방향은 '투자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며, 동 위원회는 투자대상 검토 및 승인을 비롯하여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은 부산시 내부위원을 비롯해 부산시의 전략산업 분야 전문가, 학계 및 금융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 부울경 지자체는 부울경 모태펀드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펀드의 전반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 부울경 지자체는 '투자운영위원회'와 '부울경 특별금융회사'에 지자체의 의견을 전달하며, '투자운영위원회'에 참석

○ '부울경 특별금융회사'로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를 구비하여 효율적인 펀드 운영 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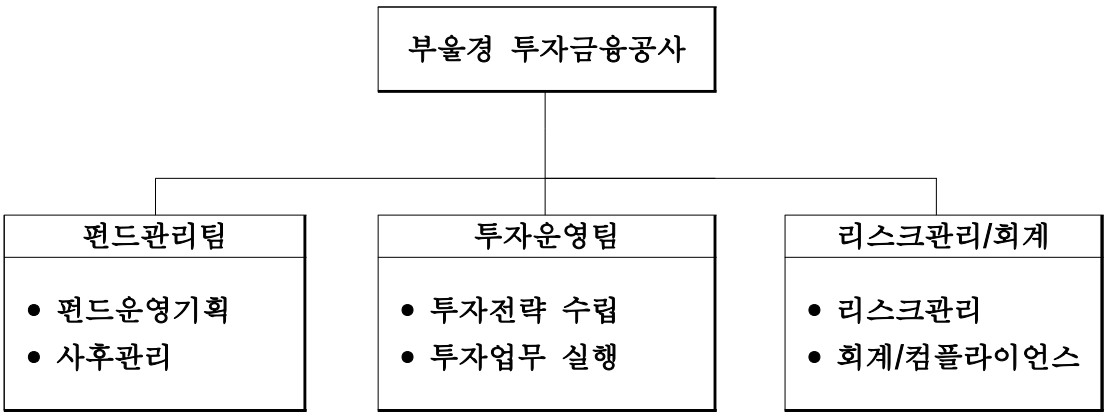
□ 투자금융공사는 모태펀드의 결성, 투자 및 운영을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기관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

○ 세부 운영계획 수립, 자산운용, 부산시의 정책방향과 투자자의 니즈를 고려한 펀드 조합 및 투자상품 개발, 컴플라이언스 준수, 출자금 회수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

○ 인력구성은 투자관리 전문기관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경험과 연속성, 전문성 있는 인력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며, 부산시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정보력과 함께 펀드 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고루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함

□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펀드 조성

<그림 4-1>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조직도 예시



4) 펀드의 조성 및 운영

□ 모태펀드의 운영 효과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섹터, 성장단계 등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산의 산업구조를 보면 성장단계 중 초기기업 뿐만 아니라 중기·후기 기업들도 자금의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창업에서 성숙, 구조조정까지 기업의 사이클에 모두 관여할 수 있는 기업의 사이클에 모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지역의 금융생태계 조성측면이나 펀드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임

○ 한편, 투자대상 섹터도 해양·선박 등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측면을 고려해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태펀드 포트폴리오 제안

① 벤처투자형 모태펀드

○ 다양한 창업동아리 및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1단계로 출자규모 100억원의 벤처투자형 모태펀드 설립

-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등 공급자 위주 투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으로 안정적 벤처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
-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재원 공급은 1단계로 부울경 관련

지방정부가 하되, 투자의사결정은 전문기관인 가칭 “부울경 기업금융투자”가 담당

- 부울경 기업금융투자는 한국벤처투자 및 성장금융의 성공 경험과 성장스토리를 초석 삼아 실행에 참고할 필요

  * 한국벤처투자는 국내 유니콘 11개 중 9개를 모태펀드 자펀드로 탄생시킴으로써 유망기업의 선별 능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

  * 9개 유니콘에 대한 모태 자펀드 투자총액 1114억, 회수원금 316억원, 회수액 5173억원 -> 투자 원금 대비 16.4배 회수

○ 벤처투자형 모태펀드의 투자조건은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코넥스시장 제외)

-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출자분야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다음의 방법 등으로 투자.

○ 벤처투자형 모태펀드의 투자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

○ 벤처형 모태펀드의 운용사는 부울경에 최초 설립 및 지점 설치 예정인 운용사 가운데 선발하여 선정

- 공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

혁신부울경	비대면	○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非對面)화하여 경영효율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예시 : 스마트헬스케어, 온라인교육,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유통, 기반기술(AI, 5G, 빅데이터 등). 세부 반영범위는 규약협의시 결정
	바이오	○ 진단 백신 치료제 등 의료용물질・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세부 반영범위는 규약협의시 결정
	혁신산업	○ 다음의 ① 또는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 ① 부울경 기반의 혁신기술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세부 반영범위는 규약협의시 결정 ② 부울경이 선정한 ’ 혁신 유망기업 100’ * ②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부울경 기업금융투자가 투자심사를 운용사에 요청할 경우 운용사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함. 단, 투자의 최종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멘토기업 매칭출자	○ 멘토기업과 매칭하여 비대면 분야에 출자제안 가능 -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非對面)화하여 경영효율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예시 : 스마트헬스케어, 온라인교육,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유통, 기반기술(AI, 5G, 빅데이터 등). 세부 반영범위는 규약협의시 결정
DNA, BIG3		○ 혁신인프라(D.N.A : Data, Network(5G), AI) 및 3대 신산업 분야(BIG3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해당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주목적대상 적합 여부는 민간 자문단이 추가로 평가할 수 있음
스케일업		○ 혁신성장이 기대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 ○펀드 해산 시까지 펀드 전체 투자액에서 평균 투자금액이 기업 당 50억원 이상이어야 함.
창업초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상기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해 부산울산경남에 본점을 두고있는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펀드결성일로부터 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소재부품장비		○ 다음의 ① 또는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 ① 부울경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② 정부가 선정한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가 추천한 기업 * ②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한국벤처투자가 투자심사를 운용사에 요청할 경우 운용사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함. 다만, 투자의 최종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일자리창출펀드	○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기관투자자와 매칭의 방식으로 투자 - 투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벤처투자 유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중소기업 R&D 성공판정, 기보술보증기금 보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기업에 투자 * 해당 실적이 발생한 직전년도 대비 투자 신청일 기준 ①20명 이상의 고용증가 또는 ②연평균 40% 이상의 고용증가율 또는 ③투자금 1억원 당 1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달성한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운용하며 세부 투자계획과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

○ 주요 출자조건

항목	내용
투자방법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버팀목 분야로 제한) *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등 세부내용은 3. 출자 분야 및 투자대상 참조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 Co-GP의 경우 합산하여 산정
자조합의 투자의무	○ 조합 약정총액에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다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선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의무로 부여 가능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투자기간	○ 4년 이내로 운용사 자율제안
존속기간	○ 5년 이상 운용사 자율제안 - 단, 바이오 분야의 경우 : 8년 이상
관리보수	○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관리보수 지급기준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table>
<tr><td></td><td>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의 경우, 2.1% 이하</td></tr>
<tr><td>기준수익률</td><td><table><tr><th>기준수익률</th><th>분야</th></tr><tr><td>6% 이상</td><td>바이오</td></tr><tr><td>3% 이상</td><td>비대면, 멘토기업 매칭출자, 소재부품장비, , DNA,BIG3, 스케일업, 창업초기</td></tr><tr><td>1% 이상</td><td>기타</td></tr></table>*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td></tr>
<tr><td>성과보수</td><td>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td></tr>
</table>

② 기업구조조정 모태펀드

○ 구조조정 시장에서 자본시장 역할이 미흡하여 마중물로서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모태펀드를 1단계로 100억원 규모로 설정

- 채권은행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성매각 문제를 해결하고, 한도성 여신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여건을 마련
-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를 창출하고, 성공사례 축적을 통해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
- 지방정부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 전문성/창의성 등을 활용하여 사업구조 개선 등을 수반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 정부는 해당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도 한층 더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1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한 바 있어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

○ 아직 초기 단계인 기업구조조정 시장은 투자 성공사례가 많지 않아 자본시장 운용사들이 진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부울경 주도의 모태펀드 설립을 통해 투자 활성화 도모

- 정부의 기업구조혁신펀드 경험은 투자 리스크 완화를 통해 다양한 운용사들이 기업 구조조정으로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유도

- 운용사 의 구조조정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 하였으며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도 창출

○ 기업구조조정 모태펀드는 펀드오브펀드 형식으로 구성하여 모펀드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설정하여 하위펀드에 다시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하위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

○ 기업구조조정 모태펀드의 주 대상은 법인 형태의 중소, 중견기업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블라인드 펀드: 1, 2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사전적,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단,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기지원목적으로 약정촉액의 30% 이상 투자

(2)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25% 이상 투자

- 프로젝트 펀드

(1) 사전적,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

- 단,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는 재기지원 목적 등 구조조정 투자에 한함
- 투자기간 종료 시점에 민간 매칭금액이 기업구조혁신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액을 상회하여야 함
- 매칭금액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울경 기업금융투자가 정함

○ 운영구조는 기업구조조정펀드, 연기금, 기관 등에서 기업구조조정펀드 운용사에 자금을 출자하고, 이를 운용사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사전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 등)에 투자하는 방식

○ 주요 출자조건

항목	블라인드 펀드	프로젝트 펀드
최소결성금액	최소 100~200억원 이상	제안금액과 출자비율을 감안하여 결정

모펀드 출자비율	약정총액의 50% 이내(사후적 매칭 선택 시 최대 98% 이내) 순위별 모펀드 출자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출자(필수)	
운용사 출자금액	약정총액의 2% 이상 운용사는 최소 모펀드와 동일한 순위와 비율로 출자 하여야 함	
존속기간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제안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
투자기간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	제안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

③ 해양금융 모태펀드

○ 국내 조선업계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캐피탈(이하 'VC') 업계는 이러한 조선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벤처투자의 성격과 부합하면서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 금융사 및 연기금들이 조선업 투자를 조심스러워 하는 상황
- 하지만 VC 업계에서는 현재 조선업황이 저점이므로, 저평가된 기업들에 투자하기에 적기로 판단
- 투자에서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긴 벤처투자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글로벌 해양금융 규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3,020억 달러로 추산되며, 유럽은행의 비중이 줄어들고 아시아 은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자본시장을 통한 해운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그 만큼 해운계가 신규투자 등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
- 우리나라의 해운금융은 공공부문이 90%이상 차지하고 민간금융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양수산부는 해양 전용펀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420억 원 규모의 해양펀드 조성 추진[73)]

-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건전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1,420억원(정부출자 매년 200억원/5년)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을 추진 중임

* 한국모태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의 경우 주목적 분야에 대한 의무 투자 비율(약 60%)이 설정되어 있어 해양 분야 투자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

○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는 한국모태펀드 내 해양계정을 신설하고, 1월에 정부예산 200억 원을 출자

- 이후 4월 자펀드 운용사(캐피탈원, 수림창업투자)를 선정하였으며, 운용사에서는 민간 출자자 모집을 통해 총 95억 원의 투자금을 추가로 확보
- 올해 결성된 2개의 자펀드는 '캐피탈원 해양신산업 투자조합'과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으로, 각각 캐피탈원과 수림창업투자가 운용

○ 해양 모태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대상은 해양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전통 해양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및 관련 사업임.

- 해양수산부는 내년에도 약 286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며, 펀드 규모를 2023년까지 약 1,400억 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2017년 8월 개최한 '해양수산 투자유치설명회'와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비행선박, 생선 필렛(fillet), 수중작업용 로봇 등을 생산하는 7개 기업에 약 84억 원의 투자유치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한바 있음.

* 그러나 당시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해양 분야 전용펀드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설령 투자하고 싶어도 주목적 사업으로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펀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해양산업 분야 최초의 정책펀드인 해양모태펀드 조성 이후로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음을 주목

- 해양산업 및 선박금융 등에 대한 VC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7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양모태펀드, 해양 중소·벤처기업 투자 개시", 2019. 10. 7

상황에서, 지속적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 펀드 조성은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

- 과거 전용펀드의 부재를 이유로 VC들의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전용펀드 조성을 계기로 해양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

○ 한편, 부산시가 주축이 되고 부울경이 통합으로 설립하는 모태펀드는 해양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펀드이되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태펀드와 지원 산업이나 방법 등에서 차별화할 필요

- 해양에너지, 해양안전, 첨단해양 장비, 첨단수산 양식가공 등 새로운 기술발전 및 기존 산업과의 접목 등 해양산업 발전 분야 및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
- 그러나 초기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IT, 바이오, 제조업 등 기존 산업 대비 투자 매력도가 다소 떨어짐
- 또한 해양산업의 특성 상 타 산업 대비 경쟁 열위에 있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배제되고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을 해양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여 해양 관련 투자 활성화 계기를 만들 필요

○ 해운업은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많은 자본이 소요되어 해운기업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벤처업계의 풍부한 자금이 부산의 해운업계로 공급될 수 있도록 부울경 모태펀드의 해양 부분 지원이 필요

- 부산형 금융중심시 조성을 위해서는 부산시 해양벤처 육성이 매우 중요
- 특히 해양신산업과의 시너지 측면에서 부산시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중심지로서 퀀텀 점프(Quantum Jump)도 가능
-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 해양기업들이 자금 걱정을 덜고 기업 활

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부울경 모태펀드의 해양 부분 지원이 그 첫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

○ 해양산업 사업체의 영세성과 창업 부진은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74]

- 전체 해양산업 사업체 중 대기업이 1.3%, 중견기업이 7.4%, 소기업이 91.4%로 대다수의 해양산업 사업체가 영세함
-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해양기업들은 자금의 대부분을 자체 자금 및 대출에 의존
  - 500개 해양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금조달 출처 중 자체 자금 비중이 74.4%로 가장 높은 반면, 민간 자금과 정부 정책 자금은 1.1%, 5.0%로 매우 저조
  - 한편 은행 대출은 18.3%를 차지하나 이마저도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

○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울경 모태펀드의 일정 금액 이상이 해양금융 활성화의 수단으로 해양 분야에 투자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

- 해양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체적인 전용펀드 계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VC 투자 적극적인 유치 필요[75]
  - (싱가포르) 항만공사에서 해양기술 클러스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싱가포르 달러(S$) 규모의 해양혁신펀드(MINT 펀드)를 조성
  - (노르웨이) 2019년부터 해양산업 부문의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약 4,000만 크로나는 해양기술을 주제로 다루는 프로그램에 지원될 예정

74) KMI 동향분석,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년 7월)
75) KMI 동향분석,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년 7월)

○ 조선・해양 업계의 VC 활용 사례

- 일본 사례

○ (주)아이디아(Aidea)는 2017년 창업 이후 전세계 선박을 대상으로 AI 및 IoT를 사용한 선박관제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있음. 2019년 7월부터는 선박 사고 예방과 조선시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 해양플랫폼 "아이시아(Aisea)"를 제공하고 있음. 스마트폰과 태블릿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항행지원시스템"과 "선박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선박의 동정 관리 및 음성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함. 현재 내항선(국내 항행하는 선박)을 중심으로 선박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업무효율성과 인력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주)스파쿠스(本社：東京都港区 `代表取締役社長：阿部修平)가 운영하는 미래 창생 2호 펀드와 미즈호캐피탈(本社：東京都千代田 `代表取締役社長：大町祐輔)이 운영하는 미즈호 성장 지원 제3호 투자 사업 유한책임 조합들로부터 제삼자 할당 증자에 의한 총액 2.4억 엔, 일본 벤처캐피탈(NVCC)와 미즈호캐피탈로부터 1억 8000만 엔 자금 조달을 실시하며 Aisea 개발체제 강화와 영업체제 강화를 도모. 또한 향후 해양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시하여, (주)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本社：東京都千代田区 `取締役社長：広瀬伸一)과 자본업무를 제휴하고 Aisea를 통합한 새로운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해상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함.[76)]

○ Beyound Next Ventures(本社：東京都中央区 `代表取締役社長：伊藤毅)는 당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츠쿠바대학 내 벤처에서 수중탐사로봇(수중드론)을 개발 ・ 제조하는 공간지능화연구소(本社：茨城県つくば市 `代表取締役：伊藤昌平)에 리드 투자자로 출자를 실시함. 이번 출자는 미츠이 스미토모 해상캐피탈 주식회사, SMBC 벤처캐피탈 주식회사 및 free bit investment 주식회사와 공동투자에 의한 출자 총액은 1.9억 엔.
공간지능화연구소에서 개발하는 수중드론은 소형 경량으로 저가격이면서 조류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의 조사나 촬영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임. 수중탐사에서는 댐이나 항만 등의 수중인프라 장수 명화를 고려한 유지관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잠수사가 잠입할 수 있는 깊이는 약 40m이기 때문에 기존의 탐사는 대형으로 고액이며 대형 선박과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원격무인탐사기(Remotely Operated Vehicle, ROV)에 의존해야 한다는 과제가 존재했음. 공간지능화연구소가 개발하는 수중드론은 본격적인 잠행 성능(300m) 선명한 화상 취득에 필수가 되는 자세 제어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형 경량, 저가격이기 때문에 조사에 걸리는 도입 비용, 운영비용의 일부분을 줄일 수 있는 등 수중드론이 국내외 구조물, 인프라, 자원, 생물이 안전하고 저가격인

탐사의 실시에 공헌하고, 미래에 인류 미답의 심해탐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투자를 결정함.[77]

○ 일본 유센(日本郵船)이 그린 본드 100억엔을 발행한다고 발표함. 이 채권은 당사가 개발한 친환경 선박기술 투자에 활용될 것임. 일본 유센은 연료를 중유에서 LNG로 전환함으로써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함. 연료 전환 외에도 환경부하 저감, 선체개조, 빅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활용할 예정임.[78]

○ 「바다를 일상으로(海を日常に)」라는 미션을 내걸고 SEA BALLOON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OCEAN SPIRAL 주식회사는 그로윈파트너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인수처로 한 제삼자 할당 증자에 의한 4069만 엔의 자금 조달을 실시함. 이에 따라 누계 조달액은 2억 191만 엔. OCEAN SPIRAL은 관광이나 연구개발 등 바다를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로 하기 위해 차세대 리조트 잠수선 "SEA BALLOON"을 개발하여 "수중여행"이라는 새로운 문화시장의 형성에 노력하고 있음. "SEA BALLOON"는 모선이 되는 Support Vessel과 최대 수심 100미터까지 잠수가 가능한 「잠수장치(Submersible)」가 일체화된 구조로, 해상의 편안한 크루즈와 함께 깨끗한 바다 속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공간'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차세대 리조트 잠수선임. 「OCEAN SPACE SHIP」으로서 세계 최초의 선박임
이번 제삼자 할당 증자로 2021년 해양관광 실현을 위한 SEA BALLOON의 최종 설계 착수 · 운영 및 수중비지니스 플랫폼의 완성을 향해 가속화 하고 있음.[79]

○ DRONE FUND는 해양 쓰레기 절감 및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Debris Watchers'의 구성 멤버로 드론과 AI를 활용한 해양 쓰레기 탐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80]

○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 분류, 재활용하는 벤처캐피탈이 필요함. 해양으로 유입되는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82%가 아시아 국가에 의해 배출되며, 연간 약 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해안지역에 위치한 플라스틱 재활용 및 기술회사들이 관심가질 만한 프로젝트이며 다양한 국가의 참여가 필요한 부문임. 아시아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2월 1억 6백만 달러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이 기금은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이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임.[81]

○ 돗토리 캐피탈 주식회사는 鳥取銀行 `鳥取信用金庫 `倉吉信用金庫 `米子信用

金庫 등 현지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VC임. 현재 돗토리 지역 창생 펀드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 2호를 운영중이며, 농업분야와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 폰과 수산시장을 연결하는 앱(「UUUO」)을 개발하고 있는 "우오"에도 투자실적이 있음.[82]

○ 선박업계에서는 글로벌 배기가스 규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배기가스 처리장치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주식회사 나노미스트테크놀로지는 초음파 미스트화 분리기술에 관한 기술 개발, 지적재산권 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에 적용되는 선박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선박 베기가스 처리장치에의 응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IMO(국제해사기구)의 NOx 제3차규제(제1차 규제의 80%의 NOx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엔진의 연소온도를 낮춤으로써 NOx 배출량을 절감하는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EGR: Exhaust Gas Recirculation)에 나노미스트테크놀로지의 초음파 미스트화 분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기술에 비해 상당한 비용절감과 공간 절약화에 의한 적재량 확보를 목표로 함. (주)산업혁신기구(INCJ), (주)츠네이시파트너스, (주)퓨처벤처캐피탈(FVC)는 당사에 총 5억 5천만 엔을 상한으로 하는 공동 출자를 함.[83]

- 중국 사례

○ 2008-2010년 중국 재무부(MOF)는 하이테크 중소기업에 대한 비정부 투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구상으로 Government Venture Capital Guiding Funds를 마련함. 이전에는 중국 정부가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조달, 은행을 통한 지원 또는 세금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왔으나, 더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초기자본이 요구되자 비정부 자본의 유입을 위해 본 정책을 마련함. 새로운 정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벤처투자기업과 협업하는 형태로 운영됨. 즉, 철저한 조사, 시장 분석, 투자경험에 입각해 VC기업과 함께 프로젝트 대상을 선택함. 이로 인해 프로젝트 선별에 투입되는 비용의 절감, 관리자의 선호를 배제할 수 있게 됨.

76) https://thebridge.jp/2020/04/aidea-jpy240m-funding; https://aidea.biz/news/%e3%83%97%e3%83%ac%e3%82%b9%e3%83%aa%e3%83%aa%e3%83%bc%e3%82%b9/2020/2046/
77)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18.000017460.html
78) https://sustainablejapan.jp/2018/04/27/nyk-green-bond/31734
79) https://ocean-spiral.com/news_press/20190408.html
80)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26.000026186.html
81)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1/venture-capital-can-help-stem-ocean-plastic-waste/
82) https://cregio.jp/column/localvcmap/
83) http://tsuneishi-cp.com/info/?p=41

○ 중앙정부의 결정에 발맞춰 지방정부들도 VC guiding funds를 마련함. 2009년 6월까지 23성(province)에서 50개의 지방 VC guiding funds가 설립됨.[84]
- 저장성 닝보시의 VC guiding funds.
닝보시는 저장성 안에 있는 해안도시임. 2011년 닝보시 인민정부사무국은 신소재, 신장비, 신에너지, 신세대 통신기술, 해양첨단기술, 에너지보존, 환경보호, 생명건강, 창조적 디자인 등 분야를 위해 10억 위안화 상당의 Ningbo Venture Capital Guiding Fund를 발행함.[85]

5) 자금운용 방안

□ 자금의 조성

① 규모와 방법

○ 부산 금융중심지 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산형 모델의 첫걸음으로 부울경 통합 2천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

- 현재 운영중인 펀드를 하위펀드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신규의 하위펀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

* 기존 부산시가 운영중인 펀드 규모(모태펀드 출자분 제외)가 약 2,500억원인데 이 가운데 신성장 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선별하여 통합하고, 신규로 2,000억원 규모 조성

○ 먼저 부울경 모태펀드 조성을 위해 부울경에서 65억원*의 신규투자를 초기연도에 시행하고, 다른 민간금융회사, 금융공기업 등이 유사한 규모로 매칭해서 시행 초기연도에 13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수행후 10년에 걸쳐 2천억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전략

* 2014년 계획되었던 서울 희망펀드의 경우 신규 총투자금액 200억원인 점(서울시 출자액 80억원), 부울경 통합 지역내총생산이 서울의 65%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설정 (2019년 부울경 GDRP 281.688조원, 서울 435.927조원)

○ 총 2천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연차적 투자규모를 펀드

84) Jia Chen. “China’s Venture Capital Guiding Funds: policies and practice. 2010. Journal of Chinese Entrepreneurship. 2(3). 292-297.

85) Jianjun Xu, Lijie Yu and Rakesh Gupta.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Venture Capital Guiding Fund Using the Intuitionistic Fuzzy Analytic Hierarchy Process. 2020. Sustainability.

진행상황을 고려하되 펀드가 잘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음; 첫 2개년 130억원, 그다음 2개년 130억원의 10% 증액 투자, 그다음 2개년 직전 규모의 20% 증액, 그다음 2개년 직전 규모의 30% 증액, 그 다음 2개년 직전 규모의 40% 증액 순으로 10년에 걸쳐 총 2천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 부울경과 민간 등의 출자 비중은 연도별 투자액의 50% 유지

○ 향후 펀드 진행상황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가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음

② 자금조성 대상

○ 기존 펀드 가운데 선별하여 통합하고 관련 기금을 바탕으로 출자금을 마련하고 부울경 이외의 기관으로 연기금, 공공기관, 공제회 등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와 민간을 포함할 필요

○ 부산시 산하기관을 통해서 지자체 기금을 출자하되, 부산시 출자 부분은 투자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구조로 펀딩

○ 가칭 '부울경 기업금융투자'의 설립을 위해 금융공기업의 출자를 유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

③ 추가적 자금 조성

○ 지속적인 자금 조성을 위해 성공사례를 만들어갈 필요

- 과거 성장사다리펀드의 초기 펀딩이 크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라는 점을 거울삼아 가칭 '부울경 기업금융투자' 도 부울경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펀딩이 필수임
- 연기금 등 추가 자금의 출자를 위해서 펀드 자체적으로도 은행, 민간기업의 자금을 유치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함
- 부산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BNK금융그룹과 같은 지역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회원업체의 펀드 참여를 유도할 필요

□ 자금의 운용 및 회수

① 펀드 존속기간

○ 모펀드는 부산의 산업정책에 따라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존속기간은 20~3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시장여건에 따라 출자 규모 및 비율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회수된 투자자금은 이익금은 분배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재투자 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자금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

② 운용

○ 지역 업체들의 성장단계, 성향 등을 고려해 투자(출자)와 융자(대출) 모두 가능하도록 설정

③ 회수

○ 중도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에 대한 투자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회수하는 경우가 아닌 개별적인 중도환매는 금지하도록 함

□ 자펀드 활성화 방안

○ 앵커펀드와 매칭펀드

- 운용 규제를 최소화해 운용사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
- 정책목적이 강한 펀드의 경우 모펀드 비중을 높여 자펀드 출자자들의 부담절감 필요
- 매칭펀드는 운용규제를 줄이고 자펀드의 출자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유도

○ 지속사업에 대한 시그널을 통해 민간참여 유도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의 설립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민간 운용사들에게 해당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메가시티 전략에 부합하는 금융 생태계 조성 노력

-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에 부합하여 펀드 투자의 지역·산업 제한을 조정하여 투자대상을 넓히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자펀드 운용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 필요

<부산시 운용 펀드 현황>

총 27개 4,786.5억 (시비 547.5 [11.4%], 모태 2,276.3 [47.6%], 기타 1,962.7 [41.0%]) (단위: 억원)

연번	조합명	결성규모				운용기간	운용기관 (창업투자사)	투자대상
		총액	시비	모태	기타			
1	KoFC-BK Pioneer Champ 2010-13(테크노파크출자금)	213	19	130	64	'10.7～'18.12	BK인베스트먼트	부품소재전문기 투자기간(4
2	BK동남권 일자리창출투자조합	150	15	100	35	'12.4～'19.4	BK인베스트먼트	동남권 50% 투자기간(3
3	부산 엔젤투자매칭펀드	50	10	39.5	0.5	'12.6～'22.6	한국벤처투자	선 엔젤 후 매 투자기간(9
4	L&S 농수산업투자조합	160	16	80	64	'12.7～'19.7	L&S벤처캐피탈	수산분야 60% 투자기간(4
5	엘앤에스 6호 EarlyStage II 투자조합	150	15	90	45	'13.9～'21.9	L&S벤처캐피탈	숀지역 대 투자기간(4
6	엘앤에스7호 동남권상생투자조합	100	15	50	35	'14.11～'22.11	L&S벤처캐피탈	동남권 60% 투자기간(4
7	BK동남권서비스 전략산업투자조합	100	15	50	35	'15.6～'23.6	BK인베스트먼트	부산서비스기업50 투자기간(4
8	스톤브릿지 이노베이션쿼터투자조합	310	100	100	110	'15.10～'23.10	스톤브릿지벤처스	부산기업 40% 투자기간(4
9	CCVC-부산 청년창업펀드	100	10	70	20	'16.3～'24.3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대표 만39세 투자기간(4
10	케이브릿지1호 스타트업 투자조합	170	30	120	20	'16.3～'24.3	케이브릿지 인베스트먼트	동남권 60% 투자기간(4
11	BK 5호 동남권투자조합	100	15	50	35	'16.9～'24.9	BK인베스트먼트	동남권 60% 투자기간(4
12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 펀드	501	15	9.8	476.2	'17.4～'25.4	이노폴리스파트너스	특구내 기업 5 투자기간(4
13	BK 6호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	500	30	250	220	'17.5～'22.5	BK인베스트먼트	구조조정조선업종6 투자기간(3
14	케이브릿지2호 동남권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100	15	60	25	'18.1～'26.1	케이브릿지 인베스트먼트	동남권 60% 투자기간(4
15	케이브릿지-코나 혁신스타트업투자조합	166	10	90	66	'18.9～'26.9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유) ㈜코나인베스트먼트	4차산업 창업3년내,중소 60% 이
16	CCVC코리아임팩트펀드	195	10	140	45	'18.11～'26.11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소셜벤처기업70%
17	케이그라운드 P기술사업화제1호 투자조합	179.1	10	100	69.1	'19～'27	케이그라운드벤처스	IP/특허 70%
18	SR 블루이코노미투자조합	150	5	100	45	'19～'27	수림창업투자(주)	해양신산업60%
19	WE Start-Up펀드1호	576	20	300	256	'20～'28	위벤처스(유)	창업기업(3년내)60%
20	케이브릿지 관광산업 레벨업 투자조합	217.2	50	145	22.2	'20～'28	케이브릿지 인베스트먼트(유)	관광기업 65%이상
21	BNK 지역균형성장 투자조합	165.4	7.5	80	77.9	'20～'28	BNK벤처투자(주)	ICT관련지방기업
22	제피러스랩 개인투자조합 제1호	50	5	30	15	'20～'28	제피러스랩	창업기업(3년내)60%
23	부산영화투자조합 1호	50	30	0	20	'13.7～'20.7	유니창업투자사	부산촬영50%
24	부산-롯데 창조영화펀드	210	60	0	150	'16.3～'22.3	타임와이즈	저예산다양성영화5
25	부산연합제1호 개인투자조합	52	6	40	6	'16.7～'23.7	부산연합기술지주	매출10억↓R&D5
26	부산연합제2호 개인투자조합	30	7	22	1	'17.10～'27.10	부산연합기술지주	대학창업기
27	부산연합제3호 개인투자조합	41.8	7	30	4.8	'18.9～'27.8	부산연합기술지주	대학창업기
합 계		4,786.5	547.5	2,276.3	1,962.7			

6) 타 시도 및 해외사례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BC)주의 BC Tech Fund

○ BC주*의 주도인 밴쿠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캐피털의 움직임이 활발한 기능형 금융도시

* 2019년 기준 BC주의 지역내총생산규모는 309,059 mil. CAD, 약 3091억 CAD로 271.77조원 (연평균환율 0.7536 *1166.72)

○ 2016년에 창설된 BC Tech Fund는 BC주와 운영을 맡고있는 투자회사 Kensington Capital Partners가 매칭형태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펀드

○ BC 기반 벤처 캐피탈 펀드 및 BC 지역에 소재하는 신기술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이 목적

* ICT, 디지털 미디어, 청정 기술 및 생명 과학/의료 분야

○ 밴쿠버가 벤처캐피털의 거점인 배경에는 BC주가 투자자에 대한 세제나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이 있음

<BC Tech Fund의 사례>

□ BC Tech Fund는 주어진 펀드 매개변수 내에서 최고의 재무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모든 투자 결정은 개발된 투자 전략과 일치하는 상업적 시장-기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짐

○ BC Tech Fund는 주로 시리즈 A 단계의 투자에 중점을 둠

* 일반적으로 회사의 완제품이 유료 고객에게 판매되고 연간 매출이 100만~300만 달러이고 급속한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있는 경우 시리즈 A 단계로 간주

○ BC Tech Fund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모든 투자 결정은 적격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에 대한 펀드 운영기관인 켄싱턴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

□ 특히 적격투자가에 대해 세액공제 부여 제도와 중소기업 투자자에 자금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 점도 주목

○ BC주 내의 적격투자가에 대해 투자액의 30%(최대 연 12만 달러)의 환급형 세액공제 부여

○ 독자적인 기술의 R&D나 쌍방형 전자매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요건

□ BC 투자대상 기업 후보 선정에 대한 BC Tech Fund 지침
○ 위치(location): (1) BC에 본사 또는 BC에 거주하는 상당한 수의 고위 경영진, 그리고 (2) 운영의 상당 부분 또는 상당 수의 정규직 직원이 BC에 거주
○ 단계(stage): BC Tech Fund 초기 투자 당시 회사는 Series A 단계
○ 부문(sector): 회사의 사업은 아래 나열된 대상 부문 중 하나
* ICT, 디지털 미디어, 청정 기술 및 생명 과학/의료 분야
○ 비상장(private): 회사는 보고 발행자가 아니며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야 함

□ BC 벤처 캐피털 펀드 후보 선정에 대한 BC Tech Fund 지침
○ 위치(location): BC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다른 곳에 기반을 둔 경우 BC 사무실에 최소한 한 명의 파트너와 투자위원회 위원이 BC에 거주
○ 단계(stage): Series A 단계의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투자 전략
○ 부문(sector): 위에 열거한 대상 섹터 중 하나 또는 여러 부문에 집중하는 투자
○ 규모(size): 최초 펀드는 최소 5천만 달러 규모가 필요. 기설립된 펀드는 최소 1억 달러가 필요
○ 약정(commitment): 선정된 펀드는 BC Tech Fund에서 받은 금액 이상을 BC 회사에 투자하는 데 동의해야 함

□ 싱가포르 TIF <모태펀드형태의 서울형 신성장동력 희망펀드 조성 방안연구, 한국채권연구원, 2012>

○ 특징
- TIF는 1998년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인재와 자금을 싱가포르로 유입할 목적으로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10억달러의 모태펀드 형태로 조성되었음. TIF는 TIF Ventures와 싱가포르 투자공사(GIC: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에 의해 관리됨

○ TIF의 펀드구성
- TIF는 일반펀드(Broad-based fund), 전략적 펀드(Strategic fund), 신생기업 펀드(Early-stage fund)의 3개 하위펀드로 구성

<TIF 펀드 구성>

구분	내용
일반펀드 (Broad-based fund)	• 일류벤처캐피탈을 싱가포르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 • 5억달러 규모의 일반펀드는 해외 벤처캐피탈 기업을 싱가포르로 유치하여 싱가포르 기반 기업으로 만드는데 사용
전략적 펀드 (Strategic fund)	• 일류 벤처캐피탈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함 • 2억 5천만달러 규모의 전략 펀드는 전 세계 이류 벤처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로부터 지식을 전달받는데 사용
신생기업펀드 (Early-stage fund)	• 2억5천만달러 규모로 신생 벤처기업을 찾아 육성하는데 사용 • 이 기금의 일부는 발생단계에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 개발하기 위한 특별사업인 VISS(Venture Investment Support for Stat-ups)와 BAF(Business Angel Fund)형태로 민간부문과 함께 공동 투자에 이용

○ TIF는 아래의 투자유치기업 및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하위펀드를 결성하여 투자를 시행하였음. 싱가포르는 많은 해외 벤처캐피탈을 자국으로 유치하여 홍콩과 더불어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의 아시아 거점으로 성장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TIF 투자유치 기업>

국가	벤처캐피탈 및 기업
미국	Apex Venture Partners / Doll Capital Management / Draper Fisher JurvetsonePlanet Ventures / Sanderling Venture Partners / SequoiaCapital / Venrock Management
영국	Abingworth Management
스웨덴	Argnor Wireless Ventures Advisor
대만	AsiaVet Partners / TCW/YFY Ltd.
이스라엘	Giza Ventures Capital / Pitango Venture Capital
싱가포르	iGlobe Partners / Springboard-Harper Investment
인도	JumpStartUp Fund Advisors
캐나다	Mclean Watson Capital
일본	Nikko antfactory
프랑스	Vivientures Partners
기타	SVM Star Ventures Management(독일, 이스라엘) / Techno Venture Management(독일, 미국)

○ TIF는 모태펀드를 활용해 세계 일류 벤처캐피탈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펀드생태계 조성을 추구한 성공 사례로 보임. 부산시도 모태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외 벤처캐피탈의 유치를 추구하는데 벤치마크 사례로 삼을 수 있음

□ 대구·경북 '희망펀드'

○ 과거 해당지역 지자체 주도로 모태펀드 조성을 추진한 실패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구 및 경북도가 출자한 '희망펀드' 사례를 들 수 있음

- 희망(경제)펀드는 매칭펀드 형태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로 1호부터 4호까지 조성
- 지역펀드의 특성상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내 기업우선투자를 조건으로 손실금 우선충당이라는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경창업투자(주)*가 수도권 기업 일변도로 투자하고, 그 손실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우선적으로 떠 안게되는 결과 초래

  * 2018년 대경인베스트먼트로 사명 변경, 희망경제투자조합 1호~3호 결성(총액 720억원), 2021년 현재 자기자본 320억원, 주주구성은 2018년 기준 최대주주는 33.75%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장철, 송준호 공동대표이며, 그 외에 대구은행(15%), 삼보모터스(7.5%), 대구테크노파크(5%), 경북테크노파크(5%)가 주주로 구성

- 게다가 시와 도가 투자운영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아 투자현황 파악 및 운영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함
- 2016년 11월 기준 대구시와 경북도가 부담하게 된 누적 손실금의 규모는 약 22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희망펀드에 대한 협약을 맺을 때 모태펀드나 은행, 타기업이 투자한 기금은 손실이 나도 전액 원금이 보장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투자한 펀드의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규모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출자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우선적으로 전액 손실 충당금으로 처리된다는 조항을 삽입. 이 같은 협약의 독소 조항으로 인해 희망펀드 1호는 각각 12억6천만원, 2호는 각각 4억원, 3호는 각각 12억원씩 손실 발생. 2호 희망경제펀드의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4억의 기금을 출자했고 4억원 전액 날렸지만 투자를 같이한 모태펀드나 은행 등은 원금을 보장됨. 희망펀드 2호도 전체 투

자금 300억원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46억원씩 모두 92억원을 출연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모두 25억2천만원 손실. 전체 손실금액은 대경창투가 공개를 거부해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추정되는 전체 손실액 50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부담. 같이 투자한 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각 30억원), 기업은행(20억원)등은 원금을 회수하거나 손실규모가 미약한 것으로 알려짐. 희망펀드 3호는 전체 300억원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30억원씩 출자 했지만 경북도와 대구시는 펀드의 40%는 손실을 기록하고 60%의 원금만 회수. 같이 투자한 모태펀드 66억원을 비롯하여 대구은행(30억원), 농협(22억원), 기업은행(20억원) 등 금융권은 원금을 회수하거나 손실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음 (대경일보, 2016.11.10.)

□ 삼성 C-Lab

○ 2015년부터 시작한 지역 최초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초기창업기업육성(C-Lab) 사업은 전용투자펀드(C-펀드)를 기반으로 한 투자연계형 보육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대구혁신센터가 운영

* 삼성 C-Lab은 창의 아이디어의 발굴-구현-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혁신을 만들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Lab Outside」로 이어져 오고 있음

- 삼성과 대구시가 지난 2014년에 조성했던 청년벤처창업펀드 200억원이 5년에 걸쳐 투자 완료됨에 따라, 2019년 2단계로 120억원을 추가 조성(대구시와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각각 20억원을 3년간 출자)
- 지역의 혁신·창업기업 발굴·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 부품, 전장 회사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

○ 대구지역 창업지원프로그램인 C-Lab의 성공 원동력은우선 삼성전자와 같은 우수한 글로벌기업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자체가 창업기업 선정 및 투자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투자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시 전담인력의 연속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삼성전자 역시 지역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미래 기업 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win-win하는 구조

- 앞서 언급한 사례인 희망펀드 1호 및 2호는 완전한 투자 실패로 평가 받으며*, 그나마 성과가 나온 3호와 4호는 지자체 참여가 극소화

  * 2009년~2010년 당시 지역 벤처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 지자체 및 지역 유지 의견에 따른 지역의 중견기업에 주로 투자되어 투자 선정부터 성과관리까지 제대로 되기 어려웠다고 함

- 대구시 해당부분 담당인력이 우연하게 초기부터 중간에 일시 단절이 있었으나 거의 8년동안 동일하게 유지된 점도 지원측면에서의 성공에 기여 (주무관-팀장-과장)

□ 부산 모펀드 조성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되 지자체는 펀드 자금 모집 역할에 초점을 두고, 투자의 지속성 및 성과관리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지역의 전담기관 설치가 필요

○ 지방정부가 무조건 중앙정부를 따라가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처 선정*

  * 중앙정부가 내세우는 4차산업혁명 관련이나 뉴딜펀드 등에 무작정 동조하기 보다는 부산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 (해양물류, 데이터센터, ESG, 금융 등 고려할 수 있으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분야를 면밀히 선정)

○ 지자체의 역할은 GP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펀드 자금을 모으는 데까지로 국한해야 함

○ 벤처캐피탈에 대해 지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라는 미션을 부과하는 것 등도 사실 성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지역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뿐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한 글로벌 벤처캐피탈이 중요한데 지역 자체가 커져야 생태계가 선순환되기 때문

○ 지자체가 단기실적에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에 전담기관 설치가 중요

나. 지역특화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

1) 영국의 RVCF 사례

□ 영국정부는 개별 지역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투자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2002년부터 지역기업 전문 VC 투자조합인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 이하 'RVCF')에 참여 하였음.[86]

○ RVCF는 각 지역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담보대출이 아닌 직접투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성장 기여가 예상되는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 성장 잠재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투자자금 확보가 용이치 않은, 각 Region의 중소벤처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해당 기업의 성장을 지원

- 즉, RVCF에 의한 기업 투자 및 육성 활동의 주요 공간범위는 개별지역이 됨.

□ 영국정부와 민간부문의 출자, 그리고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이하, 'RDA')의 지원을 토대로, 잉글랜드 9개 Region별로 RVCF가 2002~2003년에 결성되었고, 2015년까지 운용되었음[87]

○ RDA는 RVCF에 출자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내 구축된 자체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RVCF 운용주체인 펀드매니저가 RVCF 결성을 위해 전개하는 민간투자 유치활동을 지원

□ RVCF는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소유권 양도(Management Buy-Out, Management Buy-In)에 관한 투자도 수행할 수 있음

○ 기업이 RVCF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86) 변필성,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활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88~91면 (2011).

87) Mason Colin M. & Richard T. Harrison. Closing the Regional Equity Gap? A Critique of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s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s Initiative. Regional Studies 37(8), 855-868 (2003).

- 각 RVCF의 관할 지역에 본사가 있거나 핵심기능이 입지해 있는 기업,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높거나 해당 지역에 이득이 될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
- 종업원이 25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4000만 유로 미만이거나 또는 자산 총액이 2700만 유로 미만인 중소기업
- 기업의 지분 중 25% 이상이 다른 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기업 또는 상기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공동 소유주인 기업은 RVCF의 투자대상에서 제외

□ 이상의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게 RVCF는 첫 회에 25만 파운드까지, 그리고 최대 50만 파운드까지 자금을 투자할 수 있음

○ RVCF의 기업에 대한 자금 투자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우선주 등의 매입하는 방식의 직접투자를 통해 이루어짐

□ RVCF에 대한 민간부문 출자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자체 투자의 수익에 상한선을 부과하였고, RVCF의 자본이 잠식될 경우 일순위로 손실을 보는 것에 동의[88)]

○ 영국정부는 RVCF에 출자했지만, RVCF의 관리・운용에는 개입아지 않았으며, 민간 VC 투자조합처럼 펀드매니저가 투자수익의 극대화라는 목표 하에 RVCF를 관리・운용함

□ RDA는 RVCF의 결성과 운용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RDA는 해당 지역내 구축된 자체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결성을 위한 펀드매니저의 민간투자 유치활동을 지원

○ 결성 이후에는 RVCF가 성공할 수 있도록 RVCF를 기업지원 조직과 연계시기며, RVCF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 역할을 수행

88) Mason Colin M. & Richard T. Harrison. Closing the Regional Equity Gap? A Critique of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s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s Initiative. Regional Studies 37(8), 855-868 (2003).

2) 시사점

□ RVCF의 사례가 부산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RVCF와 같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연기금, 민간투자자, VC 회사 등과의 공동출자를 통해 부산기업 전문 VC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VC 회사에게 전담 운용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 영국정부의 RVCF사례처럼 민간부문 투자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투자자금으로부터 얻을 수익에 한도를 부과한 점을 주시할 필요

□ RVCF와 같이 부산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그것을 통한 부산지역 발전에 VC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해 부산지역에 VC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부산지역 또는 조선·해양 전문 VC 투자조합에 대한 한국벤처투자의 출자 확대와 함께, 부산시 재정자원 투입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VC 투자조합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므로 출자된 부산시 재정자원은 회수될 수 있으며 다시 사용될 수 있어 보조금과 달리 일회성의 집행으로 끝나지 않음

○ 부산형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산시 정책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중앙정부와 부산시 간의 협약을 통해 부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받는 보조금을 활용해 부산 지역내 중소·벤처기업 전문 VC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활용해서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전문 VC 투자조합에 출자하게 됨으로써 해당 투자조합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보조금을 투자조합의 투자자금으로 활용해서 수익과 함께 회수할 수 있고, 재투자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

○ 다만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관련 법규의 개편이 필요

다. 선박금융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 유치 방안

1) 외국 금융회사 현황

□ '19년도 기준으로 한국내 외국계금융기관은 총 163개로 은행이 53개이며, 증권사 23개, 자산운용사 27개, 투자자문사 9개 및 보험사 29개로 나타남

□ 더욱이 과거 및 기타 신흥국에 비해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하락하였다는 인식 등에 따라 국내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수는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 참조)

○ 금융위와 외국계금융기관과의 간담회(2020.2.10)에서 외국계금융기관들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인식하면서도 투자매력도가 하락했다는 의견도 제시

2) 부산 금융중심지 외국금융회사 유치의 기본 전략

□ 수익 기회가 있으면 부산 금융중심지가 발전하고 외국금융사가 자연적으로 유치됨에 따라 다양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

○ 그간 글로벌 금융중심지 성공한 사례 분석결과를 보면 홍콩은 거대한 배후시장을 보유, 아일랜드는 조세특례를 적극 활용한 사례이며, 룩셈부르크는 인프라 강점을 활용해 운영비용 절감

<표 4-1>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 현황('19년말 기준)

[국가별 · 권역별]

대륙명	국가명	은 행	금 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계
			증 권	자산운용	투자자문				
아메리카	미국	7	5	6	5	8	1	1	33
	캐나다	2				1			3
소 계		9	5	6	5	9	1	1	36
아시아	UAE	1							1
	말레이시아		1				1		2
	몽골	2							2
	사우디	1							1
	싱가포르	3		4		3			10
	요르단	1							1
	이란	1							1
	인도	1							1
	일본	6	3	2	1	2	3	4	21
	중국	6	3			2			11
	카타르	1							1
	파키스탄	1							1
	필리핀	2							2
	홍콩			3	2	2		1	8
	대만		1			1		1	3
	인도네시아	1							1
소 계		27	8	9	3	10	4	6	67
유 럽	네덜란드	1	1	1			1		4
	독일	3	1	1		5	4		14
	룩셈부르크			1					1
	스웨덴						2		2
	스위스	1	2	1					4
	스페인	1							1
	영국	2	2	4	1	2			11
	오스트리아	1							1
	이탈리아	2							2
	프랑스	5	3	2		3	1		14
소 계		16	9	10	1	10	8		54
아프리카	이집트	1							1
소 계		1							1
호 주		1	1	2				1	5
소 계		1	1	2				1	5
계		54	23	27	9	29	13	8	163

[점포 형태별]

(단위 : 개, ( )내는 전년대비 증감)

구 분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영 업 소		140 (+5)	135 (△5)	134 (△1)	133 (△1)
	현지법인	72 (+3)	72 (-)	70 (△2)	73 (+3)
	지 점	68 (+2)	63 (△5)	64 (+1)	60 (△4)
사 무 소		28 (△3)	30 (+2)	29 (△1)	30 (+1)
합 계		168 (+2)	165 (△3)	163 (△2)	163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그러나 기존 연구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험 관리가 강화되고, 조세피난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고조 등으로 인하여 기존 해외사례를 부산 해양 금융 중심지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

○ 2014년도에 도입된 서울 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동 시장은 한국과 중국 간 수출입 교역 및 역외 자본거래를 바탕으로 일일 약 20억불이 거래되는 큰 시장으로 성장

- 이는 정책기관의 지원과 시장조성자 금융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창출한 대표적 사례

□ 첫째, 해양 선박업무의 끊어진 맥을 연결하는 해운 및 선박금융의 핵심 서비스의 제공

○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부산 해양 금융중심지가 해운 서비스 및 선박금융 업무의 일부분만 제공된다면, 금융중심지 활성화는 어려움

□ 둘째, 부산 금융중심지는 원화 역외 금융허브로 특화 검토

○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이미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선박 수출 실물금융은 경상거래임에 따라서 부산을 역외 원화금융 허브로 특화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셋째, 부산 금융 중심지는 원화 금융허브를 중심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금융허브 역할을 보완적으로 담당

○ 이미 운영중인 서울 위안화 직거래 시장과 중국의 금융특구와의 연계한 원화-위안화 직거래도 가능

3) 기대효과

□ 부산 역외원화 금융허브는 그간 해운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비용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금융 가격경쟁력 개선 도모

○ 원화 선박금융은 선박의 제조부터 운영, 매매 및 선박관리 부대업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 개선이 기대

○ 원화금융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시장조성자 기능을 강화하고 외환위험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 해양금융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금융 가격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함

○ 국내 국부펀드를 연계한 중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투자자 및 선사가 모두 win-win이 되며, 부산 금융중심지 내에 외국금융사 유치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부산 금융중심지를 역외 원화 금융허브로 지정함으로써 약간의 정책조정 만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별화된 해양 금융 서비스 제공 가능

□ 부산 금융중심지는 조선-선박운용-선박금융-글로벌 시장이 연결되는 일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일부 단절된 업무 분야에 신규 진출

□ 우리나라 해양 선박금융의 여건은 우수하나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과 해양 선박금융 및 서비스 업무가 취약

○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5위 상선대 보유국이며,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은 연간 9억 톤으로 일본 11억 톤과 비슷한 수준이나 선박 보유 수준은 일본의 40%수준으로 현저히 저조

○ 해운업과 조선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변화에 상관없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이 필수적이며, 선박금융도 선주 및 해운사의 선박구매금융 뿐만 아니라 선박구매금융 이외에 조선사의 선박건조금융 등 선박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포괄

○ 따라서 싱가포르 등 글로벌 경쟁국들의 사례처럼 다양하고 일관된 선박 관련 업무를 추진

- 이는 외국계 금융사를 유치하려는 부산 해양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과도 연관된 문제들이므로, 필요하지만 아직 제공되지 않았던 해양 선박 업무 추가

4) 개선방안

가) 부산 금융중심지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

□ 선박금융은 선박의 등록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포함하는 업무임에 따라 제주선박등록특구에 추가하여 부산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여 병행 운영이 필요

○ 부산을 추가로 선박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국적 외항선이나 외국선박 등이 부산지역에 등록할 경우 현재 제주선박특구와 동일하거나 향상된 수준의 세제혜택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

○ 아울러 조세지원의 일몰제를 개선하여 우리나라에 등록한 글로벌 선사들로부터 정책 일관성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

-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7위 선박소유국가임을 감안할 때 검토해 볼만한 방안 (World fleet(2018)-IHS data)

나) 부산 금융중심지 해양 선박 편의치적 나용선 등록제도 도입

□ 부산 금융중심지에 해양 선박 편의치적(便宜置籍) 나용선 등록제도 도입으로 향후 동북아 및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교역 증가로 선박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파나마와 그리스 같은 글로벌 선박등록국으로 발전 디딤돌을 선제적으로 마련

○ 글로벌 선박 특구인 파나마는 선박이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나 다른 국가의 등록을 말소시키지 않고 파나마 특별 나용선 등록제도(Bareboat Charter Vessel Registration)에 의하여 파나마에 등록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글로벌 선박특구들이 나용선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산 해양 금융 중심지를 선박특구로 지정시,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

○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에서도 해당 제도의 미채택으로 국제수준으로 개선보완이 필요

다) 선박 매매 청산업무(ship closing) 및 선박 매매 중개, 관리업무 도입

□ 선박은 글로벌 선박 운임지수에 따라 신조 및 중고선 매매가 매우 활발함에 따라 부산 금융 중심지 선박등록특구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선박의 매매 중개와 선박의 등기변경 및 선박금융으로 조달된 자금의 결제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선박 매매 청산업무(ship closing) 및 선박 매매 중개, 관리업무 도입

○ 글로벌 선박금융 중심지에서는 일상화된 업무이고, 이미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처리된 사례도 있어 선박등기소, 선사, Ship Broker, 은행, 법무법인, 선급협회 협업 만으로 업무 진행 가능

○ 해운시장은 화물운송시장, 선박매매(S&P, Sales & Purchase)시장, 신조선시장, 해체선시장 등 4대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 업무 도입으로 선박금융의 일괄 서비스 제공이 가능

라) 해외 대사관의 영사확인 업무 지원

□ 선박의 매매는 법률적인 권리행사임에 따라 선박 매매 당사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본인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영사 확인이 필요

○ 선박등록특수제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법무법인의 요청에 따른 우리나라 해외 영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협력이 절실히 요구

마) 부산을 선박금융에 한해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로 지정

□ 글로벌 시장에서 부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산 금융중심지의 선박금융에 대해 제한적으로 비거주자의 원화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금융경쟁력 강화

○ 원화 금융은 자국통화임에 따라 우리나라 조선소 및 선사 입장에서는 국제통화 대비 유동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

□ 부산 금융중심지에서 거래되는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자금용도와 총

액 한도를 제한하여 운영함으로써 비거주자의 원화거래 따른 외환 시장 변동위험의 최대치를 제한할 수 있음

○ 부산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외환 매매, 위험관리 및 자금결제 등)는 상해 역외원화 직거래 시장 및 서울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구축-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단기간에(1~2년 이내) 구축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홍콩 역외 위안화 시장의 핵심 이슈인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부산의 경우 없을 것으로 판단
- 이는 역외 위안화의 경우 해외시장에 발행되어 유통중인 적격위안화 채권의 부족 때문에 역외 위안화 시장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HKMA발표문, 2014.11.3.일자) 되었지만, 부산 원화금융 중심지는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 가능(우리나라의 외국인 원화채권투자도 이미 개방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비중도 최근 10년간 약 6~7%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2020.12월 기재부 공시자료 참조)

□ 해양·선박금융의 원화거래는 우리나라 외환 안정화에 공헌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영향력의 확장도 기대

○ 선박금융은 선박의 인도가 자본의 인도와 상호교환되어 우리나라 실물교역과 자본시장 거래가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구조이며,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외국인 금융자산 투자자와 구별됨

○ 우리나라 역내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산 원화금융 중심지의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중앙은행 통화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Diebold and Yilmaz, 2009)

□ 이를 위해 부산 금융중심지를 선박등록특구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자유지역' 으로 설정하고 비거주자의 원화 금융거래에 관련한 금융・외환 규제를 완화

○ 싱가포르는 외국의 선박 소유주에 대해 세금을 완전 감면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의 자유화를 통해 해외선박 유치 중인 점을 고려

○ 정부는 이미 ' 15년도에 중국 상해를 역외 원화 직거래 시장으로 지정하여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 14년도에는 서울에 역외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서 상해에도 역외 원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어 한국과 중국 간 원화와 위안화를 이용하는 자국통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

○ 우리나라 원화는 비국제통화이지만 글로벌 10대 수출입 강국의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도 상승과 거시경제의 안전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 부분적인 원화 국제 거래 확대가 진행중

□ 향후 글로벌 수출입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부분적인 원화국제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금융부문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 특히 부산 해양 원화금융중심지 내의 거주자 적격금융기관 및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원화로 채권발행(가칭 '태권본드, 또는 거북선본드')을 허용하여, 거액의 장기 선박금융에 활용

○ 해양 선박금융은 대규모 장기 자본거래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필요로 함

○ 기존 글로벌 경쟁시장의 선박금융 사례를 보면 은행을 중심으로 국제 차관단 여신이나 유로본드 발행 및 다양한 펀드투자자를 포함

○ 중국은 위안화의 부분적인 국제거래 확대를 위해서 '딤섬본드'(외국인이 위안화 채권을 해외애서 발행)를 적극 활용

○ 우리나라도 부산 해양 금융중심지와 연계하여 해외에서 외국인이 원화표시로 채권(가칭 '태권본드' 또는 '거북선본드')을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 가능

- 가령 유로본드 형태로 발행되는 '태권본드'는 글로벌 채권시장에 등록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 우리나라 연기금 투자자들이 동 채권을 매입할 경우 외환 리스크를 본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해운산업의 본질적인 문제인 장기 선박금융 조달비용을 감축도 기대

○ 아세안 등 글로벌 거점 지역별로 진출한 국내금융기관을 통해 활발한 마케팅 추진도 기대

□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의 승인이 필요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10억원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기재부장관에게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 7-15조).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3조)

□ 또한 부산 해양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 및 외국 적격금융기관들에게 증권인수기능을 부여하여 위의 가칭 '태권본드 또는 거북선본드'를 포함하는 대출금 주간사 및 증권의 인수 및 매각하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함

○ 현재 증권사 및 산업은행에게만 허용된 국내 및 해외 발행 증권(채권) 인수 권한을, 부산 해양 금융 중심지에 입주하는 적격 해양금융 취급기관에게 선박금융 자금용도를 제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필요

○ 중국은 은행이 대출 주간사 및 증권인수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인 시장 대응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거래 확대를 위한 시장조성자 역할을 담당

□ 이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회사에 부산 해양 금융중심지에 입주한 적격금융기관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30>

바) 원화금융과 위안화 금융의 상호 연계

□ 부산 금융중심지는 수출입 거래에 위안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다양한 금융교류가 활발함에 따라 위안화 금융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한국 위안화 시장 활성화를 도모

○ '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위안화 수출입 비중은 수출 23억불, 수입 18억불 수준으로 對 중국 수출금액의 7.4%, 수입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표 4-2 참조), 서울 위안화 역외시장이 개설된 '14년도에는 수출 5억불(1.6%), 수입 1.6억불(0.7%)에 그침

○ 동북 지역 및 산둥반도를 기점으로 하는 위안화 조달 허브 역할로 한국 위안화 시장 활성화를 기대

○ 현재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중국 청도시와 한국 부산시간 금융협력. 예탁원과 부산시 그리고 청도시 3자는 부산시와 청도 두 지방도시간 금융협력 사업 추진, 부산·청도 공동사모펀드 설립, 청도시와 지방공 공기관의 부산에서의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 그리고 양 도시의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간 교환 학생 등의 교류 등이 있음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전략으로 중국위안화 역외시장 도입 필요성, 부산대 중국연구소, 2017)

□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와 유로화 대비 위안화의 거래 비중이 부족하므로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활성화는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부산 해양금융중심지는 수출입 실물 거래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금융을 중심으로 위안화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선박 및 인프라 프로젝트 등 거액 장기금융을 필요로 함에 따라 원화 및 위안화 표시 선박금융, 채권발행 부문에서 협력

○ 우리나라와 중국은 전체 조달 금액의 적절한 규모 이내에서 원화와 위안화를 주고 받는 투자금융을 추진

- 두 나라가 주고받는 교역량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선박금융 또는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는 양국간 교역물량의 범위 내에서 원화와 위안화를 교차 사용하는 방안이 가능

○ 우리나라와 중국 금융기관간 원화와 위안화 표시 수출입 금융 신용공여의 상호교환 운영

- 우리나라와 중국은 수출입 교역량이 상호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간 수출입기업의 단기 운영자금을 자국통화인 원화와 위안화 표시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협력이 필요

<표 4-2> 우리나라 위안화 표시 수출입 비중

우리나라 위안화 표시 수출입 비중

	한국 수출입		한국과 중국간 수출입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		
연도	한국수출	한국수입	전체금액	(위안화금액)	(위안화비율)	전체금액	(위안화금액)	(위안화비율)
2014	573,091	525,564	145,288	2,527	1.74%	90,082	834	0.93%
2015	527,286	437,109	137,124	5,312	3.87%	90,250	2,529	2.80%
2016	496,059	405,369	124,433	8,596	6.91%	86,980	4,042	4.65%
2017	573,766	478,479	142,115	9,848	6.93%	97,857	4,667	4.77%
2018	604,975	534,841	162,177	10,337	6.37%	106,457	4,512	4.24%
2019	542,233	503,343	136,203	9,651	7.09%	107,229	5,532	5.16%
2020	240,604	229,530	61,449	4,471	7.28%	51,439	3,186	6.19%

* 자료출처 (한국은행) (단위 : USD백만불)

○ 한·중 통화스왑 무역결제자금 제도를 한도제로 운영 필요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중국인민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기체결한 한-중 통화스왑 자금을 국내기업의 對中 위안화 무역결제 및 중국기업의 對韓 원화 무역결제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한-중 통화스왑 자금의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통해 중앙은행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경상거래 시 원화 활용도 제고 등 양국 통화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2.12.04)
- 다만 동제도는 기업 홍보가 부족하고, 기업들이 매 건별로 개별신청하여 처리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활용이 미미한 상황

○ 따라서 부산 해양 금융중심지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에게는 통화스왑 무역결제 자금을 현행 건별 심사에서 한도 설정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필요

3. 금융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조직 혁신

가. 부산광역시청 내 ‘금융/기업지원실’ 설치

1) 추진 배경 및 현황

□ 현재 부산시의 일자리경제실 담당 부서 소관이 경제/일자리·창업/금융/산업입지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음, 금융과 기업 육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태계 조성 및 역량과 자원 집결의 필요성 대두

□ 핀테크·블록체인 분야로 금융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4차 산업(ICT, 모빌리티, 바이오 등)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 혁신 필요

□ 조직현황(부산시)

○ (현행구성) 2021년 상반기 기준, 5과 23팀 중 금융과 기업지원 관련 팀은 4개 부서에 걸쳐 금융(금융육성팀, 금융신산업팀)과 기업지원(중소기업지원팀, 창업기반팀, 창업지원팀, 자금지원팀) 및 투자통상과(6팀)으로 구성

○ 금융중심지로서 현재 행정조직 내에 금융/기업 회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조직, 부서가 통합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한 상황

□ 부산은 금융중심지로서 금융 및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시의 투자회사 및 펀드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과 기업 육성을 전담하는 조직에서의 부서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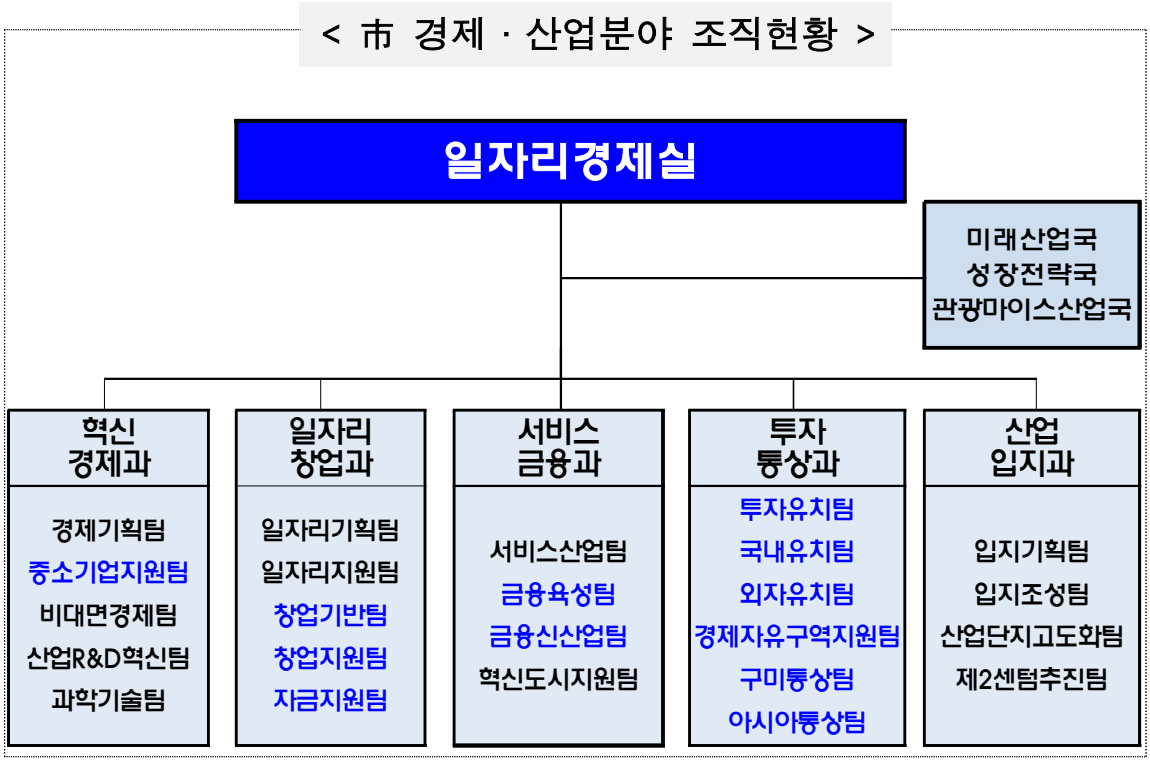
○ 현재 부산시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는 총 27개, 4786억 원 중 시비로 547억 원을 출자. 그러나 대부분의 펀드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에 시비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 중

○ 부산시가 직접 모태펀드(가칭, 부울경 기업금융투자)를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올바른 지역 투자처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및 역할 제고 필요

○ 지방정부인 부산, 울산, 경남의 합작을 통해 부울경 투자회사 및 모태펀드 운영 관련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 필요

<그림 4-2> : 부산시 일자리경제실 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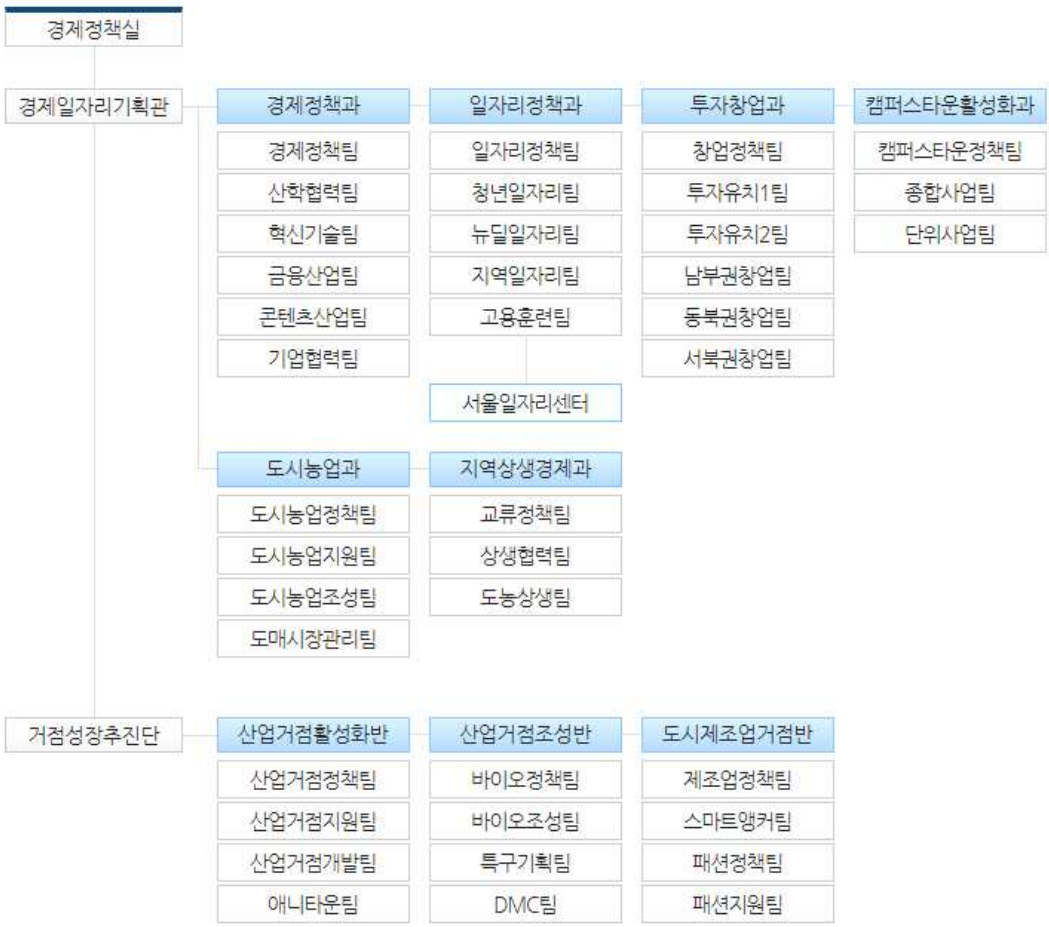


출처 : 부산시 홈페이지, 2021 상반기 기준.

□ 서울시의 경우 경제정책실-경제정책과에 금융(금융산업팀)과 기업지원(산학협력팀, 혁신기술팀, 기업협력팀)이 집결 및 투자창업과(6팀)으로 구성

○ 금융정책분야, 글로벌 금융정세 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 SIFC(서울국제금융센터) 운영 관리, 금융중심지 정책, 서울핀테크랩 조성 등 금융관련 업무와 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운영, 테스트베드, 중소기업 지원,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창업생태계 구축, 외국인투자 유치 등 다양한 업무 진행 중

<그림 4-3> 서울시의 경제정책실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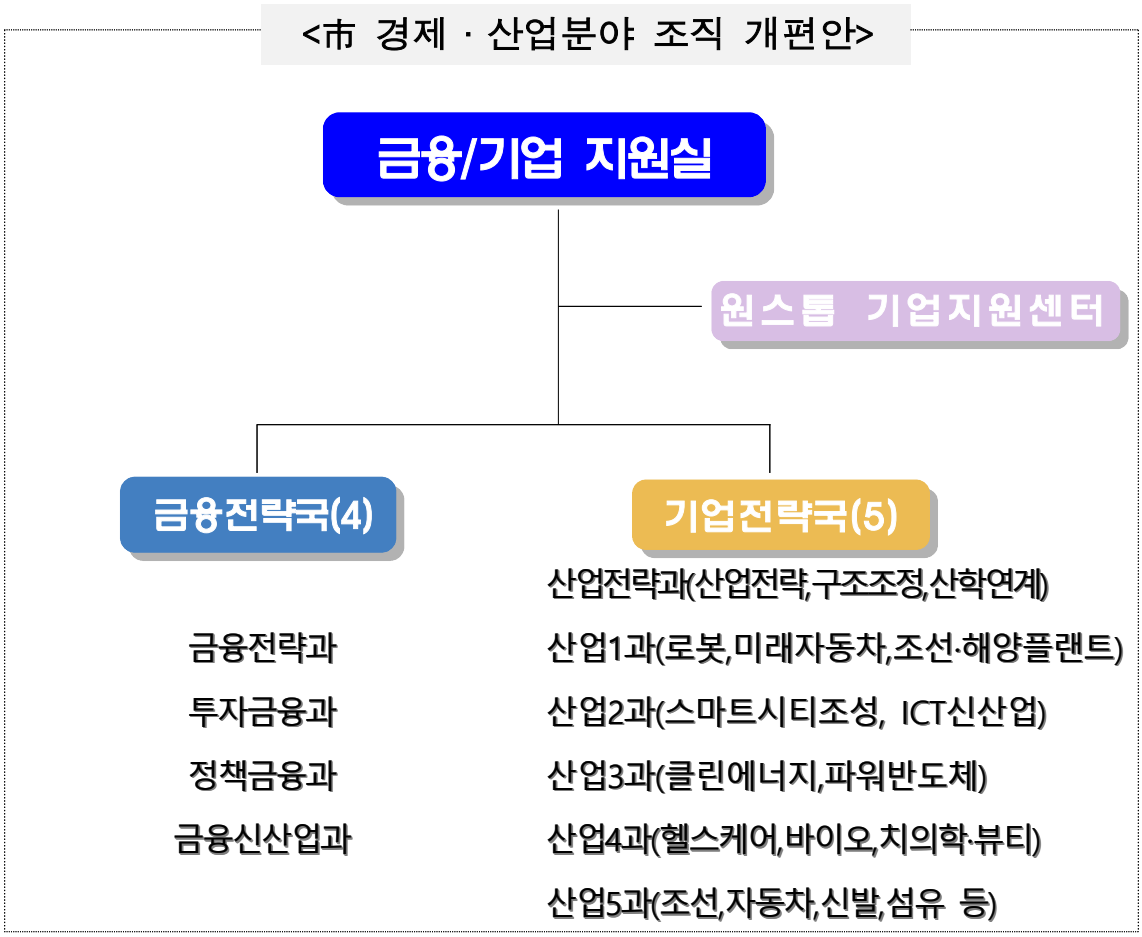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2021

2) 금융과 기업지원 관련 부서를 통합한 조직개편안

□ 금융, 기업 전략 마련, 금융중심지 및 산업 육성, 산학 연계를 위하여 그림 7과 같이 부산광역시청의 금융/기업지원실(가칭) 조직개편안을 제안하여 One-stop으로 행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마련. 금육 육성과 기업 지원을 투트랙으로 개편

<그림 4-4> 부산시 금융/기업 지원실 조직개편안



□ 세부 조직개편 사항

○ 금융전략국 : 정책개발, 제도개선, 투자 회사 및 펀드 운영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 활성화. 전략 마련 및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금융생태계 조성. 금융전략 개발 및 펀드 조성을 통한 금융산업 붐업 조성. 포용금융 및 혁신 금융 지원을 통한 균형있는 금융 산업 발전 도모

① 금융전략과

• 핵심소관: 금융중심지 정책 개발,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운영, 금융중심지 특별법 추진, 對금융위·금감원 지원, 금융감독 업무확대 관련 금융전문인력양성, 산학연계 지원, 대부업 지도 감독

<표 4-3> 금융전략과 조직개편안

현황	개편안	세부팀	주요업무
서비스금융과 금융육성팀 단일 조직	금융전략국 금융전략과	전략기획팀	• 금융중심지 정책, 전략 개발 • 금융중심지 정책, 전략 제도 개선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운영 • 금융중심지 특별법 추진 • 글로벌 금융 관련 기업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 금융 관련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및 대외홍보(IR)에 관한 사항 • GFCI 현황 및 지수개선 • 금융중심지 금융기관 보조금 집행 • 對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업무
		산학협력팀	• 금융전문인력 양성 • 금융 관련 기관·단체·인력(대학 금융학과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산학연계지원 • 금융대학원 유치 및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부울경 대학 금융 동아리 연합 지원에 관한 사항 • 對 시민강좌
		금융감독팀	• 금융 감독 업무 • 대부업 지도 감독

② 투자금융과

- 핵심소관: 모태펀드 및 투자금융공사 운영, 지역 금융회사 투자
- 부산시의 독자적인 펀드 운용 및 투자금융공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조직

<표 4-4> 투자금융과 조직개편안

현황	개편안	세부팀	주요업무
투자통상과 단일 조직	금융전략국 투자금융과	투자기획팀	• 모태펀드/투자금융공사 조성·운영 관련 주요 업무 추진 • 지역 금융회사 투자

③ 정책금융과

- 핵심소관: 정부 부처 정책 펀드 지원, 포용금융(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관련, 부산신용보증재단 관련
- 혁신경제과 중소기업지원팀과 일자리창업과의 자금지원팀의 업무를 이관

<표 4-5> 정책금융과 조직개편안

현황	개편안	세부팀	주요업무
혁신경제과 중소기업 지원팀 & 일자리창업과 자금지원팀	금융전략국 정책금융과	정책 펀드팀	• 창업펀드 조성 및 운영 • 창업투자회사, 벤쳐캐피탈(VC), 벤처투자조합 관련 업무 •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등 창업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벤처촉진지구 및 집적시설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창업자금 펀드 조성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벤처캐피탈, 모태·엔젤펀드 등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 창업생태계 관련 각종 통계 및 실적 관리
		중소기업 지원팀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장설립·이전·등록 및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금융공기업 협력팀	• 부산 금융중심지에 위치한 다양한 금융공기업들과의 협업 • 협력적 정책 관한 사항

④ 금융신산업과

- 핵심소관: 핀테크 기반 금융신기술 육성,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활성화, 부산국제금융센터 개발, 금융 빅데이터 산업 육성
- 기존 서비스금융과의 금융신산업팀의 업무를 그대로 이관하되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표 4-6> 금융신산업과 조직개편안

현황	개편안	세부팀	주요 업무
서비스금융과 금융신산업팀 단일 조직	금융전략국 금융신산업과	핀테크 육성팀	• 금융산업 및 관련 전문서비스산업 육성·진흥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 핀테크 기반 신기술 사업화 지원
		블록체인 기획단팀	•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발굴 • 가상자산(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 블록체인 관련 규제개선 발굴 추진
		인프라 개발팀	• 부산국제금융센터 및 일반용지 개발 • BIFC(부산국제금융센터)운영 • 문현금융단지 복합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및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기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금융 신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관련 대외협력 업무
		빅데이터 사업팀	• 금융 데이터 활용사업 관련 업무 • 금융 빅데이터 산업 육성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 **기업전략국 : 기반산업·4차 산업 육성, 지원 및 현황 리서치 등을 통한 산업 전반 컨트롤 타워. 기간·전통 산업 특화 및 신산업 육성 통한 부산경제 견인**

① 산업전략과

- 핵심소관: 산업 육성·전략 총괄, 부산산업전략 위원회 운영, 산업 현황 리서치·육성·구조조정 관련, 원스톱 기업 지원 서비스 관련, 기업 현장 대응반 운영 관련, 산학연계 지원
- 중소기업지원팀, 창업기반팀, 창업지원팀의 업무 중 금융·자금지원을 제외한 기업지원 업무 중 산업 육성·전략과 관련된 업무 이관

<표 4-7> 산업전략과 조직개편안

현황	개편안	세부팀	주요 업무
혁신경제과 중소기업 지원팀 & 일자리창업과 창업기반팀 & 일자리창업과 창업지원팀	기업전략국 산업전략과	미래산업 전략팀	• 7대 전략산업 • 지역산업 거점, 육성 사업 • 구조조정 및 산학연계 관련 업무 • 산업 현황 리서치·육성·구조조정 관련 총괄
		기술지원팀	• 규제자유특구 관한 사항 • 지식기반산업육성 및 혁신성장 지원 • 강소기업 육성
		신발산업팀	• 신발산업 육성 • 신발 전시회 및 인력 양성
		섬유신소재 산업팀	• 글로벌 탄성 소재 R&D 클러스터 구축 • 섬유패션 미래시장 창출 지원사업
		국내유치팀	• 국내기업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내기업 투자유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컨택센터 유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역외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 역내기업의 역외유출방지 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단, 개별기업의 이전대책은 업종별 소관 부서에서 담당) • 유치기업 사후관리(공장 등록 및 운영개시 이전까지) • 기업유치 관련 자문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외자유치팀	• 외국기업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외자유치 기본정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 타당성·효과 등 분석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외자유치 홍보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협의체(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국제산업물류도시 및 가덕도개발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 통계 관리
		경제자유구역 지원팀	•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업무협의 사항 • 경제자유구역 운영 관련 기관 간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직·예산 등 운영 지원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 위임 조례·규칙 개정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산업 1과 ~ 5과

• 핵심소관: 기반산업 육성, 산업 현황 리서치・육성・구조조정 관련

- 산업1과: 로봇, 미래자동차, 항공, 조선, 해양플랜트
- 산업2과: 스마트 시티 조성, ICT신산업
- 산업3과: 클린에너지, 파워반도체, 환경대응 산업
- 산업4과: 스마트헬스케어, 바이오, 치의학, 뷰티
- 산업5과: 조선·해양플랜트, 자동차·항공·기계, 섬유·부품·소재

• 중소기업지원팀과 창업기반팀, 창업지원팀의 실질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을 일맥상통하는 과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하도록 함

<표 4-8> 산업 1과~5과 조직개편안

현황	개편안	주요 업무	내용
혁신경제과 중소기업 지원팀 & 일자리창업과 창업기반팀 & 일자리창업과 창업지원팀	기업전략국 산업1과	기계부품 로봇팀	• 스마트제조혁신, 로봇 R&D 및 뿌리산업 육성
		미래형자동차 항공팀	• 드론, 항공, 자동차부품 산업 및 수소경제, 인프라 육성
		조선해양 플랜트팀	•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 해양플랜트 기자재 관련
	기업전략국 산업2과	스마트시티 기획팀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 조성 •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 및 리빙랩 추진
		스마트시티 기술팀	• ICT 연구개발 • 부산형 IT·CT 육성 펀드 조성
		융합 신산업팀	• ICT 융합 신산업 육성 • 가상증강현실 산업 생태계 조성
		ICT 인프라팀	• 지역 클라우드 사업 활성화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기업전략국 산업3과	클린에너지 기획팀	• 재생 에너지 정책 • 클린에너지 마스터 플랜 • 녹색성장 기본계획
		에너지신산업 육성팀	•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융복합 지원 • 수소·태양광·풍력 R&D
		클린에너지 보급팀	• 신재생에너지 보급 • 풍력·태양광·연료전지·탄소중립 관련 업무
		에너지자원 관리팀	• 도시가스, 집단에너지공급, 석유 관련 업무
		파워반도체 방사선팀	• 파워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 중입자가속기 구축 • 방사선 의·과학 관련 업무

	기업전략국 산업4과	스마트헬스케어팀	• 메디컬 ICT 융합센터 지원 • 인공지능 헬스케어 관련 업무
		고령친화 바이오팀	• 차세대 의료기기산업 육성 • 유전자 세포 치료 연구
		치의학 산업팀	• 치의학 기술연구센터 • 디지털 사용화 지원
		화장품뷰티 산업팀	• 화장품 뷰티산업 육성 • 수출지원 인력 양성
	기업전략국 산업5과	조선,해양플랜트팀	• 조선업, 해양플랜트 등 산업 육성
		자동차,항공, 기계 팀	• 자동차, 항공, 기계 관련 산업 육성
		신발,섬유,패션,부품,소재팀	• 신발, 섬유, 패션, 부품, 소재 등 관련 산업 육성

□ 금융전략국을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 펀드 조성을 통한 기업 지원 및 새로운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전략국을 통해 기반산업 및 4차산업관련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되, 금융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하나의 실을 구성하여,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금융과 기업에 대해 지원

○ 예시) On-Off line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시에도 자신의 사업에 맞는 기업국의 산업과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고 필요 자금은 금융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기업 금융 지원 가능

□ 자금조성과 기업육성에 조직 역량을 통합 및 집결하여, 향후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과 연계하여 부·울·경 펀드 통합, 금융투자회사 설립으로 확대 필요 (울산, 경남과 협의 필요)

□ 장기대책인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 규제 특례와 함께 금융 지원 혜택이 필요하므로 금융과 기업에 대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

○ 특히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로서 지역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하여 블록체인 관련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금융/기업 지원실 산하에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부산 지역내 회사 설립 시 필요한 행정사항처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조인트 운영을 통해 금융 규제 자문 및 컨설팅 제공 (자세한 사항 나.에서 후술)

나. 회사 설립/운영/이전/현황조사/분석/상장 등을 위한 One-Stop 조직 설치

1) One-Stop 조직(원스톱 기업지원센터) 구상안

□ 부산 시청, 금융/기업 지원실(가칭) 관할의 센터를 설립하여(원스톱 기업지원센터(가칭)), 국내 및 해외 기업 또는 사업자들이 부산 지역 내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행정 및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기관 설립

○ 국내기업, 외국기업, 스타트업 등 회사 설립의 용이성을 위해 창업을 위한 절차를 통합하고, 설립을 계획할 때부터 하나의 통합된 센터에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회사 등록, 관련 신고, 세금, 관련 기관 소개와 더불어 설립에 필요한 금융 지원, 법률 자문, 생활 지원, 이민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및 제공해주는 센터 설립

○ 센터 내에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행정사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를 보유하여,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어 가능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외 기업들이 부산 지역 내에 사업을 시작을 하려는 경우, 원스톱으로 창업 지원

○ 해외의 사업자가 부산에 사업을 설립할 때, 언어, 행정 절차, 생활환경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부산시와 더불어 센터에서 중앙집중식 지원을 제공하여 행정절차 및 사업 수립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한국의 창업과 관련된 법과 규정 및 등록 절차를 이해하고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영문화하여 행정절차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및 과거의 데이터와 사례를 인용하여 영어 가이드북을 제공, 주요 언어에 대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 필요

○ 다양한 관공서를 방문해야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탈피하여 원스톱 센터에서 모든 행정처리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을 위한 펀딩 정보와 함께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특히 해외 금융 회사의 경우에는, 한국 금융법 및 규정에 대해 이해가 필요해 더욱 자세한 영어 가이드북 제공 필요, 부산 생활과 관련한 생활환경 관련 정보도 제공하며 입국, 거주와 관련된 행정절차와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 전문가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주거, 지방세, 복지 등 다양한 인센티브까지 지원 검토

□ 추가적으로 금융 지원의 경우에도 해당 센터에서 '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금융 서비스 지원

○ 금융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센터가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함께 조인트로 운영되어 종합적인 금융 규제 자문 제공(공동 상담 서비스 및 종합 컨설팅, 지원)

○ 특히 외국금융회사가 부산에서 금융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면허 등록 및 취득과 같은 필수 절차와 설립 지원

○ 영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산의 지방은행 금융지주회사인 BNK와의 협약을 통해 영업 연계, 기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수익기반 네트워크 조성 지원

○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할 경우, 부산시와 금융감독원과 부산울산지원과 함께 부산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다양한 혁신적 금융 회사 설립 지원 (행정, 법 지원 등)

<그림 4-5> : 부산 원스톱 비즈니스 창업센터(가칭) 구조도

2) [해외 사례] 일본 도쿄의 기업 설립 지원 시스템 사례

□ 등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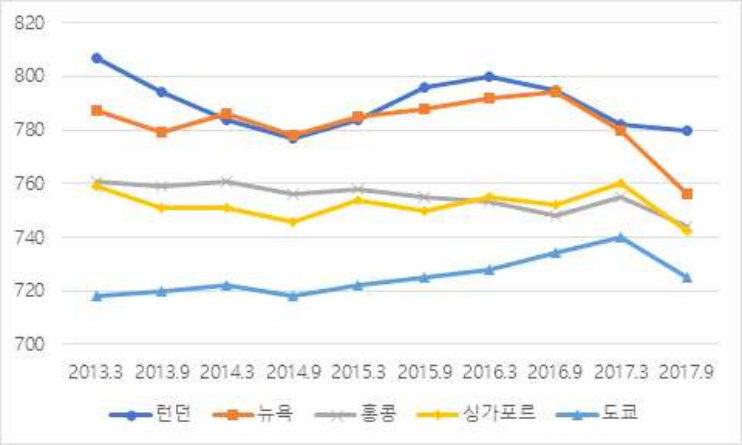
○ 도쿄는 17년 이전부터 Z/Yen Group의 GFCI 등수 5위 수준을 유지하며 상위 4개 도시의 격차를 쉽게 좁히지 못함,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성장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 2016년 11월, "글로벌 금융도시 도쿄를 위한 자문패널(Advisory Panel for Global Financial City Tokyo)"을 설립하여 SWOT 분석 실시 후, 분산된 관리 조직 및 느린 대응, 정부 기관에서의 영어 능력 부족, 지속적인 조치 결여, 조치 실행 속도 느림 등의 약점을 찾아냄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쿄도는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센터 설립, 금융서비스청(FSA)와 협력하여 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본으로 진출하려는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행정 절차 신속 지원, 일본 금융법과 규정에 대한 영어 가이드북 제공, 절차를 간소화한 원스톱 창업 지원 시스템 시작

<그림 4-6> Z/Yen Group GFCI 13-17 상위 5개 도시 점수 추이



출처: Z/yen GFCI 13-17

□ 도쿄 비즈니스 개발 센터(Business Development Center TOKYO)

○ 도쿄 비즈니스 개발 센터(BDCT)를 통해 해외 기업에 대한 업무 연계 지원 및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제공, 사업 설립 전부터 비즈니스 구축, 사업 설립 후까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지원 제공

○ 금융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법률제도, 금융권 취득 절차 등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자문(금융서비스청(FSA)과 협력)을 지원하는 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Financial One-Stop Support Service) 운영

○ 다양한 전문가들을 보유하여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와 외국어 가능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영어로 비즈니스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 및 거래처를 소개

○ 비즈니스 지원 뿐 아니라 외국인 등록 등 일본 생활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일상 생활정보 제공, 외국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 정보, 학교, 보육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도쿄의 기업 설립 지원의 이미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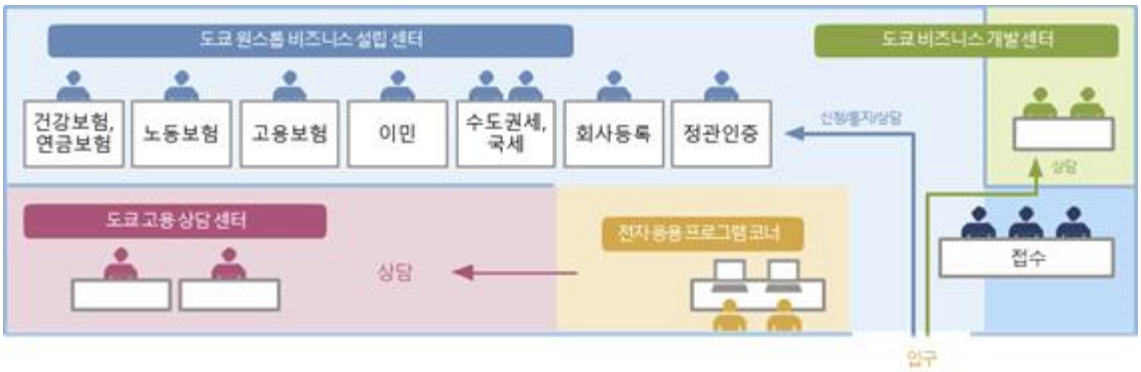
출처: Invest Tokyo

□ 도쿄 원스톱 비즈니스 창업센터(Tokyo One-Stop business Establish Center, TOSBEC)

○ 행정절차에 정통한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법인의 정관인증, 회사등록 및 법인설립 통지, 세금, 사회보장제도, 이민 등 창업 시 필요한 각종 서류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과 다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도 제공,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원하는 만큼 여러 번 이용 가능

<그림 4-7> 도쿄 원스톱 비즈니스 창업센터의 구조



출처: Invest Tokyo, Tokyo leading the world in business pamphlet

3. 특화금융 경쟁력 제고와 미래금융 육성

가. 해양금융 선진화 방안

1) 국내 선박금융의 현황 및 동향

가) 개관

□ 국내 선박금융이란 국내·외 선주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선박을 매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국내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내 선박금융의 규모는 2014년 356억 달러, 2015년 262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는데, 선복과잉 현상과 저 시황의 영향으로 시장의 규모가 급감하였다가 2018년 미국 셰일가스 붐에 따른 LNG선 발주로 인해 293억 달러 규모까지 다시 확대(표 9 참조)[89]

89) 전형진·윤희성·윤재웅,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12, 7-8면.

<표 4-9> 2014-2019 국내 선박금융 추정 규모 단위:억달러

- 국내 선박금융 규모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조선소 수주금액	334	240	44	173	274	70
국내선사	11	32	7	23	35	11
해외선사	323	208	37	150	239	59
국내 해운기업 신조발주금액	16	45	10	33	50	16
국내조선	11	32	7	23	35	11
해외조선	6	13	3	10	15	5
국내 중고선 매입금액**	17	8	6	12	4	3
국내 선박금융 추정규모	356	262	53	195	293	78

* 2019년 6월까지 취합액
**국내 중고선 매입척 X 5년 선령 주요선종 평균 중고가 (Clarkson 5Y Clarkson Price Index)

나) 국내 선박금융의 플레이어(Players)

(1) 정책금융기관

①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은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의 선박수출과 국내 해운기업의 운임수입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 조선업의 불황으로 2016년 이후 선박금융 공급규모가 감소하였지만, 국내의 선박금융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표 10 참조).[90)]

<표 4-10> 수출입은행 선박금융 잔액(대출 및 대외채무보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15.5	18.9	15.3	14.1	10.1	8.7	11.4

자료: Marine money 각호 검색일:2021.05.26

90) 상게 보고서, 12-13면.

②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험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지만,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해외선사를 위한 중장기수출보험 및 국적선사를 위한 수출기반보험 등을 제공

○ 선박금융의 규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평균 35억 달러 규모였는데, 2016년 이후 그 규모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표 11 참조)[91]

<표 4-11>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연간 선박금융 규모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3.9	3.5	3.4	2.1	0.6	1.4	11.3

자료: Marine money 각호 검색일:2021.05.26

③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은 1970년대 국내 계획조선에 따라 선박금융을 공급하면서 선박금융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선박금융 규모는 연간 50억 달러 내외의 규모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해운사를 위한 선박금융의 최대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음(표 12 참조)[92]

<표 4-12> 한국산업은행의 연간 선박금융 규모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6.5	4.7	4.6	5.1	5.0	1.4	5.8

자료: Marine money 각호 검색일:2021.05.26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09년 3월, 정부가 발표한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여 국내선사로부터 중

91) 상게 보고서, 14-15면.
92) 상게 보고서, 16-17면.

고선박을 매입한 후, 재용선하는(Sale & Lease Back; S&LB) 사업을 시행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2009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한해운, 흥아해운, 동아탱커, 대보, 장금 등 7개사로부터 33척을 간접 인수 후, 재용선을 함(표 13 참조)[93]

<표 4-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선박투자회사 설립 실적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3)	합계
척수	7	11	28	7	3	56
선종	벌커 7	벌커 9 컨선 1 화학선 1	벌커 12 컨선 16	벌커 2 컨선 5	벌커 3	벌커 33 컨선 22 화학선1

자료 : 캠코선박운용(주)(검색일: 2019. 11. 8.)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1.9조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선박은행 조성사업을 진행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체자금으로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캠코선박펀드를 2015년 5월에 첫 출시하여 2019년 3월까지 총 56개의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Tonnage Provider의 역할을 수행(표 14 참조)[94]

<표 4-14>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기금의 선박금융 공급 실적(누계치)

단위 : 백만 달러

선순위 대출 백펀딩 기관	선박 척수	총선가	후순위(기금)		해운사 자담		선순위 대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DVB	8	276	139.8	51%	16.4	6%	119.8	43%
미쓰비시상사	2	154	54	35%	8.5	6%	91.5	59%
외환은행	8	182	72.8	40%	72.8	40%	36.4	20%
하나은행	10	230.5	98.4	43%	82.9	36%	49.2	21%
-	5	48	28.8	60%	19.2	40%		0%
합계	33	890.5	393.8	44%	199.8	22%	296.9	33%

자료 : 캠코선박운용(주)(검색일: 2019. 11. 8.)

93) 상게 보고서, 18면.
94) 상게 보고서, 19-20면.

⑤ 한국해양진흥공사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후순위 선박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한국해양보증보험과 Tonnage Provider로 출범한 한국선박해양을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금융을 통해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95]

(2) 민간금융기관

① 상업은행

□ 국내 상업은행의 선박금융 참여 규모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에는 연간 3~4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 2,121억원으로 축소된 후, 더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간 1천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정(표 15 참조).[96]

<표 4-15> 국내 상업은행의 연간 선박금융 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 선박금융 (해외선사)	4,425 (93)	8,258 (3,478)	8,749 (3,917)	3,996 (235)	2,121 (-)	1,100 (-)	1,400 (-)

*추정치

자료 : 국회 김정훈 의원실 (2015), 김현미 의원실 (2017)

② 선박펀드

□ 국내의 선박펀드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펀드와 자본시장법에 따른 특별자산 펀드 중 선박펀드가 있음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펀드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2개 펀드가 인가되었으며, 펀드규모로는 13조원이 형성(표 16 참조)[97]

95) 상게 보고서, 20-21면.
96) 상게 보고서, 24-25면.
97) 상게 보고서, 30면.

<표 4-16> 국내 선박투자회사 운영규모 현황

단위: 십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04~'17)
펀드 규모	1,200	1,113.6	1,140.7	258.8	745	13,041
펀드 수	17	9	18	12	33	222

자료: 해양수산부, 「2018 선박투자회사 운영 현황」, 2018

□ 자본시장법에 따른 특별자산 펀드 중 선박펀드의 비중은 약 5% 내외를 차지하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투자금의 유입이 증가하여 2016년 2조 3,800억 규모를 형성(표 17 참조)[98]

<표 4-17> 국내 특별자산펀드(선박펀드) 추정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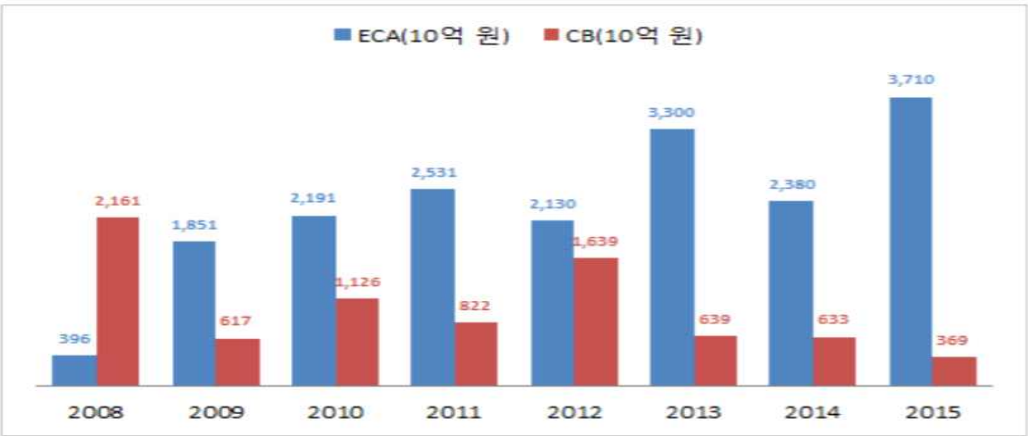
단위 : 십억 원

2013	2014	2015	2016
1,316	1,550	1,982	2,380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2016 펀드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과제」, 2016, p. 13

(3)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선박금융의 비교

<그림 4-8> 2008-2015 우리나라 은행의 선박금융 구조 변화 추이[99]



주 : ECA(수출금융기관), CB(상업은행)
자료 : An Overview of the Global Ship Finance Industry(2016), Current Ship Finance in Korea (2016)

□ 국내 선박금융시장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을 주도하고 확대하는 추세임에 반해, 민간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의 규모는 감소

98) 상게 보고서, 30면.
99) 상게 보고서, 50면.

추세를 보이고 있음.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해운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그림 8 참조)

다) 최근 동향

□ 국내 선박금융시장에서도 불확실성 확대, 해운업의 장기불황, 선박금융에 대한 증폭된 위험인식* 등으로 민간금융기관들이 선박금융을 축소하거나 시장에서 이탈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는 해운시장 불황 등으로 '선박금융은 위험자산' 이라는 인식이 확산**

○ 공공부문이 국내 선박금융의 대부분을 담당(민간부문의 약 10배 수준)

- '18년 기준 국내 민간부문 선박금융 규모는 '14년 대비 1/5 수준으로 감소 (표 18 참조)

<표 4-18> 국내 민간부문 선박금융 규모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공부문(억달러)	27.1	23.3	21.3	15.7	11.5
민간부문(억원)	8,749	3,996	2,121	1,100	1,400

출처: 전형진, 윤희성, 윤재웅,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 바젤 III 및 리스회계(IFRS-16) 도입으로 민간금융기관이 해운업에 대한 여신을 기피하는 경향

규 제	도입 효과
바젤 III	BIS자기자본비율 준수를 위해 위험업종 여신 기피 - '20년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은 해운을 관리업종으로 선정*
리스회계(IFRS-16)	장부상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 발생 - HMM 부채비율: 296%('18) → 557%(' 19)로 급증

출처: 파이낸셜 뉴스, '불황' 부동산·조선·해운업 더 죈다

□ 2016년 국내 선박펀드에 대한 과세특례*가 폐지된 이후 투자수익률

이 저하되면서,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펀드 설립이 어려워졌으며, 민간투자자들은 선박금융을 기피

***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에 대해 배당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표 4-19> 연도별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합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펀드수 (척수)	321 (444)	17 (17)	18 (18)	15 (21)	13 (20)	9 (22)	22 (32)	16 (21)	13 (16)	10 (22)	17 (33)	9 (32)	18 (22)	12 (16)	33 (41)	16 (17)	34 (41)	27 (30)	22 (23)
민간 (척수)	134 (208)	17 (17)	18 (18)	14 (14)	11 (11)	8 (13)	2 (9)	6 (8)	7 (10)	10 (22)	17 (33)	9 (32)	11 (15)	-	1 (1)	2 (3)	-	1 (2)	-
펀드규모 (선가기준)	162,443	11,577	11,654	6,113	9,038	8,445	10,468	7,002	6,354	15,158	12,000	11,136	10,887	4,790	7,880	5,234	7,941	9,887	6,859
민간 단체	103,802	11,577	11,654	4,672	6,783	6,117	3,211	3,235	4,394	15,158	12,000	11,136	9,393	-	232	2,168	-	2072	-

출처: 해양수산부

□ 국내 민간 금융기관은 해운불황 시기에 선박금융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선사는 선박금융이 용이한 호황기에 고가의 선박을 매입하고, 불황기에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저가의 선박을 매각하는 경기순행적 투자를 시행

○ 선박 발주시 최소 자기분담금(10~20%) 이외 대부분의 자금을 선박금융을 통해 조달하는 국내 선사의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구조적 문제가 지속

○ 선사들의 재무상황이 양호하고 선박금융이 발달한 해운강국들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반대방향의 투자결정(경기역행적 투자 형태)을 하며, 그 변화폭도 안정적인 모습

2) 해외 선박금융의 현황 및 동향

□ 선박금융의 규모는 2017년 LNG선 수요를 중심으로 반등하여 2018년 948억 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 중고선 매매금액은 178억 달러로 신조선 발주금액 대비 23%수준을 보이고 있음(표 4-20 참조).[100)]

<표 4-20> 2015-2021 세계 선박금융 투자 규모

단위: 억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세계 중고선 매매금액	237	125	191	178	269	240	
세계신조 발주금액	910	370	700	770	724.5	449.3	710
합계	1147	495	891	948	993.5	6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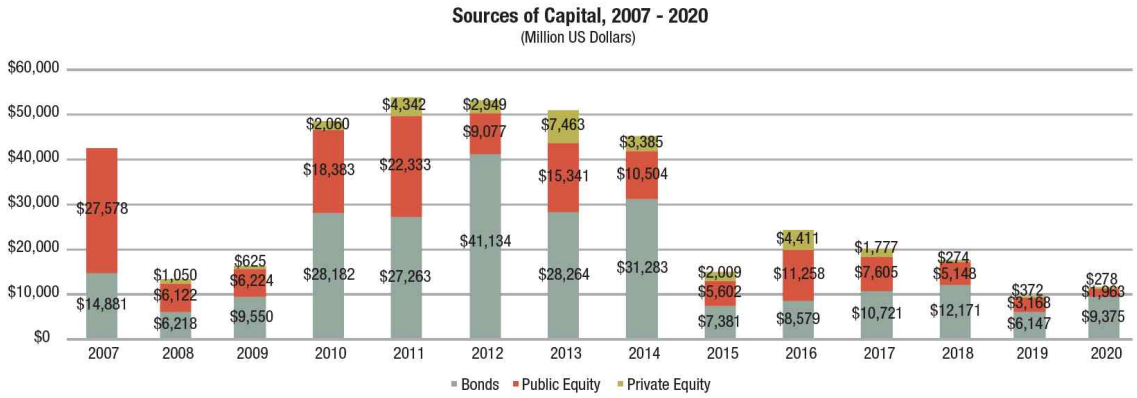
* 2021년 추정치
출처: Clarksons, World Shipyard Monitor, 26(1~7) VesselsValue (영국선박가치 평가기관)

□ 세계 선박금융의 조달(공급) 규모는 2007년 연간 8,120억 달러까지 확대된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함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더하여 장기간의 해운불황과 한진해운의 파산과 같은 대형 선사의 파산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

○ 세계 선박금융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금융의 공급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그림 9 참조)[101]

<그림 4-9> 자본시장을 통한 세계 선박금융의 조달



자료: Marine Money 2020 review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계 은행의 선박금융 투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아시아계 은행의 선박금융 공급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

100) 상게 보고서, 57면.
101) 상게 보고서, 5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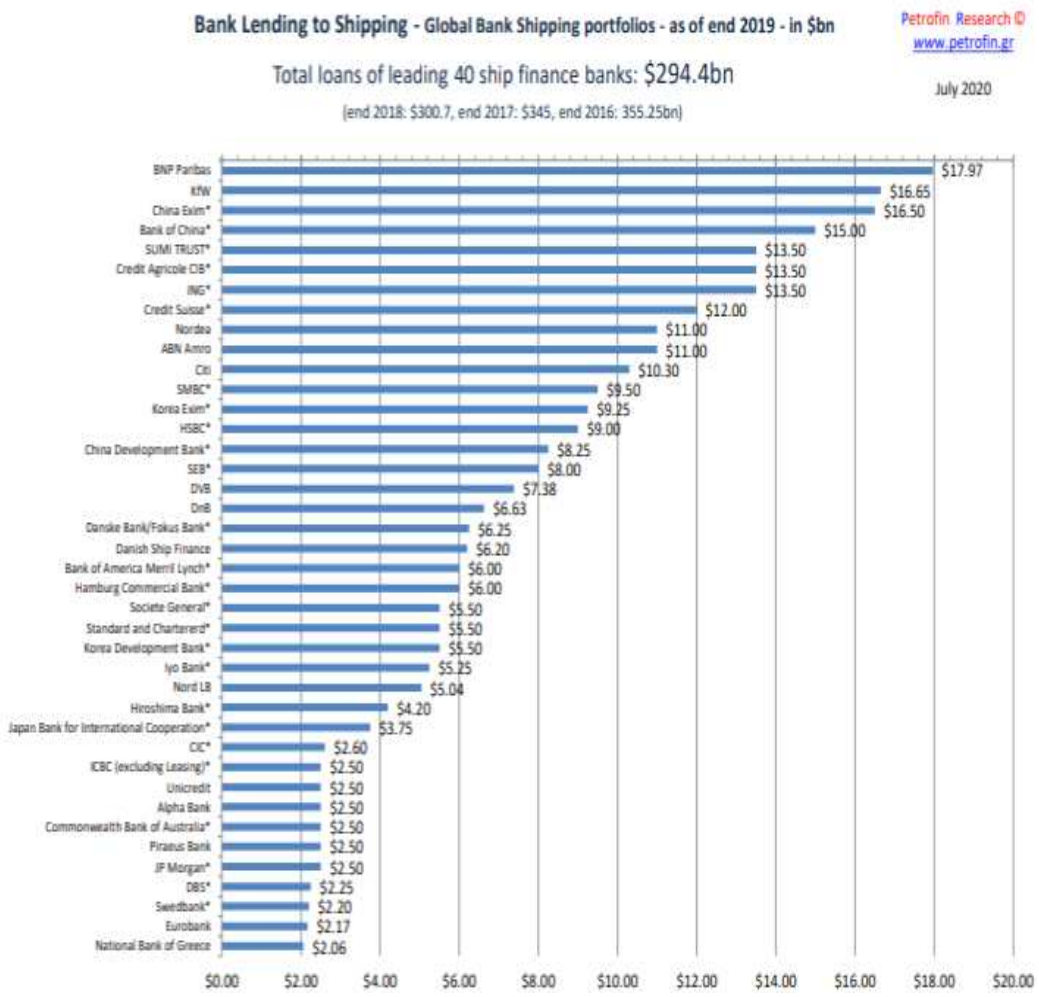
○ 2020년 7월 기준, 중국계인 China Exim과 Bank of China가 3, 4위에 랭크한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13위로 순위가 하락한 모습 등 아시아계 은행이 선박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평가(그림 10 참조)[102)]

○ BNP Paribas가 새롭게 최대규모를 기록했고, 독일의 KfW가 그 뒤를 있는 모습

○ 이는 해운불황으로 인한 해운사 실적 악화와 도산* 등으로 인한 선박금융 부실 확대, Basel III 등 규제 강화 및 기후변화 등 ESG 관련 규제 강화 등에 주로 기인

* 독일 Commerzbank, 영국 RBS, Lloyds bank 등

<그림 4-10> 세계 주요 은행의 선박금융 공급 규모(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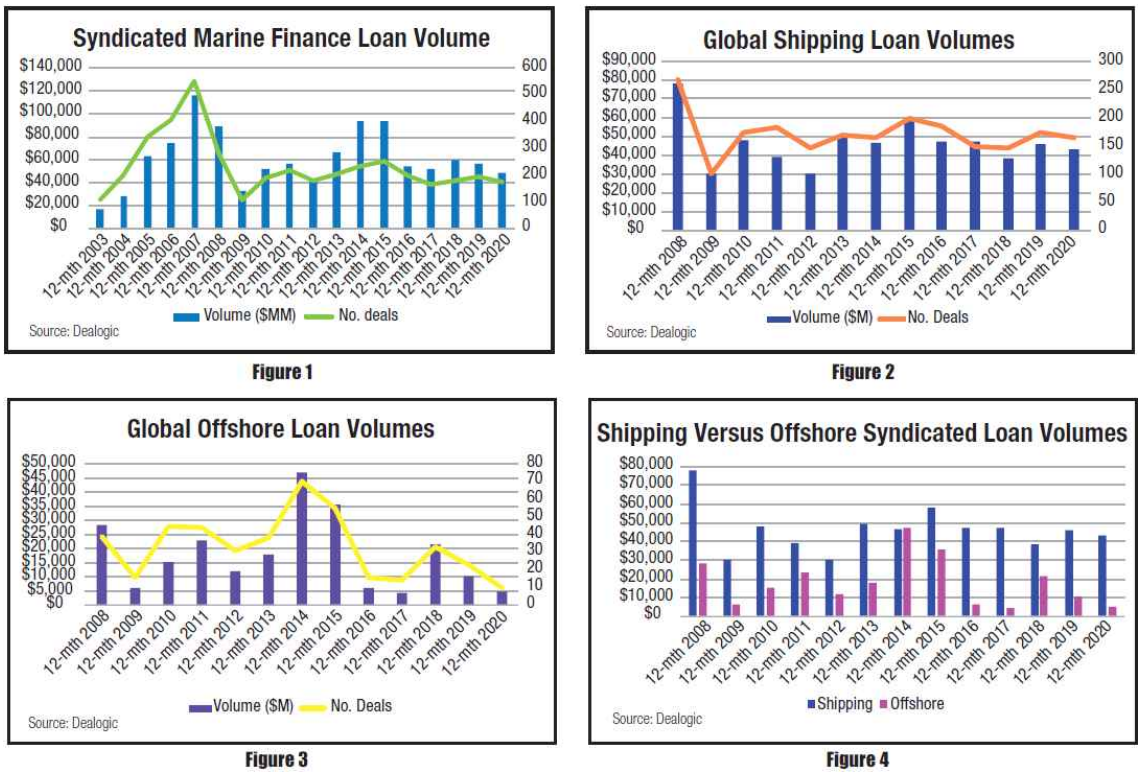


102) 상게 보고서, 63-6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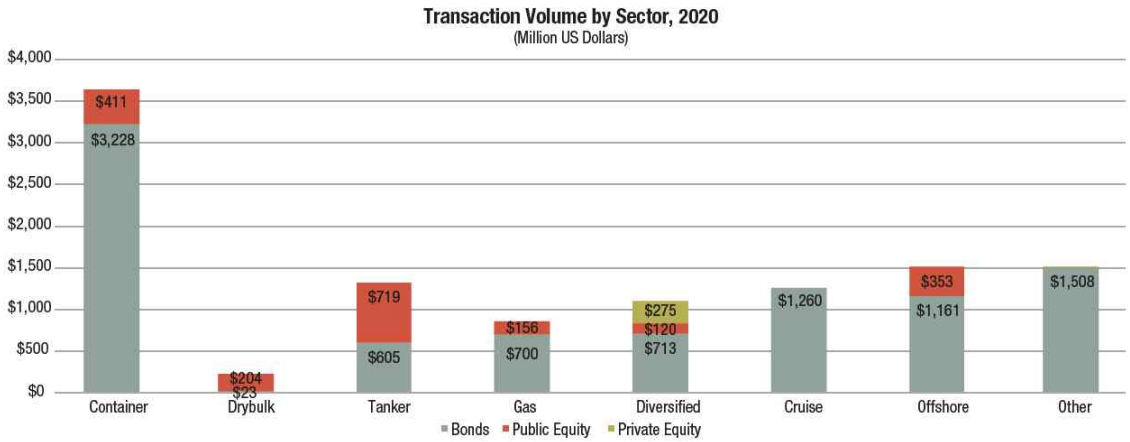
□ 2020년 기준으로 신디케이트 해양금융 대출은 총 485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약 14% 감소했으며, 딜 건수도 169건으로 나타남 (그림 11 참조)[103]

○ 여기에는 선박뿐 아니라 크루즈선, 해양플랜트(Offshore) 등이 포함

<그림 4-11> 2020년 해양금융 신디케이트론 규모 추이



자료: Marine Money 2021.02



자료: Marine Money 2020 Q4, 2020

103) 상게 보고서, 96면.

□ 전체적으로 세계 선박금융의 규모 및 역할과 관련하여 보면, 각 국가의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표 21 참조)[104]

<표 4-21> 주요 지역별 ECA

국가	ECA
오스트레일리아	Export Finance Australia
오스트리아	Oesterreichische Kontrollbank AG (OeKB)
벨기에	Credendo
캐나다	Export Development Canada (EDC)
독일	Euler Hermes Aktiengesellschaft
이스라엘	The Israel Export Insurance Corp. Ltd. (ASHRA
이탈리아	SACE and SIMEST
스페인	Compañía Española de Seguros de Crédito a la Exportación (CESCE)
스웨덴	Exportkreditnämnden (EKN) AB Svensk Exportkredit (SEK)
프랑스	Bpifrance Assurance Export
미국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EXIM Bank)
일본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NEXI)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한국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멕시코	Banco National de Comercio Exterior

출처: OECD(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 ECA list)

□ 상업금융기관이 퇴조를 보이는 반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

○ 중국*과 우리나라는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

* Exim Bank of China, Bank of China

○ 중국의 경우 리스회사(ICBC Leasing, Bocomm Leasong 등)의 역할도 급부상

○ 전세계적으로 상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대출은 감소세이나, P2P 형식의 직접대출(direct lending) 형식의 선박금융 제공은 증가

104) 상게 보고서, 99면.

<표 4-22> 세계 주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규모 (2020년)

단위: 십억달러

금융기관	선박금융 규모
BNP Paribas	21.5
EXIM Bank of China	18
Kfw IPEX-BANK	16
SuMi Trust Bank	13.7
Credit Agricole CIB	13.6
BOCOMMFL	13.5
ING	13.3
SMBC	10
Nordea	9.9
Citi	9.8
한국수출입은행	9.4
ABN AMro	9.2
DNB	9.2
한국무역보험공사	9.1
SocGen CIB	7.5
SEB	7.3
CMBFL	6.4
Lyo Bank	6.3
Danish Ship Finance	6.2
Bank of America	5.7
Danske Bank	5.7
Standard Chartered	5.7
COSCOL	5.6
한국산업은행	5.4
CDBFL	4.7
DVB Bank	4.6
Hamburg Commercial Bank	4.4
CCBFL	3.6
AVICL	3.6
CSSCL	3.0
Ocean Yield	2.9
Piraeus Bank	2.9
Alpha Bank	2.9
Eurobank	2.6
National Bank of Greece	2.6
Nord/LB	2.6
Unicredit Bank	2.4
SFL	2.3
CIC	2.2
National Australia Bank	2.2
Swedbank	2.1
SPDBFL	2.1
HRFLC	1.8
SpareBank 1 SR-Bank	1.4
Portfolio Management	1.2
한국자산관리공사	0.7

출처: Marine Money International Summer, 2021

□ 지역적으로 보면 유럽계 금융회사의 선박금융 공급 비중이 감소한 반면 아시아계 금융회사의 비중은 상승

<표 4-23> 글로벌 은행의 지역별 선박금융 잔액 현황

(단위: 십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럽	374	361	317	292	276	254	221	2016	177	177
미국	10	9	12	11	10	16	17	19	20	19
아시아	66	87	93	98	105	128	117	121	105	97

출처: Petrofin Research

3) 정책적 시사점

□ 첫째, 국내 해양금융시장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융기관이 해양금융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

○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해운불황의 장기화 및 중소조선사의 도산 등의 영향으로 해양금융의 규모를 축소하는 흐름

□ 둘째, 세계 해양금융시장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계 은행의 선박금융 투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아시아계 은행의 선박금융 투자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Bank of China와 China Exim이 선박금융 부문에서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정책의 영향이라고 추정

4) 민간 해양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가) 해양금융 활성화의 저해 요인

□ 지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의 흐름과 2020년 초부터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COVID-19 Pandemic)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이와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역시 장기불황이 지속되어 해운회사의 선박에 대한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이에 더하여 조선업 역시 신조선 수주 감소 등으로 인해 장기불황이 지속됨으로써 선박금융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

○ 다만 최근 해운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 조선사의 신조선 수주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등 조선 경기도 회복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시장의 신호라고 판단

나) 해양금융 활성화의 기회 요인

(1) 해양금융특화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치

□ 최근 홍콩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인해 금융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흐름은 부산의 입장에서는 해양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외국의 국제적 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유치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특별히 해양금융에 특화된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2)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통과

□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었음[105)]

○ 가덕도신공항이 조기에 착공된다면, 부산의 입장에서는 금융중심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

- 즉 부산이 동북아 국제물류의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함과 아울러 항공물건운송, 해상물건운송, 복합물건운송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조선소와의 접근성이 제고됨으로써 해양금융의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105) '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2021.02.26.

(3) 부산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 2020년 7월 6일, “부산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신규 지정되었다고 부산시가 발표

○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LPG연료 추진시스템을 중·소형 선박에 탑재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특례

<그림 4-12> 부산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특례현황

자료: 부산시 보도자료 2020. 7.

□ LPG기반 추진시스템을 갖춘 선박시장은 국내 연안어선 22%에 이르는 중·소형급 선박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항만도시로서의 부산의 해양환경오염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106)]

○ 이러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통한 기술개발은 해양금융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4) 친환경 미래 선박 LNG 추진선 분야 지원

□ IMO(UN 산하 국제해사기구)의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 배출량 규제 강화로 인해 선박들은 현재 LNG 추진선, 저유황유, 배기가스 처리 장치, 수소선박 등을 도입 예정, 특히 시험단계의 수소 연료 이전에 미래 선박연료로 LNG를 주목하고 있음

106) LPG선박블록체인 부동산 플랫폼 등 4개 신규사업 부산 규제자유특구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0.07.06.

□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과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공약,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통해 세계는 더더욱 친환경 산업을 따라가게 될 예정,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LNG를 선발 연료료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분야인 LNG 추진선 분야에 지원 필요

○ 2019년 세계 LNG 수요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3억 5,900만 톤을 기록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

○ 해운업계는 LNG 연료가 기존 선박유 보다 미세먼지 발생 수준을 약 80% 수준, 온실가스 배출을 약 2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

○ 석유보다 연료가격이 저렴한 LNG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할 친환경 연료로 인식, LNG 연료의 사용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LNG 공급을 위한 'LNG 운반선'과 LNG를 연료로한 'LNG 추진선' 수요 증가 중

○ 현대삼호중공업은 2020년 8월 24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고 성공적으로 인도

○ POSRI 자료(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LNG 추진선은 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2,500~3,000척 발주 전망, 기존의 중고선박들은 환경 규제에 맞춰 LNG 추진선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교체수요 약 17,000척), LNG 추진선 건조시장은 2020년 20조원 수준에서 2025년 130조원 수준으로 급성장 예상

○ 특히 한국 조선업의 경우, 국내 대형 3사(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가 LNG선 분야에서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세계 발주량에 70~80%를 차지하고, LNG 추진선의 경우 2020년 수주 비중 45%에서 2021년 100% 예상

○ LNG 추진선 건조의 핵심 경쟁력은 건조 능력도 있지만, 주요 조선 기자재 제작 및 조달 및 선박금융 제공

○ LNG선 및 LNG 추진선의 계약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보증과 건조대금 대출에 대한 혜택을 통해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고,

선박금융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지속적인 현물 산업과 금융 산업의 발전을 꾀함

□ 해운 금융 다양화를 통한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추진 - 을 통해 장기 거액 해양 금융경쟁력 확보

○ 보다 미래에는 LNG 연료가 아닌 암모니아, 전기, 수소전기연료전지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이 필요

○ 해운기업의 주식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선박펀드의 투자방식 다양화, 자본시장 활용 및 보증기능 확대,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이는 해운기업의 경쟁력이 운임경쟁력에서 비용경쟁력으로 전환되면서, 친환경 고효율의 대형선박 발주가 시대적 추세로 전환 중이지만 우리나라 양대 원양 선사의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신규 선박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수출입은행(25%)과 기관투자자(75%)가 함께 조성한 1조원 규모의 에코쉽 펀드는 투자대상이 컨테이너선보다는 손실 가능성이 작은 벌크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

다) 민간 해양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시설

(1)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수협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

□ 현재 해운업과 조선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민간 상업은행의 선박금융 기피현상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의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현상. 예를들면, 중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장래 부산이 해양금융의 허브로서 발전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①한국산업은행, ②한국수출입은행, ③한국무역보험공사, ④수협은행의 부산 이전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 현실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집중된다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과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여 부산이 명

실상부한 해양금융의 허브가 되고 국제금융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 나아가 해양금융특화 정책금융기관이 집중된다면, 민간 상업은행과의 비즈니스 파트너 십(Business Partnership)이 용이하게 구축됨으로써 해양금융에 참여하여 실무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되어 빠른 시간 안에 민간 금융기관의 해양금융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2)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국제해운클러스터의 조성

□ 북항재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북항에 국제해운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다수의 외국의 해운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 나아가 국제해운클러스터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와 연계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해양금융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

○ 즉 국제적으로 해운업, 조선업, 금융업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야만 민간 금융기관의 해양금융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효율적 금융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3) 국제해운거래소의 설립 추진

□ 선박금융의 수요를 창출하고, 아시아권 해운정보·거래 중심지로 부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운거래소의 입법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107)]

□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①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제공, ②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③운임선도거래시장 운영을 국제해운거래소가 담당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4) 부산국제해양금융포럼의 조직 및 활동

□ 부산광역시가 중심이 되어 가칭 부산국제해양금융포럼을 조직하여

107) 부산광역시, 해운거래소 설립 및 기능 관련법 개정 검토, 2015.04.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국제적 활동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해양금융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 해운회사, 금융회사, 조선회사, 정책금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연락망을 구축함으로써 민간 해양금융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해양금융생태계 조성 가능

(5) 민간 해양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률서비스 환경 구축

□ 민간 해양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금융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예를 들면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하여 해양금융에 관한 관할권을 갖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나아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해사중재가 영국에서처럼 부산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

(6) 국제적 역량을 갖춘 해양금융 전문인력의 지속적 공급과 양성

□ 민간 금융기관의 해양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스트럭처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해양금융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부산이 해양금융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양금융대학원과 부산대학교의 금융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5)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체계적 발전 및 협력 강화

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이유, 성과 및 발전 필요성

□ 한진해운 파산 이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붕괴와 해운매출액, 선복량, 외화획득 등의 감소로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이 추락하고 일

자리 감소 및 수출입 차질 등의 혼란을 경험

□ 해운산업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처리하고, 조선·항만·금융·물류 등에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유사시 군수·전략 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경제·안보의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중요성을 가짐

○ 수출입 물동량의 대다수를 해상으로 처리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운선사의 운임은 무역 경쟁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

○ 국적선사 부재시 독과점시장을 구축한 글로벌 선사의 운임인상 위험에 노출되고 물류비용 상승, 원자재 수급 측면에서 매우 큰 국가적 리스크에 직면할 우려

○ 경기순행적인 선박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운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융 및 경영 지원을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경쟁력 강화가 필요

○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 해운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

□ 이와 같은 해운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해운재건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를 설립

○ 설립 이후 해진공은 HMM 지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중견선사 중심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등을 통해 3년여간 총 89개사에 대해 6.3조원을 지원

○ 국적 원양선사의 초대형 선박 발주 지원, 민간금융기관이 기피하는 선박금융 관련 투자·보증사업 수행, 친환경 설비 대출 보증 및 노후선박 대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경쟁력 있는 선대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

○ 국적선대의 영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입후 재대선(Sale & Lease-back) 사업을 통한 유동성 공급, 선사의 원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운영자금 및 자본 확충 지원, 해운항만 자산투자 등 선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수행

□ 해양분야 정책금융 기능과 항만 등 인프라 투자 기능도 가지고 있는 해진공은 아직 설립 초기 단계로 부산지역의 해양금융 및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서는 동 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공공기관 성격을 감안하여 과감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

- 현재는 선박금융 보증사업(민간은행의 해운사 앞 대출에 대한 보증), 선박금융에 대한 직접투자(해외 SPC를 이용한 해양자산, 터미널, 컨테이너 등에 대한 투자), 해운사 채권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
- 해양진흥공사의 현행 회사채 발행한도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의해 자본금의 4배 이내

나) 해양진흥공사의 체계적 발전방안

(1) 선박 가속상각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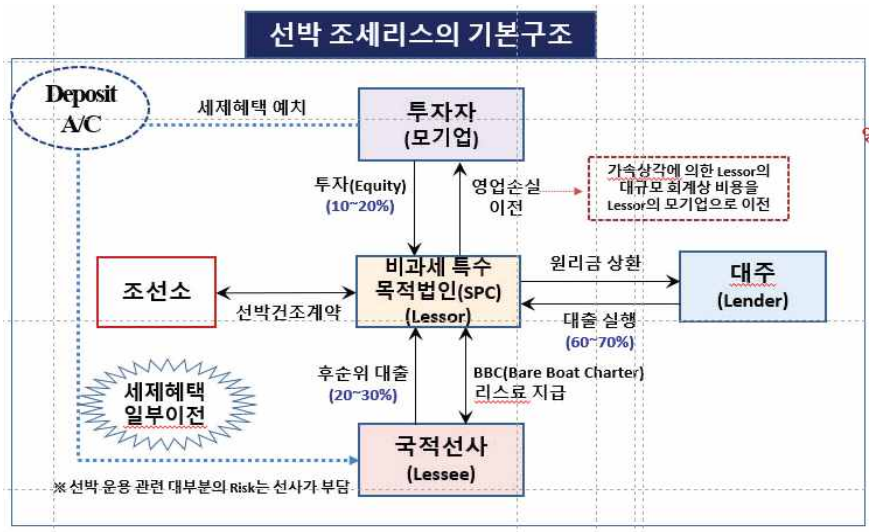
□ 민간부문의 선박투자 참여 확대 유인을 세제 측면에서 부여하기 위하여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선박 조세 리스제도*를 도입

* 선박에 대해 세법상 가속상각을 허용하여 세금 이연효과를 통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금융기법

○ 가속 상각 적용 시 자산의 총 내용연수기간 동안 총 과세액은 동일하지만 사업 초기 가속상각으로 종국적으로 투자자의 영업비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상업은행, 자산운용사, 리스회사 등 민간부문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선박의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경우 1) 선박을 소유한 SPC (비과세 특수 목적법인)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2) 영업손실이 투자자(모기업)으로 이전 됨에 따라 투자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림 4-13> 선박조세리스 구상도



출처: 조규열, 선박금융의 현황과 대책, 제4차 COVID-19이후 해운조선물류 산업 안정화 방안 세미나, 2021.07

○ 투자자는 세금절감을 받게 되는 금융기관(투자자겸 SPC모회사)으로서 리스 기간중 선박의 소유주 겸 차주가 되는 SPC를 설립

○ SPC는 선박 자산에 대한 고속감가상각을 통해 리스기간 초기에 막대한 금액의 회계상 비용을 발생시켜 영업손실(리스료 수입 - 감사상각액 - 대출이자)을 기록함

○ 리스기간 중 발생한 SPC의 영업손실을 모회사인 금융기관으로 이전시키고 금융기업의 영업비용으로 계상되어 금융기관의 법인세를 절감(CA-CIB, 2018)

□ 선박조세리스 제도가 활성화되면 조선, 금융, 법률, 회계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 선박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대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유치 방안 수립과 시행이 필요

(2) 금융선주(Tonnage provider) 역할 수행

□ 신조 선박 확보를 위한 금융이 어려운 중소·중견선사의 선박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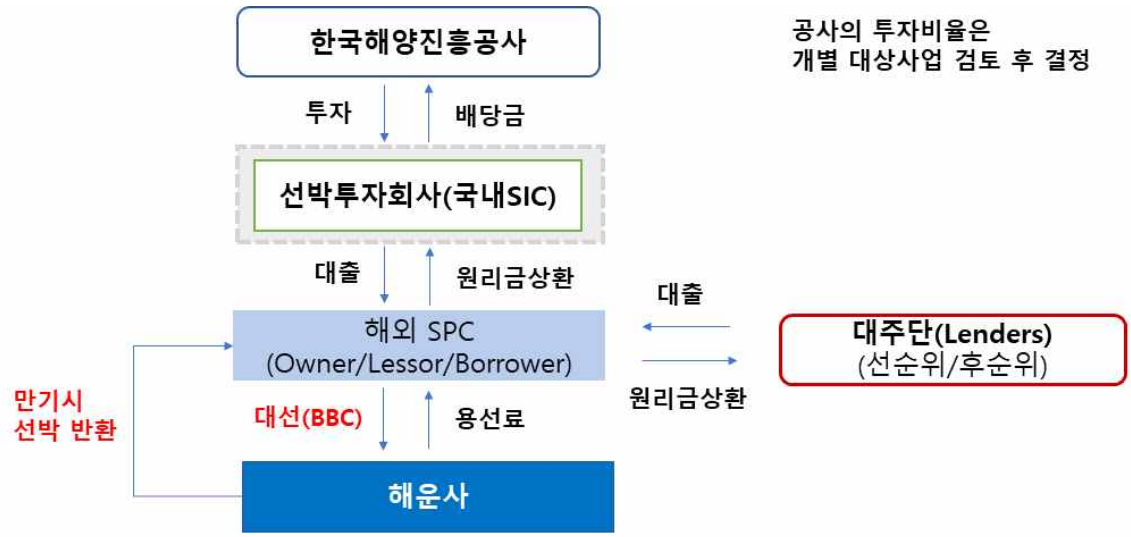
부담 경감을 위해 해진공이 현재 수행중인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S&LB)을 확대하여 대선전문기관(금융선주)로 발전시킴

○ 해진공의 신용을 통해 선박금융 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조달하여 신조선 발주, 중고선 매입을 통해 선박을 확보하고 이를 국적선사에 BBC(운용리스) 방식으로 대선(Sale & BBC Back)

○ 선가가 낮은 시기에 선박을 확보하고, 시장 활황기에 선박을 공급함으로써 경기역행적인 선박투자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

○ 국내 해운사들의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국내 보유 선박 증가로 해운산업 규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4-14> 구조도(예시)



BBCHP의 경우 용선 만기시 SPC (법적소유자) -> 해운사로 소유권 이전

출처: 성낙주, 해양금융을 위한 비운항 선주사업, 제3회 부산해양금융세미나, 2021.9

(3) 민간부문 선박금융 참여 유도를 위한 보증사업 역할 강화

□ 우량 해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 민간은행의 선순위 금융 참여 등 민간부문의 해운금융 활성화 유도가 필요

○ 민간 상업은행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해진공의 보증 사업(담보 적격 확대 등)을 통한 대출원리금 상환 보증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

(4) 선박금융 업무 확대를 위한 금전대여 기능 부여 등

□ 선박, 터미널 등 자산에 대한 금융투자 등 업무다각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에 금전대여 기능을 부여

○ 해양진흥공사가 출자한 펀드를 통해 SPC에 자금을 대여

○ 이를 위해서는 해양진흥공사법을 개정할 필요

다) 부산시 및 해양금융 관련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

□ 해양진흥공사의 체계적 발전을 통해 해양금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수도와 금융중심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부산 소재 정책금융기관, 한국거래소, BNK 부산은행과의 실질적 협력 확대가 필수적

○ 금융과 해양산업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해양진흥공사의 업무영역 확장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여 부산시가 적극 협조

○ 해양진흥공사,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BNK 부산은행과의 3자 협력을 통해 투자와 금융의 안정적 생태계를 조성에 기여

나. 파생금융 및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1) 파생금융 활성화 방안

□ 부산에는 우리나라 유일 파생상품거래소인 한국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시장 존재

○ 그러나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주요 거래원인 증권사 및 선물사는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부산을 장내 파생상품 거래중심지로 보기는 어려움

□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의 부산 입점을 위해 노력 필요, 또한 현물 상품 거래를 위한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도 유치 필요

<표 4-24>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단위 : 조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전년 대비 증감(비율)
거래규모[주1)]		16,304	17,945	17,019	△926 (△5.2)
	주식스왑	172	160	138	△22 (△13.6)
	이자율스왑	3,417	3,651	3,496	△155 (△4.2)
	통화선도	11,843	13,187	12,530	△657 (△5.0)
	통화스왑	621	674	643	△31 (△4.6)
	기타[주2)]	251	273	211	△62 (△22.7)

주1) 거래규모는 기간 중 모든 거래의 합계 금액을 의미
주2) 기타는 주식선도, 주식옵션, 이자율선도, 이자율옵션, 통화옵션, 신용파생상품 등을 포함
출처: 금융감독원

□ 또한 우리나라 및 부산에 알맞은 신규 파생상품 개발이 필요

○ 현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는 코스피200, 배당지수, 코스닥150, KRX300, 유로스톡스50, 코스피200 변동성, 국채, 국채 스프레드, ETF, 미국달러, 엔, 유로, 위안, 돈육, 금 등이 존재

○ 현재 대부분의 파생상품의 거래가 코스피200지수, 국채, 미국달러 관련 파생상품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

○ 전체적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숫자는 타 해외 주요국의 상품수에 비해 매우 적으므로,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가 필요

○ 대규모의 항만 및 조선 산업과 수산업이 발달한 부산에서 해양수산 부문 및 다양한 파생상품의 성공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현물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적 상품성이 있는 파생상품 개발

○ 반도체, LNG, 탄소배출권, 선박운임지수, 수산물 가격지수, 암호화폐 가격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개발

①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의 DRAM 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3.6%(2020년 2분기 기준)를 차지할만큼 높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반도체를 기초자산으로 한 반도체 파생상품이 존재하지 않음

② LNG : IMO(UN 산하 국제해사기구)의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 배출량 규제 강화로 인해 선박들은 현재 LNG 추진선, 저유황유, 배기가스 처리 장치, 수소선박 등을 도입 예정, 특히 시험단계의 수소연료 이전에 미래 선박연료로 LNG를 주목하고 있음, 부산은 해양금융 중심지로서 선박의 미래 연료가 될 LNG에 대한 파생상품 필요

③ 탄소배출권 : 탄소배출권은 환경을 위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정책 수단,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은 2015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 중(하루평균 28억 3천 900만원 거래, 2020년 9월 기준, 첫 해 기준 49.8배 증가), 국가 단위 시장으로는 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 이러한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한 파생상품 도입 및 관련 금융상품 상장 필요, 선물거래를 통해 가격 변동위험 관리가 용이해지고, 현물시장의 발전도 기대

④ KOBC 건화물선 종합지수(KDCI, KOBC Drybulk Composite Index) :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선화물선 주요 4개 선형(Cape, Panamax, Supramax, Handysize)의 가중평균 용선료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지수로서 해운 시황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수, 특히 외국의 해상운임지수는 각 국가 및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 특화된 지수가 개발,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한 파생상품 도입으로 용선료에 대한 위험 헷지 및 파생상품 거래 필요. 이외에도 컨테이너 운임비수 등 관련 선박 운임지수들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도입 필요

⑤ 수산물 가격 지수 : 수산물 생산자가격지수, 양식 수산물 생산자 가격지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또는 수산물 관련 가격에 대한 지수를 개발하여(개별 또는 종합) 수산물 가격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도입하여 수산물 가격에 대한 위험을 헤지 및 파생상품 거래 필요

2) 녹색금융 현황

□ 녹색금융(Green Finance)은 새로운 금융 분야로 기술, 지속 가능성 및 금융의 교차점이라 할 수 있어 부산금융중심지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

○ 경제가 COVID-19에서 회복됨에 따라 환경 부채, 갈색 및 좌초 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 탄소 배출량 측정,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 및 물과 같이 희소한 자원의 사용을 포함하여 "더 나은 재건"이 강조됨에 따라 이러한 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BIS, 2021)

* 좌초자산이란 기업의 자산이 유효 연수(useful life)를 다하기 전에 그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는 자산이라는 의미로 통용 (Al Gore and Blood,2013)

□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금융 분야로 어떻게 진화하는 지는 여전히 알 수 없으나, 녹색 채권이나 대출, 녹색 상장 주식 및 지속 가능성 관련 상품 등 핵심 영역에서 부산 역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량 강화

○ 녹색 채권, 녹색 대출, 녹색 상장 주식, 지속 가능성 관련 상품,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ESG) 공시의 표준화를 포함하여 핵심 분야에 초점

○ 환경 부채 및 영향 측정, 포트폴리오 및 탄소 거래 노출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등을 포함

□ 녹색 금융은 4차 산업혁명의 주된 분야인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IOT) 및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과의 교차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우며 중요한 주제

○ 새로운 지속 가능성 관련 제품이 등장하고 탄소 거래 시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측정 및 공시가 매우 중요해 짐

□ UNEP FI(국제연합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는 녹색금융의 개념을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과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자율적 심사 및 감시체계 구축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음

○ 첫째,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

○ 둘째,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인 심사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활동

□ 국제사회는 금융권의 기후· 환경변화 대응 및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된 "녹색금융"(또는 지속가능금융)에 대해 다양한 논의 전개 중

○ [교토의정서('97)] 주요 선진국(韓제외, 37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수준 지정

○ [파리기후협약('15)] 협약당사국(195개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준 지정

○ [TCFD*('17)]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금융정보 공시 권고안 마련

*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 [NGFS('17)] 기후・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의회 발족

○「녹색금융 촉진에 관한 6개 권고안」 발표 ('19.4월)

*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 녹색금융의 선봉에 있다고 평가되는 유럽연합은 은행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및 건전성 감독에 ESG 요소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 발표('20.12.14.)

○ '19.12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유럽 그린딜" 발표

□ 유럽연합은 회계연도 평균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역내 기업이나 공익법인에

대하여 ‘비재무정보 의무공시제도’(EU Directive on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를 2014년에 도입하고 2018년부터 의무공개 계획 발표

○ 유럽연합은 이러한 정책을 정교화시키는 과정에 돌입하고 현재 ESG 공시 기준과 형식을 구체화

○ 더 나아가 2023년을 목표로 재무와 비재무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올해 3월 10일부터는 EU 역내의 은행,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를 시행

○ SFDR은 금융기관이 그들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포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

○ 자산운용시 지속가능성 요소와 관련한 주요 부정적 영향(PAI : Principal Adverse Impacts)을 고려하는지 여부와 ESG 접근법을 설명하도록 규정

□ 영국은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테스크 포스인 이른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요구사항을 영국 경제 전반에 걸쳐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할 계획

○ 세계 최초로 2050 ’Net-zero‘ 계획을 법제화(기후변화법)

○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조치가 2023년까지는 실행

○ 영국 금융감독청(FCA :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당장 런던 증권거래소(LSE : London Stock Exchange)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된 기업(premium listings)들을 대상으로 2022년 봄까지 TCFD의 요구 사항을 ‘재무보고서’를 통하여 의무적으로 공시

○ ‘규범준수 혹은 설명의무’(Comply or Explain) 방식

○ 2020년 기준으로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140개 기업 중 480개가 적용 대상

□ 미국은 바이든 대선공약으로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

○ FRB는 기후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NGFS에 가입(’20.12.16.)

○ ’청정에너지 가속화 프로그램‘을 통해 州단위 그린뱅크 지원 예정

□ 독일도 지속가능리스크 가이드라인 발간(‘20.1월)

○ ’19년 「기후보호법」 제정 및 기후액션 프로그램 2030 도입

□ 프랑스는 은행부문 기후리스크 분석보고서(’19.4월)를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가이드 발간(’20.5월)

○ 리스크평가 파일럿테스트 실시

○ ‘15년 「에너지 전환법」을 통해 기후 관련 공시의무 도입

□ 중국 역시 ’20.9월 UN연설에서 2060년 이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10월 정부 부처 공동으로 ‘기후금융 지침서’를 발간

□ 국내에서도 과거부터 관련 논의가 몇 차례 제기되었으나, 녹색산업의 정의 미비, 녹색투자 유인 부족 등으로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그린 뉴딜 및 탄소중립 의제화에 따라, 녹색 분야로의 자금흐름 전환 및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논의 재부각

○ 빠르게 진행중인 국제사회 움직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공공・민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확산 중

○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시중유동성을 경제구조 전환에 긴요한 생산적 분야로 유도

○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인 산업 특성 감안 시, 녹색분야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증대 필요

3)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 국내에서도 과거부터 관련 논의가 몇 차례 제기되었으나, 녹색산업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이 포함되면서, 녹색산업·기업·사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 필요성이 재부각

○ 2050 탄소중립 선언('20.12월)에 따라,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금융권 역할에 대한 기대감 상승

○ 금융권의 녹색분야 논의 참여는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20.8월 민관합동의 녹색금융 추진TF* 출범

* 금융위·환경부 합동TF 산하에 ①기후리스크 평가·관리, ②녹색투자 활성화, ③기업 공시 개선 등 주요 정책과제별 세부 작업반을 구성·운영

□ 금융위·환경부는 환경정보 공시 및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가이드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 지정

① (기업공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공 등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계획 마련('21.1)

② (녹색채권)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녹색채권 발행시 녹색투자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발간('20.12월)

③ (특성화대학원) 녹색금융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인하대학교, KAIST,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정('20.10월)

* 연간 약 5.5억원씩 3년간 지원 예정 ⇨ 2020년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구체적 세부과제 이행에 착수할 필요

□ 정부 주도로 녹색금융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을 발표하고 3대 추진전략에 12개 실천과제를 제시

○ 3대 추진전략은 1. 공공부문 역할 강화 2. 민간금융 활성화 3.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 공공부문 역할강화를 위하여 △정책금융기관별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

○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녹색금융전담조직을 신설 및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 계획 중

○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1) 정책금융지원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공동 녹색지원전략 수립 및 정보공유 추진

(2) 특히, 동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P4G 정상회의 준비 등 다양한 역할 수행.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

□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녹색분류체계 마련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을 계획

□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로는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적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

<그림 4-15>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

산업은행	▸ 정책기획부문을 "**정책·녹색기획부문**"으로 **확대 개편**('21.1월) ▸ 산하에 **"ESG·뉴딜기획부*"를 신설 편제**('21.1월) * ❶한국판뉴딜, ❷녹색금융, ❸ESG 관련 실행전략 도출 및 대외기관 협력업무 총괄 등 Control Tower 역할 수행
수출입은행	▸ **산업별 조직개편**을 통해 그린뉴딜을 포함한 녹색산업 금융지원 전담조직 신설('21.1월) * 신재생에너지산업팀, 전기전자산업팀, 미래모빌리티산업팀 등
기업은행	▸ 경영전략그룹 **전략기획부 내 "ESG 경영팀"** 신설('21.1월) * ❶지속가능경영 통할, ❷ESG 기획·통할(그린경영/탄소경영/에너지·온실가스 등), ❸ESG 관련 대외평가 대응 등을 수행
신용보증기금	▸ 현재 별도의 전담조직은 없으나, 향후 신설검토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2021

□ 이 가운데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사안으로 도출된 4개 과제 중 '기업 환경정보 공개·공시 단계적 의무화'는 보수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함

○ 금융위원회 · 환경부 ·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방침에 따르면 환경(E)와 사회(S) 관련 정보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예 : 자산 2조 원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의무화한다는 계획 발표

○ 2025년 이전까지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하여 자율공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

○ 당국이 발표한 환경과 사회 정보공개·공시 로드맵은 국제적인 동향은 물론 국내의 요구와 수용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안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

○ 국내외 ESG 환경 변화의 속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수적인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 지연(Delay)으로 인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금융당국의 방침대로 환경·사회 정보를 2030년에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한다면,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는 2029년까지 지배구조와 환경·사회 정보를 분절된 상태로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 존재

○ 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기후·환경과 관련한 기업들의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제대로 비교·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

□ 따라서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2026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화하기로 하였으니, 기업부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더라도 2026년까지는 환경·사회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

○ 이 경우 2023년부터는 자산규모 2조 이상, 2024년 1조 원 이상, 2025년 5,000억 원 이상으로 의무공시 적용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 가능

□ 전 세계 녹색채권시장의 규모는 2015년 약 60조원에서 2019년 약 300조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채권 발행기관들이 2021년 1/4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의 규모는 최소 9,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이는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600억원과 유사한 규모

□ 녹색채권 등 사회책임투자채권은 발행하기에 앞서 관리체계나 프레임워크 등을 만든 뒤 이를 외부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함

○ 관리체계나 프레임워크에는 사회책임투자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프로젝트의 선정절차와 평가, 자금의 용도, 자금의 관리방법, 사후보고 방식 등이 포함

□ 일반 기업들은 물론 증권업계도 사회책임투자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책임투자채권 외부검토기관도 증가하고 있음

○ 원화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사전검증을 진행한 기관은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EY한영, 한국신용평가, CICERO 등이 있으며, CICERO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글로벌 회계컨설팅기

업인 KPMG나 딜로이트, EY, 한국신용평가의 모회사인 무디스 등이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에 회원으로 등재돼 있어 이들도 인증기관의 자격을 얻었음

□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작업과 녹색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녹색채권 발행기업이 일반채권 발행에 비해 추가로 드는 비용(외부검토 및 컨설팅 비용)중 외부검토 비용을 지원하여 발행기관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함

□ 부산시는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기준을 고려하고, 산업 표준 및 지침 채택을 지원하고, 산업 주도 역량 강화 노력을 장려하고, 녹색 채권 시장의 개발을 주도

○ 부산 지역금융기관은 녹색 및 지속가능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대출심사 제도 마련

○ 지역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 관련 기술에 대한 외부 심사와 신용평가 기능 제고 필요

□ 부산시는 구체적으로 환경부 및 한국거래소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부산의 기업들이 녹색채권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다음 방안과 같이 도모할 수 있음

○ 방안 1) 부산에 본점 소재지 또는 주된 사업지를 두고 있는 기업이 발행하여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된 원화녹색채권에 대하여 환경부가 지원하는 외부검토서비스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부산시가 녹색채권 발행 후 보고에 대한 검토 비용을 지원

○ 방안 2) 부산에 본점 소재지 또는 주된 사업지를 두고 있는 기업이 발행하여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된 원화녹색채권에 대하여 부산시에 등록된 외부검토기관이 제공하는 외부검토서비스 비용을 지원

□ 최근 BNK부산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원화 ESG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산 금융중심지 녹색채권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2020.11.30.)

○ 해당 채권은 SK증권이 주관해 공모 방식으로 2년물 1000억원 규모로 발행되었으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

○ 부산은행은 이 자금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사업에도 사용할 예정

□ 더불어 부산시는 해양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하에 부산지역 금융기관들은 지속가능한 사업 추구 및 녹색금융의 한 분야로 해양금융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포세이돈 원칙은 지속가능 금융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은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해양금융의 역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원칙

○ 부산에 APEC기후센터가 있어 향후 관련 과제 추진에 있어서 협력이 용이

○ 은행권 최초로 부산·경남은행이 이사회 내 위원회 형태로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향후 글로벌 추진 과제인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협의체), CDP(탄소공개 프로젝트) 가입 등을 통해 부산지역 녹색금융 활성화를 도모

다.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를 통한 혁신기업 유치 방안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대체투자 펀드 규모 및 해외 대체투자 자산 비중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처할 대체투자 관련 정보 부족

○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군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대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벤처기업, 원자재, 선박, 항공 등 다양

○ 대체투자는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고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낮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 추세

○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 규모는 2009년 27조원에서 2019년 말 기준 약 230조원에 달할 정도로 10년 동안 약 8.5배의 빠른 성장세를 보임[108)]

○ 투자대상의 다양성, 투자정보의 산재 등으로 투자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의 수집이 어려워 비교적 정보 접근이 쉬운 국내 수익형 부동산 펀드나 해외 대체 투자자산 위주로 규모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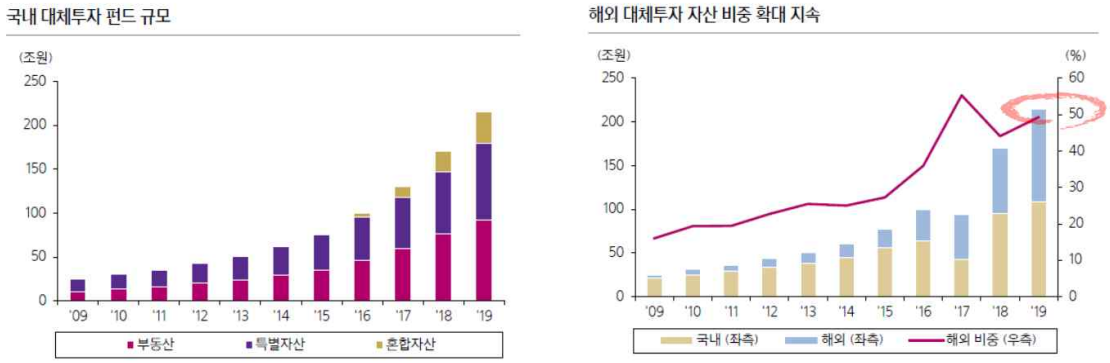
□ 대체투자 시장은 코로나19와 경쟁이 강해짐에 따라 수익률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력도가 높고 투자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

○ 대체투자 산업은 미래유망산업으로 급성장 중이나, 투자 관련 기반 정보가 공공 및 민간에 흩어져 있어 투자정보 획득이 어렵고 제한적으로 대체투자의 불균형 성장과 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

108) https://www.ebn.co.kr/news/view/1438084?sc=Naver

○ 비대면 금융을 위한 금융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커지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용한 대체투자 정보를 집적하고 가공하여 투자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보 부족을 겪던 대체투자 분야에 신뢰성있는 정보 제공을 목표

<그림 4-16> 국내 및 해외 대체투자 펀드 규모



출처 : 금융투자협회

□ 부산은 금융중심지로서 부·울·경 지역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에서 수집가능한 대체투자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대체투자를 활성화 필요

○ 공공 및 민간의 단편적인 대체투자 관련 정보들을 모은 '통합금융빅데이터 인공지능 비즈니스 공공플랫폼' 구축 및 제공

○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서 선박·파생금융, 백오피스·백업센터 관련 비교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대체투자수요를 파악하여 투자정보를 통합·분석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기관이나 업체 유치 및 금융경제 활성화

○ 다양한 대체투자 관련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전문 사모운용사와 대체투자 정보를 이용하는 금융 및 사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하여 금융중심지로서의 금융산업 생성 및 전문화, 활성화 가능

2) 적용 기술 및 수집 데이터

□ 단순한 공공 대체투자 정보 수집 및 원자료 제공만이 아닌 빅데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가공되고 의미 있는 분석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

□ 데이터 수요자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필요한 대체투자 분석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로직 개발

□ 부산에 유치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금융데이터 수집 및 금융 인프라 활용하여 파생금융상품 대체투자정보 제공 가능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의 다양한 부동산 정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부동산 대체투자정보 수집 및 활용 가능

○ 한국해양진흥공사, 국토교통부 등의 다양한 선박/항공기 정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선박/항공기 대체투자정보 수집 및 활용 가능

○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의 다양한 천연자원 정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천연자원 대체투자정보 수집 및 활용 가능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타 공공서비스와의 연계 또는 확장 가능성 확보

□ 정부의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7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연계 가능

3) 정보제공 플랫폼 해외 사례

① 시티오브런던 - 시티 비즈니스 라이브러리(CBL: City Business Library)

□ 시티오브런던은 영국 정부의 법률적 제재를 받지 않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음. 시장을 뽑는 선거에 기업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며, 행사할 수 있는 투표수는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달라짐. 이러한 배경으로 수많은 금융기관이 런던에 입주하게 되면서 뉴욕과 GFCI지수 1-2위를 다투는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게 됨(GFCI 28 2위)

□ 기업형 자치정부답게 서비스형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스타트업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플랫폼인 '시티 비즈니스 라이브러리'

□ 특히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영국 내 중소기업은 향후 변화에 대응할 수단,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 됨. CBL은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해 필수 비즈니스 데이터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지역이나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 CBL는 일반적인 창업 조언, 시장 조사에 대한 정보, 통계, 회사 데이터 및 비즈니스 뉴스를 위한 국내외 취재를 포함하여 영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및 출판물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비즈니스 정보 전용 공공 도서관. 20년 7월 시티오브런던은 이 서비스에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음.(월별 요금 £18.9/연별 요금 £189)

□ 관련하여 CBL은 기업,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시작 또는 비즈니스 시장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데 관심이 있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기업 학습 및 교육을 지원함. 학교, 대학, 자선단체 및 지역사

회단체 등 광범위한 조직에 무료 맞춤형 시장 조사 및 비즈니스 스타트업 교육을 제공함

<시티 비즈니스 라이브러리 멤버십 제공 서비스[109]>

항목	내용	멤버십 미가입자 이용 가능 유무
Fame	- 업종별, 위치별, 규모별 업체 찾기 - 최대 20년 재무 데이터 -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활동중인 530만 개 이상의 기업 정보	X
Global Trade Tracker	- 상품거래 상세통계(가치, 수량, 가격) - 2002년부터 현재까지 110개국 이상의 월별 및 연간 데이터 -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사용	X
IBIS World	- 업계 개요, 주요 성공 요인 및 벤치마킹 비용, 스타트업 성장에 적합한 비즈니스 정보 제공 - 영국, 미국, 중국, 호주 등 글로벌 업계 보고서 - iExpert 요약본에는 업종별 Q&A가 포함	X
MarketLine	- 분석 및 동향에 대한 전 세계 시장 조사 - SWOT 분석을 포함한 주요 기업 프로필 - 국가별 프로필 보고서 및 시장 통계 데이터	X
Business Source Premier	- 마케팅, 관리, 회계, 재무 및 경제에 관한 기사를 포함하여 2,300개가 넘는 저널 전문 기사	O
Cobra	비즈니스 스타트업 정보: - 시장 데이터를 포함하여 300개 이상의 산업 부문에 대한 프로필 - 사업 계획서 작성, 재무, 마케팅에 대한 지침 자료	O
European Newsstream	- 1990년대부터 남아있는 유럽의 최신 뉴스 - 신문, 뉴스와이어 및 저널 등의 전문 기사를 포함한 430개 이상의 자료	O
Exporters Almanac	- 정보 수출: 공급사슬 솔루션, 무역금융 정보, 물류, 보험, 관세 정보, 비즈니스 네트워크, 회사 디렉토리, 국가 프로필	O
Other benefits	- 시티 비즈니스 라이브러리 컴퓨터에 대한 무제한 액세스 - 주간 뉴스레터 - 무료 와이파이 이용	O

출처 : City Business Library - City of London

109) 데이터 공급자: Bureau van Dijk (Fame); Zen Innovations AG (Global Trade Tracker); IBISWorld Ltd (IBISWorld); Progressive Digital Media Ltd (MarketLine); Cobweb Information Ltd (Cobra); The Reference Data Exchange Ltd (Exporters Almanac); ProQuest (European Newsstream); EBSCO Industries, Inc (Business Source Premier).

□ 또한 CBL 내에는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사무엘 윌슨의 대출신탁(SWLT: Samuel Wilson's Loan Trust)'이라는 대출 서비스 자선단체도 존재함. 대런던 지역 또는 주변 주 Buckinghamshire, Essex, Hertfordshire, Kent, Surrey, East Sussex or West Sussex 등 내에서 최근 사업을 설립했거나 무역업, 제조업에 종사하려는 만 4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최대 £50,000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로 융자의 정확한 이자율, 금액, 기간은 신탁자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 기준으로 고려되지만 대출은 보통 5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함

□ CBL는 이벤트 정보제공 플랫폼 'eventbrite'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공지하며 접근성을 높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혁신 사업자들은 이 곳에서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 컨설팅 및 워크숍을 제공받을 수 있음. 그 중 비즈니스 121 조언 세션(Business 121 Advice session)의 경우 CBL 내 비즈니스 지원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비즈니스 서비스로 지적재산권, 예산, 산업 연구 등 창업의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아이디어인지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 줌. 1시간에 £30라는 합리적인 금액에 제공되고 있으며 추가회의를 원한다면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

② 런던 - 클락슨 리서치(Clacksons Research)

□ 클락슨은 1852년 설립된 통합 해운 서비스 제공업체임. 선박은 전 세계 경제에 활력을 주는 존재로, 원자재와 완제품을 전 세계의 가정, 공장으로 운송함. 전 세계 무역의 약 85%가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의 모든 개인에게 매년 1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수준임. 클락슨은 모든 주요 운송 및 해외 부문에서 중개, 금융, 지원 및 연구를 아우르는 진정한 '동급 최고의(Best in class)' 통합 글로벌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클락슨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선박 중개 능력(Broking capacity)을 가짐. 클락슨 내 중개인(Brokers)은 배에 화물을 싣는 용선주(Charterers)와 선적할 수 있는 선박 소유자(Owners)를 연결하는

역할을 함. 고객은 건식화물(철광석, 석탄, 곡물 등)과 습식화물(원유 및 정제유 등 석유 제품), 원자재 및 완제품, 가스 및 오일, 화학 물질 및 당밀 등 물품들을 운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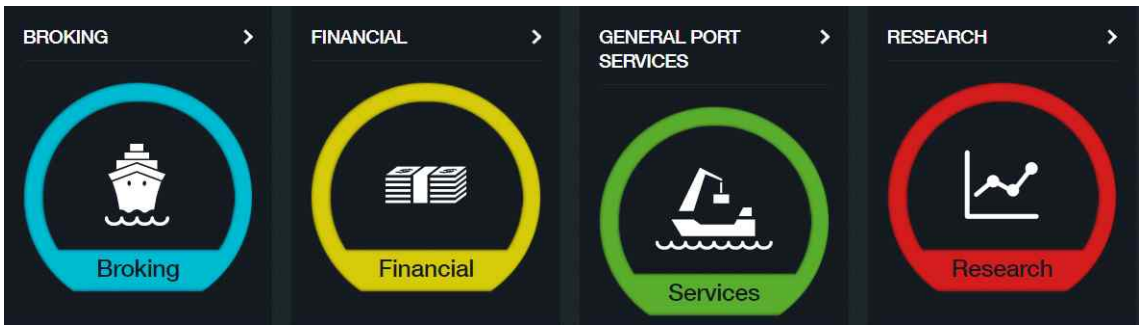
○ 클락슨은 소규모 유닛부터 대형 유닛까지 모든 규모의 선박 거래를 함. 이 선박들은 23개국 53개의 사무소와 1,6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의 관리·감독하에 전 세계 바다를 횡단함

○ 클락슨에서 개척된 파생상품부터 풍부한 투자 은행 서비스, 맞춤 채무 솔루션까지 금융서비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공함. 클락슨은 고객이 위험을 식별 및 관리하고, 거래 자금의 조달, 전통적인 경로로는 불가능한 거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클락슨의 리서치 팀은 세계 해운 및 해상 부문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정보 제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이 리서치 팀 내에는 70명이 넘는 상근 연구원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 검증, 분석 및 관리하여 업계를 형성하는 주요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대해 알려줌

○ 클락슨의 지원 기관인 Clackson Port Service는 전략적으로 위치한 광범위한 항구에서 선박, 화물 이해관계 및 승무원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클락슨 내 팀원은 현장에서 고객의 대표로서, 정박 및 하역 조정부터 세관 및 이민 준비에 이르기까지 24시간 내내 모든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행동함

<그림 4-17> Clarksons Services



출처: Clarksons

□ 클락슨 리서치 팀은 연안 및 에너지(Offshore and energy), 배송 및 거래(Shipping and trade), 평가(Valuations) 3가지 사안을 초점으로 정보를 제공함

○ 연안 및 에너지(Offshore and energy)

- 클락슨은 30년 이상 해외 업계에 데이터와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업체로, 고객이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시장 인텔리전스는 25,000개 이상의 생산 플랫폼, 선박 및 리그, 6,000개 이상의 유전 및 가스전과 관련 인프라, 전 세계 700개 이상의 해상 풍력 발전소, 지리 정보 시스템(GIS) 적용 범위 및 활용률, 일일 비율 및 가치에 관한 수많은 상업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음. 그 결과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인텔리전스가 구축되어 광범위한 고객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간소화할 수 있음

- 클락슨은 해저 조사 선박 및 시추 장치부터 건조 및 지원 선박, 생산 유닛 및 폐로와 관련된 선박에 이르기까지 해상 부문 수명 주기에 관여하는 모든 유형의 자산을 다룸.

- 고객은 클락슨의 강력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인 해외 및 에너지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받음. 해상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는 클락슨 리서치의 선도적인 온라인 데이터 서비스로, 고객이 활용률, 주간 요금, 프로젝트 및 시장 공급/수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텔리전스를 제공함. 해양 분야,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프로젝트 인텔리전스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위해 클락슨은 세계 해양 등록부 제공. Sea/net 시스템은 해상 선박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고객은 클락슨의 해상 선박 등록부, 유전 디렉토리, 석유 및 가스 지도, 월간 해상 인텔리전스 보고서와 같이 잘 확립된 다양한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음.

- 금융, 정부, 보험, 석유 회사, 장비 및 조선 분야의 많은 기업 및 기관 고객들이 클락슨의 맞춤형 고객 서비스 계약을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서비스는 맞춤형 데이터 공급, 프로젝트 추적 인텔리

전스 흐름, 재무 오퍼링, 세미나, 컨설팅 및 2030년 클락슨의 해양 및 에너지 포럼과 같은 다중 고객 연구를 제공함.

○ 배송 및 거래(Shipping and trade)

- 클락슨은 배송의 모든 측면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권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임. 135,000척 이상의 선박에 대한 데이터를 서비스 중이거나 주문형이며, 40,000개 이상의 회사와 600개 조선소의 광범위한 무역 및 상업 데이터와 100,000개 이상의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함. 클락슨의 데이터는 정확성과 깊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음. 고객과 클락슨의 동료 모두 마찬가지임.

- 클락슨의 디지털 포트폴리오는 대표적인 상업 인텔리전스 시스템인 배송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와 온라인 레지스터인 세계 비행대 레지스터로 구성됨. 또한 고객은 업계 최고의 주간 배송 정보(Shipping Intelligence Weekly)[110]를 비롯한 다양한 인쇄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음.

- 다양한 기업 및 기관 고객이 맞춤형 선박 공급, 금융서비스, 세미나 및 조선 예측 클럽과 같은 다중 고객 연구를 제공하는 맞춤형 고객 서비스 계약을 활용함

- Clarkson Valuations를 통해 Research 부서는 또한 해운 산업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선두 업체이며 해운 부문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주요 소유주 및 금융 회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평가(Valuations)

- Clarkson Valuations Limited는 클락슨의 리서치 부서의 자회사로, 소유주와 금융계에 대한 세계 최고의 가치평가 제공업체임. 숙련된 팀은 연간 30,000건 이상의 평가를 처리하며, 선박 및 해상 비행대에서 모든 종류의 선박을 다루고 있음

110) Shipping Intelligence Weekly는 전세 시장, 판매 및 구매, 뉴빌딩, 세계 함대, 무역, 경제 및 주간 분석 자료를 신뢰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함. 클락슨의 주력 보고 중 하나로서, 이 보고는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중.

- Clarkson Broker Network와 Clarkson Research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지원을 받는 평가팀은 업계를 위해 존경받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Clarkson Valuations는 광범위한 선박 금융 은행, 상장 회사 및 대규모 개인 소유주에게 포트폴리오 평가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클락슨은 개별 선박 기준으로 평가 인증서를 제공함

<그림 4-18> 배송 및 거래(Shipping and trade) 서비스 규모

출처: Clarksons

라. 대체거래소(ATS) 설립방안

1) 대체거래소의 의의

가) 개념

□ 전자거래에 기반한 매매체결시스템으로서 기존 정규거래소의 보완 또는 대안적 기능을 수행

□ 기존 정규거래소와 같은 상장기능과 규제기능은 없음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현재는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거래 할 수 있으나,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두 거래소의 거래가격, 수수료, 체결속도 등을 비교하여 저렴하고 편리한 곳에서 거래가능

□ 각국의 대체거래소 정의(이하, 통칭 ‘대체거래소’)

○ (한국) 다자간매매 체결회사(자본시장법 제8조 제2항)

○ (미국)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1998년 Regulation ATS(2018년 개정), 2005년 Regulation NMS

○ (유럽)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2007년 MiFID

○ (일본) PTS(Proprietary Trading System), 1998년 금융시장개혁법

나) 대체거래소의 도입 배경

□ 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경쟁을 촉진하여 거래비용 축소

○ 외국자본의 유입과 국내 신규투자유도로 자본시장 유동성 증대

○ 거래소의 독점에 따른 수수료 과다 등 비효율을 제거하고 증권회사의 수익구조 개선

○ 시장의 가격발견기능 향상, 효율적인 거래플랫폼 개선

○ 고빈도거래, 알고리즘거래 수용으로 고객니즈에 부응하고 외국투자자 유인

<참고> 대체거래시스템과 다크풀

□ 대체거래시스템의 구분

○ 주문 및 거래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Lit(공개)시장과 Dark Pool(비공개)시장으로 구분

□ 다크풀 (Dark Pool)

○ 익명성과 대량주문, 투자자간 직거래 등의 이점으로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주식거래의 50%정도가 다크풀 거래이며, 유럽의 경우 주식, FX,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일종의 다크풀인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

1) 투자자의 일정규모 이상 대량호가를 정규시장호가와는 별도로 집중시켜 비공개로 체결

2) 가격발견기능은 없으며, 거래소의 일중가중평균가격을 기준가로 하는 이른바 cross거래임

2) 각국의 대체거래소 도입 현황

가) 주요국의 시장분할지수(FFI)와 시장분할의 의미*

* 자료 : Fidessa 2021년 9월 현재

□ 미국 : Dow Jones 4.58, S&P 500 4.62, NASDAQ 100 4.34

○ Dow Jones 상장주식이 최소 4.58개 이상 거래소에서 동시 거래됨을 의미

○ 미국 3대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① NYSE : 32%, ② NNASDAQ: 22%, ③ BZX: 13%

□ 유럽 : FTSE 100 2.04, DAX 1.88. CAC 40 2.04

○ FTSE 100 상장주식이 최소 2개 이상 거래소에서 동시 거래됨을 의미

○ 영국 3대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① LSE : 68%, ② Cboe CXE: 16%, ③ Turquoise: 5%

□ 일본 : Nikkei 225 1.06

○ Nikkei 225 상장 주식이 1.06개 거래소에서 동시 거래됨을 의미

○ 일본 3대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① TSE : 97%, ② SBI Japannest: 2%, ③ Chi-X Japan: 1%

나) 주요국의 대체거래소 도입방식

□ 미국: 1998년 Regulation ATS, 2005년 Regulation NMS(National Market System)을 통해 증권거래소의 호가독점규칙을 폐지하고 거래소 이외의 대체거래소(ATS)를 시장으로 인정

○ 종래 미국의 ATS에서는 주로 국내외 정규거래소(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금융상품이 상장되어 거래됨

○ 하지만 2018년 11월 Regulation ATS를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STO형태로 발행되는 토큰형증권(Tokenized Securities)의 경우ATS에 상장(등록)하여 SEC에 등록된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규제된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간주

○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8년 (화폐형코인과는 달리) 증권형토큰의 경우에는 규제되지 않은 사설시장에서의 공모발행 및 거래를 금지하였으며 다만 SEC의 규제를 받는(regulated) ATS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이후 STO형태로 발행되는 증권형토큰은 대부분 ATS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음(투자자보호와 거래안전이 주목적)

□ 유럽: 2007년 MiFID(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를 통해 거래소 집중의무 폐지, 증권회사에 의한 거래소 신설 및 합병을 인정

□ 일본: 1998년 금융시장개혁법을 통해 대체거래소(PTS) 도입 근거 마련

○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매매플랫폼이 시장으로 인정되어 상호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대체거래소 설립의 계기가 됨

다) 대체거래소의 글로벌 운영

□ 주요국의 대체거래소 설립과 운영은 대형 금융회사(증권회사, 투자은행)가 주도

□ 수익사업의 일환인 동시에 금융회사 스스로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 수행

□ 또한, 금융회사의 자체 글로벌 영업망과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영역을 확장

○ 이를테면, 한국에서 미국의 대체거래소인 나스닥(NASDAQ)이 대체거래소를 설립하게 되면, 기존 나스닥의 고객이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 동 대체거래소를 이용하게 됨

□ 역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대체거래소인 BATS, Direct Edge와 같은 성공적인 대체거래소들은 규제 또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정규거래소로 전환하였고, 현재는 CBOE에 인수됨

라) 대체거래소의 분화

□ 거래플랫폼의 다양화와 금융 IT기술의 발달로 고빈도매매가 급속히 증가 → 미국 50%, 유럽 30% 정도 점유

□ 다크풀과 같은 일부 사설거래시스템들은 내부거래시스템 등 정규거래소가 수용하기 어려운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

마) 아시아 주식시장

□ 아시아 지역은 패러다임 전환과정 : 매매전자화, 서비스다각화 등 수요가 증가하고 법규자체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

□ 그러나 규제수준이 여전히 높고, 국가간 유동성 격차, 투자자간 기술역량의 격차가 커서 거래소간 합병, 대체거래소의 등장, 고빈도매매의 확산이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있음

○ 기관투자자의 기반이 약한 것도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며, 일본 약 5%, 호주 약 10%를 대체거래소가 점유

바) 각국의 대체거래소 도입현황

□ 미국

○ 2017년 말 현재 NYSE(뉴욕증권거래소), CBOE(시카고옵션거래소), NASDAQ(나스닥) 등 13개 정규거래소와 90여 개의 대체거래소 등록

○ 대체거래소가 일정거래량(미국의 경우 10%)를 초과하면 정규거래

소로 전환해야 함

○ 현재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대체거래소는 대부분 다크풀(Dark Pool, 익명거래시장)로 확인되며,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시티그룹, JP모건, 크레디트스위스 등 대형 브로커-딜러는 대부분 사설 대체거래소를 보유

1위	NYSE	상장 50%, 매매체결 21.9% 점유
2위	Cboe	상장 10%, 매매체결 19.24% 점유 ➔ BATS, Direct Edge를 인수하여 미국 제2의 거래시장으로 성장
3위	Nasdaq	상장 30%, 매매체결 18.94% 점유

<참고> BATS Global Market

□ 미국의 대표적인 대체거래소인 BATS는 2008년 정규거래소로 전환한 후 Direct Edge와 합병

□ 더 이상 대체거래소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대체거래소로 출범하여 미국 및 유럽시장에서 성공한 대표적 시장이므로 연혁적으로 의미가 있음

□ BATS Global Market자회사인 BATS Exchange와 BATS Trading Europe은 2017년 2월 CBOE가 인수

□ 유럽

○ CBOE가 '17년 34억불에 BATS를 인수, 유럽 최대의 Pan-European 거래소 중 하나로 런던거래소, 독일거래소와 경합 중 (각각 약 14% 내외의 점유율)

○ 유럽에는 약 150여 개의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다자간거래시설)가 등록

- 대표적인 MTF는 BATS Chi-X(現 CBOE), Turquoise
- LSE의 AIM 등 중소기업 주식시장은 MTF 형태로 운영

○ 이들 MTF는 설립 당시 부터 소규모 인력과 낮은 수수료 등을 배경으로 원가경쟁에서 장내거래소를 크게 추월. 평균 매매체결시간(Average roundtrip latency)도 정규거래소 추월

- 2010년 당시 LSE가 최대 1ms(millisecond)인데 반해 Chi-X의 경우 0.45ms에 불과. 속도 면에서는 NASDAQ OMX(Europe)가 가장 빠른 0.25ms 소요

<참고> Chi-X

□ Chi-X는 유럽 최초의 다자간거래시스템. 낮은 수수료와 신속한 처리능력에 힘입어 설립 14개월 만에 FTSE 100 지수 종목 거래의 13%를 장악

□ 2010년에는 유럽 전체시장의 약 19%를 점유하여 독보적 1위 MTF였으며, 2위 MTF였던 BATS Europe은 5.5%에 불과하였음

○ Turquoise는 2018년 현재 약 6.6% 점유

<참고> Turquoise

□ 유럽의 금융투자지침 MiFID의 제정이 전망되던 2006년 7개 금융회사가 설립한 대체거래소. 영국 런던에 본사 소재

□ 2008년 8월부터 거래 개시. 주주인 9개 투자은행(IB)들이 6개월간 주식을 독점 거래하는 협정을 체결 → 개장 3주 만에 유럽시장 점유율 8위 등극

□ 공개주문시장(visible order book)과 다크풀(익명거래시장) 동시 운영 → 여러 시장 수요 충족

□ 그러나 2009년 3월 독점이용계약 만료 후 시장 점유율이 급감, 2010년 2월에 런던거래소가 60%의 지분을 인수.

<참고> NASDAQ OMX Europe

□ 초대형 거래소인 NASDAQ OMX가 런던에 설립한 범유럽 대체거래소. 2008년 9월에 개장

□ 2009년 5월 다크풀인 NEURO Dark를 출범 등 차별화 시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래량 감소와 경쟁 격화 → 2010년 4월 유럽시장점유율이 0.78% 불과하는 등 사업부진 ➔ 2010년 7월 영업 중단

□ NASDAQ OMX Europe뿐 아니라 많은 대체거래소가 출범 이후 수익달성에 실패

□ 일본

○ 2018년 1월 기준 SBI JapanNext, Chi-X Japan 등 2개의 대체거래소가 금융청 인가를 받아 운영 중

○ 최근 일본 대체거래소의 비중은 약 9%(JapanNext 6%, Chi-X 3%)로 북미(약 40%), 유럽 (약 20%)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

- 다크풀(익명거래시장)은 ToSTNeT을 통한 시간외거래로 이루어지며, 한국거래소의 대량매매거래제도와 유사

3) 국내 대체거래소 관련 제도

가) 국내 대체거래소 도입 경과

□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 기존 거래소 법정설립주의가 허가제로 대체

-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등 운용 자율성 부여
-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 규제는 거래소와 동일 수준 유지

○ 자본금 요건, 거래량 한도 제한 등 제약요인 존재

- 시장전체의 5%, 개별종목의 10% 한도 거래량 제한
- 대체거래소에 대한 주식소유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로 제한(금융투자업자, 외국 대체거래소와 제휴 등 예외적으로 30%한도)
- 취급 상품은 거래소 상장주식 및 증권예탁증권으로 한정

□ 2016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운영제약 완화

○ 거래량 한도 상향 조정(시장전체 15%, 개별종목 30%)

나) 대체거래소 관련 법규 요약

구 분	내 용
대체거래소 설립	인 가 제
규정 적용	• 한국거래소와 동일 : 시장 감시, 시장 안정화 조치, 공매도 제한,가격변동제한 폭 • 대체거래소 자율 결정 : 매매수량단위, 최소호가단위, 거래시간, 익명대량매매체결
최저자본금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 최저자본금 : 200억원(자기매매포함시 500억원) • 1인당 소유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5%이내. 단, 외국 대체거래소나 자산운용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30%까지 예외 인정
취급종목	주식 및 증권예탁증권(DR)
거래량 한도	시장 전체기준 15%, 개별종목기준 30%

4) 대체거래소 설립 방안

가) 대체거래소 설립 필요성

□ 최첨단 대체거래소를 설립하여 지역 금융시장을 활성화,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

○ 현재 한국거래소 본사는 부산에 소재하나 실질적인 금융상품(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매매거래는 서울에서 처리됨에 따라 지역 금융시장 발전에 한계로 작용

○ 부산이 아닌 서울 등 타 지역에 설립되는 경우 시장분할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수입 감소 등으로 부산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될 우려

○ 따라서 매매체결속도, 거래수수료 및 운용비용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대체거래소를 부산에 설립, 운영함으로써 시장 분할에 따른 경제적 효익과 시장 선점 효과를 공략할 필요

□ 디지털거래플랫폼 중심지로서의 기반 마련

○ 대체거래시스템 개발 시 국제금융거래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초고속 매매체결 알고리즘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개념 등을 접목한

금융IT 융합 디지털거래플랫폼 구축 가능

○ 동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국내 상장금융상품(삼성전자 등)은 물론 외화증권(Apple, Google 등) 글로벌 주식의 직거래가 가능한 국제 거래소로 육성하여 부산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

○ 특히, 미국과 유럽(독일, 스위스 등), 싱가포르 등 외국의 STO 도입사례를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권형토큰(STO)가 도입될 경우 ATS에 상장되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ATS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핵심인프라가 될 것임

□ 주요국의 대체거래소 운영 현황과 국내 관련 법규, 법인 설립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설립 추진

○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상품 (현재 주식과 DR만 가능하며 ETF와 채권은 제외)을 대상으로 일정한도(종목당 거래소 평균거래량의 15% 이하)까지 매매 또는 중개알선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종전의 '증권회사')를 의미

○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해 발행주식의 1인당 소유한도(원칙 15%, 금융기관외국의 대체거래소 30%), 최저자본금(중개 200억, 자기매매 500억) 등 자본시장법상 법정 요건과 금융투자업 규정상 독립된 매매체결시스템, 업무규정 및 전문인력 등 인적, 물적 제반 요건을 구비한 법인을 설립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할 필요

□ 대체거래소 설립추진시 기본 전제

○ 대체거래소 본사 및 매매체결시스템이 부산에 소재해야 함

○ 최고속도(매매체결시간), 최저비용(수수료) 구현

- 매매체결시스템 : NASDAQ 등 외국 대체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최고속도와 안정성을 갖춘 알고리즘 구현
- 원장관리 등 운영 :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 적용으로 최소 비용 구현, 첨단 금융 IT 기술 선도

○ 발행플랫폼의 유연성과 시스템의 높은 호환성 유지

- 발행플랫폼의 유연성: 상장주식, 채권 및 ETF 등 이외에 향후 발

행이 예상되는 디지털자산(주식, 채권 등 전통적 금융상품이외에 펀드, 부동산, 선박, 지적재산 등 증권형토큰화가 가능한 모든 STO상품)이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도록 개발

- 높은 호환성: 디지털플랫폼의 핵심은 국내는 물론 국제네트워크에서 통용될 수 있는 높은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유지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플랫폼의 암호화, 분산원장관리 등 탈중앙화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내외 ATS에 비하여 경쟁력있는 매매체결속도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토콜(이더리움기반의 스마트컨트랙트 등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투자자보호와 거래안전을 확보해야 함
- 이 경우 부산이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나) 대체거래소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목적

○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내외 관련 법령 검토, 증권회사 의견수렴, 출자자 모집, 업무모델 및 시스템 개발, 업무규정 제정, 금융위 인가 등 제반절차 수행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예

○ 외국계 대체거래소, 부산지역 증권회사(BNK 그룹), 예탁결제기관(한국예탁결제원) 및 부산시가 컨소시엄 구성

- 추후 국내외 증권회사 및 투자은행(IB)으로 확대 가능

다) 대체거래소 설립 자본 및 소유 지분

□ 법령상 대체거래소 주식의 1인당 소유한도 15%(금융기관 및 외국 대체거래소는 30%)와 최소자본금 200억원을 고려하여 소유지분 분산 필요

□ 향후 국내외 증권회사, 투자은행 및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분 조달 및 소유주식 분산

□ 부산시는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행정적 지원

○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간사역할을 수행하여 외국계 대체거래소 및 국내외 금융기관 섭외, 규정 및 인가 등 대정부 업무를 지원

라) 대체거래소 BIZ모델 및 시스템 개발

□ 국내외 환경을 종합하여 최적의 BIZ 모델 및 시스템 개발 마스터플랜 작성

□ 감독기관(금융위) 및 잠재적 이용고객(증권회사)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국제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춘 모델 개발

□ 필요 시 최첨단 외국 대체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IT기술 및 운영 노하우 전수

□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여 운영 비용 최소화 및 보안성 강화

○ 대체거래소의 직접참가자(이용자)는 증권회사(또는 대형 기관투자자) 이므로 블록체인 방식의 분산원장관리 가능(결제, 거래 내역 관리 등)

마) 대체거래소 시스템 개발 주요 고려사항

□ 알고리즘고빈도매매 제공

○ (지역별 비중) 주식시장 알고리즘매매의 지역별 비중은 미국이 가장 높고, 유럽, 아시아 순. 예외적으로 일본은 고빈도매매의 비중이 매우 높음

- Aite, TABB Group의 추정 알고리즘 매매 비중: 미국 50%~60%, 유럽 25%~30%, 아시아 10%~20% 수준. 일본의 경우 미국과 같은 60% 내외. 호주는 27% 수준이며 한국은 4% 내외

○ (시사점)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시장은 알고리즘 매매 수요가 적고 규제수준이 높으며 시장인프라가 미흡함. 이는대체거래소 부재가 주 원인 중 하나

- 일본 : SBI JapanNext, Chi-X Japan의 등장으로 시장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알고리즘고빈도매매를 유치하기 위한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이 꾸준히 진행 중
- 호주: ASX, Chi-X Australia와 여러 다크풀이 운영되어 시장간 경쟁환경 조성
- 싱가포르: 거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거래소(SGX)는 최근 알고리즘 매매 유치를 위해 시스템 속도 및 연결성을 개선, Colocation 서비스 제공을 시작
- 한국: 높은 거래세와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알고리즘 매매에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거래세가 없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알고리즘매매 비중이 매우 높아 거래 수요 기반은 이미 형성된 것으로 평가

□ 시장접근성 제고

○ (시장접근성) 거래시스템에 호가의 주문, 취소, 정정을 전달함에 있어서 브로커의 개입 정도, 절차의 간소함, 속도의 지연(latency) 정도를 의미

○ DMA(Direct Market Access): 브로커의 주문대행 없이 투자자가 직접 주문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문을 거래플랫폼에 전송함으로써 주문처리시간을 단축

○ 동역서비스(colocation service)와 근접서비스(proximity service)는 투자자의 주문시스템을 거래플랫폼의 매매체결시스템에 물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함으로써 접근속도를 높이는 서비스

- 동역서비스와 근접서비스는 DMA서비스와 함께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제공하려면 부산 또는 인근(최인근 통신사의 서버가 있는 부울경)에 회원증권사가 주문체결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한국거래소의 거래속도 및 시장접근성

○ 대체거래소의 경쟁거래소가 될 한국거래소는 2014년 3월 체결속도 등 성능을 개선한 EXTURE+ 시스템을 도입 : 기존 대비 매매체결처리성능 285배, 초당 처리건수 2배, 일일처리용량 2배 이상 개선

- 개선 배경은 알고리즘거래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고빈도매매와 지연감소가 가능해야 함

○ 단, 한국거래소는 2014년 1월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여 거래환경조성 측면에서 파생상품시장에 colocation 도입계획을 밝혔으나 현재 미 시행중임

- 따라서 부산 대체거래소가 주식거래 시 DMA와 동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빈도의 초단타매매 시 초당 처리건수와 건당 응답속도 모두 한국거래소보다 빠를 경우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 정교한 수익성 분석을 위하여 이용자인 증권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수요분석, 거래소와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여 심층적 분석을 요하나, 설립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개량분석을 시도함

○ 거래소와의 공정한 가격경쟁(수수료 경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최선집행의무 여부임

○ 최선집행(best execution)이란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로서, 미국은 '가격'을 단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은 가격 외에 체결가능성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음

- 즉, 미국의 경우 2005년 Reg NMS에서 고객이 제시한 주문과 각 시장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시장에 의무적으로 회송하도록 규정하여 시장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유럽은 MiFID 지침을 통해 가격 이외에 체결가능성, 비용 등 제반

요인을 비교하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합리적 조치를 하였는지를 증명하고 거래 상위 5개의 거래시장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므로 결국 가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거래소간 공정한 경쟁이 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정규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경쟁조건을 균등화하기 위하여 2004년 금융시스템 개혁법을 개정하여 거래소집중원칙을 수정하고 최선집행의무(일본에서는 '최량집행의무'로 표현)을 도입함(대체거래소의 가격발견기능 도입)
-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선집행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일본과 같이 추상적인 기준이어서 한국거래소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는 일본과 같이 거래소주문 집중현상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

바) 수익성 분석

□ 기본 전제

○ 현행 법규상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능한 금융상품(한국거래소 상장 주식, 채권)에 한정하여, 한국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율과 최근 10년간 일평균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추정 가능

○ 특히, 최근 수년간 한국거래소 일평균거래량이 급증한 결과를 반영할 경우 종전(2018년 이전)에 비하여 수익성이 상당부분 향상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수수료 요율

○ 거래소의 수수료율과 동일하게 계상하되, 영업시간은 일본대체거래소 등 외국과 같이 전일매매(8:30 ~ 23:59) 가능한 것으로 상정

- 수수료 및 영업시간은 현행 규정하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주요 수익성 결정 요인: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및 일평균거래량

○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가 15%까지 상향된 점과 최근 3년간 일평

균거래량이 급증한 점이, 수익성 분석시 주 고려요인이 될 것임

<참고> 2018년 수익성 분석결과 (상장주식만을 거래하는 것으로 가정)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대체거래소의 연간 수수료 수익
5% 적용 시	100억원
10% 적용 시	200억원
15% 적용 시	300억원

사) 기대 효과

□ 금융중심지 부산의 위상 강화

○ 최고매매체결속도, 최저수수료율을 제공하는 최첨단 대체거래소의 운영이 가능한 금융중심지 부산의 디지털금융 인프라 조성

□ 최첨단의 투명하고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제공

○ 블록체인 기법을 적용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호완성과 보완성을 강화한 안정적 IT 환경 제공

□ 시장접근성 강화로 부산의 금융IT 집적도 제고

○ DMA, 동역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외 증권회사와 기관투자자의 매매주문시스템 서버가 부산에 소재하도록 유도

3)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산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예상

□ 글로벌 거래소 운영을 통한 부산의 국제금융센터 위상 강화

○ 부산 대체거래소를 통해 Apple, Google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주식을 최고 속도, 최저 비용으로 거래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강화

5) 외국 사례연구: 일본의 대체거래소 시장

가) 일본 대체거래소시장의 특성과 시사점

□ 일본과 한국은 발행, 유통시장과 금융환경 및 법규체계가 유사

□ 한국거래소와 동경증권거래소의 매매방식 및 규제내용 유사

○ 일본에서 대체거래소 도입 시 공개매수규정 예외적용 (5%초과 Tender Offer시 사전신고 면제)

○ 일본은 2013년 우리나라와 같이 대차공매도(covered short sale)만 허용하고, 대체거래소에도 동일하게 적용

○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 규정 개정, ’18년 4월부터 시행 예정

나) 일본 대체거래시스템의 특징

□ 매매방식, 청산결제, 거래내역 공시 등 실제 대체거래시스템 운영시 실무사항을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 필요

○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와 동경증권거래소는 시장정보를 독점 공시(유료 판매)하나 일본의 대체거래소는 협회를 통하여 거래정보를 공시(무료)

○ 청산결제의 경우 일본은 일본거래소그룹(JPX)의 자회사인 일본증권청산기구(JSCC)를 통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독립된 예탁결제기관인 일본 중앙예탁기관(JASDEC)을 통하여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나, 한국은 대체거래소에서 체결된 거래도 한국거래소가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업무개발시 이해상충문제, 결제자료 통보 등 업무 네트워크 구축시 협력 문제 등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에 상호 조율하여 선결될 필요가 있음

○ 시장감리의 경우 일본은 대체거래소 자체에서 수행하나 한국은 한국거래소가 수행하게 되므로 법규 개정을 통한 역할 관계 조정이 필요함

- 즉, 현행 우리나라의 대체거래소 관련규정상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단지 매매체결만 시켜주는 곳(다자간매

매체결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이므로 이러한 해석(상장심사 및 감리업무를 한국거래소가 수행)이 가능함

- 하지만 대체거래소와 한국거래소는 궁극적으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대체거래소가 수행하는 매매체결업무의 감리 및 청산을 한국거래소가 담당하는 것은 마치 두 선수가 경주시합을 하면서 한 선수가 다른 선수를 심판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다) 일본 대체거래소의 조직구조와 주주구성

□ (조직 구조) SBI JapanNext와 Chi-X Japan 모두 증권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형태(우리나라의 현행규정상 대체거래소도 다자간매매체결을 업으로 하는 증권회사이므로 결국 일본과 같은 구조임)

○ 국내외 금융기관이 주요 주주로 참여

○ 일본의 경우 대체거래소는 증권업의 일환으로 인가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므로 양사 모두 대체거래소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증권사 형태임

라) 시장구조: 거래참가자, 시장 구성, 거래상품, 매매방식 등

□ (시장참가자: 대체거래소의 회원) SBI JapanNext와 Chi-X Japan은 회원을 증권사(브로커-딜러)로 제한

○ 회원사 수 : ’15년 24개, ’16년 23개

○ 절차 : 회원신청과 승인

○ 자격 : JSCC(Japan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 동경증권거래소의 자회사인 청산기관)을 통한 청산결제 자격을 갖춘 자

□ (거래 상품) 동경증권거래소 상장주식과 ETF

○ SBI JapanNext의 경우 거래시간과 체결 방식에 따라 하위시장을 운영

○ 일본 PTS는 현재(2018년) 규제상 파생상품, 채권은 거래 불가

□ (시장 구성) SBI JapanNext는 주간 시장, 야간시장, X-market, VWAP market 등 네 개시장을 대체거래소 시장으로 운영

○ 연속경쟁매매시장을 시장 운영 시간(영업시간)에 따라 주간시장과 야간시장으로 구분(거래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음)

○ X-market과 VWAP는 매매체결방식의 차이에 따른 구분임

○ Chi-X Japan은 단일의 연속경쟁매매시장만 운영

마) 운영구조:정보비용, 거래수수료, 호가단위

□ (정보비용, 거래수수료) SBI JapanNext와 Chi-X Japan은 동경증권거래소(이하 동증)와 달리 시장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거래수수료 역시 동증에 비하여 저렴함

○ SBI JapanNext의 경우 주간시간의 연속경쟁매매 수수료는 동증과 동일하나, 야간시간 거래나 연속경쟁매매 이외의 체결방식인 경우 동증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

○ Chi-X Japan의 경우 시장가주문(liquidity taker)의 경우 0.2bps를 적용하는 반면 지정가주문(liquidity provider)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 (호가 단위) SBI JapanNext와 Chi-X Japan은 동증에 비해 매우 세분화된 호가단위 적용

○ 동경증권거래소는 가격대비 호가단위의 비율이 0.13%인데 반해, SBI JapanNext는 0.09%, Chi-X Japan은 0.03%에 불과. 고가의 주식일수록 동증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

○ 이는 호가스프레드(호가와 다음 호가간의 간격)을 줄여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기관투자자의 거래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정책

* 이처럼 거래단위를 세분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테면 증권형토큰을 ATS에 상장하여 거래할 경우 공모부터 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투자자 및 발행자 모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예를 들면, 부산소재 벤처기업이 개발한 블록체인기술의 소유권을 디지털 자산화하여 증권형 토큰형태로 일반에 공모(STO)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거래단위를 세분화(예를 들면 100원 단위)

하게 되면 일반 소액투자자도 당해 토큰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ATS에서 거래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환금성과 토큰발행자의 자금조달 편의성도 제고

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장기과제

1) 가상화폐 기반의 발전전략

□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을 통한 글로벌 기축 가상화폐 개발

□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페이스북의 가상자산 디엠(Diem, 舊 리브라(Libra))는 2019년 6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의 견제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더딤

○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법정화폐와 가치 연동)을 목적으로 했던 디엠은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마켓에서 안정성을 유지하여 기축통화 역할을 꾀했을 가능성이 높음(통화 바스켓: 미국 달러 50%, EU 유로 18%, 일본 엔 14%, 영국 파운드 11%, 싱가포르 달러 8% 예측)

○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등 패밀리앱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24억명이 넘는 글로벌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디엠을 발행하면서 결제, 전자상거래, 은행 서비스 등을 가지게 되면 글로벌 화폐의 구조를 흔드는 파급력 발생 예상

○ 이용자들이 모두 디엠으로 환전하여 화폐를 사용하게 될 경우 기존의 화폐들을 사용하는 은행들의 지불능력 하락 및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혼란 야기할 수 있고, 디엠을 통한 자유로운 환전과 해외송금은 국제 자본이동의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자금세탁문제, 더 크게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각국(중국, 일본, 유럽, 한국 등)의 중앙은행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

○ 한국은행도 내부에 디지털 화폐 전담 조직인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꾸려 이론적인 연구와 디지털 화폐 구현에 필요한 기반 기술 연구 진행 중

□ 카카오는 2018년 3월 블록체인 개발사인 그라운드X를 설립하고 블록체인 클레이튼과 가상화폐 클레이를 개발 및 발행

○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과 카카오톡에 탑재된 가상자산 지갑 클립(Klip)을 개발

○ 클레이튼 정식서비스 개시 1년여 만에 32개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카운슬(Governance Council)을 구성하고 총 76개의 파트너사를 모으며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중

○ 특히 20년 8월에는 50조 기업가치를 평가받은 미국 전자결제 1위 회사 월드페이(World Pay)가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

○ 그라운드X는 국내에서 암호화폐 공개(ICO)를 포함한 토큰이코노미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 사업을 규제하고 있기에 일본에 법인을 설립(일본의 경우 2016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암호화폐를 공식 결제 수단 및 자산으로 인정)

○ 그라운드X는 암호화폐를 통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18년 11월 ‘클레이튼’이라는 이름의 특수목적법인을 싱가포르에 설립(싱가포르는 자금을 조달이 쉽고 조세 혜택이 큰 영향으로 예측,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 중앙은행 주도로 암호화폐 공개(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암호화폐 사업에 우호적인 정책)

□ 페이스북의 디엠과 비슷하게, 카카오의 클레이튼 및 클레이도 카카오플랫폼과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패밀리앱과 사업, 그리고 국내외의 파트너사와 함께 글로벌 통용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가능성 존재

<그림 4-19> Klaytn Governance Council

출처: 클래이튼 홈페이지

□ 부산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혜택 및 지원을 통해 부산에 그라운드X 및 클레이튼 유치시 대기업의 낙수효과로 인해 다양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리딩 디지털 기축 통화 보유지가 될 가능성 기대

○ 특히 부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법정화폐인 동백전을 개발하여 지역화폐로서 운영 중

○ 한국은행에서 개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부산의 동백전 그리고 그라운드X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관련 금융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점기대

- 페이스북 디엠의 경우 원화를 통화 바스켓으로 사용하지 않기에 원화의 입지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2) 블록체인 기반의 발전전략

□ 현재 정부의 정책상 암호화폐 분야를 지원하기 어려움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육성한 후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 추진 필요

□ 부산은 2019년부터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어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사업을 1차 시작으로 부동산, 데이터 거래, 의료 마이데이터 등 총 3개 사업을 추가하여 진행 중

○ 1차 특구 지정 사업을 통해 물류분야의 B fresh, 관광 분야의 B Tour, 공공안전분야의 시민안전제보, 금융분야의 디지털바우처, 부산 블록체인 통합서비스인 B pass라는 앱이 출시되었으며 실제로 부산 시민들이 사용 중, 추가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순수365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수질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를 제공

○ 개발중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들을 토대로 새로운 벤처, 스타트업 레벨의 회사들을 지원하여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플랫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인 필요

○ 해당 벤처, 스타트업들이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부산에서 사업을 전국적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부산 소재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혜택, 인센티브 등이 필요

○ 부산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한 플랫폼 서비스, 디지털 바우처를 이용한 플랫폼 서비스 등 추후에 한국형 CBDC가 개발되고 상용화 될 때 바로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유인 가능

○ ‘기업 인식조사 기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정책연구’에 따르면 부산지역 블록체인 관련 기업 26개사의 블록체인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으로 1. 규제로 인한 어려움, 2. 정부의 정책적 지원 미비, 3. 불확실한 시장성을 뽑음

○ 또한 블록체인 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1.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 어려움, 2. 전문인력 부족, 3. 법적 규제로 인한 서비스 사업화 어려움을 뽑음

○ 따라서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에게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및 완화와 기술개발/도입 자금지원이 필요한 시점

□ 부산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중심지 발전전략

①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공용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②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전문지원 공기관 설치 필요(기업 연계, 네트워크, 법/제도 피드백, 자금지원 창구 등)

3)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전략

가) 부산시 클라우드 산업 현황

□ 부산시는 '19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부산 클라우드 3.0' 전략을 추진 중이며, 데이터센터는 다양한 산업영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16년부터 '18년까지는 '부산 클라우드 2.0' 계획을 추진, 소프트웨어 기업 유치에 집중해 해외와 국내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더온비즈온을 센텀시티에 유치

□ 부산시는 지정학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진 안전지대로, 일본과 대만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우회경로로도 활용됨.

○ 이에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데이터센터 강자인 홍콩,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부산 데이터센터 육성계획에 따라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

○ 또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 해저케이블의 90%이상이 부산으로 들어오고, 일본과는 최단거리(250Km)의 전용 해저케이블이 위치하고 있어 대한민국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볼 수 있음

□ 부산 정보산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무료 IT 교육도 실시하는 등 지역 IT 생태계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활동을 진행

○ 지식경제부는 2011년 5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5년 내 클라우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개 과제를 선정함

□ 클라우드 정책 5대 과제

1.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 클라우드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존 법령을 개선하고, 인증제와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가이드 등을 마련해 이용자의 불안 해소

2. 공공부문 IT 인프라 선진화, 클라우드의 선도적 도입: 정부가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하여, 국가 IT인프라의 효율화와 예산 절감 및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창출에 기여

3.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및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 표준화,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자금 지원, 인력 양성 및 테스트베드 확대

4. 글로벌 IT 허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육성: 글로벌 IT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데이터센터에 클라우드를 접목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육성하는 한편, 해외 데이터센터를 적극적 유치

5.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튼튼한 수요 기반 조성: 클라우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시장 활성화와 수요 견인에 노력

□ 네트워크 및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들의 수요 확대를 통해 국내 IT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FDI의 증대 예상

○ 차세대 컴퓨팅 기술의 고도화에 기여

○ 데이터의 허브화로 국가데이터 안보 확보 및 데이터료 수입 증대

나) 부산 외 지역의 유치 및 시도 현황

□ 우리나라에는 현재 2019년 기준 158개의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며, 클라우드 산업에서 부산이 가장 앞서고 있다고 평가되나 부산 외 강원, 대구, 파주 등이 클라우드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음

□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강원도와 춘천시도 클라우드 산업에 적극적인 상황

○ 더존비즈온의 춘천 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강원은 소양강댐의 냉수를 이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K클라우드 파크' 사업을 추진 중

○ 국내에서 수열에너지를 이용해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최초로 평가

○ 강원, 춘천, 수자원공사, 동서발전 등이 사업 유치를 위해 협업 중

□ 대구시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제3의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과 클라우드 주무기관인 정보화진흥원의 이전으로 클라우드 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대경ICT산업협회 등이 지역 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 컨설팅을 통해 지역 적합 사업 모델 구상 중

다) 시사점

□ 지자체의 클라우드 센터 유치 정책은, 단순히 서버유치뿐 아니라 IoT, 소프트웨어 등 후속산업 지원을 통해 실질적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성과가 없을 경우 해당 기업체에 전기료나 부지만 싸게 주는 격이 되어 이득이 없을 가능성 존재

○ 후생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면 유치의 의미가 퇴색됨.

□ 직접적인 효과는 클라우드로 인한 연관 파생산업으로 인한 고용효과 및 경제 활성화 효과와 데이터센터건립에 들어가는 건설비용 등으로 지역 건설 경기 부양 효과로 볼 수 있음

○ 최근 오라클이 강원도로, 소프트뱅크 및 네이버 등이 김해시로 방향을 틀며 부산시가 클라우드 센터 유치에서 차지한 위치가 공고히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 대두

바. 국제금융인력 양성 방안

1) 부산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 2009년 9월 부산 및 서울 국제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설치를 계획.2017년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성 예산이 통과 후, 9월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부산대와 한국해양대가 금융위원회와 부산광역시로부터 '금융중심도시' 부산의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금융대학원 설립 교육기관으로 선정

○ 두 대학은 4년간 각 50억원과 30억원을 지원받아 부산 금융중심지를 이끌어갈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파생금융특화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과 해양금융전문가를 양성하는 해양금융분야 특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 과정을 운영

○ 향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해운, 선박, 조선 및 금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국제 고급 전문가 양성 중

□ 해당 부산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뛰어난 교수진 구축과 안정적인 교육과정 진행, 꾸준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제금융인력을 양성하고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과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 필요

가) 관련 법령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중심지법)
[시행 2012. 4. 1] [법률 제11069호, 2011. 9. 30, 일부개정]

○ 제10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2. 5.] [부산광역시조례 제6091호, 2020. 2. 5., 일부개정]

○ 제9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융기관이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합연수원을 시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 개요: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핀테크, AI 등 혁신적 기술 발전으로 금융 산업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됨. 1년 반이라는 수학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석사 과정을 운영함. 구체적으로 R과 데이터마이닝, 파생상품론, 투자론 등 전공필

수 과목을 베이스로 하여, 트레이딩 실습, 파생 금융법, 구조화 금융론, 글로벌 파생 금융 실무 특강, 핀테크, 금융 빅데이터 분석 등의 강의를 제공하며, 방학 중 해외 연수도 실시함(6학점). 또한 최신 금융 트렌드를 발맞추어 따라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국제 금융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금융계 리더들과 실무전문가들을 초빙한 강연도 제공함.

□ 학부(과)소개

○ 소재지

- 설립유형 : 국립
- 대표전화 : 051-510-1092~1093
- 소재지 : 부산광역시
- 학교주소 :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 교육목표

- 파생 금융전문지식과 글로벌 감각을 지니며 고도의 윤리의식을 겸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 교육 - 파생 금융의 글로벌 리더 육성, 금융 윤리 교육 강화, 글로벌 공동프로그램 개설
- 연구 - 파생분야 연구 특성화, 연구 환경 선진화와 국제화를 통하여 연구력을 강화시키며 그 결과를 금융전문인력 교육에 feed-back
- 글로벌 네트워킹 - 파생 금융전문대학원, 글로벌 금융전문대학원, BIFC소재 금융공기업 및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연구, 신상품 개발, 해외연수 등에 필요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UC Irvin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Rutgurs University 등)

○ 특전

- 성적 및 외국어능력 우수자 전형: 4년제 대졸 성적 우수자 중 합격자 선발 후, 등록금 300만원의 80%지원
- 외국인특별전형: 일정기준 충족시 300만원 전액 지원
- 해외자격증(CFA) 1차 전액 지원(1회)
- 식비 제외 기숙사비 전액 지원(25인)
- 해외연수 지원
- 다수의 해외저명대학,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BNK그룹과 MOU 체결 완료

○ 대학원 현황

대학원명칭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수업 형태
	박사과정	석사과정	
금융대학원	-	1.5년	주간

○ 대학원 경쟁률

연도별	입학정원(명)	지원자(명)	신입생 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2019	25	70	2.80	176.0
2020	25	36	1.44	100.0

○ 대학원 학과별(전공별)입학정원

학과(전공)	석사(명)		
	2019	2020	2021
파생금융전공	25	25	25

○ 대학원 등록금 및 입학금

기준연도	계열별	등록금(천원)			입학금(천원) (박사,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	석사	석박사통합	
2021	인문사회계열		3,146		181

□ 커리큘럼

○ 교과과정

• 3학기 45학점제 단기 석사학위 취득과정(경영학석사, 파생금융전공)

○ 졸업이수조건

학위	공통기초	전공	논문/특수연구	수료학점
무논문학위	9학점	36학점(해외연수 6학점 포함)	특수연구 0학점	45학점 이상
논문학위	9학점	27학점(해외연수 6학점 포함)	논문연구 6학점	45학점 이상

※ 무논문학위 혹은 논문학위 선택 가능

○ 공통기초

• 금융수학, 고급경제학, 재무관리

○ 전공

• 해양금융론, 해운경제론, 파생상품론 I, 파생상품론 II, 투자론, 데이터마이닝, 핀테크 및 파이선코딩 I, 금융윤리, 행동재무론, 금융환경과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 금융사례연구, 글로벌금융세미나 I, 글로벌금융세미나 II, 블록체인 및 파이선코딩 II, 구조화금융론, 회계원리, 고급기업금융론, 계량경제학, 금융빅데이터분석, 뱅킹, 인공지능, 장외파생상품론, (파생)금융법, 채권분석론, 금융최적화실무, 국제재무관리, 시장미시구조론, 핀테크와 블록체인, 금융사례연구, 고급디지털금융론, 리스크매니지먼트

②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

□ 개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은 해양금융분야의 시장 환경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양금융전문인의 양성을 목표로 2018년 9월 개원.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국내외 저명 해양금융학자 및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을 통해 금융을 비롯하여 해운·조선 등 해양융합지식을 갖춘 글로벌 해양금융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학부(과)소개

○ 소재지

- 설립유형 : 국립
- 대표전화 : 051-410-4114
- 소재지 : 부산광역시
- 학교주소 :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 교육목표

-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해양금융분야 특화 전문가 양성
- 해운・조선・금융의 융합지식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특화 교육
- 해양금융 및 해양산업 관련 기관등과 산학협력 교육 강화
- 해양금융 실무전문가의 현장 중심적 강의 강화

○ 특전

- 3학기 45학점제 단기 무논문 석사학위 취득과정(경영학석사・해양금융전공)
- 성적우수 장학금, 개별 학습 공간 제공 및 기숙사 우선 배정
- 해외석학, 국내외 금융실무전문가 초청 특강 및 국제컨퍼런스 참여 기회 부여

※ (정부지원 확정시) 재학생 전원 장학금 및 기숙사 제공, 해외연수 및 해외학점 취득(6학점)

○ 대학원 현황

대학원명칭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수업 형태
	박사과정	석사과정	
해양금융대학원	-	2년	주간/야간

○ 대학원 경쟁률

연도별	입학정원(명)	지원자(명)	신입생 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2019	30	74	1.30	163.3
2020	30	39	2.47	103.3

○ 대학원 학과별(전공별)입학정원

학과(전공)	석사(명)		
	2019	2020	2021
해양금융학과 (비전일제과정)	15	15	15
해양금융학과 (전일제과정)	15	15	15

○ 대학원 등록금 및 입학금

기준 연도	계열별	등록금(천원)			입학금(천원) (박사,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	석사	석박사통합	
2021	해양금융학과 (비전일제과정)	-	1,818	-	179
	해양금융학과 (전일제과정)		3,000		

□ 커리큘럼

○ 교과과정

• 3학기 45학점제 단기 석사학위 취득과정(경영학석사, 해양금융전공)

○ 졸업이수조건

1학기 (15학점)	겨울학기 (6학점)	2학기 (15학점)	여름학기 (6학점)	3학기 (3학점)
공통필수 9학점 전공필수 3학점 전공선택 3학점	해외연수 6학점	전공필수 3학점 전공선택12학점	해외석학특강 등 6학점	해양금융세미나 3학점

○ 공통필수

• 금융수학, 고급경제학, 재무관리

○ 전공필수

• 해양금융론, 해운경제론, R과 데이터마이닝, 파생상품론 I, 파생상품론 II, 투자론 중 2과목 이상

○ 전공선택(해양금융)

• 해양금융특강, 선박금융투자, 해양금융실무 및 사례, 해양금융계약실무, 해운리스크관리, 해운파생상품, 해상보험론, 해운시장론,

해운회계, 해운산업과 경영전략, 해운경기 예측론, 선박용선론, 선박관리론,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이해, 금융경제학, 해상법, 프로젝트파이낸스, 금융빅데이터분석, 해양금융세미나

2)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 2020년 6월, 금융위원회와 서울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금융회사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금융위-서울시 공동사업으로, 금융회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KAIST가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비학위・학위)를 제공

○ 금융위와 서울시는 디지털금융 교육을 위하여 금융회사가 밀집한 여의도One IFC를 교육장소로 조성하고, 국제적 수준의 디지털금융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4년간(20년 ~ 23년) 총 약 190억원 지원

○ KAIST는 금융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디지털금융 이론 및 실무 교육과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최고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자체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

□ 부산시 또한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함께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디지털금융, 핀테크 관련하여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과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필요

가)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KAIST 경영대학(여의도 금융대학원) 디지털금융 MBA (DFMBA)

□ 개요: 디지털금융 MBA는 국제금융중심지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시, 금융위원회, KAIST 경영대학이 공동 개설한 2년제 금융-IT 융복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여의도에 위치)에서 평일 저녁 2회, 토요일 1회 수업을 실시. 디지털금융 MBA는 계량

및 금융기초와 금융핵심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1년차에 습득. 이러한 기반 위에 데이터 사이언스와 심화된 금융 지식(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집중분야, 핀테크 창업 집중분야,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 집중분야)을 더함으로써 금융과 IT가 융합된 교과과정을 제공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디지털금융전문인력 양성을 목표. 총 2년 42학점을 이수하면 MBA학위 수여

□ 학부(과)소개

○ 소재지

• 설립유형 : 국립

• 대표전화 : 02-6274-6184 / 02-6274-6186~6187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학교주소 : (07326)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번길 One IFC 17층 여의도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 교육목표

• 금융-IT 융복합 전문가 양성

•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

• 국내 최고 수준의 금융IT 동문네트워크 구축

• 해외명문대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인재 양성

○ 특전

• 전문성을 강조한 특화된 교육과정

- 탄탄한 수리적, 계량적 기초이론 교육

- 실무중심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 핀테크 창업 /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 집중분야 운영

• 실습 및 현장적용 교육 강화

- 금융산업 각 분야 실무전문가 및 세계적 수준의 KAIST 교수진

- 한국 대표 핀테크 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실습 제공

• 해외 유수 대학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인재 양성

- 북미와 아시아 유수 대학으로 해외연수 및 교환학생 파견

- 핀테크 강국에서의 해외 현장학습

○ 대학원 현황

대학원명칭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수업 형태
	박사과정	석사과정	
디지털금융MBA	-	2년	야간/주말(토)

○ 대학원 경쟁률

연도별	입학정원(명)	지원자(명)	신입생 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2020(가을학기)	40	576	14.40	100
2021(봄+가을)	80	?	3~4:1	100

* 2022학년도 봄학기 입학부터 "연 1회 봄학기 입학"으로만 학생 선발예정(가을학기 입학전형 폐지) 카이스트의 경우 외부에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관련 종사자의 답변으로 3~4:1 정도의 경쟁률이 나타남을 확인.

○ 대학원 학과별(전공별)입학정원

학과(전공)	석사(명)		
	2020(가을학기)	2021(봄학기)	2021(봄학기)
디지털금융MBA	40	40	40

○ 대학원 등록금 및 입학금

기준연도	계열별	등록금(만원)			입학금(천원) (박사,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	석사	석박사통합	
2020	디지털금융 MBA	-	1,200	-	0
2021					

※ 단,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충당받음으로써, 자체재원으로 디지털금융MBA 입학생 전원에게 교육경비의 50%(1학기 60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에 동 사업의 종료가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22년 입학생은 재학기간 전체(2년이내 졸업시), 2023년 입학생은 입학 후 1년간 교육경비의 50%가 지원될 예정

□ 커리큘럼

○ 교과과정

•2년 42학점제 야간/주말 경영전문석사(MBA) 과정

○ 졸업이수조건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	연구	합계
3학점, 1AU	21학점	13.5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42학점 이상

※ 단, 전공필수 교과목 중 최대 9학점까지 이수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이수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교과목 담당 교수의 평가를 거쳐 추천을 받고, 책임교수의 최종승인을 받은 경우, 면제된 전공필수 교과목의 학점에 상응하는 선택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 공통필수

• 경영통계분석, 윤리 및 안전

○ 전공필수

• 3학점: 기업재무, 재무회계, 투자분석, 디지털금융 프로그래밍, 금융 데이터 애널리틱스

• 1.5학점: 금융 데이터베이스, 금융 데이터 마이닝, 금융윤리와 사회책임, 핀테크창업과 신사업개발 또는 디지털금융 사례분석과 사업개발

○ 전공선택

① 핀테크 창업 집중분야에서 최소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② 집중분야(Concentration) 아래 집중분야 이수를 위해서는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집중분야(Concentra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Science)

- 인공지능과 추천시스템(3학점),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정형데이터 분석(3학점), 금융 빅데이터 분석(3학점), 블록체인과 활용서비스(3학점)

•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 집중분야(Concentration in Investment and

Asset Management)

- 알고리즘 거래와 고빈도 금융(3학점), 파생상품 운용 및 거래전략(3학점), 퀀트 및 팩터투자전략(3학점), 연기금 운용전략과 성과평가(3학점)

• 핀테크 창업 집중분야(Concentration in Fintech Startup)

- 창업과 법(3학점),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3학점),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3학점), 핀테크 M&A(3학점)

○ 연구

• 현장적용 프로젝트(3학점), 글로벌금융 현장연구(1.5학점)

② 서울특별시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 서울시는 금융부문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2018년 2월 21일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를 개강하여 비학위 전문가 양성과정 진행

□ 서울시의 제안에 각 금융권 교육기관이 호응하여 추진된 것으로, 지방정부와 금융권이 서로 협력하여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설(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여신금융교육연수원 등 6개 금융권 교육기관)

<그림 4-20> 디지털금융 MBA 교과목 체계도

출처: KAIST 디지털금융 MBA

□ 각 금융 교육기관의 강의 커리큘럼 및 강사 풀을 제공받아 총 108시간의 핀테크 전문가 양성과정이 진행, 전공교육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솔루션, 보안, 감독규정 등 핀테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공통 분야의 교육이 진행

○ 강의 63시간의 공통교육과 45시간의 세 개 트랙별 전공교육으로 구성, 세 개 트랙은 [은행,카드,여신전문업], [투자금융업], [보험

업]으로 구성, 각 금융 분야의 기본적 핀테크 적용 기술과 심화 교육 과정으로 구성

- 트랙1. 은행,카드,여전업 과정
  - 은행 및 카드업의 이해를 통한 지급결제 서비스 동향 분석 및 외국환 업무의 이해
  - 지급결제/송금(외국환 포함) 심화교육 및 P2P서비스 사례 분석과 서비스 모델링
- 트랙2. 투자금융업 과정
  - 글로벌금융기관의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 투자자 성향 파악,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전문지식 학습
- 트랙3. 보험업 과정
  - 기존의 보험산업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핀테크 등의 IT기술이 적용되는 사례 교육
  -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새로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핀테크 적용 기술 학습

□ 매년 60명씩 교육하며, 교육대상은 금융, IT, 소프트웨어 종사 인력 및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대학생 등

□ 공통교과목

○ 핀테크 이슈와 전망, 금융정보보호/보안, 핀테크 관련 금융감독 규정, 핀테크 혁신 지원 제도, 핀테크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블록체인개론 및 전망, 핀테크 소프트웨어, 핀테크 오픈 플랫폼 실습 교육 등

<그림 4-21>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홍보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3) 부산 U-Space BIFC 고급 인력 확충 방안

□ 부산 U-Space(Unicorn-Space) BIFC는 2019년 10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핀테크 혁신기업 지원 및 핀테크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시, BNK금융그룹, (사)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BNK금융그룹 지원), 위워크가 공동으로 조성한 디지털 혁신금융 육성 플랫폼

○ 입주 당시 29개 기업, 128명에서 2021년 6월 기준 43개 기업, 333명이 근무 중, 청년 일자리 창출(205명)의 모범사례

○ 사업목표는 5년차 생존율 50% 달성 (국내 스타트업 평균 30% 미만), 고급 IT 인력 확보, 데이터 의사결정 환경 구축, 국내외 기업간 협업 진행, 국제화 등

○ U-Space BIFC는 입주기업에게 임대료, 일자리, 교육, 법률, 컨설팅, 주요기업 협업, 데이터 랩 등을 집중 지원하며, 매출은 2020

년 기준 270억원으로 2019년 대비 131% 증가

○ 부산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비씨카드, 부산대학교, 글로벌핀테크 산업진흥센터가 공동으로 구축한 '부산금융빅데이터플랫폼 랩'은 입주기업들의 성장과 생태계 조성,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하며, 내년에 구축 예정인 인공지능연구소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부산금융의 새로운 전략 자산

○ 사단법인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는 핀테크 산업 기반의 부산 금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부산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핀테크 기반 부산 금융 생태계 조성,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 지원, 핀테크 산업 기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업 진행 중, 특히 U-Space BIFC 입주기업에게 청년 채용 지원, 부산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랩, 데이터 기술금융 인재양성 교육, 금융기술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임차료 지원, 금융사 협업,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지원

○ U-Space BIFC 플랫폼을 통해 플랫폼 강화, 인재양성, 데이터 기반 사업환경을 구축하여 핀테크 기업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결국 부산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확대해나갈 예정

□ U-Space BIFC에 입주한 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금융기업들에게 채용 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고급 개발자 또는 인력 채용 지원을 진행을 한다면 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현재 U-Space BIFC 입주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들이 많지만 이를 실행하고 구현할 수 있는 고급 개발자들을 리소스 부족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인건비 및 채용 지원을 통해 고급 개발자 및 인력 충원을 통한 사업의 질적, 양적 확대가 가능해지고 추가 고용이 가능해 신진 금융 인력들이 채용된 리더급 고급 개발자 및 인력에게 실제 업무 및 금융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 제공 가능

○ 지원을 통해 뛰어난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U-Space BIFC에 많이 상주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인력들이 와서 금융 전문인력이 되기 위한 일 및 스킬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제공 가능

○ 한국인 고급 인력 뿐 아니라 해외의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고급 인력 또한 채용을 지원하여 자유롭게 열린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밑거름 제공

○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뿐 아니라 현장에서 업무와 기술을 고급 인력에게 배우고 일을 배운 성장된 인력들이 연쇄 창업으로 또 다른 인력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 구조 생성 가능

○ 또한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많이 U-Space BIFC에 올 수 있도록 BIFC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많이 추가하고, 새로온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

○ 처음엔 적은 인원을 지원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실적에 따라 점점 인원을 늘리면 지원을 크게 하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 필요

V. 부산형 모델 구현을 위한 방법론

1. 단계별 접근방안

가. 단계별 추진전략

□ 부산 금융중심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 과제를 제시

□ 바람직한 금융중심지 모델 구현을 위해 앞서 제시한 과제를 추진 시계 (time horizon)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추진

□ 관련 환경 변화 및 이슈가 이미 상당부분 가시화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어젠다와 그 이외의 중장기 어젠다로 구분이 가능

○ 금융규제와 기타 환경 규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개선방안을 도출(법·제도·인센티브 등)

○ 부울경 통합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가칭 '금융/기업지원실'과 같은 조직의 활성화 방안

- 부울경 지역 내 금융회사 설립·운영·이전·현황조사분석·상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설치

- 지원기관으로서 지원체계 구축, 정책 결정 및 실행을 위한 권한 부여와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나. 1단계 (단기)

□ 다양한 국내외의 금융 및 비금융 회사들이 부산에 모일 수 있을 요인을 만들기 위한 부산 지역 산업 발전, 새로운 기술과 금융의 융

합 발전, 금융허브 자생력 확보 전략 수립, 이를 위한 부산시 역할 강화 방안 모색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부울경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 및 부울경 모태펀드의 단계별 조성에서 1단계 조성 및 운영 시작

□ 금융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직 혁신

○ 부울경 통합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가칭 '금융/기업지원실' 설치

○ 부울경 지역 내 금융회사 설립·운영·이전·현황조사분석·상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설치

□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VC 활용 방안과 부산시 역할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 1항 시행령 제정안" 추진

□ 해양금융 선진화 방안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체계적 발전 및 협력 강화

- 금융과 해양산업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해양진흥공사의 업무영역 확장 등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적극 참여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BNK와의 3자 협력을 통해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

□ 디지털 금융의 적극적 육성

○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 활용

○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를 통한 혁신기업 유치전략 제시

○ 블록체인 기반의 발전과제

○ 클라우드 및 데이터산업의 발전과제

다. 2단계 (중기)

□ 다양화되고 발전된 지역 산업과 더불어 부산에 특화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 전략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부울경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 부울경 모태펀드의 중기(2차~3차) 조성

□ 대체거래소 부산 설립

□ 선박금융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 유치

□ 국제금융인력 양성

□ 인프라 금융과 지속가능 금융의 활성화
  ○ 신공항, 북항 재개발, 트라이 포트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다양한 금융기업과 금융회사를 통해 조달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해운, 조선 업종) 지원을 통해 파생금융 및 녹색금융 활성화

라. 3단계 (장기)

□ 부산 금융중심지가 근접한 해외 금융중심지(홍콩, 싱가폴, 도쿄, 상하이)와의 차별점을 구체화하고 부산에 특화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법 개정 및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

□ 부울경 모태펀드 장기(4차~5차) 조성

□ 금융중심지 인허가 규제 개선 및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금융 생태계 조성

□ 現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지원에 관한「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권한 강화

□ 한편으로 상기 추진과제를 전략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금융회사의 집적 촉진

○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조화를 통한 부산형 모델의 일환으로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부울경 통합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 국내 금융 및 일반회사 유치와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 선박금융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 유치를 통한 외국계 금융회사 집적 촉진

□ 금융산업의 발전 지원

○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 및 민관협력 방안으로 부산광역시청 내 '금융/기업지원실' 설치와 회사 설립부터, 운영, 이전, 현황조사, 분석, 상장 등을 위한 One-Stop 조직을 설치

○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형 벤처 캐피탈의 역할 강화 및 부산시 역할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 1항 시행령 제정안" 추진

○ 해양금융 선진화 및 해양진흥공사 역할 강화

○ 파생금융 및 녹색금융 활성화

○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를 통한 혁신기업 유치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창업 활동 및 새로운 핀테크 산업을 장려하며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전략

○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관련 규제 완화방안으로 ICO 활성화 추진

□ 금융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및 위상 강화

○ 부산형 모델 구현을 위한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방안

○ 국제 금융전문인력 양성

○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통한 금융중심지 부산의 위상 강화

- 최고매매체결속도, 최저수수료율을 제공하는 최첨단 대체거래소의 운영이 가능한 금융중심지 부산의 디지털금융 인프라 조성

○ 금융인프라 국제정합성 제고

□ 상기 추진 과제 수행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 배분과 관련 산업의 성장 지원이 필요

□ 그러나 이상의 기준에 의거한 단기 및 중장기 시계의 구분은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책추진 당국은 관련 이슈에 대해서 상시적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점검할 필요

○ 또한 중장기 어젠다 내에서도 세부 과제별로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그림 5-1>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방향

목 표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 국제경쟁력 강화

전 략

- 부울경 통합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조달과 운용의 효율화
-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 및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 생산적·혁신적 분야 금융지원 강화 및 금융의 4차 산업혁명 지원
-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선박 및 해양금융 발전 지원

추진 과제

1 금융회사의 집적 촉진	2 금융산업의 발전 지원
▪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금융회사 집적 촉진(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 ▪ 국내 금융 및 일반회사 유치와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 선박금융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 유치를 통한 외국계 금융회사 집적 촉진	▪ 행정조직 개편으로 가칭 '금융/기업 지원실' 설치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지역특화형 벤처 캐피탈의 역할 강화 ▪ 핀테크 등 혁신산업 발전 지원 ▪ 선박 및 해양금융 발전 지원 ▪ 파생 및 녹색금융 반전 지원 ▪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
3 금융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4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
▪ 금융규제 개선 및 부산형 모델 구현을 위한 혁신금융 법제 개선 ▪ 대체거래소 설립 ▪ 금융인프라 국제정합성 제고	▪ 국제 금융전문인력 양성 ▪ 금융연관산업 발전 지원

마. 기대효과

① 기업친화적인 금융중심지

○ 기존 기업들의 영업 활동이 활성화되고, 신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집적 효과 구현

② 투입-산출-환류가 이뤄지는 금융중심지

○ 지식과 경험이 전혀 남지 않는 기존의 투입·매칭 위주 펀딩에서 탈피하고 환류 및 재생산 통한 GRDP(지역내총생산) 증가

○ 부울경 기업금융투자 설립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적 뒷받침

③ 민・관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금융중심지

○ 기업친화적인 행정 조직으로 체질 개편하여 기업 활성화를 지원

○ 투자금융공사-市-민간금융기관(BNK) 상호작용 확산

④ 초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하는 금융중심지

○ 가덕도 신공항, 북항 통합개발 및 2030 엑스포 등 초대형 사업과 함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전

2. 부산형 모델 구현을 위한 혁신금융 법제 개선방안

가. 부산시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 현행 자본시장법 및 은행법 등의 진입규제 검토

□ 자본시장법 및 은행법 등의 진입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산 금융중심지에 종합금융업 및 예금 수신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하에서 서울 금융중심지 및 다른 지역과의 금융회사 진입규제의 차등화는 인정되기 어려움

□ 금융회사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은행법상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구별이 유일한 사례

○ 은행법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정의(은행법 제2조 10호 가목)

□ 지방은행 영업구역 제한의 법적 의의

○ 지점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거주자를 상대로 예금 등의 계약체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예금권유 등의 영업활동이 제한될 뿐

○ 그러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사실상 영업구역의 제한이 의미를 상실해 가는 추세

2) 최근 일본은행의 업무범위 규제 완화 방안

□ 2020년 12월 22일, 금융청 산하 금융심의회는 [은행제도 등 워킹그룹 보고][111]를 발표

○ 본 워킹그룹은 포스트 코로나의 일본경제 회복・재생, 디지털화와 지방창생 등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은행 및 은행그룹의 업무범위 확충 등을 제언

○ 동 보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은 은행업고도화회사 관련 규제 완화, 사업회사 출자규제 완화, 부수・종속업무에 대한 규제 개선, 외국 자회사・형제회사 업무범위 규제 완화(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

○ 금융청은 향후에 은행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

---

111) 金融審議会、銀行制度等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経済を力強く支える金融機能の確立に向けて-(2020).
(https://www.fsa.go.jp/singi/singi_kinyu/tosin/20201222/houkoku.pdf)

가) ‘은행업 고도화 회사’ 인가요건 완화(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2016년 도입된 은행업 고도화 회사는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은행업의 고도화나 이용자 편리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종래 「타업」으로 정리되어 온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음

□ 이번 금융심의회 업무규제 완화 보고에서는 은행업 고도화 회사가 디지털화에 가세해 지방 상생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공헌하는 것을 폭넓게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업무의 외연을 한층 더 확충할 것을 제안

○ 은행이 IT기업, 지역상사 등을 자회사로 운영할 수 있는 은행업 고도화 회사는 현재 출자규제의 예외로 적용되어 금융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은행의 계열사인 경우, 리스크 차단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가제에서 개별 인가가 필요 없는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

□ 은행그룹이 산하에 핀테크 사업 등을 하는 회사를 설립할 경우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신고로 하는 방향

○ 동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그룹이 축적해온 지식과 창의력을 활용해 비금융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 이와 같은 일본 사례를 미뤄볼 때 <u>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이점을 살려서 BNK 금융지주 산하에 블록체인 핀테크 사업 등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u>

나) 출자규제 완화

□ 이번 워킹그룹 보고에서는 은행 자회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회사에 10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완화안을 제시

○ 지역의 사업 재생·승계 회사 등에 출자할 때의 특례를 확대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곤경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의 재생을 지원

□ 은행 본점에 의한 사업회사에 대한 출자는 원칙적으로 5%까지로 제한되어 있음

○ 다만 투자전문 자회사를 통해 벤처기업이나 사업회생회사에 출자할 때는 의결권 기준으로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규제완화 보고에서는 관광 진흥이나 지역 상품의 물건판매 등을 다루는 지역활성화 사업회사에 대해 50%의 출자 상한의 철폐를 목표로 함

□ BNK 금융지주의 자회사를 통해 지역 벤처기업 또는 지역활성화 사업회사에 대해 출자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고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 1항 시행령 제정안

□ 부산시에서 VC의 유망 해양벤처기업 발굴·투자·성장지원 기능을 활용하여 금융중심지로서의 성장과 부산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

○ 현재 한국벤처투자의 지방기업 전문 VC 투자조합 출자는 지방의 유망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VC 기능 활용의 기반 확충보다는 국내 VC 부문 육성방안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한계가 분명

□ 지역특화형 VC를 활성화하여 부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금융중심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벤처투자법)을 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관련 권한을 부산시로 이양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기술기반 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산 지역이 역내 기업의 이전

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역재정(Local Finance)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위 엔젤투자그룹(Angel Investor Group)이 비 기술기반 지역에서 혁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112)]

○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지역 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역할이 중요

○ 초기에 정책금융을 기반으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성공한 부산 지역내 기업가의 엔젤투자 확대, 소득공제 개선을 통해 부산시 개인자산가의 엔젤투자 유인, 부산시 엔젤클럽이나 조합의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

□ 부산시의 이러한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벤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 및 개인투자조합(엔젤투자그룹)의 관련업무를 부산시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 벤처투자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

○ 국내 벤처캐피탈(VC) 업체들은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기부 소관)에 근거한 창업투자회사와 2)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 소관)에 근거한 신기술금융회사 라이선스를 취득해 벤처투자업을 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이원화

○ 엔젤 투자를 위한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법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음

□ <u>벤처투자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u>

○ <u>그러나 현재 제76조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부재</u>

112) Darian M. Ibrahim, “Financing the Next Silicon Valley”, 87 Wash. U. L. Rev. 717 (2010).

□ 따라서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벤처투자법의 개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76조 제1항에서 위임한 시행령에 부산형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권한을 부산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 벤처투자법 제78조 제1항 시행령 제48조의2 (권한의 위임) 제정안

[제1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법 제9조,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의 관리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 시·도지사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법 제9조,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의 관리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시·도지사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의 활용

1)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 경제활동 매개체의 특성상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하나 향후 지역 금융혁신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

□ 지역중심형 규제 샌드박스형(서비스가 일부 규제와 충돌할 때 소규모 프로젝트를 단기적으로 시험하는 제도) 형태로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활성화

□ 지역중심형 (금융규제)샌드박스란 시험응용을 위한 공간을 부산시가 제공하는 개념

① 현행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여 전국단위에서는 서비스 운영이 어려우나 혁신성이 높은 시험사업을 부산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② 부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경우(또는 부산시에 등록한 금융회사)에 다른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부산형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여 허용

③ 지역적으로 부산지역(또는 부・울・경)에 한정된 영업을 시행

- 예를들면, 현재 부산이 블록체인 지역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가상자산 송금업은 불가능
-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부산에 본점을 둔 스타트업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울・경 송금업 시행 검토
- 최근 미국의 OCC는 은행들이 블록체인 구조를 이용한 지급결제를 허용
- 이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금융결제원 이용 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금융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

2)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의 의의

□ 현재 5+1의 규제샌드박스 구조하에서 여전히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업을 부산시에 한정하는 사업으로 테스트할 수 있음

□ 예비 샌드박스 영업지역

○ 전국단위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기 어려운 사업을 부산지역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Testbed or 마이너리그), 이를 바탕으로 다시 전국적인 영업(메이저리그)으로 확대

□ 중・장기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 특례로 연계 고려

○ 부산시는 여러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시키는 인큐베이터의 역할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 내의 규제를 면제・유예 시켜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에는 다양한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는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의 역할 수행과

더불어 부처 간 협력이 강화필요

○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특례 관련 권고 이외에는 규제특례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실효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두고 있지 않음

□ 규제샌드박스 신청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현행 법령에 마련되어있지 않음

○ 가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규제적용 특례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로 이관하여 재심사를 받는 방안

○ 이 경우 중앙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3) 규제자유특구와의 차이점

□ 지역특구법상의 규제 자유구역(Freezone)과는 달리, 기존의 금융샌드박스 규제체계 내에서 장소적 제한조건을 추가(부산시 또는 부·울·경내에서만 영업을 허용)하여 보다 실험적인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Testbed of Regulatory Sandbox) 개념

□ 금융혁신법에서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승인 사항을 부산시(가칭 부산시 혁신금융센터)에 위임하는 방식

○ 부산시와 금융감독원 부산지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심사 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2019. 4. 17. 시행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

○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하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

□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의 대상은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등이 지역의 혁신성장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목표로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 현재 부산은 블록체인(21건)과 해양모빌리티(3건) 분야의 특구로 지정되어 있음

□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와 산업융합촉진법 또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의 차별점은 전자에 대하여 광범위한 규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과 임시허가 등의 특례조치에 대한 1차적인 판단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음

○ 다만 규제확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승인이 지체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음

-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시 · 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해줄 수 있음 - 시 · 도지사 판단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규제확인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 · 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재통보 -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온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 · 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 이때도 해당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이는 30일 기간에 미산입

※ 이재훈·정희영, "규제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KISTEP Issue Paper(통권 제261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23면

4) 해외 사례

가) 미국 애리조나(Arizona) 주 사례[113)]

□ 최근 2018년 8월, 미국 주 차원 최초로 애리조나 주가 핀테크 샌드박스를 출시. 지금까지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제샌드박스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애리조나는 'House bill 2177' 제정을 통해 이 프로그램 개선하기 위해 노력

□ 승인을 받으려면 참가자는 혁신적인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샌드박스 내에서 허용되는 금융서비스는 영업금융, 소비자대출, 투자관리, 송금 등이 있음.

○ 2018년 10월 첫 참가자 결제플랫폼 Omni Mobile, Inc 승인 이후 소비자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회사 Sweetbridge NFP, Ltd와 Grain Technology, Inc가 Omni 샌드박스 참여자로 합류

□ 참가자는 운영 전에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라이센스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규제감독하에 특정 금융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면서 제품을 일시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음

□ 기업은 정식 라이센스를 신청하기 전 최대 2년 동안 제품을 테스트 할 수 있으며, 최대 10,000명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2년 후 참가자는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 라이센스를 신청하거나 애리조나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하나, 첫 2년 기간이 종료된 후 최대 1년까지 연장 신청가능

나) 일본의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114)]

□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 지역한정형이란 규제샌드박스 대상 지역을 특구 지정을 받은 지

113) https://www.jdsupra.com/legalnews/arizona-seeks-to-improve-fintech-53415/
https://www.jdsupra.com/legalnews/fintech-regulatory-sandboxes-update-on-85915/

114)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는 '지역한정형'과 '프로젝트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기 대상 및 기반 법률이 상이함.

자체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2018)」에 근거한 ‘프로젝트형’ 샌드박스 제도와 구별되며, 기존 국가전략특구의 혁신 관련 규제개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전략특구법」에 도입[115]

□ 국가전략특구법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제 경제활동의 거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를 통해 과감한 규제 및 제도 개혁을 시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 제정

○ 일본 전역에서 10개의 국가전략특구(도쿄권, 간사이권, 니가타시, 야부시, 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 오키나와현, 센보쿠시, 센다이시, 아이치현, 히로시마현・이마바리시)가 운영되고 있음. 국가전략특구의 특구조치 분야는 도시 재생, 창업, 외국 인재, 관광, 의료, 간호, 보육, 고용, 교육, 농림수산업, 근미래기술 샌드박스로 구분

□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는 분야에 대해서도 자동차의 자동운전, 무인항공기(드론), 이와 관련된 전파 이용 등 고도의 혁신적인 근미래 기술과 관련해 과거에 유례가 없는 실증실험에 한정하여, 미리 규제의 특별 조치를 마련하고 실증실험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구조임. 이와 비교해 프로젝트형 샌드박스는 대상 지역과 사업 분야를 한정하지 않음

○ 즉, 특구에 대해서 감시・평가 체제를 마련해 사후 체크를 강화하는 대신 근미래 기술 실증에 관한 사전 규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속・원활하게 실증실험을 실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116]

□ 「국가전략특구법」 제25조 제2항부터 제25조 제6항까지에 근거해 국가・ 지자체・사업자가 일체가 되어 샌드박스 실시계획(구역계

115) 김윤경, “한·일의 혁신관련 규제개혁 비교: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제88권, 2020; “일본의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금융브리프 제27권 제13호, 2018.

116) 内閣府、国家戦略特区地域限定型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制度 説明資料(2020) (https://www.kantei.go.jp/jp/singi/tiiki/kokusentoc/pdf/202010_sandbox00.pdf)

획)을 작성하고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으면, 실증실험에 관한 각 부처의 규제 법령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

다)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최근 현황

□ 2015년 10월 영국 금융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Project Innovate 정책을 추진하면서 준비된 혁신적인 회사(Innovative Firms)들을 지원하고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 영국 규제샌드박스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가스・전력시장국(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Ofgem)에서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 추진

○ 현재까지 1차(window) (신청 30건/테스트 3건) 및 2차 (신청 37건/테스트 4건)까지 진행[117)]

□ 기업의 사업 범위, 혁신성, 소비자 편익, 필요성, 준비상태를 자격기준으로 제시

○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지원을 영국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영국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유도

□ FCA는 7차에 걸쳐 혁신적인 기업들을 지원하였으며, 7차 모집은 2020년 12월 31일 마감

<표 5-1> 규제샌드박스 신청・실증실험 현황[118)]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신청: 69건 테스트: 18건	신청: 77건 테스트: 24건	신청: 69건 테스트: 18건	신청: 69건 테스트: 29건	신청: 99건 테스트: 29건	신청: 68건 테스트: 22건

* 테스트 건수는 접수(accepted) 건수가 아닌 최종적으로 테스트 승인을 받은 기업 수임.

□ 영국의 샌드박스 수단(Sandbox tools)은 제한된 승인(Restricted

117) www.ofgem.gov.uk/publications-and-updates/innovation-link-outcome-sandbox-window-1
118)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

authorization), 개별지도(Individual guidance), 규정면제 또는 수정(Waivers or modifications to our rules), 비조치 의견서(No enforcement action letters), 비공식 조정(Informal steers)으로 구성[119]

○ 제한된 승인: FCA는 규제샌드박스에 수용된 회사에 대해 맞춤화된 인증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승인 또는 등록은 회사가 동의한 아이디어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

○ 개별지도: 규정들이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를 경우, FCA는 테스트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대해서 안내

○ 규정면제 또는 수정: FCA는 테스트를 위해 과도하고 부담스러운 규정은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나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면제할 수는 없음

○ 비조치 의견서: FCA는 개별지도나 규정면제 또는 수정을 제공할 수 없지만 규제샌드박스 테스트의 특정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 없음'의 문서를 발행할 수 있음

○ 비공식 조정: FCA는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혁신적인 제품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잠재적인 규제영향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정을 제공할 수 있음

□ 영국 규제샌드박스의 구성과 절차[120]

□ 사업자가 신청・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FCA는 규제샌드박스 적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 → 사업자와 FCA는 실험수법에 대해 협의하고 규제완화의 단위, 대상 고객층, 실험기간, 개선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정량적 KPI(핵심성과지표) 등의 합의 → 사업자는

119)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sandbox-tools
120) FCA. "Regulatory sandbox" November 2015.

실험 종료 후 FCA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FCA는 보고서 검토 후 실험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미인가 기업에 해당) 또는 정식 출시(기인가 기업을 대상으로 함)를 허용 → 사업자는 실험한 상품·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121]

□ 대표사례 소개[122]

기업	회차	제공서비스
BitX	1차	디지털 통화/ 블록체인 기술로 구동되는 국경 간 송금 서비스
HSBC	1차	FinTech 신생기업인 Pariti Technologies 와 제휴하여 개발된 앱으로 고객의 재정 관리를 도움
Beekin	2차	인공 지능 및 데이터 공유를 활용하여 자산(부동산, 엔젤투자)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자에게 위험 관리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
Economic Data Sciences	3차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투자 선택 과정에서 여러 위험과 목표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최적의 균형을 펀드 매니저에게 제공하는 기술 솔루션
Creativity Software	4차	휴대폰 네트워크 기반 지리적 위치 서비스를 활용하여 영국의 은행고객을 사기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RegTech 솔루션
British Heart Foundation	5차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 검진 절차를 갖춘 여행보험상품
Funds4Talents	5차	고등 교육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연한 소득 기반 학자금 대출.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대출자의 이전 학업 성과 및 과거 대학 졸업생의 데이터를 평가하여 신용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미래 소득 잠재력을 예측함
FundAdminChain	6차	집합 투자 펀드를 시작하고 거래하기 위한 시장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설 분산 원장 네트워크로 투자자와 상품 제공 업체가 더 적은 비용으로 마찰을 줄이고 연결·거래·결제를 할 수 있음

5) 지역중심형 규제 샌드박스의 이점

□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경우, 부산 지역특구에 선정된

121) 고영미,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영국과 호주의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30집 제1호, 2019.
122)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cohort

블록체인과 해양모빌리티 분야 이외의 사업도 부산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보다 신속하게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중앙정부는 기초·원천 중심의 R&D에 집중하고, 지역은 지역 환경과 인프라를 활용한 신기술 실증 활성화 기대[123)]

○ 지역(지자체)은 행정적으로 잠재 사용자인 주민과 보다 가까우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공간 제공(주민수용, 행정절차 등)이 용이한 이점이 있음

□ 특정지역에 국한된 신기술 실증은 ① 쇼윈도 효과(타 지자체 학습효과), ② 실험 효과(전국적 규제완화 결정에 앞선 사전적 시험장소로 선점효과), ③ 기업집적 유도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가능

○ 지역이 경쟁적으로 R&D를 기획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R&D 중심)과 지역(실증 중심)이 함께 R&D사업을 공동 기획하는 방식도 가능

다. 부산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단계별 ICO 허용 방안(“부산 ICO 프리존”)

1) 국내 ICO(Initial Coin Offering)의 현황

□ ICO의 시작은 2013년 Mastercoin이 실시한 ICO로 알려져 있으며, 2016년 DAO토큰을 계기로 ICO가 주목받기 시작

□ 국내 기업의 ICO는 정부의 규제 방침에 따라 ICO를 허용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23) 이지훈·김수은, “지역중심 신기술의 규제 샌드박스,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제174권, 2018.

<표 5-2> 국내기업 주요 ICO 현황

회사명	가상통화명	시기	진행국가	자금조달금액
현대 BS&C	에이치닥	2017년 12월	스위스	3,000억원
더루프	아이콘	2017년 8월	스위스	1,000억원
거번테크	보스코인	2017년 6월	스위스	170억원
직토	인슈어리움	2018년 4~5월	싱가포르	200억원(예정)
한빛소프트	브릴라이트 코인	2018년 3~4월	홍콩	1,800억원 (예정)

자료: 디지털타임스(2018.03.11.), 기업 자금조달 '해외 ICO'로 눈돌린다

2) 규제 샌드박스와 ICO

□ 가령, 부산시가 특정 기업의 ICO 사업을 특구 신청 계획에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을 한 후에 심의를 통과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해당 기업을 특구 사업자로 지정했다면 이 회사는 부산 지역에서 ICO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규정 하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다른 기업들이 ICO를 하고 싶다면 다시 부산시장에게 제안을 하고 부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구 사업자로 명시해야 함

○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자 역시도 규제특구 사업자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구 내에 위치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특구 지정 후에 새로 특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자동적으로 ICO를 할 수는 없음

□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신규코인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싱가포르통화청이 핀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는 두 가지 유형의 ICO에 한해 적용될 예정인데, 그 첫째는 발행회사(issuing company)가 경영성과(financial performance)의 배분을 약속하지 않는 ICO(일종의 실물자산 거래)임

○ 이러한 ICO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디지털토큰에 대한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영성과의 배분을 약속하는 ICO는 근본적으로 유가증권(security)의 성격을 갖게 되나 경영성과의 배분을 약속하지 않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과 같은 형태인 ICO(비용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면서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관련 규제체계에서 자유로 울 수 있다는 입장

□ 규제샌드박스가 허용되는 둘째 유형은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신규주식상장(IPO)을 통해 현행 증권거래법상으로 요구되는 규정들을 준수하는 ICO(일종의 유가증권 거래)임.

○ 유가증권 성격(security relationship)을 갖는 경우에도 규제샌드박스의 허용을 통해 ICO가 갖는 핀테크로서의 잠재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 싱가포르통화청은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들거나 과도한 차입투자(leverage)가 발생하지 않는 한 ICO를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17년 8월 디지털 토큰 발행에 관한 최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2018년 11월 디지털 토큰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싱가포르 국경 내에서 증권형 성격의 토큰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현지 증권선물법(SFA; Securities and Futures Act)에 부합하는 투자설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승인을 받기 이전까지는 모금진행을 제한함

○ 다만 i) 1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5백만 싱가포르달러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자금 조달을 하려는 경우. ii) 1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50명 미만의 사모형 토큰 발행을 하는 경우, iii) 기관 투자자 또는 iv) 적격투자자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발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토큰 발행 주체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성격의 토큰을 취급하는 플랫폼 및 중개업자들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라이센스를 보유 해야 하며 MAS의 인허

가를 받아야 함

- 이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나 디지털 토큰 발행 재단 등에 대해서는 MSA에서 경고장을 발부하여 해당 ICO를 중단 시키는 등의 엄격한 규제 또한 시도하고 있음

□ 향후 싱가포르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와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직접 규제나 전면 금지보다는 주의나 경고를 통한 간접 규제에 초점을 맞춰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창업자금 조달수단으로서 ICO 채널을 양성화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특금법이 국제기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뿐이지,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 동시에 ICO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

□ 그러나 ICO를 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상의 정의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도·매수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ICO 금지 의미는 다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첫째, ICO 사업자라 하더라도 특금법의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이나, ICO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 이 경우 ICO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취급

○ 따라서 법에 위반하여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특금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음

□ 둘째, ICO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긴 하나, 적용 법규가 없다고 해석하

는 경우

○ ICO 사업자는 특금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이므로, 신고 대상도 아니고, ICO 사업자가 ICO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도하더라도 특금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

□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ICO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ICO를 허용하게 된다면 다수의 사업자들을 유치할 수 있음

○ ICO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형사법적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

3) 스위스 ZUG 시의 크립토밸리 사례

가) 스위스의 추크(Zug)

□ 추크주(Canton of Zug)는 스위스 26개 칸톤 중 스위스 중앙에 위치한 인구 12만 7천 명(2019년)의 작은 주임. 이는 다시 11개의 한국 시・군에 해당하는 커뮤니티로 나뉨. 그 중 크립토밸리의 심장(the heart of the Crypto Valley)으로 불리는 추크시(City of Zug)는 2018년 기준 인구 3만 정도의 작은 도시

나) '크립토밸리(Crypto Valley)'

□ 추크가 크립토밸리로 불리게 된 것은 2013년경 이더리움과 모네타스(Monetas)가 추크에 회사를 꾸릴 때 행정지원을 빠르게 해준 덕분

□ 추크는 2016년 5월부터 관공서 내에 비트코인 사용을 허용해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비트코인을 정식화폐로 인정하고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신분증을 도입해 전자투표, 도서관 대출, 자전거 대여, 교통시스템 등으로 점차 확대 중[124]

124)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8082109192902133

□ 스위스의 블록체인 기업은 무려 960개(2020년)에 달하며, 이중 433개(2020년)가 추크에 있음.

○ 상위 50개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가치는 무려 2865조(US $254.9 billion, 2020년)에 달하며,[125] 대표적인 기업은 이더리움재단, 모네타스, 비트코인스위스법인, 쉐이프쉬프트(ShapeShift), 자포(Xpo), 한국의 에이치닥(Hdac) 등

□ 2021년 2월부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최고 10만 스위스프랑(미화 약 11만 13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암호화폐로 납부한 세금은 추크 주정부가 제휴한 암호화폐 브로커 및 수탁기관인 '비트코인 스위스'가 스위스 프랑으로 교환해 당국에 전달[126]

□ 스위스의 안정적인 정치 환경, 원활한 관료주의, 비정통적인 아이디에 대한 개방성이 크립토밸리를 형성한 주요 환경적 요인

○ 특히 거의 규제가 없고, 톱다운(Top Down) 방식의 정부주도 경제정책이 아닌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정치문화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127]

- 한 시민의 요청을 추크시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단 2주 만에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음[128]

다) 연방정부의 지원

□ 스위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각종지원(입법지원 포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 스위스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18년 2월 중순에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암호자산을 3가지 유형[129]으

125) https://www.s-ge.com/en/article/news/20211-blockchain-crypto-valley-unicorns
126)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0150
127) 오정근. "금융혁신하는 나라가 부국된다" 인사이트
128) 대구광역시의회(운영위원회). "2018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129) 지불형(payment), 기능형(utility), 자산형(asset) 으로 나뉨. https://www.finma.ch/en/news/2018/02/20180216-mm-ico-wegleitung

로 분류하고 각 ICO에 적용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ICO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임.[130]

○ 또한 금융 기술 회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이 비싼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고도 고객을 위해 암호 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특수 라이선스 제공[131]

라) 주정부의 지원

□ 크립토밸리를 만들기 위해 추크 정부가 한 일은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없애고, 창의적인 인재를 공급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 추크는 기존의 낮은 법인세율(14.35%,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9-10%,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로세율)을 2020년 11.91%로 더욱 낮추는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132]

○ 또한 정부가 블록체인 기업 사업자에게 공간을 대여해주며 월 20만원만 내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

○ 이 외에도 추크는 우수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기 위해 정보통신대학을 확충하는 등 대학들도 변신하고 있음. 전 세계에서 모여든 많은 기업인 전문가들로 인해 자연히 금융, 정보통신기술, 사업서비스, 국제회의, 교육, 관광도시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음[133]

---

130) “암호자산을 분류하고 각 암호자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규제법령을 안내하는 것은 ICO 발기인(ICO organizer)과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ICO의 규제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스위스에서 ICO를 계획하는 자들은 관계기관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ICO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효과적이 ICO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설계된 ICO 구조가 스위스 금융시장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는 각 사례별로 FINMA에 의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는 ICO에 친화적인 국가(an ICO-friendly jurisdiction)로 여겨진다.” (정승기·김성호. 2018.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규제에 대한 평가” 금융법연구 15권3호 157pp)

131) Sonia Zhuravlyova. 2017. "The Future of Money: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y Technologies Are a Way of Life in This Small Swiss Town; The town of 30,000 has attracted entrepreneurs who have created cryptocurrency startups" *Newsweek* Vol. 169, Issue 3.

132) 오정근. “금융혁신하는 나라가 부국된다” 인사이트

133) 오정근. “금융혁신하는 나라가 부국된다” 인사이트

마) 크립토밸리 랩스(연구소)

□ 크립토밸리 랩스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인큐베이션, 자금지원은 해당분야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음

○ 특히, CVVC(Crypto Valley Venture Capital)은 일정한 교육을 마친 스타트업에 대해서 12만 5천 스위스프랑(CHF)을 약 8% 이자율로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한화로 약 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펀딩[134)]

□ CVVC와 정보기술(IT) 컨설팅 기업 이낵타(INATA)가 설립한 블록체인 지원 센터인 CV랩스(CV Labs)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협회 등 112곳이 입주해 있거나, 법인 주소를 올려놓고 있음

○ CV랩스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무실 공간 등을 제공하고, 신생업체에는 행정, 법률 기술, 경영 등에 대해 조언하는 멘토를 매칭[135)]

바) 크립토밸리협회(Crypto Valley Association)

□ 2017년 9월에 설립된 민간단체인 ‘크립토밸리협회(Crypto Valley Association)’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해가고 있음.[136)]

○ 블록체인 및 암호 스타트업을 위한 공동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음.

○ 보험 플랫폼, 자산관리 플랫폼, 비트코인 채굴사업 등을 포함 100명 이상의 블록체인 관계자가 입주하고 있으며, 마케팅, 법률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유 업무 및 사무실 공간 임대의 활동을 함.[137)]

---

134)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울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2019.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13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22229005&code=940100

1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블록체인의 미래”

137)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울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2019.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4) 시사점

□ 스위스의 작은 도시 추크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음[138]

□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와 해당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급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만큼 대학과 연구소를 비롯한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수 인력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업화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크립토밸리의 사례와 같이 시드머니(seed money)는 민간과 공동으로 펀딩(funding)하는 작업이 뒷받침 되어야 함[139]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안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파생된 가상화폐와 그 거래에 대한 관심으로 편중[140]

○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등 기술보급 확대를 위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지역 밀착형 블록체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141]

□ 단계별 ICO 허용 방안

○ 1단계: VC 및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 대상 가상통화 발행 및 투자 허용

○ 2단계: 에스크로 및 Private ICO 등을 통한 선별적인 허용

○ 3단계: 부산시 자체 진입 및 운영 규제를 따르는 Public ICO 허용

---

1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139)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울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2019.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140)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울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2019.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141) 대구광역시의회(운영위원회). “2018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단기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ICO를 허용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업 및 유관 서비스 기업을 부산시로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블록체인 허브도시로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

□ 부산 지역내 ICO를 허용함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는 '가상통화 거래소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적 효과'와 '가상통화 발행기업 이전 효과' 및 'ICO 유관산업 성장 효과' 등이 있음

라. 선박금융의 STO 활용방안

1) STO의 개념

□ Security Token Offering(증권형 토큰; 이하 'STO')은 코인으로 자산을 증권화해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 즉,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토큰 발행자가 자금을 모집하는 대가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회사 주식, 부동산 건물, 미술 작품, 골동품 등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 다수가 투자를 하고 소유권과 투자 내역을 블록체인으로 보장받는 방식

□ 기존 경제계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자산과 연계되어서 발행된다는 의미로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토큰화하는 것

○ 금융안정위원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이를 다른 표현으로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것을 '자산의 토큰화'라고 정의

□ 증권형 토큰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에서 파생되거나 또는 금융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또는 권리를 분산원장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에 연결하여 발행하는 것

○ 오프체인 연계형 토큰은 기존 경제계에 이미 존재하는 실물 자산 또는 금융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자

산유동화증권과그 속성과 구조가 매우 유사

○ 온체인단독형 토큰은 오프체인 연계형 토큰과는 달리 기존에 존재하던 자산이 아니라 증권형 토큰 발행자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해당 발행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갖게 되는 권리를 토큰화한것으로서 증권의 신규 발행에 비교할 수 있음

□ 2018년 뉴욕 맨해튼의 빌딩 한 채가 STO를 통해 판매된 것이 세계 최초의 사례로 소개된 이후, 현재 앞다투어 각 은행들이나 투자회사들이 자산에 대한 토큰화를 추진하고 있음

○ STO의 경우 증권으로 볼 것인지 채권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기업 이익 분배나 주식 배당, 투표권, 자산유동화 증권 등 기존 증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주요국은 증권관리감독 기관의 규제 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음

○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되던 IPO와 다르게 STO는 플랫폼만 잘 구축된다면 블록체인상의 스마트계약을 통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간편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2) STO의 이용 현황

□ 국제기구가 발행주체인 경우

○ 세계 은행은 지난 2018년 8월 분산원장에서 운영되는 채권인 Bond-i를발행

○ 해당 채권은 분산원장에서 발행, 유통, 및 제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러한 업무에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첫 번째 채권으로서 이를 통해 세계은행은 총 1.1억 호주달러를 조달

□ 증권형 토큰 관련 법제가 구비된 국가 내에서 발행되는 경우

○ 프랑스는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자금조달 및 증권발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제 마련을 진행해온 최초의 나라로서,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증권 발행 및 유통을 공식적인

법제하에 관리하기 위하여 화폐금융법(2016년), 블록체인 시행조치(2017년) 및 PACTE법 (2019년)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

□ 증권형 토큰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나라의 경우

○ 스위스는 증권형 토큰에 관한 별도의 법제를 운영하지는 않으나 기존 법제하에 발행된 주식을 디지털 형태의 토큰으로 모두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이하 ‘CMTA 토큰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규제 샌드박스와같은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 영국 금융감독청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주식과 사채를 디지털 토큰의 형태로 발행하는 프로젝트(UK FCA Sandbox 4)를 수행

○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국의 경우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를통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증권형 토큰의 발행을 시범적으로 추진

- 해당 사업에 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 된 카사코리아는부동산신탁의 수익증권을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앞서의 영국 사례와 같이 수익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여 신탁기관이 보관하되, 해당 수익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토큰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음

3) STO의 규제 현황

□ 미국은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연방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과 같은 증권에 적용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는 Howey Test에 의하여 특정 증권형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고 만일 해당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거래가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방 증권거래법상 증권 관련 제반 규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업무

를 수행

□ 스위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증권형 토큰에 대하여 증권규제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

○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여부는 금융시장법 (FMIA,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에 따라 판별하며, 증권으로 인정될 경우 증권법(SEA, Stock Exchange Act)에 따른 규제를 적용

□ 프랑스는 기존의 금융법제(화폐금융법)의 개정뿐아니라 증권형 토큰에 특히 적용되는 법제(블록체인 시행조치, PACTE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증권형 토큰의 도입 및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시행

□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7년 보도자료 발표 이후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ICO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비록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ICO를 통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또는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 즉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뒤이어 발표

□ 일본은 2019년 개정법률(금융상품거래법; 2020년 5월 시행)에서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통일하였는데, 암호자산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금결제법상에서 규제하는 암호자산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금융상품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전자기록이전권리’는 제외 하였음

○ 선불식지급수단이되는 지급결제 토큰에 대해서는 자금결제법을 적용하고 ICO나 STO와 같이 증권형 성격의 토큰(전자기록이전권리)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

○ 전자기록이전권리는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제1종 유가증권)

중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기기 또는 기타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는 것에 한한다.)에 표시되는 것'을 말하며, 기타 유통상황에 따라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함

○ 증권형 토큰 발행인 STO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2항 제5호와 제6호에 있는 집합투자기구규정상 1) 권리를 가진 자(출자자)가 금전 등을 출자 또는 출연, 2) 출자 또는 출연한 금전 등을 충당하고 사업(대상기업이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3) 출자자가 출자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당 또는 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의 세 가지 사항을 만족함으로 규제될 수 있음

<표 5-3> 암호자산 및 전자기록이전권리 규제 정리

분 류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암호자산 (일반토큰포함)	암호자산교환업 규제, 유출방지규제, 자산 규제 등	투기적 거래 조장 광고 금지, 암호자산의 사전신고	-	부정행위 금지, 풍설의 유포 및 협박 금지, 시세조종 행위 금지
전자기록이전권리(증권형토큰)	-	-	금상업자 취급 규제, 발행공개규제 및 계속공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4) STO 관련 규제상 쟁점

□ 자본시장법 적용 관련: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적용되는 것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최후로 적용되는 경우이고 현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증권 조항은 구체적인 요건, 규율 내용,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이 다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증권형 토큰의 법적 성격의 규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정비도 함께 필요한 상황

□ 전자증권법 적용 관련: 전자증권법은 전자증권제도 운영에 사용되는 기술 유형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증권형 토큰이 전자증권제도에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자증권법상 중앙집중적인복층(2-tier) 구조의 계좌 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이 개발된다면 전자증권제도에서 증권형 토큰이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5) 시사점

□ STO의 발행은 유동성과 시장성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낮고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자산을 유동화 하는 경우 또는 거래 인프라가 빈약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언급

□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 STO를 발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비용 절감 효과, 시스템 안전성, 신뢰성, 용이한 이해 도 및 기성 시스템과의 보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 부동산의 자산유동화, 신생 벤처기업이 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적재산권 신탁에서의 자금조달 등과 같은 분야가 증권형 토큰의 활용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분야

□ STO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① 판매정보를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것과 ② 자산을 토큰화해 판매하는 형태로 구분

○ 선박금융에 STO를 이용하면 일반 소액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선박금융에 쉽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해 판매한다면 누구나 소액으로 선박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과 관련한 모든 내역은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실시간으로 기록

○ 분할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선박운용에서 발생하는 부가수

익과 매각 시 발생하는 매각대금을 분할 소유권 보유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매각수익을 얻을 수 있음

VI.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그간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부산 금융중심지의 비전 및 정책을 재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

○ 금융중심지 정책추진 이후 답보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법·제도적 측면을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부산의 지리적 이점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급속한 확산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금융산업 접목 등 환경 변화 요인을 금융중심지 관점에서 점검하였음

○ 향후 중앙정부의 추진전략에 발맞추어 개별 금융중심지의 특성에 맞는 부산형 발전모델도 제시하였음

□ 그간 부산 금융중심지 관련 정책 및 관련 과제의 성취도를 분야별로 평가할 때 가시적 성과를 보인 부분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

○ 부산 금융중심지는 서울·부산의 특화전략을 바탕으로 해양 금융 특화를 통해 시장친화적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산업을 선도할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하고 있음

○ BIFC 1, 2 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등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금융공공기관과 해양금융기관의 집적으로 금융센터로 자리매김하여 물리적 집적지 조성이라는 성과 시현

○ 각종 국제 금융기구 유치 및 국제회의 개최로 글로벌 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

○ 그러나 부산은 금융중심지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금융회사가 여전히 부족한 문제점에 직면

○ 또한 정부 주도하에 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산업분야도 마찬가지로 서울 인프라 집중 현상의 심화로 여타 도시로의 분산이 쉽지 않은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

○ 지역 금융산업과 연계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화된 전문인력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

○ 그 외 문제점으로 외국인 거주에 따른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항목이 별도로 없는 상황

□ 그간의 부산 금융중심지 관련 성과를 구분하여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부분은 주요 금융공기업의 이전에 따른 해양 및 선박금융 분야와 BIFC 건립 등 물리적 기반 구축 등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보유한 공공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금융시장 형성 및 민간금융회사의 활동에 의한 금융중심지 생태계 조성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판단

□ 홍콩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급속한 확산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금융산업 접목, 그린 파이낸스 대세 등 환경 변화 요인을 금융중심지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

○ 홍콩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융중심지 본연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홍콩거래소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 사태는 비대면 및 비접촉 경제활동을 확대·촉진하고 디지털화를 통한 기업정보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오프라인 의존도를 완화시키는 계기를 제공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온 디지털화는 기존 기술혁신과 다르게 파격적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이 금융의 다방면에서 활용됨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제공 방식 또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홍콩 및 GFCI에서 높은 등수를 차지고 있는 중국 국가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주를 이루며 무역과 내수산업의 발전과 함께 금융업 및 금융중심지 역할도 발전

○ 중국의 각 금융중심지 도시들은 인근 지역 도시와의 연합을 통해 win-win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으며 통합 발전, 균형 발전을 추구

□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으로 우선 '제2금융센터'로 자리매김하되 특정 분야에 특화하는 '기능형'금융중심지 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오슬로와 같이 선박 및 해양금융 중심지로 특화하되 룩셈부르크와 더블린 같이 핀테크 및 데이터 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중국 도시와 같이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 도시와 함께 연합을 통해 통합 발전 및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나아가 친환경/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 오슬로는 실제로 항구도시이면서 금융중심지로 위상이 높은 독일 함부르크, 그리스 피레우스,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등과 더불어 해양관련 선박금융 육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룩셈부르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맞춰 금융산업에서도 핀테크, 디지털 금융 관련 혁신 금융서비스, 규제 극복을 위해 노력

○ 특히 룩셈부르크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산업인 레그테크(RegTech), 인슈어테크(InsurTech),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등을 받아들여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가 생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

○ 룩셈부르크의 금융 서비스 규제기관인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는 기술 혁신에 대한 역량과

개방성으로 맞춤형 핀테크 규제에 대응

○ 중국 금융중심지를 살펴보았을 때 부산 또한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 도시와 함께 연합을 통해 통합 발전,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오슬로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녹색성장 관련 투자가 활발한 도시 중 하나이며, 교통망/전략 및 경제발전 기조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틀 속에서 발전시키고자 노력

□ 지방금융도시의 형성이 갖는 장점을 검증하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서울에 금융기능이 집중된 경우 재해 시의 금융 기능 대체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방금융도시를 형성하는 의의를 검증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실시해야 함

□ 부산이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역할 분담 및 민관협력 강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조화로 부산 지역 금융 및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부산의 산업구조와 연계된 자생력 확보,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 1단계는 공공기관의 이전 및 유치,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 및 여건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온 것이 특징

○ 2단계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정착 및 업무기반 강화를 통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조화를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고려 및 지원, 그리고 역외 수요의 충족과 금융중심지의 대외적 위상 및 글로벌화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갈 필요

○ 2단계 활성화는 1단계의 정부 주도, 공공부문 주도, 산업정책에 의한 보완 역할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협업 강화, 상업적 주재의 강화, 기존 기관의 업무 및 서비스 활성화, 지역경제와의

연계 등 점진적,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

□ 관련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조화를 통한 부산형 모델의 일환으로 부울경 통합 모태펀드 조성,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형 벤처 캐피탈의 역할 강화, 선박금융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 유치, BIFC 입주 공공기관과 협업 강화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부울경 모태펀드를 단계별로 조성하고 운영

○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VC 활용 방안

○ 특히 부산시 역할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 1항 시행령 제정안" 추진

□ 금융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청 내 '금융/기업지원실' 설치방안과 회사 설립부터, 운영, 이전, 현황조사, 분석, 상장 등을 위한 One-Stop 조직을 설치

□ 특화금융 경쟁력 제고와 미래금융 육성을 위해 해양진흥공사 역할 강화를 통한 해양금융 선진화, 파생금융 및 녹색금융 활성화 등 지속가능 금융 활성화,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를 통한 혁신기업 유치, 대체거래소 부산 설립, 국제금융인력 양성 방안을 추구

□ 상기 전략적 추진과제를 추진 시계로 분류해 볼 때 관련 환경 변화 및 이슈가 이미 상당부분 가시화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어젠다와 그 이외의 중장기 어젠다로 구분이 가능

□ 1단계(단기) : 다양한 국내외의 금융 및 비금융 회사들이 부산에 모일 수 있을 요인을 만들기 위한 부산 지역 산업 발전, 새로운 기술

과 금융의 융합 발전, 금융허브 자생력 확보 전략 수립, 이를 위한 부산시 역할 강화 방안 모색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부울경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 및 부울경 모태펀드의 단계별 조성에서 1단계 조성 및 운영 시작

□ 금융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직 혁신

○ 부울경 통합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가칭 '금융/기업지원실' 설치

○ 부울경 지역 내 금융회사 설립·운영·이전·현황조사분석·상장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설치

□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VC 활용 방안과 부산시 역할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 1항 시행령 제정안" 추진

□ 해양금융 선진화 방안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체계적 발전 및 협력 강화

- 금융과 해양산업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해양진흥공사의 업무영역 확장 등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적극 참여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BNK와의 3자 협력을 통해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

□ 디지털 금융의 적극적 육성

○ 지역중심형 규제샌드박스 활용

○ 다양한 정보제공 플랫폼 설치를 통한 혁신기업 유치전략 제시

○ 블록체인 기반의 발전과제

○ 클라우드 및 데이터산업의 발전과제

□ 2단계(중기) : 다양화되고 발전된 지역 산업과 더불어 부산에 특화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 전략

□ 부울경 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부울경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 부울경 모태펀드의 중기(2차~3차) 조성

□ 대체거래소 부산 설립

□ 선박금융 역외 원화금융 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외국 금융회사 유치

□ 국제금융인력 양성

□ 인프라 금융과 지속가능 금융의 활성화

○ 신공항, 북항 재개발, 트라이 포트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다양한 금융기업과 금융회사를 통해 조달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해운, 조선 업종) 지원을 통해 파생금융 및 녹색금융 활성화

□ 3단계(장기) : 부산 금융중심지가 근접한 해외 금융중심지(홍콩, 싱가폴, 도쿄, 상하이)와의 차별점을 구체화하고 부산에 특화된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법 개정 및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

□ 부울경 모태펀드 장기(4차~5차) 조성

□ 금융중심지 인허가 규제 개선 및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금융 생태계 조성

□ 現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지원에 관한「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권한 강화

□ 상기 추진 과제 수행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 배분과 관련 산업의 성장 지원이 필요

□ 그러나 이상의 기준에 의거한 단기 및 중장기 시계의 구분은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책추진 당국은 관련 이슈에 대해서 상시적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점검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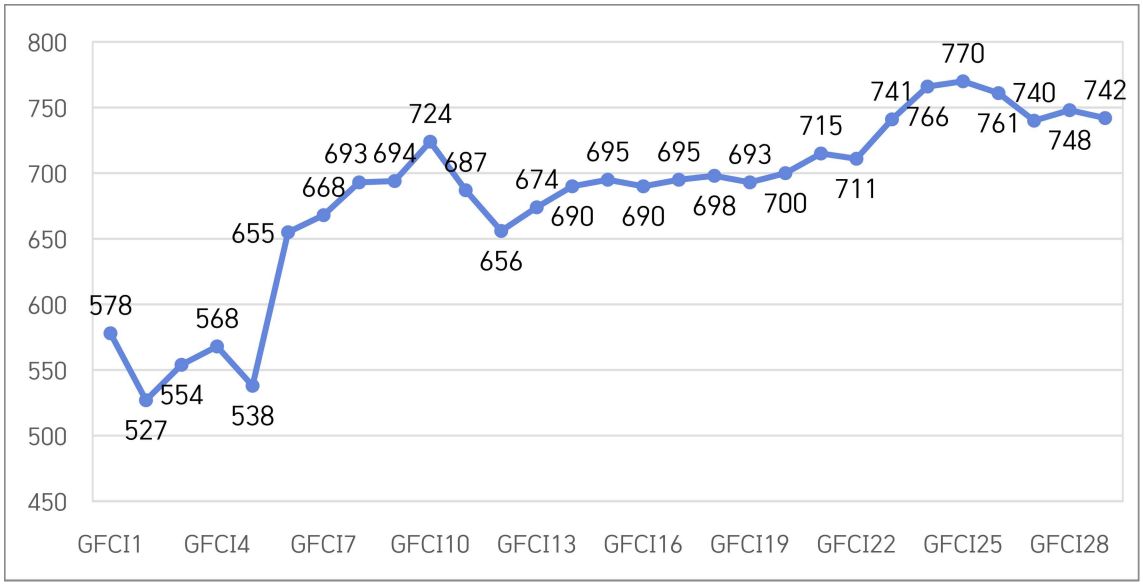
○ 또한 중장기 어젠다 내에서도 세부 과제별로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부록

중국 금융중심지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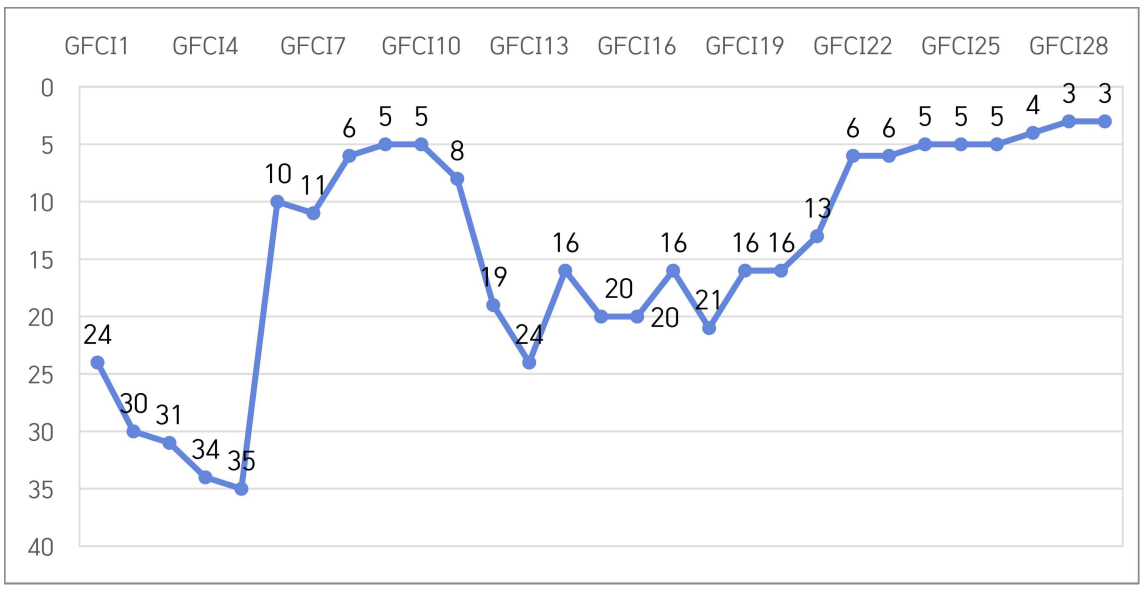
1) 상하이

□ GFCI score추이



출처: The Z/yen Group,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1~29

□ GFCI Rank추이



출처: The Z/yen Group,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1~29

□ 상하이는 최근 2021년 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중심지로서 상하이의 강점을 발휘해 향후 장삼각 지역 발전을 위한 국제 자금 유치 및 배분, 과학기술 혁신, 프리미엄 산업 선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을 밝힘.

○ 지난 2년 기간 발표된 장강 삼각주 일체화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도시-농촌 간 융합 발전, 과학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 간 기초 인프라, 행정연계, 금융, 세무, 교통, 인재 육성 등 사회 각 방면에서 지역 통합 발전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지향함을 알 수 있음. (KOTRA 해외뉴스 <중국 장강삼각주 경제동향 및 유망산업 분석>)

○ 장강 삼각주 지역은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문화, 헬스케어, 오래된 도심 리모델링 및 주거 안정화 등 정책사업을 통한 대규모 사회 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이 분야는 연관되는 산업 사슬이 길고 확장성이 크므로 향후 장강 삼각주 지역 1인당 소비 규모에 대한 승수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 여지도 더 남아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임

○ 장삼각 지역의 발전 궤도를 보면 전형적인 점(点)-선(线)-면(面)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기존 연안의 상하이에 집중됐던 산업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간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거점, 내륙도시들을 연결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 장강 삼각주 지역은 2020년 기준 인구수 2억 3000만 명으로 경제 규모로만 보면 중상위권 이상의 국가로 볼 수 있음. 장삼각 지역은 비록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의 우수한 기술력과는 차이가 있고 또 제조업의 경우 중간재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외 선진 기술 기업, 타 경제권과의 교류 수요는 계속 커질 전망

<2019~2021년 장강 삼각주 관련 정책 발표 내용>

발표 일시	주요 내용
'19.12.1	ㅇ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규획 요강(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 발표 - 내 용 : 2025년이내 도농 구역 협력 발전, 과학혁신산업 융합발전, 지역 간 기초시설 연계, 생태환경 공공보건 연합, 공공서비스 연계, 사회 시스템 일체화 추진
'20.2.15	ㅇ 장강삼각주 지역 화물통행증 발급 (물자이송 지원) - 내 용 : 상하이를 포함한 장강삼각주 지역 내 화물차량 통행증 발부-통행 간소화
'20.2.27	ㅇ 장강 삼각주 지역(3성1시)의 일체화를 통한 방역통제 강화 및 경제사회발전 추진 - 내 용 : 코로나19 확진자 경로 추적을 위한 건강코드 통일 적용 및 정보 공유, 방역물자 이동지원
'20.4.2	ㅇ 장강삼각주 금융관련 일체화(示范区金融16条) 조치 발표 - 내 용 : 통일된 금융, 결제 서비스 등 지역 내 금융경제 일체화 노력을 위한 16가지 조치 발표
'20.4.15	ㅇ 장강 삼각주 교통운수 고품질 일체화 발전계획 - 내 용 : 2025년까지 지역내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장강 삼각주 지역의 철도 및 여객 운수 체계 고도화 목표
'20.4.15	ㅇ "개방확대, 관리강화, 서비스 제고(放管服)" 개혁의 32개 조항 발표 (상하이시) - 내 용 : 장강 삼각주 일체화 시범구 녹색발전 지원, 링강 신구역 발전지원 등
'20.7.31	ㅇ 장강삼각주 지역의 일체화 발전을 위한 10가지 조치 (세무총국) - 내 용 : 세무행성 효율성을 증대 및 편의성을 향상을 위한 26개 세수지원 시스템 구축
'20.8.14	ㅇ 장강삼각주 교통 운수 전자 면허 상호 인정 사항에 관한 통지 발표 - 내 용 : 도로 운송 사업허가증 등 6종의 증명서 상호인정 전자증명서에 포함(2020년 9월 시행)
'20.9.22	ㅇ 장강 삼각주 시범구 인재 상호 인정 방법 출범 - 내 용 : 시범구역 내 전문기술인력의 직업자격, 직함 등에 대해 상호 인정, 공유.
'20.12.29	ㅇ 장강 삼각주 과학기술혁신공동체 건설 발전계획 발표 - 내 용 : 국가실험실, 국가기술혁신센터, 산업혁신센터, 제조업혁신센터, 임상의학연구센터 등 중요 과학기술혁신기지 건설 추진
'21.1.5	ㅇ 장강 삼각주 양로 관련 합작 심화 추진 - 내 용 : 장기 간호보험 시범사업 협력, 자원 공유 등을 통해 양로 일체화의 질적 발전 추진
'21.1.13	ㅇ 장강 삼각주 생태 녹색 일체화 발전 시범구 공동건설 및 공공서비스 공유 리스트 (长三角生态绿色一体化发展示范区共建共享公共服务项目清单) 발표 - 내 용 : 공동건설 및 공공서비스 공유리스트는 총 20개 항목으로 위생건강 , 의료보장 , 교육 , 문화관광 , 체육 , 양로 , 공공교통 , 정무서비스 등 8개 분야를 포함함

출처: 각 기관 발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 '21년 4월 상해진성세무사사무소(上海真诚税务师事务所有限公司)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역 린강신평지구 금융거래플랫폼 개발에 존재하는 문제와 그 이유를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

○ 문제점

- 상하이의 경제발전은 확실히 빠르지만, 개발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남. 자유무역시험구역을 지원하는 비표준 자산거래플랫폼이 구축되면서 상하이 금거래소 이외의 다른 여러 섹션의 총체적 효과는 미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남.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금융거래플랫폼의 개발 아이디어와 모델은 기본적으로 국제 이사회, 거래소 설립 및 거래 플랫폼 설립과 같은 고정된 모델에 의존함. 이 세 가지 패턴은 해당 지역의 금융거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거래소의 분업과 감독 허점을 완전히 개선하지 못해 개혁을 추진할 수 없고, 금융시장의 개방성이 떨어져 투자를 더 유치할 수 없으며, 금융거래의 수준에 한계가 생김. 이 때문에 상하이는 뉴욕, 런던 등의 금융중심지보다 부족한 점이 많음.

○ 이유

- 상하이의 자유무역시험구역의 린강신평지구는 국제 경제가 발전되면서 더 큰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 비록 중국의 금융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비교적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역의 자본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함. 예를 들어, 일부 금융거래플랫폼(Ex. 런던, 뉴욕)은 상위법 방면에서 상하이 국제원유선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음.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유선물시장의 합법적인 비교를 하므로, 이 대목에서 상하이 시장에 허점이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약화됨. 이는 투자환경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역의 린강신평지구의 금융거래플랫폼 건설은 여러 부문에 걸쳐있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음. 국제 선물 품종의 기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 상품이 별다른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자 가능성이 감소할 것임

○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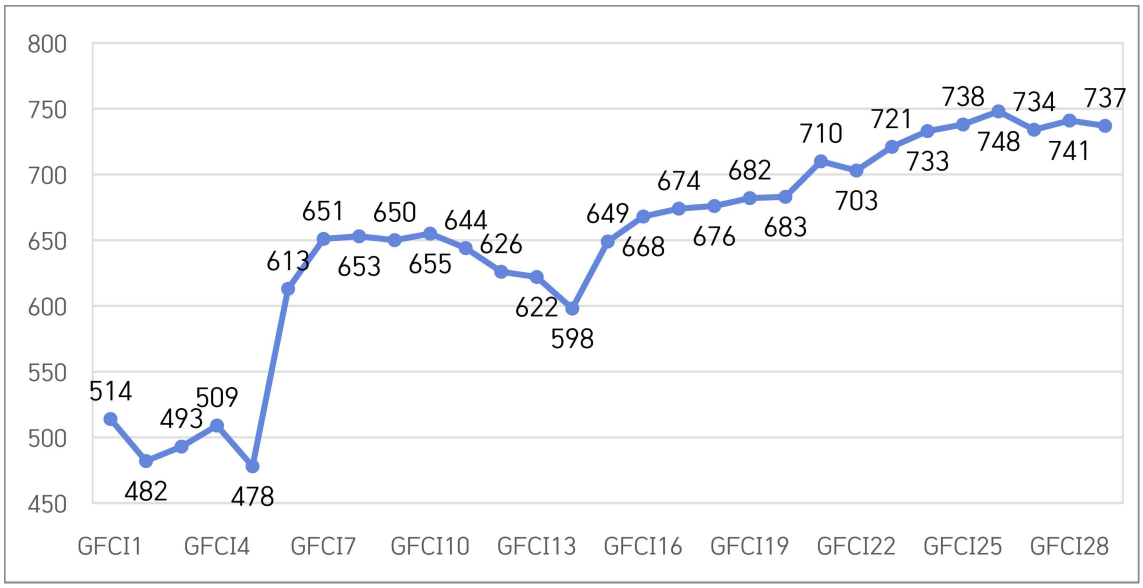
- 개방형 경제의 위험관리 수준을 상향시켜 자유무역기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
- 중국과 외국 금융기관을 가능한 한 빨리 모여 금융개방 환경을 구축, 새로운 지역 혁신과 금융거래플랫폼 개발에 임해야 함. 지역 개발을 통해 주택, 인재 구조, 토지, 자본, 세금, 국제 중재 및 기타 단일 정책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음. 이는 플랫폼 확장에 매우 중요
- 싱가포르의 경우 외환 통제가 기본적으로 해제되고, 기업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로 금융 교환 정책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음. 외국 기업은 싱가포르에서 자유롭게 은행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린강신평지구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이 금융 교환에 큰 문제가 있음.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금융거래플랫폼의 개발을 제한할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
- 상하이는 이미 국제금융중심지에 속하지만, 런던, 뉴욕 등의 금융중심지와의 격차가 뚜렷함. 이는 단기간에 줄일 수 있는 격차가

아니므로 합리적인 법률 및 규정 및 정책 돌파구를 꾸준히 모색하여 상하이 내외부 금융 환경을 안정화해야 함. 이는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 될 것

- 실물 경제 기반의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금융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함. 특히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핵심 기술 수준을 개선한다면 더 나은 금융거래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을 것

2) 베이징

□ GFCI score추이



출처: The Z/yen Group,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1~29

□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은 금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13.5 규획 기간[142]동안 △ 과학 기술 금융을 기반으로 한 혁신역량 강화 △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국제화 수준 제고 △ 일반특혜금융(普惠金融)[143] 발전 △ 녹색금융[144]

142)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143) 일반특혜금융(Inclusive Finance, 普惠金融)은 '포용적 금융'이라고도 하며, 정책 강화를 통한 원조와 시장제도의 확립을 중시해 빈곤지역과 비중심 지역, 소기업, 사회저소득층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의 사용가능 정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함(KOTRA(2016. 1.6),「일반금융특혜(普惠金融), 공익적 성격을 넘어 비즈니스 기회로 성장」).

발전 △ 금융안전 강화 △ 현대보험서비스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금융업 고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방침

- 12.5 규획기간에는 과학기술금융 투·융자 서비스 체계 완비, 과학기술 금융기구의 제품 및 서비스 혁신 등 기초적인 과학기술금융 발전을 도모하였다면 13.5 규획기간에는 인터넷 금융 발전에 주력할 방침
- 베이징 내 외자금융기관의 서비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외투자관리 서비스를 개선하여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베이징 내자금융기관의 해외 지사 설립 및 합병 등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여 금융업의 양방향 개방을 추진
- 국무원에서「일반특혜금융 발전 규획(推進普惠金融發展規劃 2016-2020年)」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일반특혜금융을 통한 영세기업, 농민 등 일반 대중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방안을 명확히 제시함. 이와 연계하여 베이징 또한 13.5 규획기간 일반특혜금융 발전에 주력하고 특히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춤
- 13.5 규획시기 사회자금이 에너지 절약, 저탄소 영역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베이징의 녹색경제, 저탄소 경제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는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

○ 2020년 중국의 지방양회에서 베이징은 신규 도시총체계획 추진, 베이징은 수도 기능 강화 및 비수도기능 이전, 징진지[145] 협동발전 중기목표 달성, 혁신 주도 발전전략 심화, 개혁개방심화, 도시관리 역량 제고, 도농 통합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도 기능 관리 및 개발 등을 포함하는 도시총체계획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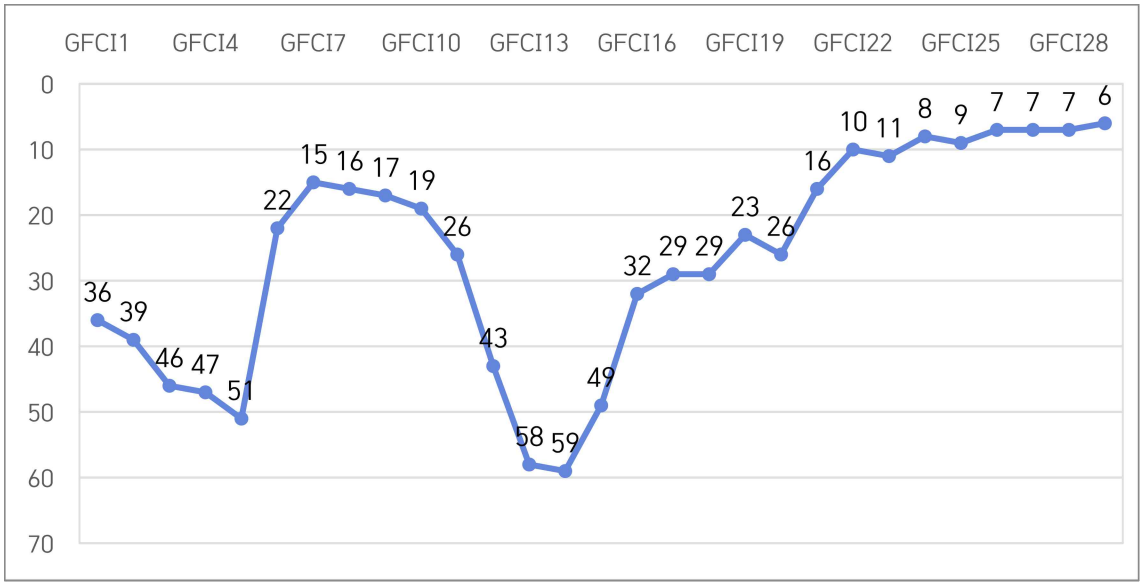
□ 베이징 금융법원 공식 설립: 21년 3월 18일, 베이징 금융법원이 공식적으로 설립됨. 베이징 금융법원은 베이징시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금융민사상업사건과 금융행정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심사는 베이징의 다른 중급인민법원과 동

144) 녹색금융(환경금융)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위한 친환경 금융제도를 의미함(KIEP 북경사무소(2008. 6. 13), 「중국의 '녹색금융'제도 현황」).

145) 징진지: 베이징·톈진·허북(허베이) 지역을 의미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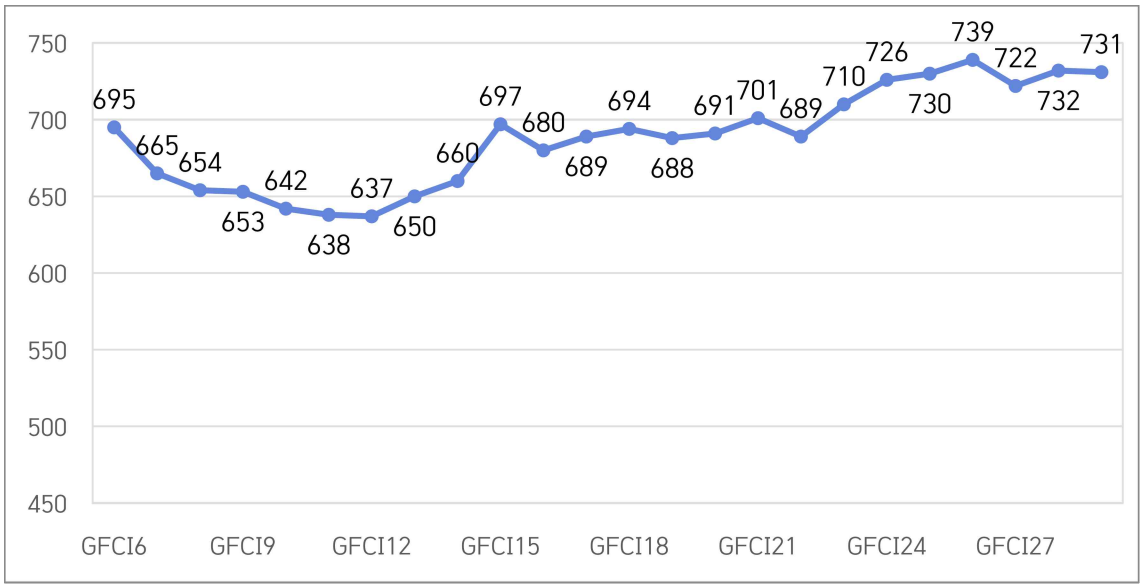
□ GFCI Rank추이



출처: The Z/yen Group,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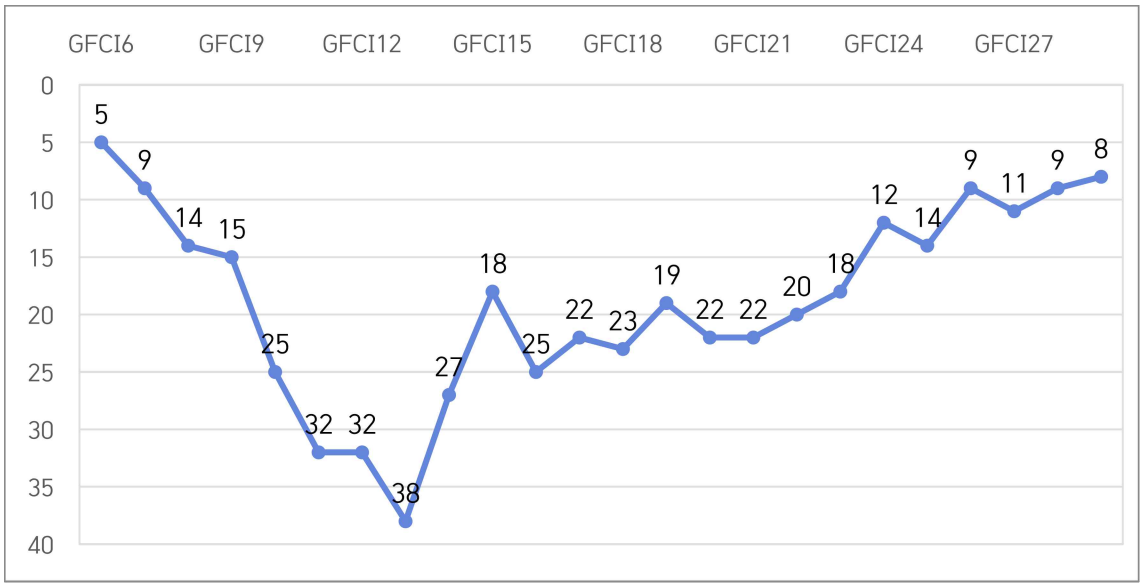
3) 선전

□ GFCI score추이



출처: The Z/yen Group,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16~29

□ GFCI Rank추이



출처: The Z/yen Group,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16~29

□ 선전시는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선정되었으며(1979년), 2007년 1인당 GDP가 1만달러로 성장하여 중국내에서 가장 부유하며 현대화된 도시로 성장하였음.

○ 주식제상업은행 최초설립(1987년), 중국 제2의 증권거래소 유치(1991년)등 첨단 금융 실험무대로 도약

○ 상업지구 푸톈구에 금융, 증권, 보험 서비스 위주의 도심상업지구 개발을 통해 홍콩의 대형 금융기관 유치

○ 매년 2억위안(약 250억원)을 들여 홍콩의 고급인재를 선전으로 유치하는 프로그램 개발

○ 2015년 선전 첸하이(前海) 자유무역구 출범

○ 2020년 중국의 지방양회에서 선전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건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

○ 선전의 전통금융 네트워크화 추세는 뚜렷함.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선전의 각 전통 금융기구는 계속해서 국가 “인터넷+(互联网+)“ 전략에 순응하여 인터넷 금융을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넷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며, 업무의 인터넷화 발전을 가속화 함. 이 밖에도 선전은 국내 첫 민영은행과 인터넷은행인 웨이중은행[146]을 보유함. 2018년 12월 현재, 마이크로뱅크의 유효고객은 1

억 명을 넘고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를 망라하고 있으며 72% 이상의 개인 대출고객은 단돈 100위안 미만의 단일 차입비용을 가짐. 신용 기업고객 중 약 2/3가 처음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으며, 이는 인터넷 금융의 보편적인 위치와 특색을 잘 나타냄.

□ 20년 11월 선전시는 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선전경제특구의 녹색금융규정(深圳经济特区绿色金融条例)'을 공식 발표함. 이는 중국 녹색금융분야의 첫 번째 지역 규정이며, 국제 녹색 금융의 최첨단 연구결과를 배우고, 선전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시범지역 건설의 새로운 개혁 및 입법 혁신을 수행하며, 많은 분야에서 국가 및 국제 녹색금융분야의 선구자를 개척하고, 선전에 새로운 녹색산업의 발전과 전통산업의 녹색화에 더 도움이 되는 금융 생태환경 및 법률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선전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중국국민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그레이터 베이 지역(Greater Bay Area)[147]에서 선전 금융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발전에 힘쓰기 위해 금융감독시스템을 탐구하고 향상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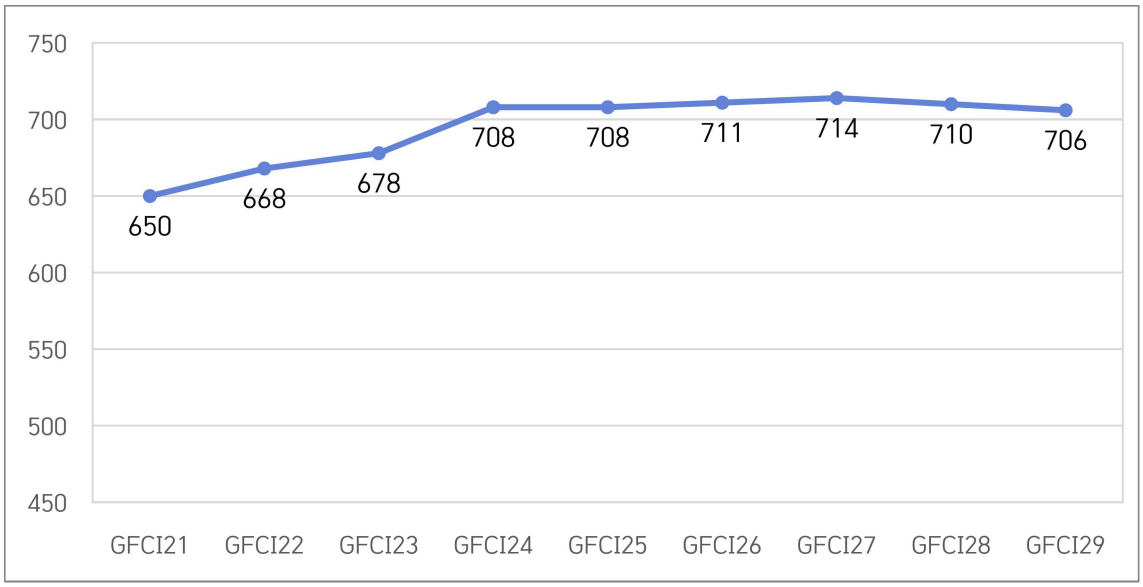
○ 제 19차 당대회 보고서는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단라인을 지켜야한다고 지적함. 시진핑 주석은 체계적인 금융리스크의 발생방지가 금융업무의 기본적 과제이며, 금융종사자,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운영, 금융거버넌스, 금융감독, 금융규제체계를 개선하고 표준화해야한다고 강조함. 2019년 8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의견, 선전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선도시범지역 건설지원 의견에서 선전이 혁신적인 국경간 금융감독을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

4) 광저우

146) 1949년 중국이 공산화한 뒤 설립되는 첫 순수 민간은행인 동시에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중국의 첫 핀테크(fintech=정보기술이 결합된 금융) 적용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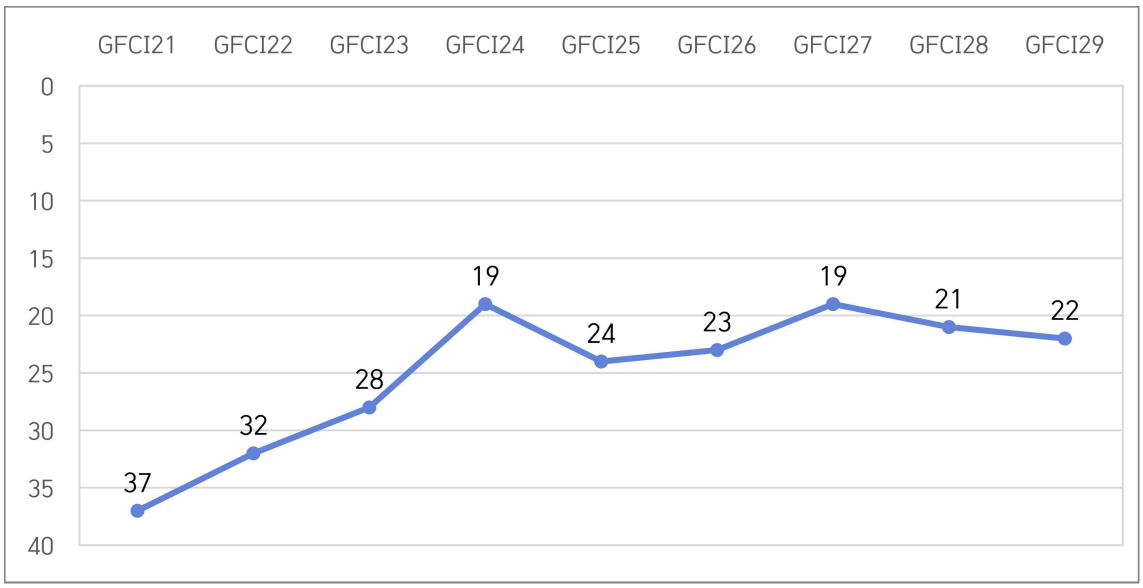
147) 웨강아오 대만구와 동일 개념으로 광둥성·홍콩·마카오 지역을 의미

□ GFCI score 추이



출처: The Z/yen Group,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21~29

□ GFCI Rank 추이



출처: The Z/yen Group,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21~29

○ 광저우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수 또는 주요 기업의 본점, 금융거래 규모 등에 있어서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과 대응한 경쟁력을 갖출 필요

○ 2012년에 Guangzhou International Award for Urban Innovation을

마련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

- 2017년의 경우 59개국 171개 도시로부터 301개의 프로젝트가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

○ 2016년 12월 ~ 2017년 8월 중에 금융중심지, 산업중심지, 무역중심지로서의 글로벌 입지(internationl reach) 강화를 위한 글로벌 로드쇼(Roadshow) 및 홍보행사(promotion fairs)를 미국 및 유럽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

- 파리, 뉴욕, 도쿄, 런던, 샌프란시스코, 홍콩 등에서 글로벌 로드쇼 및 홍보행사를 개최
- 동 행사 중에 과학 및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Silicon Valley, Boston, Tel Aviv[148] 등에 지역사무소를 설치
- 글로벌 입지 강화를 위한 금융정책으로는 광저우에 투자하는 자본(registered capital)과 연계하여 2천5백만 RMB 지원, 은행 및 증권, 보험사 등의 지역 본사에 대해서 2백만 RMB 지원, 상위 경영진 또는 최고전문가 등에 대해 정착자금으로 최대 1백만 RMB까지 지원

○ 광저우 국제 금융 엑스포(Ghuangzhou International Financial Expo, GZIPE)를 개최

- 광저우 금융중재법원(financial arbitration court) 및 금융재판소(trial division), 증권거래소, 탄소거래소, 청산기구, 실물거래소(financial assets exchange), 해운거래소 외 6개의 거래플랫폼을 설립
- 금융클러스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서비스 존(Financial Innovation Service Zone), 국경간 거래 중심의 난샤(Nansha)금융서비스 존, 녹색금융개혁 및 혁신 실험 존 (Green Finance Reform and Innovation Pilot Zone)을 설치

○ 광저우 정부는 2018년 6월에 이스라엘 모델을 벤치마킹한 6억 RMB규모의 Sino-Israel 생명공학 투자기금(Biotech Investment Fund)을 설립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인큐베이터 기반을 강화

- 광저우에 위치한 광저우 국제 바이오텍 섬은(Ghuangzhou

148) 이스라엘 서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

International Biotech Island)은 해외 벤처펀드와 공동 투자 및 운용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스라엘의 생명공학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벤처펀드를 설립

- 주로 이스라엘 생명공학 기업의 중국 자회사 설립 시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 성공 시에만 정부 지원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운영
- 이미 2017년에 광저우 혁신 사무소(Ghuangzhou Innovation Office)를 이스라엘에 설립하여 양국 간 기술 및 혁신 협력을 강화

□ 21년 5월 17일 KOTRA 해외뉴스에서 중국 광저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149] 종합시험 구역의 작업지도반이 발표한 <RCEP 기회를 포착하여 광저우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혁신 발전 촉진 조치>[150](이하 약칭 "<조치>") 공고를 정리

○ <조치>의 배경

- 광둥성은 RCEP 자유무역지대의 지리적 핵심 위치에 있으며, 공항・항만・철도 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완벽하고 역내 공급 체인의 허브 역할을 기반으로 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음. 2019년 12월까지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둥관(東莞), 산터우(汕頭), 포산(佛山) 등의 여섯 개 도시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역을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광둥성 내에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무의 관리・감독 작업소만 40개소가 있음.
- 이런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광둥성은 수출입 총액 규모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함. 해관총서광둥지사(海關總署廣東分署)에 따르면, 2019년 세관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계된 전 성의 수출입 총액은 1107억9000만 위안(해외 창고, 우편물 수출입 경로 제외)으로 전년보다 45.8% 증가했으며, 중국 전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총액(1862억1000만 위안)의 59.5%를 차지함.

149) 국경을 넘어 이커머스 거래가 발생하는 시장

150)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한·중·일 3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에 발표된 <조치>가 중국 최초의 RCEP에 대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전문 정책임.

그중 수입액은 366억2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해 중국 전체의 39.9%를 차지했으며, 수출액은 741억6000만 위안으로 62% 증가해 중국 전체의 78.6%를 차지함.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지자 해관총서와 국무원은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침. 2020년, 해관총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3단 통행 검사(주문서-영수증-송장), 전 과정 노 페이퍼(no-paper) 감독, 수출 반품 혁신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침. 또한, 국무원(國務院)은 슝안(雄安) 신구(新區) 등 46개 지역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 구역 설치를 승인하면서 종합시험구가 설립된 도시를 대상으로 B2B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기준, 절차, 관리감독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지원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함. 이에 2020년 해관 총서(海關總署)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 감독 시험 장소을 개설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으며, 이 공고에는 세관 감독 코드 증설, 기업 등록, 통관 관리 및 검사 검역 등의 분야가 포함됨.

○ <조치>는 항구 경영환경 최적화, 독립적 창조능력 향상, 국제 물류 네트워크 확장, 전문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서 총 25가지 혁신 조치를 제시함.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은 이전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영업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편의수준 제고: RCEP 내 무역절차 간편화 조항에 따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B 수출화물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신고명세서만으로 통관절차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세금 환급(면제) 정책 보완: 광저우시는 전자상거래 수출의 관세환급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수출환급금 노 페이퍼 신고 업무를 추진하며, 전자상거래 기업의 관세환급 시한을 근무일 기준 5일로 약속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기업의 관세환급 효율을 크게 높일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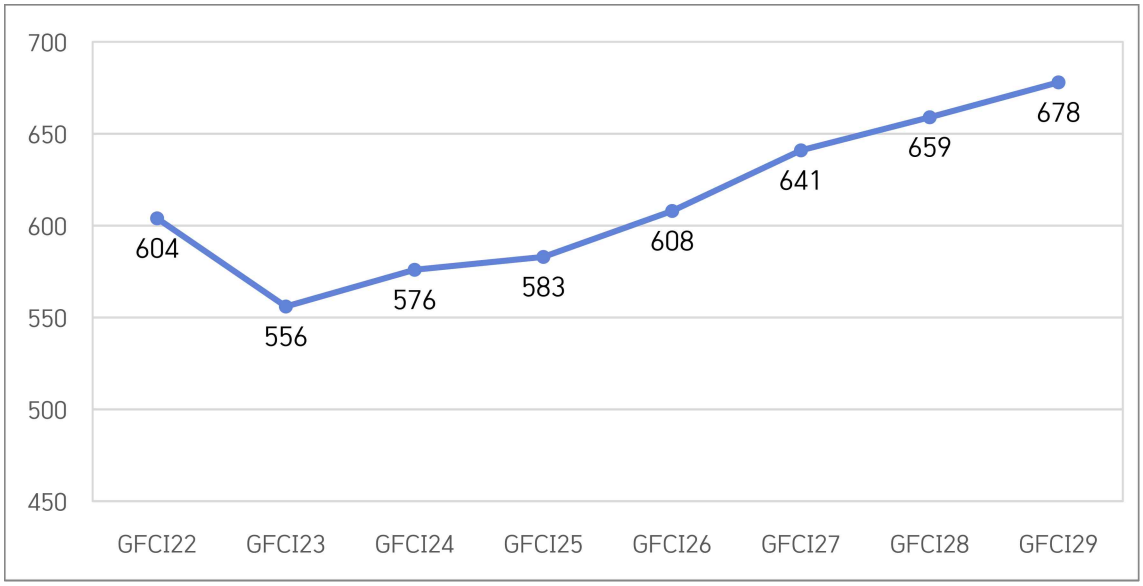
- 대출 확대 및 크로스보더 간편 결제방식 허용: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광둥성의 은행은 국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거래 정보 수집 및 자료의 진위 검토 후 해당 기업에 간편 결제방식 허용이 가능
- 국제 물류 네트워크 확장: <조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이 국외 창고사업의 발전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또한 독립적인 국외 물류 거점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 광저우 바이윈(白雲)공항에 신규로 국외 또는 중국 내 화물 노선을 개설하는 항공사에게는 화물 노선 보조금이 지급
- 전문 인재 양성: <조치>는 기업이 광저우의 대학과 공인된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직원을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전문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저우의 직업기술 교육의 보조금 기준 및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 보조금을 제공할 것을 제안

○ 시사점: 이번 <조치>는 RCEP 조항을 숙지해 기존 절차 및 규정들을 간편화하는 동시에 리스크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정책으로 평가받음. 이에 더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및 수출 세금 환급 효율을 개선하고 RCEP 국가 간 공급망과 원활한 자본 흐름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

- <조치>에 대한 중국내 전문가의 보완 의견도 존재. 광둥 재경대학교(廣東財經大學) 경영유통연구소장이자 광둥 경제협회장인 왕선칭(王先慶)은 “현재 광저우 전자상거래 시장은 대부분 유통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저우의 알리바바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으로 광저우는 크로스보더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보완하는 정책이 추가로 필요. 이는 향후 일대일로 건설에 있어서 광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될 것” 이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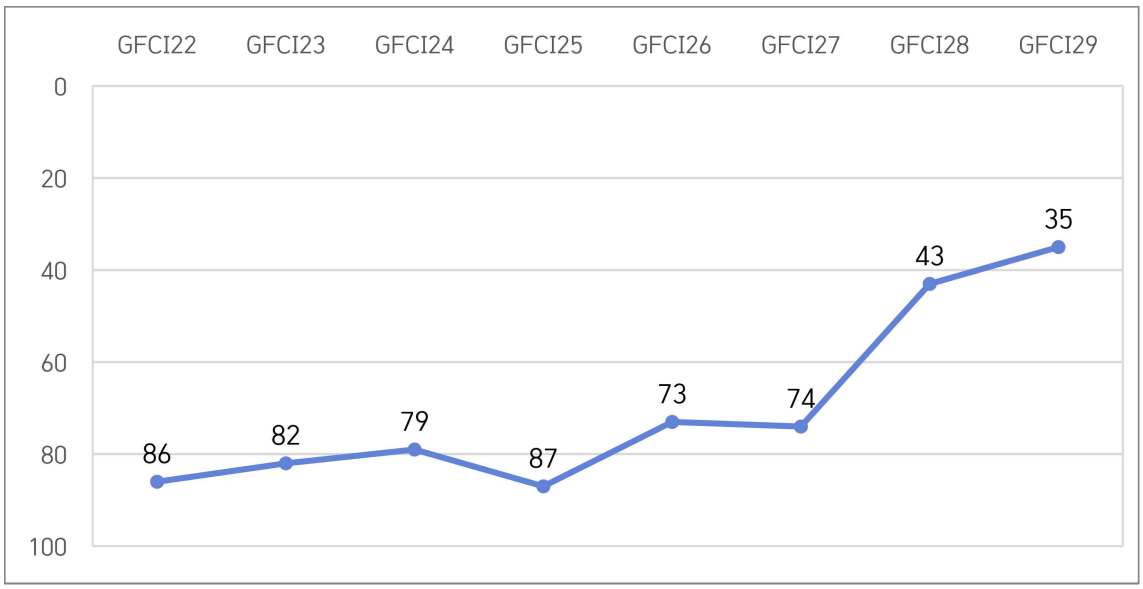
5) 청두

□ GFCI score추이(GFCI 22~29)



출처: The Z/yen Group,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22~29

□ GFCI Rank추이



출처: The Z/yen Group,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22~29

□ 청두는 차세대 정보기술, 장비 제조, 자동차 제조, 항공우주, 신재료, 생물의약, 현대서비스업 등에 특화된 산업 밀집지역

○ 2010년에 청두는 “국가급 혁신형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혁신역량 및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 시도

- “중국 소프트웨어 도시“ 및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 등으로

선정

- 톈푸신구(天府新區) 및 청두고신구는 각각 2014년, 2015년에 국가신구 및 국가자주혁신시범구로 격상

<표> 주요 데이터로 보는 청두시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구분	순위	주요 내용
과학기술 종합경쟁력	▷ 서남지역 1위[151] ▷ 15개 부성급 도시에서 6위 차지[152]	• 대학 : 53개(전문대 포함) R&D기관 : 798개[153] - 국가급 연구소 : 30여 개 - 국가급 연구개발플랫폼 : 67개(← 32개 '09년)
전문인력	▷ 서부지역 1위 ▷ 중국 대·중형 도시 4위	• 각종 인재 : 389.67만명('14년 연말 기준)[154] - 전문 기술인력 : 168.26만 명(43.18%) - 중국과학원 원사 : 34명 - 국무원 특수보조금 취득자 : 2,331명 - "천인계획" 당선자 : 102명(서부지역 1위) - 전문대나 초급 직명 이상인 인력 : 222.05만명(65.0%) - 연간 대학졸업생 : 28만명(재학중인 대학생 70만명)
첨단기술 산업	▷ 첨단기술 기업 수 : 4위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1~3위) ▷ 청두고신구 총생산액 : 4년 연속 4위	• 생산액이 1,000억위안 이상인 4대 지주 산업 : 전자, 정보, 자동차, 기계 및 식품 - 전 세계 70%의 IPAD 및 50%의 노트북 칩이 청두에서 생산 • 6대 중점산업 : 전자정보, 생물의약,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메커트로닉스 및 항공우주 - 청두시 첨단기술산업 생산액의 90% 이상 차지

출처: KOSTEC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151) "중국 도시경쟁력 청서 2011"에서 청두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중국 294개의 도시에서 6위, 서부지역의 1위 차지

152) "提升科技竞争力助推城市经济发展——我国15个副省级城市2011年科技竞争力比较研究", 倪芝青, 林晔, 「科技管理研究」, 2013.1.

153) "2014년 청두시 과학기술통계연감"

154)"2014年成都市人才资源状况报告",
(http://sc.sina.com.cn/news/b/2015-06-18/detail-ifxefurq6439466-p2.shtml)

<표> 청두시 국가급 개발구의 중점 분야

개발구	중점 분야	주요 내용
청두고신구	차세대 정보기술	차세대 정보네트워크, 전자기반, 첨단SW 및 신흥정보서비스 등
	생물	바이오약물, 의료기계, 바이오의학공정
	첨단장비제조	위성항법설비, 스마트제조 장비 등
	환경보호・에너지절약	친환경 기술 및 설비
청두경제개발구	자동차산업	승용차 및 핵심부품
	첨단장비제조	공학기계, 항공설비 제조 등

출처: KOSTEC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그림> 청두시 지역별 특화클러스터 조성 계획

출처: KOSTEC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계획을 위한 기관 설문

- 본 설문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금융학회 및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서 수행합니다
- 복수 응답이 가능한 설문과 단수 응답만 가능한 설문이 모두 존재합니다.
- 본 설문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이민혁(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minhyuk.lee@pusan.ac.kr)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속 기관명:

담당자(or 설문진행자) 및 연락처:

Q1. 귀 기관의 주된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가능하다면 지역별 근무자 현황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근무지	
지역별 근무자 현황	
서울	
경기/인천	
부산	
경남/울산	
대구/경상북도	
대전/충청남북도/세종	
광주/전라남북도	
강원/제주	
해외(국가 표시)	

Q2. 귀 기관은 향후 5년 내에 현 위치(본사 기준)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계획 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a) 이전 예정이거나 높다.
(b) 이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c) 이전 가능성이 낮다.
(d) 이전 가능성이 없다.

Q2-1-1. (Q2 a, b 응답자만) 이전 예정 혹은 이전 고려 지역은 어디입니까?

Q2-1-2. (Q2 a, b 응답자만) 해당 지역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a) 정부 정책 등으로 의해 외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서
(b) 주요 관계 기관(산하기관이라면 상부기관)의 이전으로 인하여
(c) 해당 지역의 지원 및 혜택(세제, 환경 등)에 끌려서
지원 및 혜택 내용 :_____
_____)
(d) 해당 지역의 산업체 혹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해서
(e) 기타 _____

Q2-2-1. (Q2 c, d 응답자만)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a) 기존 인력 유출 우려
(b) 신규 인력 채용의 어려움 우려
(c) 대고객 업무에서의 비효율
(d) 대관 업무에서의 비효율
(e) 기타 _____

Q2-2-2. (Q2 c, d 응답자만) 어떠한 지원이나 혜택이 제공된다면 귀 기관이 타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복수 응답 가능)

(a) 세제 혜택
(b) 금융특구 지정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 사업 기회 제공
(c) (교육 및 의료 등) 생활 인프라 확충
(d) 경쟁 및 관련 타 기관(기업 포함)들의 동시 이전
(e) 현 상황에서는 고려하기 어려움
(f) 기타_____

Q3. 귀 기관이 현재 소재지에 있으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또는 어떠한 문제가 가장 소재지의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4. 부산이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개선 혹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복수 응답 가능)

(a) 신규 파생 상품 및 암호 자산 등 혁신 금융상품 출시 여건 및 관련 규제 완화
(b) 기존 금융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제공
(c) 다수의 해외 금융기관 유치
(d) 선박 및 해양금융 중심의 특화
(e) 주요 금융공기업 이전 등 정부 중심의 집중적인 지원
(f) 기타_____

Q5. 더 많은 기업, 금융기업들이 부산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 계획을 위한 기관 설문 결과

1. 조사개요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금융기관, 공공기관, 사기업 근무자
표본 수	2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0.4% Point
응답률	5.75%
조사 방법	이메일 조사 및 대면 조사

2. 응답자 분포표

	근무지	사람수	비율
권역	서울	6	26.1%
	부산	17	73.9%
기관	공공기관	16	69.6%
	사기업	7	30.4%

3. 조사 결과

Q2. 귀 기관은 향후 5년 내에 현 위치(본사 기준)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계획 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응답자 수(비율)

		(a)이전 예정이거나 높다.	(b)이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c)이전 가능성이 낮다.	(d)이전 가능성이 없다.	합계
서울				2(33%)	4(67%)	6(100%)
	공공기관			1(50%)	1(50%)	2(100%)
	사기업			1(25%)	3(75%)	4(100%)
부산				1(6%)	16(94%)	17(100%)
	공공기관			1(7%)	13(93%)	14(100%)
	사기업				3(100%)	3(100%)
합계				3(13%)	20(87%)	23(100%)

- 서울 및 부산 근무자 모두 이전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고 응답

Q2-2-1. (Q2 c, d 응답자만)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a)기존 인력 유출 우려	(b)신규 인력 채용의 어려움 우려	(c)대고객 업무에서의 비효율	(d)대관 업무에서의 비효율	(e) 기타
서울		1(17%)	1(17%)	6(100%)	1(17%)	
	공공기관			2(100%)		
	사기업	1(25%)	1(25%)	4(100%)	1(25%)	
부산		1(6%)		5(29%)	1(6%)	9(53%)
	공공기관			3(21%)	1(7%)	9(64%)
	사기업	1(33%)		2(67%)		
합계		2(9%)	1(4%)	11(48%)	2(9%)	9(39%)

- 서울 근무자의 경우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c)대고객 업무에서의 비효율을 모두 응답함
- 부산 근무자의 경우에도 (c)대고객 업무에서의 비효율을 많이 뽑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정책과, 지방특화 공공기관이 많아 (e)기타의견이 부산 공공기관에서 압도적으로 높음

Q2-2-2. (Q2 c, d 응답자만) 어떠한 지원이나 혜택이 제공된다면 귀기관이 타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복수 응답 가능)

		(a)세제 혜택	(b)금융특구 지정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 사업 기회 제공	(c)(교육 및 의료 등) 생활 인프라 확충	(d)경쟁 및 기타 타 기관(기업 포함)들의 동시 이전	(e)현 상황에서는 고려하기 어려움	(f) 기타
서울		1(17%)	1(17%)	1(17%)	2(33%)	4(67%)	
	공공기관	1(50%)	1(50%)	1(50%)	1(50%)	1(50%)	
	사기업				1(25%)	3(75%)	
부산		4(24%)	5(29%)	4(24%)	3(18%)	9(53%)	2(12%)
	공공기관	3(21%)	4(29%)	3(21%)	2(14%)	7(50%)	2(14%)
	사기업	1(33%)	1(33%)	1(33%)	1(33%)	2(67%)	
합계		5(22%)	6(26%)	5(22%)	5(22%)	13(57%)	2(9%)

- 서울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 이전을 고려하기 위한 조건으로 각각 (a,b,c,d)를 모두 뽑았지만, 사기업 근무자의 경우 혜택에 상관없이 (e)현 상황에서 고려하기 어렵다는 비중이 높음
- 부산 근무자의 경우에도 이전을 고려하기 위한 조건으로 각각 (a,b,c,d)를 모두 뽑았지만, 정책특성상 (e)현 상황에서 고려하기 어렵다는 비중인 높음
- (f)기타 의견으로는 정주여건이 언급

Q3. 귀 기관이 현재 소재지에 있으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또는 어떠한 문제가 가장 소재지의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 근무자의 대부분은 금융 산업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애로사항이 없다고 응답, 물가와 집값이 비싸지만 그걸 상쇄하고 남을 비즈니스 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
- 부산 공공기관 근무자의 대부분은 부산의 교통, 유관기관과의 사업환경, 생활인프라(교육, 의료, 정주여건), 민간금융기관, 금융생태계 등이 부족하고, 직원 정착 유도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응답
- 부산 사기업 근무자의 경우 부산의 인구유출이 지속되어 산업경쟁력이 악화되고있고, 실물경제 기반이 약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응답,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방에 금융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고, 실문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을 대비하기 위한 파격적인 신산업 유치와 정책 입안 노력이 중요하다고 응답

Q4. 부산이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개선 혹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복수 응답 가능)

	(a)신규 파생상품 및 암호자산 등 혁신 금융상품	(b)기존 금융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c)다수의 해외 금융기관 유치	(d) 선박 및 해양 금융 중심의 특화	(e) 주요 금융공기업 이전 등 정부 중심의 집중적인	(f) 기타

		출시 여건 및 관련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제공	지원			
서울			2(33%)	4(67%)	5(83%)	3(50%)	
	공공기관		1(50%)	1(50%)	1(50%)	1(50%)	
	사기업		1(25%)	3(75%)	4(100%)	2(50%)	
부산		9(53%)	3(18%)	6(35%)	10(59%)	11(65%)	4(24%)
	공공기관	7(50%)	3(21%)	4(29%)	8(57%)	9(64%)	4(29%)
	사기업	2(67%)		2(67%)	2(67%)	2(67%)	
합계		9(39%)	5(22%)	10(43%)	15(65%)	14(61%)	4(17%)

- 서울 근무자의 경우 (d)선박 및 해양 금융 중심의 특화, (c)다수의 해외 금융기관 유치, (e)주요 금융공기업 이전 등 정부 중심의 집중적인 지원 순으로 응답
- 부산 근무자의 경우에는 (e)주요 금융공기업 이전 등 정부 중심의 집중 적인 지원, (d) 선박 및 해양 금융 중심의 특화, (a) 신규 파생상품 및 암호 자산 등 혁신 금융상품 출시 여건 및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응답
- 기타 의견으로는 해외 금융중심지를 넘는 해운금융에 대한 선제적 파격적 지원, 부산 근무직원 여건 개선, 핀테크 전문 펀드 조성 등

Q5. 더 많은 기업, 금융기업들이 부산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 근무자의 경우, 금융중심지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및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등을 위한 세제 혜택 마련과 인프라 확충, 타지역과의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금융 특화 전략 집중 등을 응답
- 부산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 교통개선, 규제완화, 세제혜택, 인프라 개선, 부산근무직원에 대한 여건 개선 및 실질적 혜택, 부산 만의 특화 금융 생태계 조성, 핀테크 전문 펀드 조성 등을 응답
- 부산 사기업 근무자의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정주여건 개선 등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응답

전문가 면담 내용 정리

1 김수환(사단법인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사무국장)

□ 부산은 300만명인 적당한 인구와, 도시 인프라, 천혜의 기후 등과 같이 국제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부산은 가장 최적의 위치(최고의 뷰)에 오피스 건물이 아닌 아파트건물이 들어서 있어 외국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 수단을 잃었다. 홍콩과 싱가폴의 경우 뷰가 좋은 땅에 외국기업 전용 건물을 건설하여 해외기업 유치에 힘을 쓰고 있다.

□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인재들이 부산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기업은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아닌 자생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정부 지원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기업의 경우 자생력을 잃게 되고 실질적인 실력이 부족하게 된다.

○ 부산시 차원에서 기업을 육성한다는 생각보다는 인재들을 부산시에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 인재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지인인 티몬 창업자 신현성씨께 부산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문의한 결과, 최소 500명의 인재들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실제 창업에 성공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인력을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부산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 따라서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동남아(발리, 괌 등)에는 고급 개발자들이 많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인데, 부산의 환경이 동남아 쪽 좋은 섬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임금의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 3단계 BIFC에는 민간, 작은 기업 그리고 젊은 개발자,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엔터테인먼트 적

인 요소를 많이 넣어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인구를 타겟으로 하게 되면 결국 전체 인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마케팅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

○ 그래서 예산을 사람을 유치하고 수입하는데 써야한다. 한번에 좋은 방법으로 국제금융중심지를 만들 수는 없고, 가장 가성비가 좋고, 타율이 높은 방식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BIFC U-space 입주기업들이 고급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에서 고급인력 한 명 당 5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리고 외국기업과 외국 인력에게는 무조건적인 혜택을 더 지원을 해준다면 BIFC에 고급 인재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산업이 만들어지고 발전할 것이다.

○ 결국 사람이 모이면 정보가 모이게 되고 정보가 모이게 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자금이 모이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부산에서 역차별정도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 싱가폴 정부에서는 500대 기업의 Asia Head Office를 홍콩에서 옮기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른 역사가 있다. 실제 법인세 16%, 실효세율 10% 정도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라 한국에 입점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파격적인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 부산이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특히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매우 필요하므로 정부를 설득해서 얻어와야 한다. 법인 실효세율을 지속적으로 올릴 경우 외국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하다. 우선적으로 실험을 진행해서 20년 이상 파격적으로 혜택을 주어 외국기업이 한번 입주할 경우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혜택의 선점 효과도 중요하다.

○ 역차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줘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점점 사람들이 모여 폐쇄적인 시장상황에서 오픈된 시장상황을 만들게 되고 자연스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원이 없는 것과 같다. 혜택을 주어서 들어오게 하

면 조금이라도 세원을 걷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외국기업을 유치하기위해 부띠크 방식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사용하였던 분더샵(BOONTHESHOP) 전략과 비슷하다. 해외를 많이 다닌 사람들이 사는 곳에 세련된 건물과 인프라를 잘 지어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브랜드가 아닌 라이징 브랜드를 들어오게 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파격적으로 외국기업들에게 자리를 제공해 주는데, 작지만 유망하고 모태기업이 튼튼한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외국인들이 모여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오픈된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무소를 개소해서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며, 부산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해외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인센티브도 발견될 것이다.

□ 모태펀드조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다.

○ 시에서 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기업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정책이 중요하다.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사람에게 쓰는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유치하는데 사용하여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꿔내는 것이 중요하다.

○ 지금 현재 블록체인특구사업(금융샌드박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비즈니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2+1년 독점으로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 굉장한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중기부, 과기부, 시 등에서 요구하는 것이 뒤섞여져 오면서 기술개발이 아닌 요구 사항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연출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특구사업은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혁신적인 사업을 유도하였지만 가장 큰 축인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유통 쪽이 막혀있어 혁신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 외국기업을 유치하면서 그레이 존에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 따라서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으나 적극적인 개입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자금 유치는 정부의 개런티가 있다는 뜻이고 그 의미가 중요하다.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보증마크를 그 기업에게 찍어주는 형태 정도로 기업들이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에게 비

즈니스를 할 경우, 더 돋보이고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다. 이러한 방식이 공적인 자본이 해야 하는 일이다. 자율주행카메라회사 모빌아이(MobilEye) 등은 정부의 인증마크가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점프하며 성장할 수 있게끔 좋은 의미의 관여가 필요하고, 실제로 돈만 지원해주고 아무것도 개입을 안 하는 회피 또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빅데이터 기반 대체투자정보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이다.

○ 이 플랫폼의 타겟이 부정확하다. 실제로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쓰고 부산의 기업들이 쓴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 실제 기업들은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현재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보다 선행적으로 데이터의 위치와 구조를 알 수 있는 데이터 대쉬보드라도 먼저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실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인지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종합적으로 과거부터 조선, 해양 등 정책금융이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은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그 외 새로운 영역에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고, 젊은 인재 영입과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해 오픈된 경제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이성구(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금융부장)

□ 2014년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부산에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였지만, 연합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 주로 거래하는 외국계 은행, 대형 조선사들 금융팀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속적으로 서울에 가서 업무를 봐야하는 일이 생긴다.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본사가 실제로 부산시에 내려왔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

□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융합한 가칭 '해양개발은행' 설립 관련해서는 보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특정 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공사를 신설할 경우, WTO 보조금 이슈 가능성이 있어 해양금융만을 위한 공사 설립이 어렵다. 재정적 기여가 있고 혜택이 있을 경우 보조금으로 WTO 보조금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수혜자가 시장에서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이다. 그런데 보조금협정 제2조에서는 특정성이 있는 경우 규제대상 보조금으로 분류하고 특정성은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에 한정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이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과거에도 이를 추진하다가 무산되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부산에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였고 18년에는 해운, 항만, 해양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었다.

○ 또한 우려사항으로는 계약 건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능력이 없는 문제가 아닌, 기관이 여러 개가 같이 참여할 경우 서로 간의 크로스 체크와 시너지 효과 등등이 있을 수 있지만 독립적인 기관 하나일 경우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출입은행, 보험공사의 경우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 해양금융에 치중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줄어들고 늘어나면 리소스의 재분배가 가능하지만, 해양금융 전문 은행으로 하나로 모았을 경우, 실제 해양금융의 절대적인 양이 줄어들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 추가적으로, 여러 대응 회사들이 존재하다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지원총량이 축소할 수 있다.

□ 선박펀드는 현재 실현가능성이 낮다.

○ 수익률이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어서 현재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 해운 사업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크다. 메이저급들도 덴마크의 머스크 사를 제외하면 투자적격등급인 곳이 없는 곳으로 알고 있다. 그만

큼 위험성이 크지만 선박에 투자를 해서 리스 수익을 얻는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상품이 되어버렸다.

□ 국제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의 주거 요건과 교육 요건이 중요하다.

○ BIFC위치를 보았을 때, 외국 기업들이 입주하기에 매력적인 위치가 아닐 수 있다.

○ 부산이라는 도시에 오기위한 특별한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 테마를 잡고 하나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면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전기차만 있는 도시 등)

3 성낙주(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2본부 본부장), 문주혁(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부 부장)

□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방안

○ 부산에서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요인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인듀스먼트가 필요하다. 전략적 장기적 먹거리와 혜택이 필요하다.

○ 그러한 것들 중 하나가 경제특구이다. 모든 금융중심지 활동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계, 법률, 컨설팅, 기업체, 산하기관 등이 모두 서울에 있고, 편의성과 접근성 부분에서 부산보다 서울이 편하다. 금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플레이어가 같이 하는 것이므로 해외기업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항, KTX 등과 같은 교통 편의와, 거래고객, 돈이 되는 정보 생성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산으로 그런 것이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혜택이 필요하고 그것이 경제특구를 지정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혜택, 마중물을 만들어줘야 한다.

○ 각 세계적 금융중심지마다 내세울 만한 금융 분야가 존재한다. 그러나 부산, 한국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이전에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이율이 높아서 달러를 가져와서 이익을 얻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한국에서 자금이 유통되게 해야한다.

○ 금융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기관과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홍콩사태로 인해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옮기고 있는데 법인세가 높아 부산이나 서울에서 흡수가 안된다.

○ 금융중심지 정책은 50년짜리 장기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장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특구 전략이다.

○ 아일랜드의 경우 70년대부터 국가적으로 해외투자 유치 전략을 진행해왔다. 해외 실질법인세 10%, 국내 실질법인세 12.5%로 굉장히 낮은 법인세를 가지고 매력적인 어필을 하였고, 특별구역지역 소재지에 있는 사무실의 경우 임대료 혜택 및 각종 세금 파격적 혜택을 주었다. 또한 전 세계 125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협약으로 이중과세방지법을 맺어 원천세인 이자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자가 0이다. 한국의 경우 외국 기업에 자금을 빌리면 이자를 갚을 때 12.5%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러한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외국기업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줘서 유치한 후 자국민을 고용하도록 하고 소득세를 높은 세율로 걷어 세금을 충당하여 세금문제와 고용문제를 해결한다.

□ 필요한 방안

○ 특구 지정을 통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세제혜택은 사람, 정보가 모이게 되는 효과를 만든다. 부산시는 정부와 기재부를 잘 설득해야 한다.

○ 해양금융 쪽은 항만 하드웨어는 잘 되어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을 하려면 사람을 모아야한다. 돈이 되는게 없어서 사람이 없다.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러한 돈이 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해외 기업들의 국내 진입을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한국인 직원을 많이 뽑아야 하는데 한국지점이 타 외국지점보다 급여가 낮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이것은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해고가 안되므로 더 많은 해고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급여를 낮게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에 들어올 유인을 잃게 된다. 전문가 대우, 인재 발굴, 노동의 보상, 유연성, 성과 보상 등의 시스템 차이가 사람과 기업을 움직인다.

○ 한국에서는 외환의 이동이 어려워서 외국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갈 때 제약이 많다. 그러한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 (Conversion and transfer risk)

○ 인프라, 교통, 영어, 시스템 등에서 국제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홍콩의 경우 특정 공간에 금융과 관련된 모든 곳이 다 모여 있어, 회의 시간도 효율적이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영국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나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완전히 투명하고 합리적이다.

○ 부산은 공기의 질, IT 발전, 인터넷 속도, 치안 등 사람들 이 살기에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어필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인 사업친화적인 환경요소는 더 보강을 해야 한다.

○ 기존의 부산으로 이전했던 금융공공기관들이 부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계속 생성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진행해서 먼저 금융중심지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이 부산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부산에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 모태펀드의 필요성

○ 약간의 돈을 지원해준다고 기업들이 부산으로 온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를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이점을 찾아서 부산으로 와야 하는데 큰 메리트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 다른 산업단지도 지원을 통해 키워냈지만 결과가 일시적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모태펀드가 50년짜리 금융중심지로의 성장을 위한 장기 제도가 맞는지 의문이다.

□ 부산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정책 : Tax lease

○ 일본에서 실행하는 정책으로 비행기, 배를 만들 때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많은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다. 세금을 이연시켜 총액은 유지하되 NPV를 줄여 혜택을 준다.

○ 따라서 해당 혜택을 받게 되면 비행기나 배를 구매할 때 비용 축소의

혜택을 보게 되므로,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일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Tax lease 혜택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SPC를 그 국가내에 설립해야 한다. 부산도 선박, 조선이 발달되었으므로 Tax lease를 이용하면 많은 해외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 전 세계 해운사들이 부산에 들어와서 Tax lease를 통해 배를 싸게 살 수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

○ 프랑스,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홍콩 등도 도입 및 도입 예정, 홍콩의 경우 중국의 선박금융특구인 칭다오에서 빠져나오는 회사들을 흡수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 이러한 정책 및 금융에서 유발되는 효과가 산업의 낙수효과로 인해 고용 증진, 산업 육성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

□ 금융은 국력, 경제력 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분야이다. 그러나 금융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 모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것이 유발될 수 있는 기폭제가 필요하다. 기폭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따라 나오게 되므로 어떠한 것이 연쇄 기폭제가 될 것인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기폭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부산으로 금융기관을 옮기기 전에 자연스럽게 옮기게 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고, 금융산업은 한군데 밀집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유도해서 그러한 밀집지역 또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구본성,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전략과제: 코로나 위기 이후 디지털 금융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2020. 5.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 국제신문, 금융중심지 부산의 기회와 도전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00922.22012006943
-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전략 수립 (정부연구보고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 5
- 김다인 중국 상하이무역관, <중국 장강삼각주 경제동향 및 유망산업 분석>,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02.24.
- 김명희, 이기환, 양혁준, “해양금융중심도시를 위한 부산의 발전요인 분석”,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32, No.3, 2016, pp.155-175.
- 김범중, 김근섭, 이주호, 김은수, 조지성, 김업지,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우리 물류기업 진출방향 연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12.30.
- 김해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데이터센터산업의 가능성 평가 및 정책과제(이우배)
- 김화섭, “중국 웅안신구 건립 어떻게 보아야 하나”, KIET 산업경제, 2017.08.17.
- 남길남, “금융중심지 기능과 증권거래소의 경쟁력”,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202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
- 디지털타임스, 혁신사업 대비 경비 활성화 효과. 2017.06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62802101560753001
- 리더스경제, 부산시, 2022년까지 86억원 투입, 클라우드 산업 키운다. http://www.leaders.kr/news/articleView.html?idxno=96575
- 박광수・임동순, “아일랜드의 금융시장 발전요인 분석: 펀드산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36(4), 2018.
- 박준석 주홍콩총영사관 선임연구원, <홍콩의 금융중심지 지위, 흔들릴까?>, KDI 경제정보센터, 2020.02
- 부산 국제금융경쟁력 순위 11계단 ‘껑충’...세계 40위, THE FACT, 2020.09.27.
- 부산대 중국연구소,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전략으로 중국위안화 역외시장 도입 필요성”, 2017.
-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https://gsf.pusan.ac.kr

- 부산 미음산업단지 방문기(블로그) https://m.blog.naver.com/busanbudongsan/220624614809
- 부산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플랜” 2010.
- 부산시 지식산업센터현황(2020.02)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원본 https://m.blog.naver.com/goldwon/221920434858
- 부산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http://nifc.bepa.kr/
-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www.busandong100.or.kr
- 성낙주, 해양금융을 위한 비운항 선주사업, 제3회 부산해양금융세미나, 2021.9
- 손령선(중국 광저우무역관), <中 광저우, RCEP 활용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정책 발표>,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05.17
- 손상호,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2030>, 한국금융연구원, 2018.12
- 스카이이데일리 뉴스, <부산시, ‘U-Space BIFC’ 온라인 성과보고회 개최>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8592
- 신경희, “금융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레그테크(RegTech),” 자본시장포커스, 2020-20호
- 오용협, 오승환, <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11.30
- 이상훈, 김주혜, <중국의 지역별 산업고도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베이징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09.28.
- 이용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93호) 검토보고 (제382회 제2차 국회정무위원회), 2019. 09
- 이재훈·정희영, “규제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KISTEP Issue Paper(통권 제261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23면
- 이종필, “금융중심지 지정 10년 부산금융중심지 성찰: 문제점과 발전과제 ”, 부산연구원, 2019
- 자본시장연구원(KCMI), “아일랜드 경제회복과 더블린 국제금융센터(IFSC)의 재도약 움직임“, 자본시장 Weekly 33호, 2014
- 자본시장연구원(KCMI), “부산 금융중심지의 펀드산업(백오피스) 특화전략 연구“, 2015.
- 자본시장연구원(KCMI), “브렉시트에 따른 런던의 금융중심지 위상 변화“, 자본시장포커스 07호, 2019.
- 전국대학원 http://www.gradmap.co.kr/index.html
- 전형진, 윤희성, 윤재웅,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 정지현, “2020년 중국 지방양회 특징 및 지역별 경제정책 방향”, KIEP 세계경제포커스, 2020.05.19.
- 조규열, 선박금융의 현황과 대책, 제4차 COVID-19이후 해운조선물류 산업

안정화 방안 세미나, 2021.07
- 조선비즈, 부산 MS 데이터센터 유치 효과 거두려면 후방 산업 키워야. 2016.0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3349.html
- 조용범, “해외 사례로 본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의 미비점 및 향후 과제”, 한국은행 부산본부, 2013.05.2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3349.html
- 주한대사관, <중국 인권 문제에 관한 각종 낭설과 사실 진상>, 2020.07.20.
- 중한 중국 대사관 http://kr.china-embassy.org/kor/
- 코인데스크, 카카오가 데이터센터에 수천억을 투자하는 이유. 2020.10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84
- 통계청, ‘2019년 지역소득(잠정)’ 2020.12.
- 프레시안, 오사카를 따라잡을 부산. 2020.1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1410270433867
- 한국금융연구원,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2030”, 2018. 12.
- 한국은행(부산), ’해외 사례로 본 부산의 선박금융 발전여건 점검 및 향후 과제’ 보고서
- 한국은행 https://www.bok.or.kr/
- 한국채권연구원, 모태펀드형태의 서울형 신성장동력 희망펀드 조성방안연구, 서울특별시, 2012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 https://www.kmou.ac.kr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혁신・창업 도시로 변모 중인 청두(成都)>, 2016.05.11
-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016~2020)’ 보고서
- [현장 르포] LG CNS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https://www.lgcns.com/PR/NewsView/161)
- 홍 윤, <뛰는 부산금융중심지 위에 나는 경쟁도시들>, 일간리더스경제, 2021.03.18, https://www.leaders.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08
- Darian M. Ibrahim, “Financing the Next Silicon Valley”, 87 Wash. U. L. Rev. 717, 2010.
- KAIST 경영공학부 https://www.business.kaist.ac.kr/
- KIEP 북경사무소, <베이징市, 동북아 금융허브 경쟁에 동참>,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3-47호, 03.08.08
- KMI 동향분석,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7
- KOSTEC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http://kostec.re.kr/
-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 大阪府知事, 「国際金融都市OSAKA」の実現に向けて, 2020.12.23. http://www.pref.osaka.lg.jp/attach/39795/00382108/03_kokusaikinnyuutoshizitugen.p

df
- 申玉铭 李哲, <世界金融中心的分布与形成机理>, 首都师范大学资源环境与旅游学院, 2020.(18).4-7
- 崔乐 白春梅, 沪港金融中心对西安区域金融中心建设的可借鉴性研究>, 西北大学现代学院, 2021.(12).116-117
- 颜晓斌, <上海自贸试验区临港新片区发展金融交易平台思路研究>, 上海真诚税务师事务所有限公司, 2021.(10).77-78
- 向倚欣, <浅谈香港金融发展史>, 财经与市场, 2020.12.22
- 田雨昊, <北京金融法院正式成立>, 中新社, 2021.(04).2-3
- 马祖芳, 王惠, 张若望, 张晓萍, 李小娟, <非首都功能疏解背景下雄安新区承接北京市金融产业问题>, 河北金融学院, 2021.(16).97-98
- 箴言, <深圳：出台《条例》开创绿色金融先河>, 2020,(12),55-57
- 吴燕妮, <粤港澳大湾区背景下深圳完善金融监管体系研究>, 深圳市社会科学院经济研究所,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2020.(01).63-74
- 吴爱丹, <南沙　打造全国首个国际金融岛，封面壹号即将开盘？>, 2021.(04).52-53
- 广州市商务局, <中国（广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工作领导小组关于印发《广州市把握RCEP机遇促进跨境电子商务创新发展的若干措施》的通知>, 2021.03.30, http://www.gz.gov.cn/xw/tzgg/content/post_7193087.html
- 张伟, 王华, <成都在校大学生教育消费金融贷问题研究>, 成都信息工程大学 成都信息工程大学管理学院, 2020.08.08.
- 彭祥萍, <百余项特色科普活动开启“奇妙之旅”！成都市科技活动周本周五启幕>, 红星新闻记者, 2021.05.17., https://static.cdsb.com/micropub/Articles/202105/77a84c9942525009d7146d26800cbd9e.html
- 谢陶, 杨欢, <成都今日面向全球释放“金融资本机遇”2021成都新经济“双千”发布会产业功能区金融资本供给专场26日举行>, 每日经济新闻, 2021.05.25. https://finance.sina.com.cn/tech/2021-05-25/doc-ikmyaawc7499180.shtml
- 청두상보(成都商报) https://www.cdsb.com/
- China Academic Journal with CDMD(CAJ) http://oversea.cnki.net.ssl.eproxy.pusan.ac.kr/index/
- Diebold, F.X. and Yilmaz, K. (2009). Measuring Financial Asset Return and Volatility Spillovers, with Application to Global Equity Markets. The Economic Journal, 119, 158-171.
- Facebook Diem, https://www.diem.com/en-us/

- Fidessa, 2021.9
- GoundX https://www.groundx.xyz
- Interdisciplinary Centre for Security, Reliability and Trust (SnT) https://wwwen.uni.lu/snt
- Klaytn www.klaytn.com
- Luxembourg for Finance https://www.luxembourgforfinance.com
- Luxembourg Financial Services Regulator (CSSF) https://www.cssf.lu
- Luxembourg House of Financial Technology (the LHoFT Foundation) https://www.lhoft.com
- Luxembourg House of Start-ups (HoST) https://www.host.lu
- The Luxembourg Bankers' Association (ABBL) https://www.abbl.lu
- QS Top Universities https://www.topuniversities.com/
- Sovereign news, https://www.sovereigngroup.com/news-and-views/hong-kong-ranks-as-2nd-largest-ipo-market-in-2020/
- THE(Times Higher Education)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
- The Z/yen Group https://www.zyen.com/